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27-03
협동연구 2009-02-03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2차년도)

사회적 자본 수준·정책 분석 및 교육투자 효율화 방안

홍 영 란 외

주관 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력 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27-03
협동연구 2009-02-3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2차년도)

사회적 자본 수준·정책 분석 및 교육투자 효율화 방안

발 행 일 2009년 12월
저 자 홍 영 란 외 (한국교육개발원)
발 행 인 김 용 하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전 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처 대명기획
가 격 10,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ISBN 978-89-8187-632-6 93330
ISBN 978-89-8187-635-7 93330(전5권)

발간사

21세기 들어서 분배와 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전국가적인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양극화 또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민간부문의 조세부담이 높아져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감소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지출 확대는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최근 들어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에 기인하는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지출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양자 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이 양립가능한지,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2008년도의 거시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제

고하는 측면까지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그리고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의 참여로 완성되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관련된 후속연구 및 중요한 정책방향 결정과정에서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자의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0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2차년도)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09-27-01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총괄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9-27-02	사회서비스산업의 산업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9-27-03	사회적 자본 수준·정책 분석 및 교육투자 효율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09-27-04	노동부문의 사회투자 활성화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09-27-05	성장, 빈곤, 불평등과 사회지출의 상호관계 분석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종욱 연구위원(총괄책임자)	이귀진 연구원
		원종욱 연구위원	윤문구 교수 이귀진 연구원
협력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홍영란 선임연구위원	현영섭 연구위원 김강호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선임연구위원	김진수 교수 이상호 교수 김수완 교수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강성진 교수	이우진 교수

목 차

Contents

요 약 ····· 1

제1장 서론 ·····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 13

제3절 연구방법 ····· 16

제2장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와 정책 영역 ····· 21

제1절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 ····· 21

제2절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 영역 ····· 39

제3장 사회적 자본의 수준 비교 분석 ····· 59

제1절 국제 비교 분석 ····· 59

제2절 국내 비교 분석 ····· 166

제3절 종합 논의 ····· 208

제4장 사회적 자본의 정책 예산 분석 ····· 221

제1절 정책 예산 규모 분석 ····· 221

제2절 정책 예산 집행 과정 분석 ····· 252

제3절 종합 논의 ····· 278

제5장 사회적 자본 교육투자 효율화 방안 ····· 287

제1절 사회적 자본 교육투자의 기본 방향 ····· 287

제2절 사회적 자본 교육투자 규모 확대 방안 ····· 291

제3절 사회적 자본 교육투자 집행 효율화 방안 ····· 295

참고문헌 ····· 307

부 록 ····· 307

부록 1. 국가별 사회적 자본 수준 비교 종합 ····· 309

부록 2. 전문가 조사 설문지 ····· 346

Contents

표 목차

〈표 II- 1〉 사회적 자본의 정의 ·····25
〈표 II- 2〉 사회적 자본의 정의 또는 구성요소 ·····36
〈표 II- 3〉 국가인적자원개발 분석틀 ·····40
〈표 II- 4〉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 중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 40
〈표 II- 5〉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의 영역별·유형별 특성 ·····42
〈표 II- 6〉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 중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 ···43
〈표 II- 7〉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의 영역별·유형별 특성 ·····44
〈표 III- 1〉 유럽사회조사 설문지의 구성 ·····61
〈표 III- 2〉 ESS와 한국의 사례수 비교 ·····66
〈표 III- 3〉 IMD WCY의 경쟁력 요소 및 지표수 ·····80
〈표 III- 4〉 사회적 자본 관련 IMD WCY 지표 ·····83
〈표 III- 5〉 ISSP의 연도별 조사내역 ·····87
〈표 III- 6〉 2003-2007 ISSP 지표 중 사회적 자본 관련 지표 ·89
〈표 III- 7〉 사회적 자본 관련 WVS 지표(WVS 2005-2008) 138
〈표 III- 8〉 KGSS의 조사 영역과 항목 ·····167
〈표 III- 9〉 행위형태별 정치참여의 수준 ·····168
〈표 III-10〉 시티즌십의 조사 항목 ·····170
〈표 III-11〉 정치적 참여 횟수별 응답자수 ·····173
〈표 III-12〉 주요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 응답비율 ·····175
〈표 III-13〉 연령, 교육수준, 거구지역에 따른 신뢰수준 ·····176
〈표 III-14〉 사회적 지원 변수의 정의와 측정 ·····178
〈표 III-15〉 사회적 지원의 대상별 응답 비율 ·····179
〈표 III-16〉 한국의 타인 신뢰에 대한 응답 비율 ·····181
〈표 III-17〉 한국의 기회주의와 공정성에 대한 응답 비율 ·····182

〈표 III-18〉 한국의 이기성과 이타성에 대한 응답 비율 ·····182
〈표 III-19〉 한국의 사회단체 참여 정도 ·····183
〈표 III-20〉 친구 구성의 다양성 ·····185
〈표 III-21〉 이웃 구성의 다양성 ·····186
〈표 III-22〉 직장 동료 구성의 다양성 ·····187
〈표 III-23〉 이질집단에 대한 개방성 ·····189
〈표 III-24〉 연줄행사 부탁빈도 및 사람정도 ·····190
〈표 III-25〉 KRIVET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개발 연도별 연구계획 ·192
〈표 III-26〉 KRIVET 1차년도 사회적 자본 조사 항목 ·····194
〈표 III-27〉 개인중대사와 네트워크 ·····199
〈표 III-28〉 사회생활 측정 영역 및 항목 ·····203
〈표 IV- 1〉 우리나라 정부예산 구조 예시(교육과학기술부) ·····221
〈표 IV- 2〉 교육과학기술부의 단위사업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226
〈표 IV- 3〉 통일부의 단위사업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228
〈표 IV- 4〉 행정안전부의 단위사업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229
〈표 IV- 5〉 문화체육관광부의 단위사업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233
〈표 IV- 6〉 보건복지가족부의 단위사업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238
〈표 IV- 7〉 노동부의 단위사업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241
〈표 IV- 8〉 교육과학기술부 사회적 자본 예산 규모 ·····243
〈표 IV- 9〉 통일부 사회적 자본 예산 규모 ·····244
〈표 IV-10〉 행정안전부 사회적 자본 예산 규모 ·····246
〈표 IV-11〉 문화체육관광부 사회적 자본 예산 규모 ·····248
〈표 IV-12〉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적 자본 예산 규모 ·····250
〈표 IV-13〉 노동부 사회적 자본 예산 규모 ·····252
〈표 IV-14〉 2009년도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안 ·····254

〈표 IV-15〉 2009년도 총지출 대비 각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 현황 ··255
〈표 IV-16〉 IMF와 통합재정의 분류기준 ·····257
〈표 IV-17〉 분야별 재원배분의 국제 비교(중앙정부 통합재정 기준) ··259
〈표 IV-18〉 분야별 재원배분의 국제비교(일반정부 기준) ·····260
〈표 IV-19〉 품목별 예산제도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차이와 특성 262
〈표 IV-20〉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예산과목 분류 ·····263
〈표 IV-21〉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체계 ·····264
〈표 IV-2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예산 구조 ·····266
〈표 IV-23〉 정착금의 종류 및 지원금액 ·····268
〈표 IV-24〉 정착장려금 지급기준 ·····269
〈표 IV-25〉 2008년도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운영비 실행예산 내역 ··273
〈표 IV-26〉 2008년도 대학역량강화사업 재정지원 내역 예시 ·····276
〈표 IV-27〉 정부부처별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사업 분포 ·····281

그림 목차

[그림 II- 1] PRI의 네트워크 중심 사회적 자본의 개념틀 ·····30
[그림 III- 1] 사회적 자본 측정의 영역과 지표 ·····63
[그림 III- 2] 연간 봉사활동 참여 국가별 응답비율 ·····68
[그림 III- 3] 연간봉사활동 참여횟수의 국가별 평균 ·····69
[그림 III- 4] 정치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 표현 국가별 응답비율 ·70
[그림 III- 5] 정치적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의 국가별 평균 …70
[그림 III- 6] 정치·시사 문제 관련 텔레비전 시청 시간 국가별 응답비율 ·72
[그림 III- 7] 투표참여율 국가별 응답비율 ·····73
[그림 III- 8] 지역사회 야간 안전 인식 국가별 응답비율 ·····74
[그림 III- 9] 지역사회 야간 안전 인식 국가별 평균비교 ·····75

〔그림 III-10〕 지역사회 활동 참여 국가별 응답비율 ·····76
〔그림 III-11〕 지역사회 활동 참여 국가별 평균비교 ·····77
〔그림 III-12〕 국가 경쟁력을 형성하는 네 가지 기본 영향요소 ·····78
〔그림 III-13〕 IMD World Competitiveness의 지수(순위) 산출 과정 ·82
〔그림 III-14〕 국가별 정의 지수 ·····84
〔그림 III-15〕 국가별 사회응집력 지수 ·····85
〔그림 III-16〕 국가별 경영자 신뢰성 지수 ·····85
〔그림 III-17〕 국가별 경영자 사회적 책임 지수 ·····86
〔그림 III-18〕 지역에 대한 친밀감 응답비율(ISSP 2003) ·····91
〔그림 III-19〕 국가별 지역에 대한 친밀도 평균 ·····92
〔그림 III-20〕 국가에 대한 친밀감 응답비율(ISSP 2003) ·····93
〔그림 III-21〕 국가별 국가에 대한 친밀도 평균 ·····94
〔그림 III-22〕 이민자에 대한 불신 응답비율(ISSP 2003) ·····95
〔그림 III-23〕 국가별 이민자에 대한 불신 평균 ·····95
〔그림 III-24〕 투표참여의 중요성 응답비율(ISSP 2004) ·····97
〔그림 III-25〕 국가별 투표참여의 중요성 평균 ·····97
〔그림 III-26〕 세금납부의 중요성 응답비율(ISSP 2004) ·····98
〔그림 III-27〕 국가별 세금납부의 중요성 평균 ·····99
〔그림 III-28〕 준법 의식의 중요성 응답비율(ISSP 2004) ·····100
〔그림 III-29〕 국가별 준법의식의 중요성 평균 ·····100
〔그림 III-30〕 정부감시의 중요성 응답비율(ISSP 2004) ·····101
〔그림 III-31〕 국가별 정부감시의 중요성 평균 ·····102
〔그림 III-32〕 적극적 연대 참여의 중요성 응답비율(ISSP 2004) ··103
〔그림 III-33〕 국가별 적극적 참여 연대의 중요성 평균 ·····103
〔그림 III-34〕 타인의견 이해의 중요성 응답비율(ISSP 2004) ··104

Contents

〔그림 III-35〕 국가별 타인의견 이해의 중요성 평균 ·····105
〔그림 III-36〕 군복무의 중요성 응답비율(ISSP 2004) ·····105
〔그림 III-37〕 국가별 군복무의 중요성 평균 ·····106
〔그림 III-38〕 시위참여 응답비율(ISSP 2004) ·····107
〔그림 III-39〕 국가별 시위참여의 평균 ·····107
〔그림 III-40〕 기부 응답비율(ISSP 2004) ·····108
〔그림 III-41〕 국가별 기부 시기의 평균 ·····109
〔그림 III-42〕 공무원에 대한 신뢰 응답비율(ISSP 2004) ·····110
〔그림 III-43〕 국가별 공무원에 대한 신뢰의 평균 ·····110
〔그림 III-44〕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 응답비율(ISSP 2005) ····112
〔그림 III-45〕 국가별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의 평균 ·····112
〔그림 III-46〕 매니저와 종업원의 관계 응답비율(ISSP 2005) ··113
〔그림 III-47〕 국가별 매니저와 종업원의 관계의 평균 ·····114
〔그림 III-48〕 동료와의 관계 응답비율(ISSP 2005) ·····115
〔그림 III-49〕 국가별 동료와의 관계의 평균 ·····115
〔그림 III-50〕 정치에 대한 영향력 응답비율(ISSP 2006) ·····117
〔그림 III-51〕 국가별 정치에 대한 시민의 영향력의 평균 ·····117
〔그림 III-52〕 대시민 정부서비스에 대한 신뢰 응답비율(ISSP 2006) ·118
〔그림 III-53〕 국가별 대시민 정부서비스에 대한 신뢰의 평균 ·····119
〔그림 III-54〕 신뢰할 수 있는 타인의 존재 응답비율(ISSP 2006) ···120
〔그림 III-55〕 국가별 신뢰할 수 있는 타인의 존재의 평균 ·····120
〔그림 III-56〕 타인에 대한 불신 응답비율(ISSP 2006) ·····121
〔그림 III-57〕 국가별 타인에 대한 불신의 평균 ·····122
〔그림 III-58〕 타인의 중요결정에 대한 도움 요청 응답비율(ISSP 2006) ·123
〔그림 III-59〕 국가별 타인의 중요요청에 대한 도움 요청의 평균 ··123

〔그림 III-60〕 자신의 중요결정에 대한 타인의 도움 요청 응답비율 (ISSP 2006) ·····124
〔그림 III-61〕 국가별 자신의 중요요청에 대한 타인의 도움 요청의 평균 ··125
〔그림 III-62〕 일주일 동안의 타인과의 접촉 응답비율(ISSP 2006) ···126
〔그림 III-63〕 국가별 일주일동안 타인과의 접촉빈도의 평균 ·····126
〔그림 III-64〕 사람을 만나기 위한 스포츠 활동 응답비율(ISSP 2007) 128
〔그림 III-65〕 국가별 사람을 만나기 위한 스포츠활동의 평균 ·····128
〔그림 III-66〕 스포츠 단체 참여 응답비율(ISSP 2007) ·····129
〔그림 III-67〕 국가별 스포츠 단체 참여의 평균 ·····130
〔그림 III-68〕 문화 단체 참여 응답비율(ISSP 2007) ·····130
〔그림 III-69〕 국가별 문화 단체 참여의 평균 ·····131
〔그림 III-70〕 종교 단체 참여 응답비율(ISSP 2007) ·····132
〔그림 III-71〕 국가별 종교 단체 참여의 평균 ·····132
〔그림 III-72〕 지역사회 봉사단체 참여 응답비율(ISSP 2007) ··133
〔그림 III-73〕 국가별 지역사회 봉사단체 참여의 평균 ·····134
〔그림 III-74〕 정치 단체 참여 응답비율(ISSP 2007) ·····135
〔그림 III-75〕 국가별 정치 단체 참여의 평균 ·····135
〔그림 III-76〕 교회 신자 혹은 종교단체 회원 응답비율 (WVS 2005-2008) ·····141
〔그림 III-77〕 교회 신자 혹은 종교단체 적극적 회원 비율 ·····141
〔그림 III-78〕 스포츠 혹은 레크레이션 단체 회원 응답비율 (WVS 2005-2008) ·····142
〔그림 III-79〕 스포츠 혹은 레크레이션 단체 적극적 회원 비율 ·····143
〔그림 III-80〕 예술, 음악, 교육 단체 회원 응답비율 (WVS 2005-2008) ·····143

Contents

〔그림 III-81〕 예술, 음악, 교육 단체 적극적 회원 비율 ·····144
〔그림 III-82〕 노동조합 회원 응답비율(WVS 2005-2008) ····145
〔그림 III-83〕 노동조합 적극적 회원 비율 ·····145
〔그림 III-84〕 정당 회원 응답비율(WVS 2005-2008) ·····146
〔그림 III-85〕 정당 적극적 회원 비율 ·····147
〔그림 III-86〕 환경 단체 회원 응답비율(WVS 2005-2008) ··147
〔그림 III-87〕 환경 단체 적극적 회원 비율 ·····148
〔그림 III-88〕 전문가 단체 회원 응답비율(WVS 2005-2008) 149
〔그림 III-89〕 전문가 단체 적극적 회원 비율 ·····149
〔그림 III-90〕 자비롭고 인도주의적 단체 회원 응답비율
(WVS 2005-2008) ·····150
〔그림 III-91〕 자비롭고 인도주의적 단체 적극적 회원 비율 ·····151
〔그림 III-92〕 소비자 단체 회원 응답비율(WVS 2005-2008) 152
〔그림 III-93〕 소비자 단체 적극적 회원 비율 ·····152
〔그림 III-94〕 정치에 대한 관심 응답비율(WVS 2005-2008) 153
〔그림 III-95〕 정치에 대한 관심 평균 ·····154
〔그림 III-96〕 타인을 돕는 것의 중요성 응답비율
(WVS 2005-2008) ·····155
〔그림 III-97〕 타인을 돕는 것의 중요성 평균 ·····155
〔그림 III-98〕 타인에 대한 신뢰 응답비율(WVS 2005-2008) 156
〔그림 III-99〕 타인에 대한 신뢰 비율 ·····157
〔그림 III-100〕 가족에 대한 신뢰 응답비율(WVS 2005-2008) ···157
〔그림 III-101〕 가족에 대한 신뢰 평균 ·····158
〔그림 III-102〕 이웃에 대한 신뢰 응답비율(WVS 2005-2008) ··159
〔그림 III-103〕 이웃에 대한 신뢰 평균 ·····159

[그림 III-104]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 응답비율 (WVS 2005-2008) ·····160
[그림 III-105]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 평균 ·····161
[그림 III-106]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 응답비율 (WVS 2005-2008) ·····162
[그림 III-107]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 평균 ·····162
[그림 III-108] 타종교인에 대한 신뢰 응답비율(WVS 2005-2008) ·163
[그림 III-109] 타종교인에 대한 신뢰 평균 ·····164
[그림 III-110] 타국인에 대한 신뢰 응답비율(WVS 2005-2008) ··165
[그림 III-111] 타국인에 대한 신뢰 평균 ·····165
[그림 III-112] KGSS의 한국인 정치참여 형태 비율 ·····169
[그림 III-113]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참여횟수별 응답자수 ·····173
[그림 III-114] 한국의 사회단체참여 응답비율 ·····173
[그림 III-115] 연령별 신뢰 수준 ·····176
[그림 III-116] 교육수준별 신뢰 수준 ·····177
[그림 III-117] 거주지역별 신뢰 수준 ·····177
[그림 III-118] 사회적 지원의 대상별 응답 비율 ·····179
[그림 III-119] 한국의 타인 신뢰에 대한 응답 비율 ·····181
[그림 III-120] 한국의 기회주의와 공정성에 대한 응답 비율 ·····182
[그림 III-121] 한국의 이기성과 이타성에 대한 응답 비율 ·····183
[그림 III-122] 한국의 사회단체 참여 정도 ·····184
[그림 III-123] 한국의 사회단체 활동 정도 ·····185
[그림 III-124] 친구 구성의 다양성 ·····186
[그림 III-125] 이웃 구성의 다양성 ·····187
[그림 III-126] 직장 동료 구성의 다양성 ·····188

[그림 III-127] 연불행사 부탁받는 빈도 ·····189
[그림 III-128] 연줄행사 부탁 빈도 ·····190
[그림 III-129] 연줄행사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의 정도 ·····191
[그림 III-130] 개인적 신뢰 수준 ·····196
[그림 III-131] 사회적 신뢰 수준 ·····197
[그림 III-132] 제도적 신뢰 수준 ·····198
[그림 III-133] 개인중대사와 네트워크의 유형 ·····200
[그림 III-134]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종류 ·····201
[그림 III-135] 네트워크의 수 ·····202
[그림 III-136] 지역의 환경 ·····204
[그림 III-137] 이웃공동체 ·····205
[그림 III-138] 법과 도덕/ 공공성 수준 및 연고주의 ·····206
[그림 III-139] 사회적 차별과 취약 계층 보호 ·····207
[그림 III-140] 공공서비스 및 정보 제공 수준 ·····208
[그림 III-141] ESS 조사대상 국가 중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수준(순위) 209
[그림 III-142] WCY(2009) 조사대상 국가 중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수준(순위) ·····211
[그림 III-143] ISSP(2003) 국가정체성 부문 조사대상 국가 중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수준(순위) ·····212
[그림 III-144] ISSP(2004) 시민의식 부문 조사대상 국가 중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수준(순위) ·····212
[그림 III-145] ISSP(2005) 노동지향성 부문 조사대상 국가 중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수준(순위) ·····213
[그림 III-146] ISSP(2006) 정부역할 부문 조사대상 국가 중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수준(순위) ·····213

〔그림 III-147〕 ISSP(2007) 레저시간과 스포츠 부문 조사대상 국가 중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수준(순위) ……214
〔그림 III-148〕 WVS(2005-2008) 사회참여 부문 조사대상 국가 중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수준(순위) ……215
〔그림 III-149〕 WVS(2005-2008) 신뢰 부문 조사대상 국가 중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수준(순위) ……215
〔그림 IV-1〕 4대 재정전략과 12대 중점과제 ……253
〔그림 IV-2〕 사업 예산제도의 형태: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263
〔그림 IV-3〕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체계도 ……267
〔그림 IV-4〕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체계도 ……272
〔그림 IV-5〕 2009년도 대학교육지원사업 개편 내용 ……275

요 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사회적 자본은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

  – 그러나 그동안 국가경쟁력 성장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관심에 비해 사회적 자본을 위한 교육투자에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교육의 사회적 성과로서 사회적 자본이 대두함에 따라 해외 선진국들은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으며, 한국 역시 국가성장을 위한 새로운 핵심전략으로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책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수준과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교육투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음.

Ⅱ. 한국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

□ 한국의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 중 정치·시사 문제에 대한 관심, 투표참여율, 지역사회이간안전인식에서는 상위권에 속하지만, 봉사활동연간참여횟수의 경우는 중위권, 정치적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지역사회

활동은 하위권으로 머물고 있음.

- 전체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이를 실천하는 개념인 투표참여의 경우 정치에 대한 개인수준의 관심과 참여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음.
- 반면에 정치적 주제에 대한 의견 제시에서 심리적 제한을 느낀다는 점에서는 의견제시 등에서는 타인의 눈치를 본다든지, 또는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회적 응집력의 경우 한국의 순위는 최상위권에 해당되었고,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성 역시 상위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의나 경영자 신뢰성은 하위권 수준임.

- 이는 사회적 정의는 제도나 법적 조건을 구비함으로써 그리고 이런 제도나 법적 사항을 강제함으로써 실현되고 있다는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특성을 갖는 반면에, 사회적 응집력이나 신뢰는 제도가 구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인식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음.

□ 국가정체성에 대한 지표들은 순위가 낮은 편이었고, 시민의식의 경우에는 지표에 따라 순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예를 들어 적극적 연대참여나 군복무는 순위가 비교적 상위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금납부나 시민참여 등은 한국이 하위순위인 것으로 나타남.

□ 노동지향성의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가 높은 순위로 나타났지만, 매니저와 종업원의 관계나 동료와의 관계는 중간 이하의 순위로 나타남.

- 이는 노동조합이 노조원의 권익을 신장하고 보호하는 등의 행위를 정당하게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반대로 기업의 경영층에 대한 불신의 반대급부로 해석할 수도 있음.

□ 정부역할의 경우 정치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인식은 상위순위로 나타났으나 다른 지표들은 모두 하위 순위인 것으로 나타남.

- 정부역할 요소는 정부역할이라는 측면과 함께 타인에 대한 불신이나 타인과의 접촉 또는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등에 대한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지표들의 경우 모두 중하위에 한국이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냄.

□ 종교 단체나 문화 단체의 경우에는 상위 순위였으나 정치 단체는 중하위 순위인 것으로 나타남.

- 사회참여로서 종교 단체나 스포츠 단체, 예술·음악·교육 단체 등에 대한 참여가 중간 정도의 순위였고 반면에 노동조합 참여나 정당 참여, 전문가 단체 참여, 인도주의적 단체 참여 등은 하위 순위로 나타남.

□ 신뢰 부분에서는 타인에 대한 신뢰나 가족에 대한 신뢰는 중간 이상의 순위였고, 타인을 돕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하위순위임.

- 가족이나 일반적 타인에 대한 신뢰는 이웃이나 타종교인 또는 타국인 등에 대한 신뢰보다는 높았지만 상위순위까지는 도달하지 못함.

III. 사회적 자본 정책예산 규모 및 집행과정

□ 국가수준에서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정책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6개 부처의 정책사업을 분석함.

□ 하지만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사업은 다소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교육투자와 관련한 직접적 사업은 비중이 다소 낮게 나타남.

- 6개 부처의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사업은 총 52개로 사회적 자본 형성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책사업이 20개,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이 14개, 그리고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업이 15개임.

〈표 8〉 정부부처별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사업 분포

부처	구분	SCF1	SCF2	SCF3	계
교육과학기술부	시민의식/사회참여	1	1		2
	신뢰/관용성		1		1
	네트워크/파트너십		1	3	4
통일부	시민의식/사회참여	1	2		3
	신뢰/관용성				0
	네트워크/파트너십			1	1
행정안전부	시민의식/사회참여	1			1
	신뢰/관용성				0
	네트워크/파트너십	3		2	5
문화체육관광부	시민의식/사회참여		5	2	7
	신뢰/관용성	2			2
	네트워크/파트너십	1		4	5
보건복지가족부	시민의식/사회참여	3			3
	신뢰/관용성	5	4	1	10
	네트워크/파트너십			1	1
노동부	시민의식/사회참여	1			1
	신뢰/관용성	2			2
	네트워크/파트너십			1	1
계		20	14	15	49

주: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중 사회적 자본 영역이 구분되지 않은 사업(종교문화기반구축) 및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 구분이 되지 않은 사업(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노동부 사업 중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 구분이 되지 않는 사업(고용평등환경개선) 총 3개 사업 제외

□ 부처별로 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가 타 부처에 비해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부처별 전체 사업예산 대비 사회적 자본 관련 사업예산 규모는 노동부 19.9%, 문화체육관광부가 17.6%, 보건복지가족부가 15.2%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행정안전부 0.2%, 교육과학기술부는 0.3%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미약하였음.

□ 부처별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의 양상이 다소 차이를 보임.

  –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사업 중 고등교육

과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에 대한 비중이 큰데 반해 학생지도와 같은 학교교육 측면의 투자는 상당부분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냄.

- 통일부의 경우 새터민과 같은 성인 대상의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의 사업에 대한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내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부문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행정안전부의 경우 지자체와 지역내 기업의 협력을 위한 민관협력지원 사업이 약 100%가량 증가한데 반해 다른 사회적 자본 관련 사업은 모두 감소하였고, 특히 공직선거관리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의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성인의 평생학습과 관련한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향상을 위한 국제문화 협력과 문화 활동 참여 분야의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보건복지가족부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회적 자본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저소득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에 대한 가정교육 분야(예, 드림스타트 사업)의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역시 다문화 가정 아동교육에 대한 예산으로 통합됨.
- 노동부는 성인근로자 교육에 국제협력과 노사문화 구축, 저소득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관련 사업이 35-70% 가량 증가함.

□ 실질적인 사회적 자본 투자는 투자대상의 전환, 복지·문화·보건 등의 분야와 교육의 통합적 지원, 마스터플랜에 의한 지속적 투자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투자대상의 경우 교육 외적인 기타경비에 대한 투자폭을 줄이고, 실제적인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성과 창출을 위해 개인보다는 단체 혹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결집형, 연결·연계형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위해 가정, 지역사회 대상의 투자를 확대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 교육투자와 그 외 복지·문화·보건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 방식은 단기적인 성과 중심의 투자보다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 필요한 기본 투자규모를 설정하여 중장기적으로 투자될 필요가 있음.

Ⅳ. 사회적 자본 교육투자 효율화 방안

□ 사회적 자본 교육투자는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신뢰 구축 및 사회적 통합을 위해 가정, 학교, 평생학습에 기반하여 이루어져 하며, 기존의 사회적 자본 교육투자 규모의 확대와 집행 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함.

□ 사회적 자본 교육투자 규모의 경우 사회적 자본 형성에 직접적인 사업예산 투자규모가 매우 미약하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그 규모를 확대하는 전략이 요구됨.

–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는 교육 외적인 시설·인건비 등의 물질적 자원의 유지·보수 영역의 투자는 축소하고, 실제로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교육영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함.

– 정부부처별 기능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사회적 자본 투자가 활성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부처 간 역할분담을 통해 사회적 자본 영역 및 구성요소를 고려한 예산확대가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모든 사회적 자본 관련 사업에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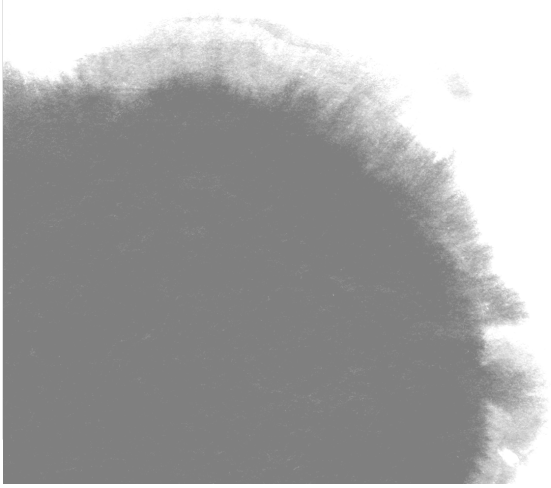
□ 사회적 자본 교육투자 집행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 수립에서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위상이 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교육투자 규모 및 집행 방식의 개선, 그리고 사회적 자본 교육주체들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함.

– 인재강국 건설 등 핵심 국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적자본과 함께 사회적 자본에 대한 기여 정도를 정책목표 설정시 반영해야 함.

– 사회적 자본 교육투자는 단기적인 성과중심의 예산규모 결정보다는 지역별, 대상별 사회적 자본 형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투자영역 및 투자규모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단년도 사업보다는 중장기적 연차사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인식제고와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정부의 획일적인 투자보다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필요한 적정 예산투입과 지역사회의 대응적 투자를 유도해야 함.

01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추구되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 의해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인으로 인적자본과 함께 신뢰, 네트워크, 호혜성, 시민사회 참여 등을 주요 요소로 하는 사회적 자본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학교교육에서의 학업성취도 향상, 성인교육에서의 지식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접근 기회 향상 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사회적 자본 구축은 중요하다(Coleman, 1988; Schuller, 2002). 나아가 사회적 자본은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발전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한다(Grootaert, 1998; OECD, 2001).

그러나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와 정책을 통해 강조되어 왔으나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 최근 사회적 자본 형성에도 교육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높은 교육성과를 지닌 개인은 높은 사회적 자본을 지닐 수 있으며 사회적 자본을 증진을 위한 내용을 교육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교육은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김태준, 2004; Putnam, 2000; Halpern, 2004)

교육의 사회적 성과로서 사회적 자본이 대두함에 따라 해외 선진국들은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OECD는 2005년부터 '학습의 사회적 성과(Social Outcomes of Learning)'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이 건강과 시민적·사회적 참여와 같은 사회적 성과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를 국제적 수준에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정책적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을 접근한 캐나다는 '공공정책으로서의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 as a Public Policy Tool)' (2003-2005) 연구프로젝트를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캐나다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정책 프로그램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정책적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학계와 정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적 투입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한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의 탐색과 사회적 응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인재강국이라는 거시적인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의 핵심전략으로서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인재강국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적 통합과 응집을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전략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자본에 대한 교육적 투자는 부처별 핵심인재 육성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 왔지만, 사회적 자본에 대한 교육적 투자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 규모가 미미하다.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은 어느 하나만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지 못한다.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통합적 형성과 축적은 한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서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의 성과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사회

적 자본 수준을 분석하고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투자 전략을 정책적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수준과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교육투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 수준에 대한 국내외 사회적 자본 관련 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진단한다.

둘째, 사회적 자본 형성과 관련한 주요 정부부처의 관련 정책사업을 도출하고, 예산규모 및 예산집행 사례를 분석하여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부의 예산투자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구명한다.

셋째, 사회적 자본의 수준과 정책 예산 분석을 토대로 사회적 자본의 함양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육투자 전략을 개발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1. 사회적 자본의 수준 및 정책 예산 분석틀 구안

문헌연구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주요 영역 및 구성 요소를 추출하고 사회적 자본 수준 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영국, 캐나다, 미국, 세계은행 등에서 구명한 사회적 자본의 주요영역 및 구성요소를 종합 비교하여 사회적 자본의 영역을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신뢰 및 관용성,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으로 분류하였으며, 사회적 자본 수준 및 예산 분석에 필요한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한편,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 예산분석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2001-2005)」,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2006-2010)」,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2006년도 시행계획(2006)」 등을 고찰하여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한국의 주요 교육투자 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신뢰 및 관용성,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별로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해 실시한 정책사업들을 분석하여 한국의 사회적 자본 정책 예산 분석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사회적 자본 수준 분석

국내외 사회적 자본 수준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분석하였다. 먼저 국내외 사회적 자본 조사 자료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주요지표를 산출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분석·종합하였다.

국외 자료로는 European Science Foundation의 유럽사회조사(ESS), IMD의 세계경쟁력연구(WCY), 국제사회조사기구의 ISSP,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의 시계가치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사회적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자료로는 한국종합사회조사, KDI의 사회적 자본 실태조사, KRIVET의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개발 조사 연구자료 및 연구결과를 분석·고찰하여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구명하였다.

3. 사회적 자본 투자정책 분석

본 연구에서 구안된 정책 예산 분석틀을 토대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사업 투자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의 2009년도 정책사업 내역을 분석한 후, 관련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여 각 단위사업이 해당되는 사회적 자본의 영역 및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을 조사·분석하

였다. 사회적 자본의 영역은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신뢰 및 관용성,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을 구분하였고,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은 사회적 자본 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사업(SCF1: Social Capital Formation Policy 1), 사회적 자본 형성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사업(SCF2: Social Capital Formation Policy 2),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정책(SCF3: Social Capital Formation Policy 3)으로 구분하였다.

전문가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부처별 사회적 자본 형성 관련 정책사업의 2008년, 2009년 예산규모를 분석하였으며, 부처별 전체 사업 예산 대비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사업의 비중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사업의 예산집행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부처별 주요 사회적 자본 관련 사업 중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신뢰 및 관용성,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에 해당되는 사업의 예산집행 사례를 분석하여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 방안 마련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 교육투자 효율화 방안 도출

국내외 사회적 자본 수준 분석, 정부부처별 사회적 자본 형성 관련 예산규모 및 집행과정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 효율화 방안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자본 교육투자 효율화를 위한 가정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 측면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 규모의 확대, 교육투자 집행의 효율화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제3절 연구방법

1. 문헌 연구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회적 자본 영역 및 구성요소, 관련 측정 지표에 관한 연구보고서, 학술지, 정책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사회적 자본 영역 및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영국, 캐나다, 미국, 세계은행의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연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정책 사례를 분석하였다.

한편,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 정책 및 세부 절차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부예산의 투자 체계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여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예산 투자 현황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실증 자료 분석

국제적 수준의 국가별 사회적 자본 실증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사회적 자본 비교 열위 및 비교 우위 영역 분석하였다. 유럽사회조사(ESS), 세계경쟁력연보(WCY), ISSP, 세계가치조사(WVS) 등의 연도별 분석자료를 해당 홈페이지 및 주관 기관의 협조를 얻어 수집하였으며, 조사항목 중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구성요소를 추출하여 주요 선진국 및 한국의 사회적 자본을 분석·비교하였다. 또한 한국종합사회조사, KDI, KRIVET이 기 실시한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하여 국제 수준의 사회적 자본 조사 항목 이외의 지표들에 대한 사회적 자본 수준을 추가 분석하였다.

3. 전문가 조사

정부 부처별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사업이 사회적 자본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분류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 관련 교수,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의 2009년도 정책사업 예산 내역을 분석하여 사회적 자본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명, 사업목적 및 내용을 토대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정책사업의 사회적 자본 영역 설정,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을 질의·응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사회적 자본 영역은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한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신뢰 및 관용성,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직접적인 사업인 경우 SCF1, 간접적인 사업인 경우 SCF2,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사업인 경우 SCF3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관련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여 총 70명을 대상으로 On-line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 중 30명(회수율 42.9%)의 응답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회수율이 다소 낮은 수준이나, 응답자의 경력 및 연구경험이 관련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고, 통계적 처리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최소 인원을 초과하였다고 판단하여 최종 응답한 3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빈도 및 백분율 등 기술통계를 활용하였으며, 각 사업별 사회적 자본 영역 설정 및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은 가장 많은 응답빈도를 나타낸 영역 및 관련성으로 결정하였다.

KIHASA

02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와 정책영역

제2장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와 정책 영역

제1절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자본(capital)이란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이고 원천이다. 사회의 진보와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원천으로서 자본은 그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천연자원, 시설, 돈 등과 같은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과 그러한 물적 자본을 바탕으로 잉여가치를 창출해내는 노동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인적 자본 등이 있다. 이러한 인적·물적 자본에 덧붙여서 사회 전체적 맥락에서 공공성을 지닌 부가가치의 창출에 기여하는 제3의 자본 형태로써 사회적 자본 개념이 대두되었으며, 사회적 자본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PRI, 2003). 국제적으로 각국(국제기구) 그리고 학계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정의는 다양하며 이와 관련된 논쟁 역시 활발하다.

가장 먼저 사회적 자본 개념을 구체적 용어로 소개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규정한 Bourdieu(1986)는 사회적 자본이란 지속적 네트워크의 소유 정도와 관련지어진 실제적 혹은 잠재적 자원의 결합체로써 여기서 지속적 네트워크는 상호 친밀성 내지 인식의 관계를 어느 정도 제도화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Bourdieu는 경제적 자본,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의 세 유형으로 자본의 형태를 구분하면서 이러한 자본들은 상호 전환이 가능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Putnam은, 지역사회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간의 수평적 결합체로써 시민 참여 네트워크의 형태를 취하는 사회적 자본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조정과 상호 협력을 촉진시키는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신뢰 등과 같은 사회적 조직체의 특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북부 이태리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경제적 번영과 효율적 통치 구조를 가진 지역사회는 강력한 '시민 참여의 규범과 네트워크'를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Putnam, 1993).

Coleman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은 그 구조 내에서 행위자의 특정 행동을 촉진시키는 사회 구조를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형태의 집합체 이상으로써 하나의 원천이며 행위자에게 유용한 특수한 종류의 자원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다양한 실체의 복합체로써 두 가지 공통 요소를 가진다. 첫째, 사회구조의 일부 측면을 구성하며 둘째, 사회구조 내에서 행위자의 특정 행동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요소들은 위계질서 내지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와 같은 수직적 결합체를 추론해 내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은 그 특성이나 활용 여건에 따라 이로울 수도 있고 무용(useless)할 수도 있으며 해로울 수도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이 구체화된 형태를 서로 구분하여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 간의 관계로 구체화된다고 하였다(Coleman, 1988).

Coleman은 사회적 자본의 형태와 기능을 구분하여 거래비용의 감소, 정보소통의 통로, 도덕과 규범의 강화를 통한 공공재의 공급 등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이재열, 1998; Schuller & Field, 1998).

사회적 자본의 첫 번째 기능은 신뢰를 통해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이다. 높은 신뢰가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서면 계약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상세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없는 만큼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법적 문서나 근거 없이 사회 구성원간의 상호 신뢰를 전제로 채권과 채무가 형성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주어진 여건에서 사회 구성원이 가지는 의무감은 구성원간의 신뢰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들간의 신뢰도

가 높으면, 의무감을 상호 공유하게 되고 사회적 자본이 높아진다. 따라서 법적 분쟁이 드물어지며, 개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다양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경제적인 성장이나 후진성의 이면에는 상호신뢰의 여부가 자리잡고 있으며, 높은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간의 장기적인 결합을 가능하게 하므로 높은 신뢰사회에서는 공식적 제도가 덜 발전하더라도 대안적 수단을 찾아내기 쉽다.

사회적 자본의 두 번째 형태는 사회적 관계에 내재하는 정보원으로서의 잠재력이다. 정보는 행동을 위한 토대가 되지만, 정보의 획득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러나 특정한 이슈에 대해 지속적이고도 심층적인 관심을 유지하는 전문가를 알고 있는 경우,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전문가의 견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정보를 추적하고 축적할 때 생겨나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대학교수들이 서로간에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것이 그 예이며, 사업가들은 정보망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로 인해 사업운영경비를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올리기도 한다. 또한 조직 내부에서 사회적 자본을 많이 축적한 사람일수록 승진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Burt, 1997).

세 번째 형태는 규범, 혹은 효과적인 사회 제재력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자본으로써 사람들이 공동으로 공익을 추구하도록 격려하거나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높은 학업성취를 칭송하는 사회적 규범이 강화되면 학교의 교육기능을 발휘하기가 쉬워진다. 또한 사회적인 규범이 강화되면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제재를 가하는 효과를 갖는다. 시민적 규범이 효과적으로 기회주의를 제재할 수 있게 되면, 감시비용과 계약이행을 감독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다양한 투자와 경제적 거래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시민적 도덕감을 증대시켜 유권자로 하여금 공직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집합행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높은 신뢰사회에서는 정책의 장기적인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관료의 정책수행이 보다 추진력을 갖게 되고 혁신에의 인센티브가 강해지며, 동시에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와 수익률이 높아

진다. 공식적 교육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교육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지고 사교육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사회적 자본의 개념에 관해 연구한 대표적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Bourdieu와 Coleman, Putnam의 관점은 각기 차이가 있다. 불평등과 배제의 재생산이라는 관점을 가진 Bourdieu의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 멤버십을 통해 이익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즉 투자를 통해 경제적·문화적 자본으로 전환되어 불평등을 재생산할 수 있는 사유재의 성격을 갖는다. Coleman은 다소 보수적이고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의 공공재적 성격을 논한다. Putnam은 정치경제적 발전과 시민공동체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을 거시적 차원에서의 공동체 정체성, 시민적 참여와 네트워크,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위한 '집단적 자산'으로 간주하였다(구혜정, 2002).

또 다른 연구(Adler & Kwon, 2000)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에 대한 많은 정의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유형은 개인 차원에서 행위자와 다른 행위자와의 관계 유지에 초점을 두었고, 둘째 유형은 집단 차원에서 조직 내부 구조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유형은 주로 네트워크 이론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회학자들의 관점이며, 행위를 촉진하는 근원으로써의 사회적 자본을 강조한다. 개인과 집단의 행동은 사회적 네트워크내의 멤버십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으며, 사회적 자본은 개인과 회사가 경쟁구조 속에서 성공 또는 실패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Uphoff(2000)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이란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심리적·인지적·제도적 자산 및 이와 관련된 자산의 축적체로써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행위의 총량(혹은 가능성)을 증진시킨다.

둘째 유형은 정치학자와 발전경제학자들의 관점이며, 집단 행위자(집단, 조직, 지역사회, 지방, 국가 등)의 구조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사회적 자본의 내부적 연계 양상, 통합성 및 연계의 결과에 의한 이익에 초점을 맞춘다.

개인 차원의 외부적 시각과 집단적 성향의 내부적 시각간의 구분은 관점

의 문제이고 분석 단위의 문제이며, 두 시각이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므로 두 유형의 개념을 통합된 시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표Ⅱ-1〉 참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한 개념 정의에 근거하여 OECD(2000)는 사회적 자본이란 '집단 내 혹은 집단간의 상호협력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규범, 가치, 이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상호협력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규범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개념 정의의 객관적인 요소를 구성하는 네트워크는 상호연계적 행동을 하는 행위자의 행동과 관련된 것이며 규범, 가치, 이해 등은 행동 규범과 규제 뿐 아니라 개인과 집단의 주관적인 성향과 태도와 관련된 것이다.

결국 사회적 자본이란 어느 정도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의 형태와 내용에 의해 창출되는 개인적·집합적 행위의 근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Adler & Kwon, 2000).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상호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자원인 사회적 자본은 인적 자본과 물리적 자본과는 구별되며 한 개인에 한정된 자산이라기보다는 상호관련적 성격을 가지는 자본이고, 주로 집단적으로 분배된 공공자산이며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사회적 투자를 통해 형성된다(현영섭·홍영란).

〈표 Ⅱ-1〉 사회적 자본의 정의

저 자	사회 자본의 정의들	외부적/내부적
베이커(Baker, 1990)	행위자(actor)들이 특정 사회 구조들로부터 얻어낸 뒤, 자신의 관심에 따라 이용하는 자원 : 그것은 행위자들간의 관계 변화에 의해 창조됨	외부적
벨리보, 오'레일리, 웨이드(Belliveau, O'Reilly & Wade, 1996)	한 개인의 개인적 네트워크와 엘리트 제도적인 협력 관계(elite institutional affiliations)	외부적
부르디외(Bourdieu, 1986)	서로 면식이 있는 다소간 제도화된 관계들의 영속적인 네트워크 소유와 연계되어 있는 실제적 혹은 잠재적 자원의 집합 특정 상황에서는 경제 자본으로 변환할 수 있고 고귀함이라고 불리는 형태로 제도화될 수 있는 사회적 의무(관계)들로 구성됨	외부적
부르디외, 와퀀트	서로 면식이 있는 다소간 제도화된 관계들의	외부적

저 자	사회 자본의 정의들	외부적/내부적
(Bourdieu & Wacquant, 1992)	영속적인 네트워크 소유에 의해서 개인 혹은 집단에 생기는 현실적·실제적인 자원들의 합	
박스맨 외(Boxman et al, 1991)	후원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람들의 수와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원들	외부적
버트(Burt, 1992)	친구, 동료, 보다 일반적인 교제를 통해서 얻는 재정적·인적 자본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들	외부적
콜만(Coleman, 1990)	사회적 자본은 그 기능에 의해서 정의되며,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들을 가진 여러 가지 실체들: 이는 모두 사회적 자본의 관점을 약간 포함, 그 구조 안에 있는 개인의 특정행동들을 촉진. 자본의 다른 형태들처럼 사회적 자본 역시 생산적이어서, 특정한 목적들의 성취를 가능하게 해줌	외부적
포트(Portes, 1998)	사회 네트워크 혹은 다른 사회적 구조안에 멤버십을 소유하여 이익을 지키는 행위자들의 능력	외부적
브렘, 란(Brehm & Rahn, 1997)	집단적 행위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촉진하는 시민들 사이의 협력적인 관계망	내부적
잉글하트(Inglehart, 1997)	자발적인 조합들의 광대한 네트워크가 발현되는 신뢰와 관용의 문화	내부적
후쿠야마(Fukuyama, 1995, 1997)	집단과 조직의 공통적인 목적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능력(1995) 협력이 허용된 집단 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비공식적인 가치나 규범의 특정한 집합(1997)	내부적
토마스(Thomas, C. Y., 1996)	시민 사회 내에 집단 전체의 발전을 촉진하는 자발적인 수단들과 과정들이 형성되는 것	내부적
포트, 센센부레너 (Portes & Sensenbrenner, 1993)	경제 활동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집단 구성원들의 경제적 목표와 목표 추구행동에 영향을 주는 집단 내 행동에 대한 기대들	내부적
푸트남(Putnam, 1995)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 조정과 공동 협력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 조직의 형태	내부적
로리(Loury, 1992)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관계를 자연스럽게 발생시키거나 시장(marketplace)에서의 중요한 기술과 특성의 습득을 돕는... 사회적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원인인 재정적인 유산만큼 중요한 하나의 자산	내·외부적
나하피에트, 고살 (Nahapiet & Ghoshal, 1998)	개인이나 사회 단위의 관계 네트워크 안에 깊이 내재해 있으면서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가능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획득된 실제적·잠재적인 자원들의 합.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집이 가능한 네트워크와 자산들을 둘 다 포함	내·외부적

저 자	사회 자본의 정의들	외부적/내부적
페너(Pennar, 1997)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 성장에 작용하는 사회적 관계망들	내・외부적
쉬프(Schiff, 1992)	일련의 사회구조적 요소들로써 인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생산 및 효용 기능을 위한 투입요인이나 전제들	내・외부적
울콕(Woolcock, 1998)	한 사람의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호 관계의 정보, 신뢰, 규범들	내・외부적

출처: Adler, P. S. & Seok-Woo, Kwon.(2000). Social Capital : The Good, the Bad, & the Ugly. in E. L. Lesser(ed.)(2000). Knowledge & Social Capital: Foundations & Applications. Boston : Butterworth Heinemann.

2. 사회적 자본의 주요 구성요소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해외선진국, 국제기구, 학자들에 따른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주요 구성요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영국

사회적 자본 측정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인 영국은 사회적 자본의 특성상 개인 수준에서의 사회적 자본 측정보다는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간의 네트워크에 대한 측정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한다. 영국의 경우 사회적 자본의 측정과 관련된 주무부서는 국가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으로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통합설문지(Harmonized Question Set)를 개발하였고, 이를 위하여 사회적 자본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사회적 자본을 '집단 내부 혹은 집단 사이에서 협력을 촉진하는 공유된 규범, 가치 그리고 이해가 함께 갖추어져 있는 네트워크(Cote & Healy, 2001: 41)'라고 정의하고 있다.

영국 국가통계청에서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의에서 사회적 자본을 규정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로 집단, 협력, 공유된 규범・가치・이해, 네트워크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ONS, 2003).

· 집단 : 집단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에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집단이라는 말 자체가 집단구성원의 범위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국가통계청에서는 지역 집단(예: 특정 이웃에 사는 사람들), 전문 집단(예: 동일 직업에 있는 사람들, 지역 연합회 혹은 자원봉사조직의 구성원), 사회 집단(예: 가족, 교회에 기반을 둔 그룹, 친구들의 그룹), 그리고 가상 집단(예: 공통의 이익 그룹을 통한 채팅룸에서 인터넷을 통해 생성된 네트워크)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협력 : 사회적 자본의 정의에서 협력은 그룹이 유지되고 필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자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즉, 자원으로서 협력은 사회적 자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집단이 일정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구성원간의 관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협력은 사회적 자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협력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그룹 구성원은 그룹의 규범이나 가치를 지향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의 행위를 해야 한다.

· 네트워크 :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 개념의 핵심을 구성한다. 특히 영국의 경우 네트워크가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 요소로 또는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는 사람간의 형식적 그리고 비형식적 관계로 정의된다. 즉, 사람들 간의 다양한 관계를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사람들이 가족, 직장, 이웃, 지역 협회 그리고 비공식적 및 공식적 회의 장소 등에서 서로 교류할 때 축적되는 관계를 의미한다(ABS, 2000). 따라서 형식적 관계라는 것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상황이 공식적인 회의장소라든지, 회사에서의 공적 관계라든지 하는 등의 상황인 경우에 해당된다. 그리고 비형식적 관계는 네트워크의 형성 상황이 가족이나 이웃과 같이 비형식성이 강하고 결속적 특성이 강한 경우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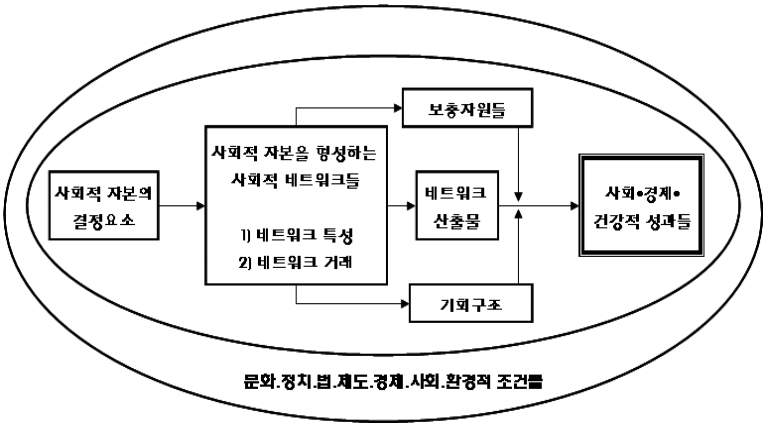
· 공유된 규범, 가치, 이해 : 공유된 규범, 가치, 이해는 사회에서 공통적이고 대부분의 개인들과 그룹에 의해 행해도 '좋은 것'으로서 수용되는 행동에 대한 공유된 태도와 관련된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는 것 혹은 사고 장면에서 응급서비스를 호출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행동 규범은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에 의해 수용되고 이해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보면 공유된 규범, 가치, 이해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인 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한 소프트웨어에 해당된다. 즉 이런 소프트웨어가 운영되어야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협력적 관계의 집단의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나. 캐나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공공정책연구소는 보다 효과적이고 타당한 공공정책의 계획 및 실행을 위해서 2003년 사회적 자본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정책 입안 및 실행의 관점에서 비교적 생소한 개념이었다. 이에 캐나다 공공정책연구소에서는 우선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규정하고 사회적 자본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준거들을 개발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캐나다 공공정책연구소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결정요소에서 시작하여 사회적 자본의 성과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일련의 체제적이면서 선형적인 개념틀을 제시하였다. 이 개념틀에는 사회적 자본의 결정요소,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네트워크 산출물, 사회·경제·건강적 성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사회적 자본의 개념틀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특성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자본 측정 연구의 체계성과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II-1] PRI의 네트워크 중심 사회적 자본의 개념틀



출처: 조영하(2007), 84.

캐나다 공공정책연구소에서 제시하는 네트워크 중심 사회적 자본의 개념틀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사회적 자본의 결정요소: 사회적 자본의 결정요소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동인 또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 결정요소는 네트워크에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또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영향을 주는 요소들로써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참여하게 만드는 영향력을 말한다. 사회적 자본의 결정요소는 크게 개인 수준과 지역사회 수준으로 구분된다. 개인 수준에서는 인구통계, 취업경력, 교육, 문화·민족적 배경, 지각 및 태도 등이 주요한 요소로 포함된다. 그리고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네트워크, 네트워크 관련 인프라 구조, 지역사회의 규범과 가치 등이 사회적 자본의 결정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관련되는 중요 결정요소로 기회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회비용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형성하고 유지하는 등의 활동에 지불되는 비용에 대한 기회비용인데 기회비용이 높을수록 네트워크의 형성과 유지는 어려워진다.

- 사회적 네트워크: 캐나다 공공정책연구소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정의하기 때문에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캐나다 공공정책연구소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조와 구성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네트워크의 밀도, 크기 등을 고려한 구조와 구성이 측정의 주요 내용이 되고 있다.

- 네트워크 산출물: 네트워크 산출물은 사회적 자본으로써 네트워크를 통해 발생되는 결과이다. 네트워크 산출물은 개념틀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경제·건강적 결과와는 달리 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이다. 즉,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유지하는 동안 개인에게 발생되는 다양한 상황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타인으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받는다든지 하는 등의 결과를 네트워크 산출물이라고 정의하였다.

- 보충자원: 보충자원은 사회적 자본의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추가적 또는 보완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의미한다. 보완적이라고는 하지만 사회적 자본이 그 결과를 발생시키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보충자원에는 물적 자본, 재정적 자본, 인적 자본 등이 포함된다.

- 기회구조: 기회구조는 사회적 자본이 결과 또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적 요소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구직자의 경우 구직과 관련되는 경제적 환경이라든지, 계절적 상황 등은 구직과 관련된 환경적 요소들로서 기회구조에 포함된다.

다. 미국

미국의 경우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가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서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맹주로서 자리매김해온 미국은 시민참여, 봉사활동 참여, 정치활동 참여 등에서 개방적 문화를 유지하고 개별 국민들의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 중심의 유럽의 사회적 자본 연구 성향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 참여 중심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 접근방식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참여 중심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의 대표적 사례는 '미국의 사회참여'를 주제로 Saguaro 세미나에 기초한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 벤치마크 조사(Social Capital Community Benchmark Survey: SCCBS)이다.

Saguaro 세미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학자는 Putnam이다. Putnam은 1990년대 말 정책담당자들과 관련 연구자 9명과 함께 3년에 걸쳐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실제적 방안에 대해 세미나를 통해 논의를 계속하였다(김태종, 박정후, 2006). 이 세미나를 Saguaro 세미나라고 한다.

Saguaro 세미나 및 SCCBS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의는 Putnam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의와 유사하다. Putnam은 1970년부터 약 20년 동안 이탈리아 지방정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면서 특정 지역의 발달과 관련된 특성에 차이가 존재하고 그것이 사회적 자본의 차이와 관련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지역의 발달과 관련된 특성에는 산업생산성, 사회경제적 개발, 제도적 수행, 시민의 역동성 등이 포함되었다. Putnam은 산업생산성 외의 요소들을 비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하면서 사회적 자본으로 명명하였다(임경수, 2007).

또한 Putnam은 Saguaro 보고서를 통하여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4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4가지 원칙은 사회적 자본 영향의 원칙(the social capital impact principle), 재순환의 원칙(recycling principle), 연결의 원칙(the bridging principle), C2C의 원칙(consumer to consumer, citizen to citizen, community to community principle)이다(Putman, 2002).

사회적 자본 영향의 원칙은 사회적 자본이 자원(resource)으로서 뿐만 아니라 제도, 프로그램, 개인행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이제 기존의 경제적 가치나 다양성과 같은 원칙들 대신 제도의 변화, 개인들의 행동, 새로운 시민사회의 형성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서 적용될 수 있다.

재순환의 원칙은 사회적 자본은 한계체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사용할수록 줄어드는 물리적 자본과는 달리 재생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이 사회적 자본이다. 마치 지식과도 같이 사회적 자본은 사용할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용할수록 증가하는 자본일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을 활용할수록 보다 많은 사람, 집단, 모임과 관계를 맺게 되고 더 많은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새롭게 재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 재순환 방법에 대하여 정책입안자들이나 학자들이 관심을 두어야 한다.

연결의 원칙은 사회적 자본이 서로 상이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사회주체들 간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한다.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나 성과 같은 중요한 특성에서의 차이가 존재하는 개인들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법이 바로 사회적 자본을 개발하는 길이다. 국가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회의 조화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자본의 연계적 특성은 매우 강조된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도 매우 중요하며, 집단과 집단 간의 연계성의 측면에서도 연결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다양성이 강한 국민으로 구성된 미국의 경우 한 조직 내에 존재하는 여러 집단들 간의 연계성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연결형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자본 중에서도 다양성이 극대화되는 조직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C2C의 원칙은 사이버 세계의 확산과 관련된다. C2C는 '고객 대 고객'의 의사소통을 의미하다가 점차 그 개념이 확대되어 '시민 대 시민', '지역사회 대 지역사회'로 까지 확산되고 있다. 원래 조직에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성원 간에 직급에 의한 상하 집단을 구분하게 되

고 상사와 부하직원간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는 수직적 의사소통(vertical communication)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리더십은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수직적 관계에서 발휘되었다. 그러나 현대 조직 또는 현대 사회는 조직이나 사회에서의 상하관계보다는 대등한 관계의 의사소통이 중요해졌다. 이런 의미에서 동등한 수준의 시민과 시민,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등의 관계가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리더십유형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의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수평적 커뮤니케이션(horizontal communication)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C2C의 원칙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서 기존과는 달리 수평적 의사소통, 대등한 관계에서의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의 동료 간의 호혜성이나 지역사회 간의 호혜성 등의 근간이 된다.

Saguaro 보고서에 기반을 두고 실시된 SCCBS 사업의 경우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발생되는 호혜성의 규범으로 정의하였다(SCCBS, 2007). 또한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사회적 신뢰, 규범, 네트워크의 축적된 총합으로 정의되기도 한다(Saguaro Seminar, 2007). 이런 정의에서 보면 Saguaro 보고서 및 SCCBS에서 사회적 자본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 시민참여 등으로 구성된 총체로서 정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World Bank

World Bank의 사회적 자본 관련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을 통한 경제적 가치의 향상, 자원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의미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과 교육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기도 하였다.

사회적 자본 측정을 주제로 한 World Bank의 연구보고서들은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나 기관 또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교육과 관련성이 깊은 최근 연구사례들이 등장하였다. World Bank의 Bain 외(2002), Grootaert(2001),

The World Bank(2002), Grootaert 외(2004), Ibanez 외(2002), Chase와 Holmemo(2005), Wetterberg(2004), Knack(2000)의 연구보고서들에서 제시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 정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관계성, 네트워크, 규범, 신뢰를 통해 다양한 수준의 집합체가 공유된 공동목표를 달성하고자 집합적 행동을 실천하도록 하는 힘이라는 정의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둘째, 공통적인 부분과 함께 각 연구보고서 마다 독특한 영역 또는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집합체는 일반적으로 개인과 개인, 가정, 단체,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등으로 다양하다.

사회적 자본을 처음으로 이론화한 Bourdieu는 사회적 자본을 개인적 차원으로 귀착시킨 반면 Knack(2000)은 국가와 같은 큰 수준에서 집합적 행동이 요구될 때 협력을 요청하는 강력한 시민규준과 일반적인 신뢰의 형태 안에서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였다.

또한 World Bank(2000)는 사회적 자본을 다음과 같이 3가지 영역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첫째 영역은 가족, 이웃, 가까운 친구들을 포함하며 결속형(bonding) 사회적 자본을 의미한다. 이들은 자주 대면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둘째 영역은 같은 인종, 민족, 종교 혹은 직업이 같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상호작용은 첫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헐적이고, 수단적이며,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자본을 연결형(bridging)이라고 한다. 셋째 영역은 가난한 사람들과 은행, 법원, 학교, 병원 등 공식적 조직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 때 사회적 자본을 고리형(linking)이라고 한다.

World Bank의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지역사회 또는 국가 수준에서 사회적 자본의 정의와 역할 등을 탐색한 보고서들이다. 예를 들면, Bain 외(2002)는 사회적 자본이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간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집단대처와 위기관리 전략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하였다. Grootaert(2001)는 사회적 자본을 미시, 중시, 그리고 거시의 수준에서 개념화 하면서 거시 단계에서 사회적 자본은 정부,

법의 역할, 사회와 정치적 자유와 같은 공공제도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또한 Bosnia-Herzegovina 연구(The World Bank, 2002)는 상호믿음과 공공기관의 자신감(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그리고 시민참여를 사회적 자본에 포함하였다. Grootaert 외(2004)는 사회적 자본이 물리적 자본과 달리 인간관계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정보, 아이디어, 지원 등의 자원을 의미하며 공식적 시민조직과 다양한 비공식적 네트워크 안에서 관계의 본질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World Bank의 다양한 연구들에서는 제시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의와 주요 구성요소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Ⅱ-2〉와 같다. 아래 표에서 보면, 연구에 따라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의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우선 네트워크가 중요한 사회적 자본의 요소로서 등장한다는 점이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네트워크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극소수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의 모습을 그려보는데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나 공공기관 등의 개인적 수준을 넘어서는 영역이 사회적 자본과 관련되는 주요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제도,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이 사회적 자본의 정의에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이 개인 수준의 조사를 통하여 측정되어야 하는 한계점은 존재하지만, 현실에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존재하는 곳은 개인 수준이 아니라 집단이나 지역사회 등 보다 집합적 수준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표 Ⅱ-2〉 사회적 자본의 정의 또는 구성요소

출처	사회적 자본의 정의 또는 구성요소
Bain 외(2002)	신뢰성과 단결성을 기초로 집합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결합, 가치와 규범
Grootaert (2001)	미시, 중시, 거시 수준으로 구분되며 미·중시에서 네트워크와 규범을 의미하며 거시수준에서는 공공제도를 포함함
The World Bank(2002)	시민참여, 상호믿음, 공공기관에서 자신감

출처	사회적 자본의 정의 또는 구성요소
Grootaert 외 (2004)	인관관계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자원 및 관계의 본질과 범위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주는 다양화된 방식 안에서의 특성을 기술하는 개념)
Ibanez 외 (2002)	공유된 이익을 위해 집합적 행동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규범, 그리고 신뢰로 구성
Chase & Holmemo (2005)	지역사회를 조직화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집단 구성원간 신뢰, 포용, 네트워크, 집합적 행동 그리고 정보와 의사소통 영역을 포함
Wetterberg (2004)	친근감이나 상호 인지적 관계가 내면화된 관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소유와 연결되어 현재 또는 미래의 자원 총합
Knack(2000)	집합적 행동이 요구될 때 협력을 요청하는 강력한 시민규준과 일반적인 신뢰의 형태 안에서 발생

마. 기타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

사회적 자본의 다른 측면에 주목한 North(1990)와 Olson(1982)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 뿐 만 아니라 규범과 사회적 구조를 형성하는 사회·정치적 여건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시민적·정치적 자유 등과 더불어 정부, 정치 기구, 시장, 법률, 법정 체제(court system)와 같은 보다 형식화된 제도적 관계를 포함하는 것이다(Grootaert, 1998). 상보성과 대체(substitution)의 역동성에 대해 검증한 Narayan(1999)은 사회적 자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국가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여, 개인과 집단을 이어주는 시민 참여 뿐 만 아니라 국가의 효율성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Colleta & Cullen, 2000).

이 외에도 Fukuyama(1995)는 Coleman의 논의를 발전시켜 '신뢰'를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 측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신뢰는 시민 참여 네트워크 내의 상호 호혜적 규범 및 성공적 상호 협력 관계를 통해 축적되어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도덕과 가치로 구체화되는 윤리적·도덕적 습관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문화적 연원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하였다. 상호 호혜성, 시민적 임무, 도덕적 의무 등은 안정적 사회의 형성과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건전하고 역동적인 시민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의 습관, 관습, 윤리 의식

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이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형성되어지며,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인식 확대를 통해 육성되어진다. Luhmann(1979) 또한 신뢰를 심리적 차원이나 제도 수준에 환원시키기 어려운 사회구조의 한 차원으로 이해하면서, 신뢰란 어떤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한 행위자가 갖는 자신감이라고 하였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위 주체들 간에 존재하는 축적된 신뢰, 규범, 공유된 가치 의식 등을 사회적 자본으로 지칭한 Furtado(1999)의 논의에서 다양한 행위 주체들은 개인, 정부/공공 제도, 민간 부문, 시민 사회 집단 등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본은 공유된 사회적 자원, 신뢰 네트워크의 형성에 기여하며 공동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과 집단행동을 촉진시킨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공유된 목적과 관심사의 성취를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정부, NGO, 시민 개개인 등 다양한 행위 주체들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전제한다.

사회학, 인류학, 정치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제기된 사회적 자본 논의에 있어서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되는 합의점은 '사회적 자본은 관계적(relational)이다'는 것이다.[1] 즉, 사회적 자본은 인간 간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개념 정의에서는 네트워크에서의 멤버십과 집단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관장하는 규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결국 사회적 자본은 지식의 축적과 신뢰의 형성을 통해 호혜성과 협동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제적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합의가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은 개인과 집단의 행동을 촉진시키는 관계 구조, 네트워크, 상호 호혜적 규범, 신뢰 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현영섭 · 홍영란).

---

1) "경제적 자본이 인간의 은행계좌에 있고, 인적 자본이 인간의 머리에 있는 반면, 사회적 자본은 인간의 관계 구조에 있다." (Portes, 1998).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 구조의 속성으로써 사회적 자본은 사회에서 이득을 취하는 개인의 사적 자산이 아니다." (Coleman, 1990).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조 속에 내재해 있으며, 공공선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Narayan, 1997).

제2절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 영역

1. 국내외 사회적 자본 관련정책

가. 국내 정책 분석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증대는 2001년에 추진되기 시작한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부터 이미 '사회적 신뢰 회복,' '사회통합 촉진'등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7년 동안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책의 특성과 추진 실태, 성과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래서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사회적 자본 형성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홍영란, 현영섭; 2009).

(1)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 분석대상·분석방법

분석대상은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기저로 한 세부과제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2001-2005)」
-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2006-2010)」
-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2006년도 시행계획(2006)」

분석방법으로는 시민사회·사회참여, 신뢰·관용성, 네트워크·파트너쉽의 영역으로 하였고 정책유형 별로는 사회적 자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SCF1), 간접적으로 관련된 정책, (SCF2), 인프라 구축(SCF3)으로 구분하였다.

〈표 Ⅱ-3〉 국가인적자원개발 분석틀

영역	세부과제	정책유형		
		1	2	3
시민의식 · 사회참여				
신뢰 · 관용성				
네트워크 · 파트너쉽				

(2)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계획 분석 결과

정책 목표로는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강화, 사회적 신뢰구축과 결속의 강화,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회적 자본 형성과 관련된 정책 수는 17개로 전체 119개 과제 중 약 1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제 수가 극히 적은 것으로 보였다.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와 관련된 영역에 해당하는 세부과제는 민주시민의식 함양,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촉진, 직업윤리 정립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홍영란, 현영섭, 2009).

신뢰 및 관용성과 관련된 영역에 해당하는 세부과제는 취약계층,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다양성에 대한 이해 촉진, 신뢰에 기반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고,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과 관련된 영역에 해당하는 세부과제는 지역사회와 교육기관(학교 및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을 촉진 · 지원하는 내용을 가진 과제들이 주를 이루었다(현영섭, 홍영란).

〈표 Ⅱ-4〉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 중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

영역	세부과제	유형		
		1	2	3
시민의식 사회참여	Ⅰ-2-1-1.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문화/행자)			○
	Ⅰ-4-3-1. 고령자 · 노인의 평생학습 및 봉사활동 지원 강화(교육/복지, 노동)		○	
	Ⅰ-5-1-1. 민주시민 기초역량 함양(교육)	○		

영역	세부과제	유형		
		1	2	3
	Ⅰ-5-1-2. 자발적 시민 참여 확대(행자/교육, 문화)	○		
	Ⅰ-5-3-2. 고객중심의 기업문화 및 직업윤리 정립(재경/ 교육, 노동)	○		
신뢰 관용성	Ⅰ-3-3-5.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지원(교육/복지, 노동)		○	
	Ⅰ-4-2-3. 장애인 차별해소 방안 마련(복지)			○
	Ⅰ-4-4-1.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보편적 정보접근 환경 조성(정통/교육, 행자)			○
	Ⅰ-4-4-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법, 제도 정비(정통/교육)			○
	Ⅰ-5-2-1. 인권존중 의식 함양(교육/국가인권위)	○		
	Ⅰ-5-2-2. 세계시민의식 형성을 위한 외국문화 이해 확대(교육/외교, 문화)	○		
	Ⅲ-2-1-1.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 인사관행 정착 유도(노동/교육)		○	
	Ⅲ-2-2-1. 근로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신 노사문화 유도(노동/교육)		○	
	Ⅲ-3-2-1. 남녀평등 고용환경 구축(노동/여성)			○
네트워크 파트너쉽	Ⅰ-1-2-3.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강화(교육/행자)	○		
	Ⅰ-2-2-1. 학교와 지역사회 관련 단체 간 협력체제 구축(문화/교육, 행자)			○
	Ⅰ-3-3-3. 평생학습중심의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추진(교육/행자)			○

전반적인 영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신뢰 및 관용성에 해당하는 과제 비율이 가장 높은(52.9%) 반면,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에 해당하는 과제의 비율이 가장 낮은(17.6%)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와 관련된 정책들은 주로 사회적 자본 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두 영역에서는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정책들이 주를 이루었다.

〈표 II-5〉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의 영역별 · 유형별 특성

영역별 \ 유형별	SCF1	SCF2	SCF3	계
시민의식, 사회참여	3개	1개	1개	5개
신뢰, 관용성	2개	3개	4개	9개
네트워크, 파트너십	1개	-	2개	3개
계	6개	4개	7개	17개

전반적인 정책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정책들이 가장 많이(41.2%) 추진되었으며, 사회적 자본 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책들도 그에 못지않게(35.3%) 추진되었다.

사회적 자본 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은 주로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인프라 구축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은 신뢰 및 관용성 영역에 해당하는 정책들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계획 분석 결과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 목표는, 신뢰사회 구축을 토대로 사람과 지식 주도형 국가성장 전략 채택, 2010년 인적자원분야 국가경쟁력 세계 10위권 진입하고자 한다.

기본계획은 4대 정책영역별 20개의 정책분야에서 총 200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으나 2006년 수립된 시행계획에서 211개 세부과제로 변경되었다.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회적 자본 형성과 관련된 정책수는 14개로 전체 211개 과제 중 약 6.6%를 차지해 1차에 비해 사회적

자본 형성 관련 정책과제 비율 감소하였다.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와 관련된 영역에 해당하는 세부과제는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촉진, 인권 및 인성교육, 환경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신뢰 및 관용성과 관련된 영역에 해당하는 세부과제는 새터민과 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과 이들 문화를 이해하고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다민족, 다문화에 대한 이해,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표 II-6〉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 중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

영역	세부과제	유형		
		1	2	3
시민의식 사회참여	III-4-1. 인성, 창의성 교육 강화(교육)	○		
	III-4-4.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 활성화(복지)	○		
	III-4-5.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청소년의 참여, 인권증진(청소년위)	○		
	III-4-6. 자원봉사 인프라구축 및 활성화(행자)			○
	III-4-7. 청소년 등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환경)	○		
	III-4-8. e-환경교육 추진(환경)	○		
	III-4-9.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환경)	○		
신뢰 관용성	Ⅰ-4-6. 국제이해교육 강화(교육)	○		
	III-3-3. 양성평등한 고용환경의 구축(노동)			○
	III-5-5. 새터민 자녀 교육지도(교육)		○	
	III-5-6.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지원(교육)		○	
	III-5-7. 국제결혼가정 자녀 교육지원(교육)		○	
네트워크 파트너십	III-5-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교육)	○		
	III-5-16.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능력개발지원(청소년위)	○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과 관련된 영역에 해당하는 세부과제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교육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전반적인 영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에 해당하는 과제 비율이 가장 높은(50.0%) 반면,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에 해당하는 과제의 비율이 가장 낮은(14.3%)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그리고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과 관련된 정책들은 주로 사회적 자본 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신뢰 및 관용성 영역의 정책들은 주로 간접적으로 관련된 정책들이 주를 이루었다.

〈표 II-7〉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의 영역별 · 유형별 특성

유형별 / 영역별	SCF1	SCF2	SCF3	계
시민의식, 사회참여	6개	-	1개	7개
신뢰, 관용성	1개	3개	1개	5개
네트워크, 파트너십	2개	-	-	2개
계	9개	3개	2개	14개

전반적인 정책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 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들이 가장 많이(64.3%) 추진된 반면, 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정책들의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사회적 자본 정책 비교 · 종합

(가) 사회적 자본 정책의 영역별 특성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부분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 지원하는 내용의 정책과제들이 1, 2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민주시민의식, 인권의식의 함양을 위한 정책과제들도 1, 2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환경 교육 강화·지원에 관한 정책과제들이 2차 계획에 새롭게 추가되어 환경보호 의식 함양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반영하였다. 기업조직 차원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고객중심의 기업문화 및 직업윤리 정립'과제는 2차 계획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정책적 측면에서 과제 발굴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신뢰 및 관용성은 주로 취약계층, 소외계층, 소수자에 대한 지원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계획은 불특정 혹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취약계층을 타겟그룹으로 포함하였으나 2차 계획에서 다문화를 가진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촉진하는 과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고용환경에서의 남녀평등을 촉진하는 과제들은 1, 2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은 해당 정책과제는 주로 지역단위에서의 네트워크,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른 조직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 지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신뢰 및 관용성 향상을 위해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정책과제는 사회적 자본 정책 중에서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과제들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사회적 자본 정책의 유형별 특성

사회적 자본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SCF1)은, 1차와 2차 계획에서 일관되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과제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자본형성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정책(SCF2)는, 1차와 2차 계획에서 모두 과제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자본형성과 인프라와 관련된 정책(SCF3)는 1차 계획에서 인프라와 관련된 정책과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2차 계획에서 해당 정책과제의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자본이 미약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들이 증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자본 형성이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들이 1차 계획에 비해 2차 계획에 포함된 비율이 현격히 낮은(14.3% → 6.6%)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로 사회적 자본 형성과 관련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회적 자본 형성은 다양한 영역 내에서 그리고 이들 영역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므로 되도록 많은 부처들이 관련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나. 해외 정책 분석

(1) 사회적 자본 측정 관련 주요 국가 및 기구 현황

사회적 자본 측정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로는, 영연방을 중심으로 하여,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사회적 자본 측정 프레임워크 개발 및 측정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로는 OECD, 세계은행 등이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개념)은 각 국이 사회변화에 대응하면서 정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정책의 발전적 전략 도구'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사회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발전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고 있다(홍영란, 현영섭, 2009).

(2) 조사 대상 국가 및 방법

해외 정책·제안 사례 주요 대상국을 영국, 캐나다,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은 2000년에 정책결정자 및 연구자들로 구성된 그룹의 3년간 논의 결과를 통해 교육, 일, 예술, 정치 등과 관련한 사회적 자본 형성 권고안 마련하였다. 지난 1990년대 말에 사회적 자본 이론가인 Putnam이 정책담당자들과 연구자들로 구성된 그룹(Saguaro Seminars)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 권고(안) 제시하였다.

영국과 캐나다는 2000년대 초부터 사회적 자본 개념을 받아들여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고 있으며, 관련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하였다.

(3) 해외 사회적 자본 정책·제안 프로그램 사례

본 연구의 대상국가의 사회적 자본과 관련되는 정책 및 제안 프로그램의 사례를 정리하고 이를 사회적 자본 영역 및 정책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가) 시민참여 및 사회참여 영역

① 청년 시민참여 촉진 프로그램(캐나다)

캐나다의 정책 프로그램으로서 청년들의 투표 참여율, 정당 참여율 및 관심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이들의 정치 참여 및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청년들의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살펴보면, 자원의 공평한 배분 보장과 거주지 조건과 같이 적극적 시민 참여를 저해하는 제도, 행정, 사회, 경제적 장애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자원 접근의 불평등성 완화하고, 청년층의 참여 노력과 정치적 관심 증대에 초점을 두어 시민교육을 통하여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효능에 대한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단화 한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년들을 시민적 삶으로 유인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시민참여 활동 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네트워크 세 루트를 통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② 청년들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및 지표 개발 (영국)

청년들의 시민의식 및 참여 등에 대한 정량적 측정 결과와 정성적 측정

결과의 불일치로 청년들에게 적합한 측정지표 개발과 교육 등과의 관련성을 보다 올바르게 파악함으로써 향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 형성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조하여 청년들에게 맞는 지표를 재개발하였다.

③ 청년층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미국)

- 모든 학생들의 커뮤니티 서비스 참여를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졸업 요건으로 일정 시간 봉사활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학교가 증가, 봉사활동 기회를 통하여 학생들은 노인이나 가난한 미혼모 등 다른 사람을 접촉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고자 한다.
- 학교를 더 소규모로 만들어 거대하고 비인간적인 고등학교들, 특히 도심의 학교들은 공동체를 돌봄(caring communities)에 있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실종 현상을 반영함과 동시에 악화시키게 되었다.
- 과외활동 복원하고 청소년들은 과외활동을 통하여 친구를 사귀고 다른 사람들과 직접 관계를 맺으며, 연극을 제작하거나 스포츠 게임을 즐기는 등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어울려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고자 함이다.
- 시민스킬-시민지식-시민가치 연계교육에 대한 투자확대 하여 시민능력 육성, 시민지식 전수, 시민가치 개발에 실질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시민능력과 시민지식은 향후 시민 참여에 있어서 결정적 요인이 된다.
- 학교 중도탈락자의 관계 재구축·연계 하여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 제공하고자 한다.

④ 직장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협회 결성(미국)

기업으로 하여금 직원들이 사무실을 기반으로 적십자나 여성유권자연맹(League of Women Voters), 전미흑인지위향상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등과 같은 전국 단위의 자원봉

사 단체를 설립하도록 권장한다.

⑤ 커뮤니티 서비스를 위한 자원봉사 유급휴가 제도 확대 (미국)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자원봉사하기 위한 유급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확대하고, 기업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주도록 하는 (예를 들어 1년에 최대 48시간까지) 법안과 초과근무수당을 휴가로 바꾸기 원하는 직원들을 지원하고자 한다.

⑥ 커뮤니티 서비스를 위한 유인책 마련(미국)

근로자로 하여금 커뮤니티 서비스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지원 (예: 기업의 기부예산과 근로자의 자원봉사 시간을 연계)한다.

⑦ '커뮤니티 예술' 펀드 확대(미국)

민간 자선단체와 정부 예술기관이 시민 중심의 다수가 참여가 가능한 예술 프로젝트와 창작에 더 많은 예산을 확충한다.

⑧ 시민의 대화와 문화예술 창작과의 통합(미국)

예술 작품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와 민주주의를 비평하고 향상시키던 관습을 부흥시키도록 예술을 위하는 미국인들(Americans for the Arts)과 같은 그룹에 동참시킨다.

⑨ 지역 및 국가기관의 개인-정부 연결기능 강화(미국)

과거에 유행했던 계층과 신분에 상관없이 민주적 토론과 시민활동의 연

합 속에서 사람들을 통합하는 지역 및 전국 단체의 부흥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⑩ **더욱 폭넓은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정치캠페인 개선(미국)**

공중사회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정치인들과 민간 지지자들이 여론, 광고, 포커스 그룹 등의 정치적 대화 수단을 통한 캠페인 활동에 있어서 선의의 활용을 촉진한다.

⑪ **참여적 시민 개발(미국)**

정부 기관과 선출직 공무원들은 일반 시민이 지역사회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⑫ **노인을 위한 새 지평선 프로그램(캐나다)**

노년기 성인들에 대하여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생산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인들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서 2004년에 시작. 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나 NGO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통합

(나) 신뢰 및 관용성 영역

① **'가족시간' 회복하기 (미국)**

부모와 자식이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대화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텔레비전을 끄고 함께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함께 자원봉

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

② 부모를 위한 휴가수당 제도 확대(미국)

출산으로 인해 무급 휴가를 받은 부모들에게 실업 수당을 받도록 노동법을 개정하며, 50개의 모든 주가 이러한 개념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법을 마련하였다.

③ 부모 등 노인의 건강을 위한 자택요양 프로그램(캐나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보살핌은 노약자들의 신체기능 및 정신적 안정 유지에 많은 도움을 준다.

④ 개인 맞춤형 근로 계약 시스템 제도화 (미국)

많은 기업이 공식적으로 근무시간 자유선택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직원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동 프로그램의 이점을 취할 수 있는 구조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리더십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최고경영자가 직원이 단지 "근무시간"을 잘 지키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업무의 질에 따라 평가 받는 기업 문화를 조성

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술과의 결합 (미국)

정부와 비영리 기관의 지도자들이 예술가들을 교육과 사회, 신뢰 기반 프로그램에서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길거리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대안을 찾도록 해준다.

⑥ 과거 실수로부터 배우기(미국)

정부 기관과 선출 공무원, 비영리 그룹 및 기타 공적 기관들이, 지난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해 연구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또는 해를 끼쳤는지 평가하고, 정부와 비영리 단체 지도자들이 사회적 자본의 관점을 가지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동 평가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창출 혹은 파괴를 만들어내는 결정과 절차를 이해하고 노력한다.

(다)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

① 커뮤니티 이사회 및 위원회에 청년 참여시키기 (미국)

소년을 자원이자 기부자로서 참여시키는 것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도 더 폭넓게 확대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어른들은 단지 열성적인 청소년 참가자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은 청소년들이 직장에서 어른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도록 한다.

② 청소년의 역량 및 주변 환경 인식시키기 (미국)

각 세대마다 거대한 사회적 도전을 일으키고 기대를 넘어서는 성공을 거두는 뛰어난 청소년을 배출. 리복 인권상(Reebok Human Rights Award)과 촛불 재단(Points of Light)의 자원봉사 상, 브릭 상(Do Something Brick Awards), 푸르덴셜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Prudential Spirit of Community Awards)는 뛰어난 봉사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시킨다.

③ 청년층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중간 매개조직 강화 (미국)

청소년의 공헌을 지원하는 협력 전략의 일환으로서 전국 규모로 해야 할 일과 지방 규모로 해야 할 일을 구분

④ 커뮤니티 서비스 운동 지원 (미국)

전국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지지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잘 지원되고, 일반에 잘 홍보되며, 조직을 잘 갖추고, 잘 구성되어야 한다.

⑤ 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 형성의 중심부로 유도 (미국)

기업은 해마다 수십억 달러를 사회에 기부하기 때문에 기부금의 수혜자들에게 지역사회 유대를 형성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거의 이십 년 동안 포드 재단과 같은 민간 자선단체들은 자신의 기부금을 이용하여 비영리 단체가 인종적으로 더욱 다양한 임원과 직원을 모집하도록 하는데 성공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⑥ 직장을 시민교육의 장소로 전환 (미국)

사람들은 자신이 시민으로서 능력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모임을 조직하고 이끌어가는 능력, 대중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능력, 설득력 있게 글을 쓰는 능력 등을 갖추었을 때 공동체 일에 참여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⑦ 세대 상호간 멘토 관계 육성 (미국)

멘토 조직을 위하여 사회적 자본 형성의 참여도가 높은 은퇴자를 적극적

으로 모집·활용하고, 이들은 시민의 책무를 전수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을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 해결까지 모든 일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⑧ 타 부문과의 커뮤니티 파트너십 구축 (미국)

1980년대의 자매결연 학교 프로그램, 도시 재개발 연합 등 "민관 협력 관계"와 같은 협력관계를 지지하며, 기업의 금융 및 인적자본이 시민 참여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참여기회를 확장하는데 집중시킨다.

⑨ 문화예술 기관 간 협력 기회 창출 (미국)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안정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정진하도록 도전의 기회와 기쁜 마음으로 도전하도록 안내한다.

⑩ 예술과 커뮤니티 서비스의 연계 (미국)

문화기관과 통합되지 않은 예술가 그룹이 다른 단체의 지역사회 형성 작업을 지원할 혁신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⑪ 정부 구조조정에 있어서 시민의 역할 확대 (미국)

어떠한 수준의 정부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 지역사회 참여 구성원으로 인해, 일부 프로그램은 중앙정부에 의해서만 효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기구로의 권력 집중 현상에 대하여 우려되며, 정책결정과 정책시행이 지방의 역량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다면 일반인은 관심을 끌기는 어려우며 지방 정부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

⑫ 교외(Suburban)의 불규칙화(Sprawl) 억제 (미국)

정부 및 시민 지도자들은 지역사회의 생활의 질에 위협을 가하는 새로운 건축 속도와 디자인을 점차 인식하도록 한다.

⑬ '사이버 모릴 법안' 시행(미국)

정부가 산업혁명 기간 동안에 일반 국민의 혁신을 격려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날의 정보혁명 속에서 공공정책은 기술혁신을 위한 민간 상업 수요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⑭ 지역사회 고용혁신 프로젝트(캐나다)

1999년에 시작된 The Community Employment Innovation Project (CEIP)는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구직자와 구인자(기업)를 연결해줌으로써 고용기회를 향상시켜주는 지역사회 고용혁신 프로그램이다. 지역사회 안팎의 강력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발달시켜 서로 협동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동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시 도움과 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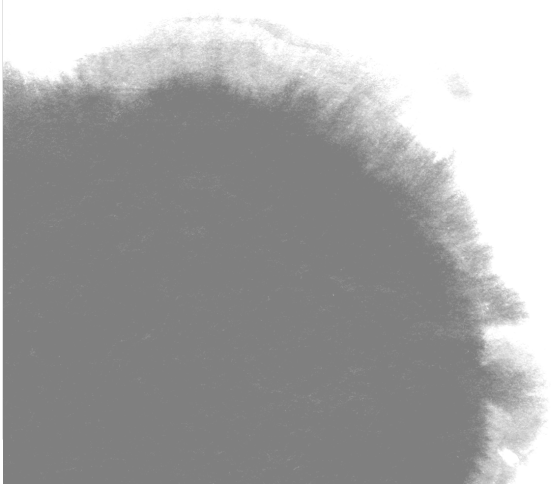
⑮ 이민자 지원 프로그램(캐나다)

캐나다 정부 (주로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가 이민자들의 정착과 화합을 지원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이민자 정착 및 적응 프로그램이다. 경제, 사회, 건강, 문화, 교육, 여가 관련 프로그램 소개하고, 은행 이용, 쇼핑, 가정 돌보기, 일상 업무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한다.

KIHASA

03

사회적 자본의 수준 비교 분석



제3장 사회적 자본의 수준 비교 분석

제1절 국제 비교 분석

1. European Science Foundation의 유럽사회조사(ESS)

가. 개관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는 유럽지역의 변화하는 제도와 사회심리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설문조사이다. 특히 사회적 태도 중 사회적 자본이나 복지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풍부한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있으며 학문적 목적으로 조사되는 만큼 조사 자료는 공개되고 있다. 최근까지 4차 조사가 실시되었고 2009년 현재는 5차 조사를 위한 설문지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3차 조사 자료까지 공개되고 있다. 1차 조사는 22개 국가가 참여하였고 2차 조사에는 4개국이 증가하여 26개 국가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3차 조사에서는 25개국, 4차에는 31개국이 참여하였다.

나. 조사방법 및 지표

유럽사회조사의 설문조사도구는 총 279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핵심조사영역(core module)과 교체조사영역(rotating module)으로 구분된다. 핵심

조사영역에는 169개 문항, 교체조사영역에는 110문항이 배치되어 있다. 핵심조사영역은 각 조사마다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항목들이고 교체조사영역은 각 조사 때마다 다른 조사항목을 사용하는 영역이다. 유럽사회조사의 핵심조사영역의 주제는 12개로 다음과 같다(ESS 홈페이지).

기관에 대한 신뢰(Trust in institutions)
정치적 참여(Political engagement)
사회-정치적 가치(Socio-political values)
도덕 및 사회적 가치(Moral and social values)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국가, 인종, 종교적 정체성(National, ethnic, religious identity)
복지, 건강, 안전(Well-being, health and security)
인구통계학적 구성(Demographic composition)
교육 및 직업(Education and occupation)
재정적 상황(Financial circumstances)
가구별 상황(Household circumstances)

유럽사회조사에서 사용되는 설문지의 구성을 보면 9개의 부분으로 구분된다. 4개의 핵심조사영역과 2개의 교체조사영역 그리고 보조조사영역이 3개 포함되어 있다. 설문지의 구성을 정리하면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유럽사회조사 설문지의 구성

영역	문항번호	주제
Core	A1 - A10	미디어, 사회적 신뢰
Core	B1 - B40	정치: 정치적 관심, 효율성, 신뢰, 선거참여 등의 정치 참여방식, 정당충성심, 사회-정치적 성향 등 포함
Core	C1 - C36	주관적 복지, 사회적 배제, 종교, 지각된 차별, 국가 및 인종적 정체성
Rotating module	D1-D55	인생의 주기, 인생경로, 인생의중요사건, 이상적 연령에 대한 태도, 인생사건의 가장 젊은 시기와 늦은 시가, 은퇴계획
Rotating module	E1-E55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복지, 타인 도움, 지난주의 느낌, 생애만족, 일에 대한 만족
Core	F1 - F73	사회-인구통계학적 프로파일: 가구구성, 성, 연령, 지역유형, 교육과 직업, 노동조합, 수입, 지위 등
Supplementary	Section G	인간 가치 척도
Supplementary	Section H	검사 문항
Interviewer questionnaire	Section I	면담자 자기보고식 문항

출처:ESS(2006).FinalSourceQuestionnaire(Round3). 〈http://www.europeansocialsurvey.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63&Itemid=98〉.

기관에 대한 신뢰는 구체적으로 미디어나 사회에 대한 신뢰로 예를 들어, 일주일동안의 텔레비전 시청시간, 정치나 시사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시청시간,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이메일 등의 사용 시간, 타인에 대한 신뢰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정치 영역의 경우에는 정치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정도, 정치가 복잡해 보이는 정도, 정치적 주제에 대한 의사결정의 용이성, 지난 선거에서 투표참여, 정치적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 정도 등의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복지의 경우에는 행복한 정도, 친구·친척·직장동료와의 사교적 만남의 횟수, 개인적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유무, 사회적 활동의 참여정도, 범죄의 희생양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의 정도, 테러에 대한 공포 등 다양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다. 한국과의 비교

한국의 경우 홍영란 외(2007)의 연구에서 한국의 사회적 자본 측정 지표 개발 및 전국 수준의 사회적 자본 수준 분석이 실시되었다. 홍영란 외(2007)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실행된 다양한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자본 측정 지표를 분석하여 한국적 상황에 부합되는 지표를 선정·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자본 측정 연구는 다음과 같다.

-KEDI 사회적 자본 측정 관련 연구
-국내 사회적 자본 측정 연구
-SCCBS 및 Saguaro 세미나의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연구
-ONS의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범주 및 구조
-PRI의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영역 및 지표
-OECD에서의 사회적 자본 관련 지표
-World Bank의 사회적 자본 측정 연구
-ESS에서 사용된 사회적 자본 관련 지표
-국내의 교육지표 관련 자료

국내외 사회적 자본 측정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사회적 자본의 영역을 사회참여 및 시민의식, 신뢰 및 관용성,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으로 구분하고 사회참여 및 시민의식 영역에 12개, 신뢰 및 관용성 영역에 20개,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16개로 총 48개의 지표가 배치되었다. 각 영역별 지표를 정리하면 〔그림 III-1〕과 같다.

〔그림 Ⅲ-1〕 사회적 자본 측정의 영역과 지표

출처: 홍영란 외(2007), p.88.

총 48개의 지표 가운데 ESS에서 사용한 지표 중 6개의 지표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ESS 지표 중 봉사활동, 정치적 관심, 지역사회 신뢰, 지역

사회 참여 등과 관련된 지표가 활용되었다. 6개의 지표와 지표별 측정 문항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괄호의 기호는 ESS 지표상의 문항 번호이다.

-봉사활동 연간 참여 횟수(E1)

귀하는 지난 1년간 봉사활동(자원봉사 혹은 자선단체 활동 등)에 얼마나 참여하셨습니까?

( )① 일주일에 한번 정도 ( )② 한 달에 한번 정도
( )③ 세 달에 한번 정도 ( )④ 반년에 한번 정도
( )⑤ 매우 드문 정도 ( )⑥ 전혀 안한다
( )⑦ 잘 모르겠다

-정치적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 정도(B3)

귀하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 )② 비교적 어렵다고 생각한다
( )③ 어렵지도 쉽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 )④ 비교적 쉽다고 생각한다
( )⑤ 매우 쉽다고 생각한다
( )⑥ 잘 모르겠다

-정치·시사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A2)

귀하는 정치 및 시사 문제에 관한 텔레비전 뉴스나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되십니까?

( )① 전혀 안 본다 ( )② 30분 미만
( )③ 30분~1시간 ( )④ 1시간~1시간 반
( )⑤ 1시간 반~2시간 ( )⑥ 2시간~2시간 반
( )⑦ 2시간 반~3시간 ( )⑧ 3시간 이상

(　　)⑨ 잘 모르겠다

-투표 참여율(B11)

귀하는 지난 번 선거 때 투표에 참여 하셨습니까?

(　　)① 했다　　(　　)② 안했다

(　　)③ 투표할 만한 적격자가 없었다　　(　　)④ 잘 모르겠다

-지역사회 야간 안전에 대한 인식 정도(C6)

귀하는 동네 밤거리를 혼자 걸을 경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안전하다　　(　　)② 비교적 안전하다

(　　)③ 비교적 위험하다　　(　　)④ 매우 위험하다

(　　)⑤ 잘 모르겠다

-지역사회 활동 참여 정도(C4)

귀하는 지역사회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에 얼마나 참여 하십니까?

(　　)①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매우 적게 참여 한다

(　　)②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다소 적게 참여 한다

(　　)③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하다

(　　)④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다소 많이 참여 한다

(　　)⑤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매우 많이 참여 한다

(　　)⑥ 잘 모르겠다

이에 ESS 3차 조사결과와 홍영란 외(2007)의 연구에서 수집된 한국의 자료를 통합하여 6개의 항목에 대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ESS 3차 조사는 2006년과 2007년에서 조사가 실시되었고 2008년에 SPSS와 SAS 형태의 통계자료가 개방되었다. 이에 ESS 자료는 ESS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3차 조사결과를 내려 받아 활용하였다. ESS 3차 조사의 경우 배포된 자료에 포함된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스위스, 사이프러스,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영국, 헝가리,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스웨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등 23개국이었다.

우선 ESS자료와 홍영란 외(2007)의 자료를 통하여 각국의 응답자 사례수를 비교하면 〈표 III-2〉와 같다.

〈표 III-2〉 ESS와 한국의 사례수 비교

국가	사례수	백분율
오스트리아	2,405	4.5
벨기에	1,798	3.4
불가리아	1,400	2.6
스위스	1,804	3.4
사이프러스	995	1.9
독일	2,916	5.4
덴마크	1,505	2.8
에스토니아	1,517	2.8
스페인	1,876	3.5
핀란드	1,896	3.5
프랑스	1,986	3.7
영국	2,394	4.5
헝가리	1,518	2.8
아일랜드	1,800	3.4
한국	10,579	19.7
네덜란드	1,889	3.5
노르웨이	1,750	3.3
폴란드	1,721	3.2
포르투갈	2,222	4.1
러시아	2,437	4.5
스웨덴	1,927	3.6
슬로베니아	1,476	2.8
슬로바키아	1,766	3.3
우크라이나	2,002	3.7
Total	53,57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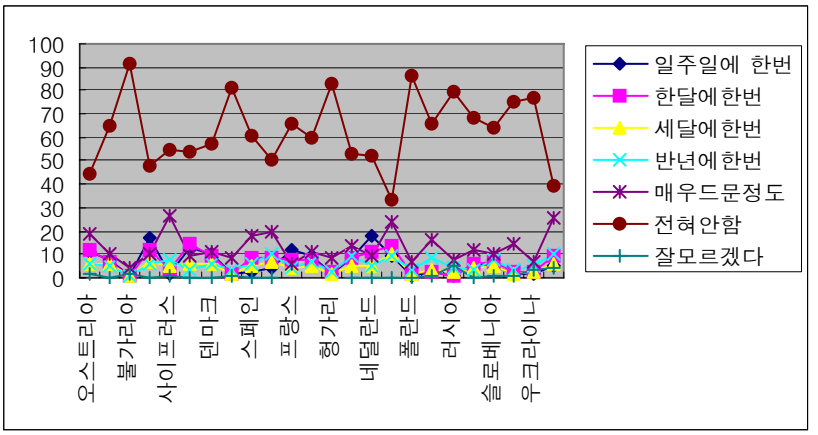
분석에 활용된 총 사례수는 53,579명이었고, 한국의 경우 10,579(19.7%)로 가장 많았다. 한국을 제외하면 독일이 2,916명(5.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영국(2,394명), 러시아(2,437명), 오스트리아(2405명)의 순이었다.

(1) 봉사활동 연간 참여 횟수

6개 항목 중에서 봉사활동 연간 참여 횟수는 사회적 자본 중 자원봉사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였다. 척도와 국가를 기준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빈도표는 아래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전혀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매우 드문 정도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봉사활동 연간 참여 횟수에 대한 국가별 응답의 비율은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봉사활동을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약 40% 정도 되고, 매우 드문 정도가 25%, 반년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이 10% 정도의 사례수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네덜란드나 스위스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17%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장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국가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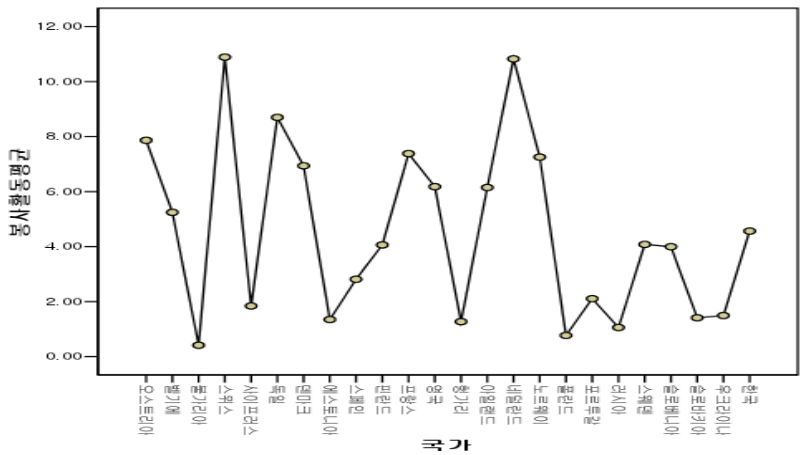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한국과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개 국가 중에서 불가리아나 헝가리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91.5%, 83.0%로 가장 높게 나타나서 자원봉사 참여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1〉 참조).

〔그림 III-2〕 연간 봉사활동 참여 국가별 응답비율



연간 봉사활동 참여횟수에 대한 응답을 1년 동안의 횟수로 변경할 경우 전혀 안함은 0회, 매우 드문 정도는 연 1회, 반년에 한 번은 연 2회, 세 달에 한 번은 연 4회, 한 달에 한 번은 연 12회, 일주일에 한 번은 연 52회로 환산된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무응답처리를 하였다. 이렇게 자료를 전환한 후 각 국가별 자원봉사활동의 연간 횟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24개국의 자원봉사활동 연간 참여횟수는 4.7회이고,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인 국가는 스위스로 10.9회, 그 다음은 네덜란드로 10.8회였다. 그 외에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노르웨이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불가리아와 폴란드의 경우에는 평균 1회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는 평균 4.6회로 전체 24개국 가운데 11위였다(〈부표 7〉 참조). 국가별 자원봉사활동 연간참여횟수의 평균도표는 〔그림 III-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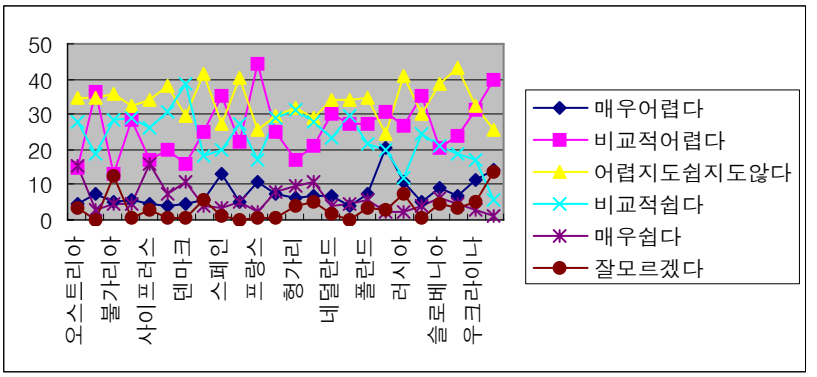
〔그림 III-3〕 연간봉사활동 참여횟수의 국가별 평균



(2) 정치적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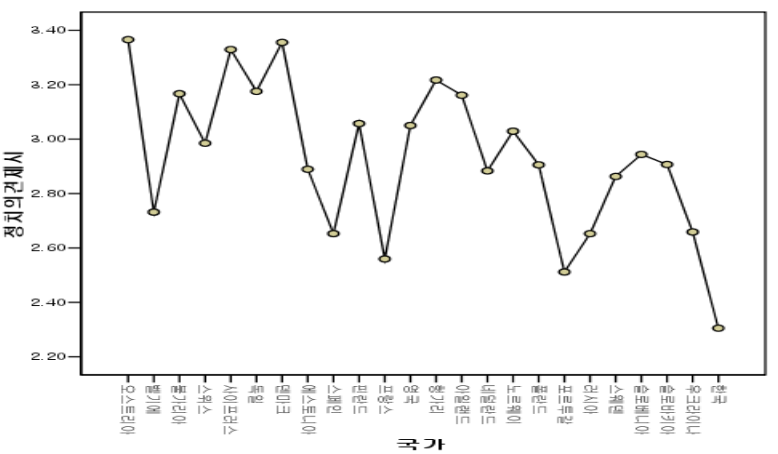
정치적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는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인 정치적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스러운지에 대한 조사항목이었다. 24개국의 응답 분포를 보면, 어렵지도 쉽지도 않다 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2〉 참조). 이는 중간 정도의 인식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쪽으로 의견을 내지 않는 응답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비교적 어렵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은 국가로는 벨기에(36.3%), 프랑스(44.3%), 스웨덴(35.5%) 등이었고 한국의 경우에도 비교적 어렵다는 응답이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경우에는 응답비율만 비교하였을 때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는데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정치적 의견을 제기하는데 자유롭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은 국가는 오스트리아, 사이프러스, 덴마크, 헝가리 등의 국가였다.

〔그림 Ⅲ-4〕 정치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 표현 국가별 응답비율



다음으로 국가 간의 정치적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제시 정도의 평균을 비교하였다(〈부표 7〉 참조). 여기서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무응답으로 처리하였다. 24개국의 전체 평균은 2.83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가장 자유롭게 인식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덴마크, 사이프러스, 헝가리, 독일의 순이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24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5〕 정치적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의 국가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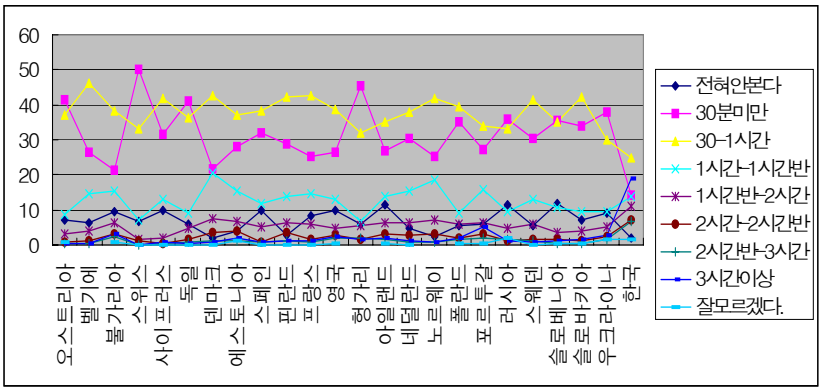
(3) 정치 · 시사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정치 · 시사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는 정치 · 시사문제에 대한 텔레비전 시청 시간으로 측정되었다. 측정척도는 '전혀 안 본다'부터 '3시간 이상'까지 측정되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지도 포함되었다. 전체적으로는 30분 미만과 30분에서 1시간 미만의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3〉 참조).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3시간 이상 텔레비전을 시청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8.9%로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 정치 및 시사 문제에 관한 뉴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SS에서 조사한 국가 중에서는 벨기에나 불가리아의 경우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을 시청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다른 조사대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많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반대로 정치나 시사와 관련된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경우 아일랜드, 러시아, 슬로베니아에서 10% 이상의 응답률이 나타나서 정치 · 시사문제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는 전혀 안 본다는 응답비율이 1.9%로 24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의 경우 정치나 시사와 관련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이 ESS에서 조사한 23개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그만큼 한국의 경우 정치나 시사와 관련된 정보를 텔레비전을 통하여 얻는다는 것도 된다. 동시에 국민들이 정치나 시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II-6〕 정치·시사 문제 관련 텔레비전 시청 시간 국가별 응답비율



정치·시사관련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한국의 경우 응답비율이 18.90%로 1위였고 그 다음이 포르투갈,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영국 등의 순이었다. 응답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스위스,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순이었다. 조사국가의 응답 비율 평균은 5%였다(〈부표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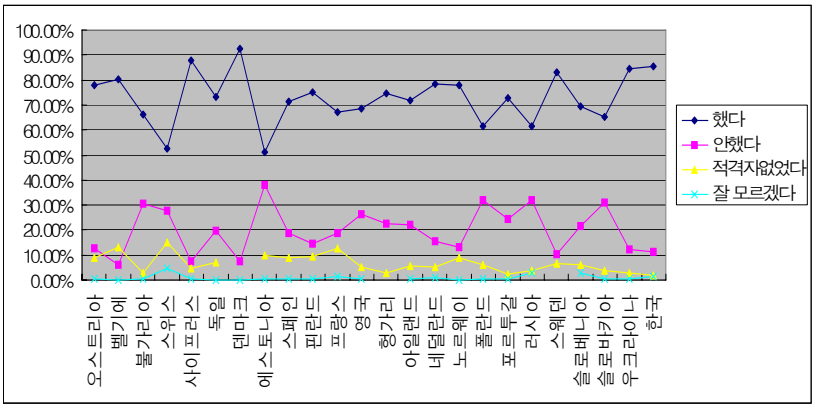
(4) 투표 참여율

투표참여율은 정치적 참여라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요소를 측정하는 지표로 최근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지표였다. 응답지는 투표에 참여했다와 안했다 그리고 투표할 만한 적격자가 없었다와 잘 모르겠다의 4개 유형으로 척도가 구성되었다.

24개국 전체 응답자 가운데 지난 선거에서 투표를 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74.7%로 높게 나타났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92.5%)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이프러스(87.7%), 한국(85.4%)의 순이었다. 반대로 투표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에스토니아(51.3%), 스위스(52.7%), 러시아(61,3%), 폴란드(61.5%)의 순이었다. 투표할 만한 적격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4개국 평균 5.7%로 비교적 낮은 상태였다. 적격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15.1%)였고 가장 낮은 국가는 덴마크로 0%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는 1.9%로 24개국 가운데 덴마크 다음으로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부표 4〉 참조).

〔그림 Ⅲ-7〕 투표참여율 국가별 응답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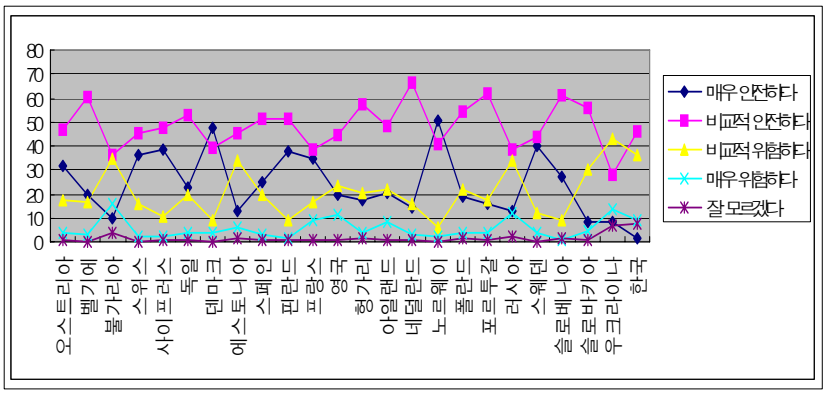
(5) 지역사회 야간 안전 인식

지역사회의 야간 안전에 대한 인식의 경우 지역사회의 치안이나 치안당국에 대한 신뢰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문항으로 사회적 자본 측정 지표로 활용되었다. 문항의 응답지는 매우 안전하다, 비교적 안전하다. 비교적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 잘 모르겠다의 5개 척도로 구성되었다.

척도 가운데 전체적으로 비교적 안전하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4개국 평균이 48.0%였다. 따라서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지역사회의 야간 안전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별로 보면, 노르웨이, 핀란드, 슬로베니아에서 지역사회 야간 안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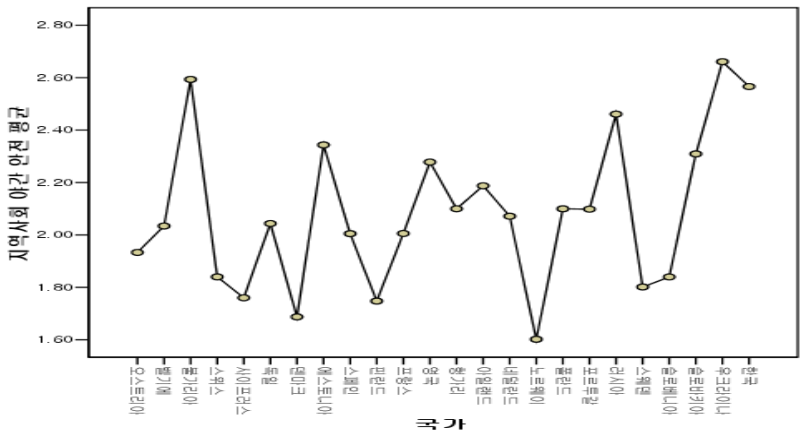
슬로바키아, 러시아, 한국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야간안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위험하게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5〉 참조).

〔그림 Ⅲ-8〕 지역사회 야간 안전 인식 국가별 응답비율



다음으로 지역사회 야간 안전 인식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여기서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무응답으로 처리하였다. 24개국의 전체 평균은 2.16으로 안전성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의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7〉 참조). 야간 안전 인식이 가장 긍정적인 국가는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의 순이었고 지역사회 야간 안전에 대하여 가장 위험하게 인식하는 국가는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한국의 순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24개국 가운데 지역사회 야간 안전 인식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불안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9〕 지역사회 야간 안전 인식 국가별 평균비교



(6) 지역사회 활동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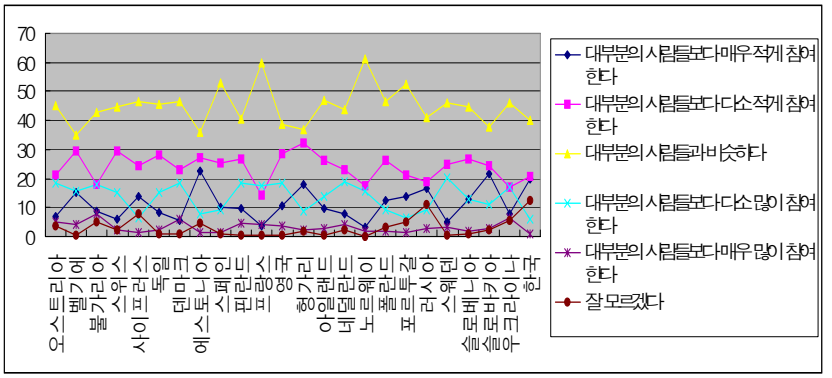
지역사회 활동 참요는 지역사회에서 자유로운 사회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지표로 측정되었다. 응답지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매우 적게 참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다소 적게 참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하다',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다소 많이 참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매우 많이 참여한다', '잘 모르겠다'의 척도로 구성되었다.

척도 중에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이 나온 척도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하다'로 24개국 평균응답비율이 44.2%로 나타났다. 이는 중간 성향을 반영할 수 있는 응답지라는 점에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척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다소 적게 참여한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가별로 비교하면 지역사회 활동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이 참가하는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이었고 반대로 응답비율이 낮은 국가는 한국,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등이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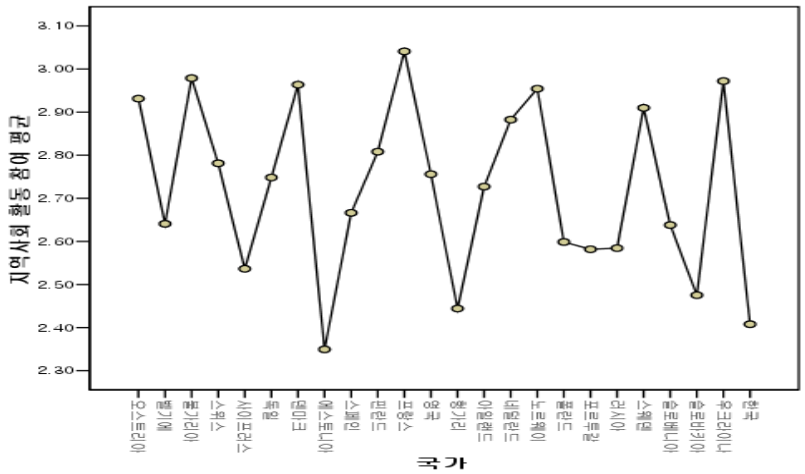
다. 한국은 '잘 모르겠다'에 대한 응답비율도 12.5%로 24개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부표 6〉 참조).

〔그림 Ⅲ-10〕 지역사회 활동 참여 국가별 응답비율



다음으로 지역사회 활동 참여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여기서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무응답으로 처리하였다. 24개국의 전체 평균은 2.68로 지역사회 활동 참여에 대하여 타인에 비해 적게 참여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7〉 참조). 지역사회 활동 참여가 가장 긍정적인 국가는 프랑스,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덴마크의 순이었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에 대하여 타인에 비해 적게 참여한다고 인식하는 국가는 우크라이나, 한국, 슬로바키아의 순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24개국 가운데 지역사회 활동 참여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참여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1〕 지역사회 활동 참여 국가별 평균비교



2. IMD의 세계경쟁력연보(WCY)

가. 개관

세계경쟁력 조사는 IMD에 대한 국제적 공신력과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지수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도 국정점검을 위한 주요 통계지표로 산정하고 있다. 세계경쟁력연보(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WCY)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WVS)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참여 국가를 대상으로 각 국가별 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WCY 발간은 IMD 내에 1989년에 설립된 세계경쟁력센터(World Competitiveness Center: WCC)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WCY 탑재 정보를 위한 실제 조사는 각 국가별 협력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WCC에서는 국가별 경쟁(competitiveness)의 의미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WCC는 각 국가가 경쟁 환경(competitiveness environment)을 구성하는 네 가지 차원, 즉 매혹적 대 공격적(Attractiveness vs.

Aggressiveness), 국지화 대 세계화(Proximity vs. Globality), 자산 대 과정(Assets vs. Processes), 개별적 위험감수 대 사회적 단결(Individual Risk Taking vs. Social Cohesiveness)이 있다고 보고, 이들 요소들이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며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WCC의 WCY는 국가경제의 특징을 도출하고, 경제의 변화 동향을 예측하는 국가경쟁력 프로파일을 구명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림 Ⅲ-12〕 국가 경쟁력을 형성하는 네 가지 기본 영향요소

출처: http://www.imd.ch/research/centers/wcc/about_wcc.cfm

IMD의 WVY는 전 세계 국가 대부분의 국가경쟁력을 연감으로 1989년부터 연도별로 출간하고 있으며, 국가별 경쟁력에 대한 벤치마킹 및 동향, 그리고 주요 경제 경쟁력에 관한 통계 및 의견 자료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WCY는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분석하고 순위를 산출한다. 특히 기업의 해당 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적 측면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GDP 등과 같은 지표만으로 판단이 어렵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즉, IMD의 국가 경쟁력의 개념은 국가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 제도 및 정책적 환경을 강조한다.

IMD는 경쟁력 지표 다양한 경제관련 문헌분석을 통해 300개 이상의 경

쟁력 지표를 설정한 후, 경제관련 협회 및 단체, 정부기관 및 학회의 검토를 통해 최종 지표를 산출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산출된 지표를 수정·보완해 나가고 있다. 또한, 기술 및 국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WCY 역시 이러한 변화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경쟁력과 비교할 수 있는 경제성과의 진보에 초점을 두고 연도별로 그 추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조사방법 및 지표

WCY는 ［그림 III-12］와 같이 국가의 환경을 네 가지 경쟁력 요소(competitiveness factors)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요소는 5개의 하위요소로 구분되어 있고, 다시 20개 하위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일부는 경쟁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하위요소의 내용을 다시 세분화시켜 범주(categories)로 구분한 경우도 있으며, 이들 각각의 하위요소 및 범주는 경쟁력의 다양한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지표는 하위요소 및 범주는 동일한 수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각 하위요소는 결과 산출을 위해 동일한 가중치(5%)를 부여하고 있다. 즉 20개 하위요소에 대해 각각 하위요소별로 0.05의 가중치를 부여하며, 총 결과치는 100으로 고정해 놓고 있다. 이는 각 하위요소별로 지표수가 서로 다르더라도 각 하위요소가 상대적으로 동일한 중요도를 갖도록 하고, 이를 통해 연도별 결과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표 III-3〉 IMD WCY의 경쟁력 요소 및 지표수

경쟁력 요소	하위요소	지표수	내용
경제성과 (Economic Performance)	• 국내경제 • 국제무역 • 국제투제 • 고용 • 물가	82	국내경제에 대한 거시경제학적 평가
정부효율성 (Government Efficiency)	• 공공재정 • 예산정책 • 제도구조 • 경제 관련법 • 사회적 구조	70	정부 정책이 경쟁력에 기여하는 정도
경제효율성 (Business Efficiency)	• 생산성 • 노동시장 • 재정 • 경영체제 • 태도 및 가치	67	기업의 혁신, 이윤 창출 및 책무성을 촉진하는 국가환경의 수준
인프라 (Infrastructure)	• 기초 인프라 • 기술 인프라 • 과학 인프라 • 건강 및 환경 • 교육	110	기술, 과학, 인적자원이 경영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

출처: Rosselet-McCauley. (2009). Methodology and principles of analysis, p. 470.

WCY는 양적 자료(hard data)와 질적 자료(survey data)를 각각 독립적으로 수집한다. WCY의 경쟁력 지표는 총 245개이며, 이 외에 기타 정보를 얻기 위한 84개 지표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지만, 순위 산출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245개 지표 중 양적 자료는 135개로 각 국가별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국가통계자료이며, 질적 자료는 기업 최고 및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Executive Opinion Survey)로 이루어지며 1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조사로 수집되는 질적 자료는 측정이 어려운 속성을 가진 지표를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질적 자료는 수집된 자료의 대표성을 얻기 위해 각 국가경제의 GDP 수준에 비례한 표본수를 산

정하며, 해당 국가의 경제를 대표할 수 있도록 각 산업분야에서 표집 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의 경우 57개 국가 3,960명의 자료가 수집되어 경쟁력 지수를 산출하는데 활용되었다.

각 지표는 1에서 6까지의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경제지표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0에서 10점으로 전환한 후,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순위 산출을 위한 값을 최종 도출한다. 순위 산출은 모든 지표에 대해 소위 STD값이라는 표준화 값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이를 위해 우선 모든 경제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각 지표별로 STD값[2]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245개 지표에 기반한 경제 수준에 대해 순위를 산출한다. 대부분의 지표들은 높은 값을 가질수록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하며, 일부 지표의 경우 예를 들어 소비물가 인플레이션 등의 경우에는 낮은 값을 가질수록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한다. 이들 경우 최종 산출된 수치를 역산하여 순위를 산출한다.

한편, 모든 통계치는 표준화된 값이기 때문에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합산값(aggregate value)을 활용하게 되며, 결측값이 존재할 경우 STD값을 0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이 해당 지표의 경쟁력을 과대추정할 소지가 있지만, IMD에서는 이 방식이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

2) $(STD\ Value)_i = \frac{X - \overline{X}}{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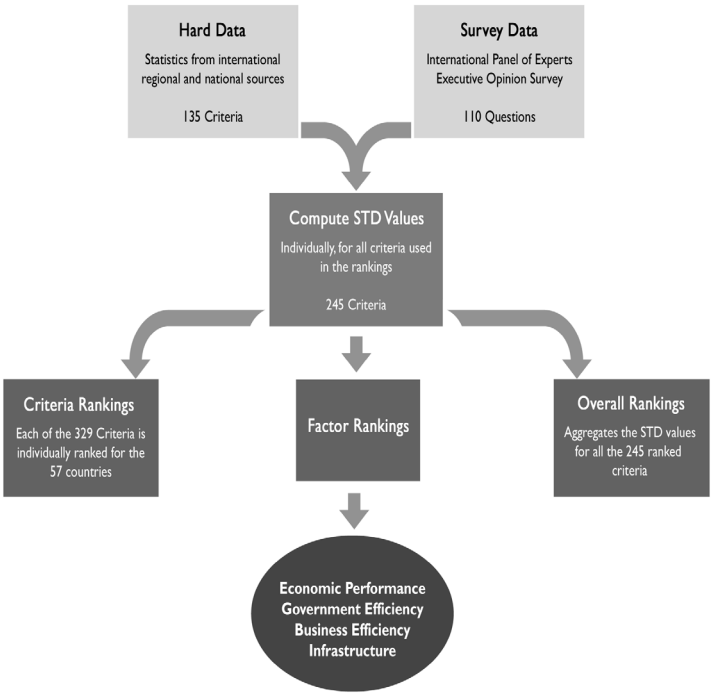
X = 국가별 관측값

$\overline{X}$ = 조사대상 국가의 평균값

N = 조사대상 국가수

S = 표준편차 $(= \sqrt{\frac{\Sigma (X - \overline{X})^2}{N}})$

〔그림 III-13〕 IMD World Competitiveness의 지수(순위) 산출 과정



출처: Rosselet-McCauley. (2009). Methodology and principles of analysis, p. 472

개별 지표는 대상 국가별로 STD 값 계산공식을 활용하여 표준화 된 값을 산출하고, 이 결과에 터해 245개 지표 각각에 대한 국가별 순위를 산출하게 된다. 하위요소에 대한 순위산출은 하위요소를 구성하는 지표의 STD 값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균값을 사용한다. 이때 가중치는 양적자료의 경우에는 1, 설문조사 자료의 경우에는 0.55를 부여하게 된다. 다음으로 하위요소의 STD 값을 합산하여 네 개의 경쟁력 요소에 대한 순위를 산출한다. 그리고 국가별 경쟁력 지수인 전체 점수(Scoreboard)[3]를 위해 다시 경쟁력 요소들의 STD 값을 합산하여 산출하게 된다. 즉, 경쟁력 요소 및 전체 점수 모두는 각 지표별 STD값을 통해 산출되게 된다.

3) 국가별 경쟁력 지수는 0에서 100의 범위 내에서 산출된다.

다. 한국과의 비교

IMD의 세계경쟁력지표는 경제적 측면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지표들이다. 이 가운데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 지표로는 사회적 틀 영역에서 정의(2.5.01)와 사회응집력(2.5.05), 경영효율성(Business Efficiency) 영역의 경영자의 신뢰성(3.4.03)과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3.4.03)을 고려할 수 있다. 각각의 구체적인 지표 내용은 〈표 III- 4〉와 같다.

〈표 III-4〉 사회적 자본 관련 IMD WCY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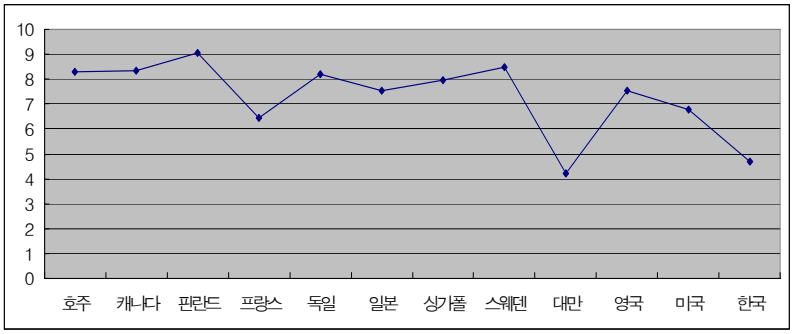
지표번호와 지표명	문항내용
2.5.01 Justice	정의는 공평하게 관리된다.
2.5.05 Social cohesion	사회응집력은 정부를 위해 최우선이다.
3.4.03 Credibility of managers	사회에서 경영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3.4.08 Social responsibility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높다.

(1) 정의

정의는 사회적 정의가 공평하고 평등하게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 지표이다. 내용은 '정의는 공평하게 관리 된다'이고, 2009년 조사된 정의의 평균은 5.32이었고 표준편차는 2.3716이었다. 한국은 정의지수가 4.68로 57개국 중 32위였다(〈부표 8〉 참조). 한국과 유사한 순위에 있는 국가로는 헝가리(30위), 리투아니아(31위), 슬로베니아(33위), 터키(34위), 대만(35위)이었다.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싱가포르, 스웨덴, 대만, 영국, 미국, 한국만을 대상으로 정의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III-14〕와 같다. 선정된 국가는 유럽, 북미, 아시아, 오세아니아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되는 국가들이었다.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의 경우에는 핀란드, 프랑

스, 독일, 스웨덴, 영국이 포함되었고, 북미에서는 캐나다와 미국,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싱가폴,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가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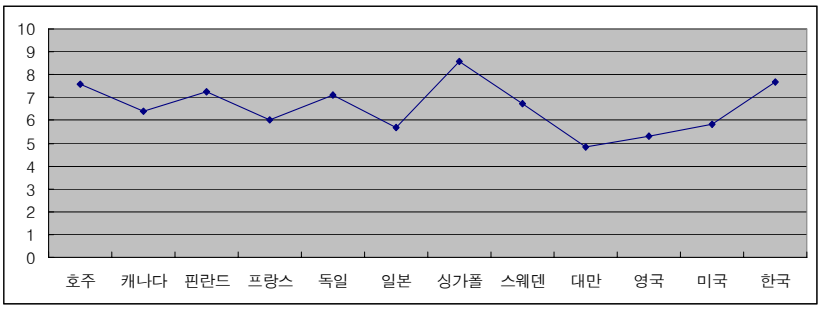
〔그림 III-14〕 국가별 정의 지수



(2) 사회응집력

사회응집력은 사회적 단결, 단일한 목표의 추구를 위한 의견일치와 같이 사회적 구성원과 구성조직의 일치된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회응집력은 정부에서 추구해야할 중요한 정책대상 중에 하나가 된다. 왜냐하면 사회응집력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이 잘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사회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되고 이런 노력의 효율성과 결과인 사회적 응집력은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한다. 2009년 조사된 사회응집력의 평균은 2.37이었고 표준편차는 1.5601이었다. 한국은 사회응집력 지수가 7.69로 57개국 중 6위였다(〈부표 8〉 참조). 한국과 유사한 순위에 있는 국가로는 덴마크(3위), 카타르(4위), 룩셈부르크(5위), 오스트리아(7위), 호주(8위)였다.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싱가포르, 스웨덴, 대만, 영국, 미국, 한국만을 대상으로 정의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III-1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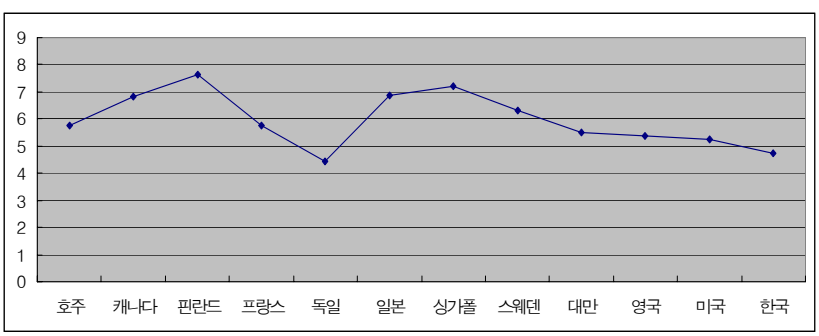
〔그림 III-15〕 국가별 사회응집력 지수



(3) 경영자의 신뢰성

경영자의 신뢰성은 경영자 신뢰성 지수로 구성되어 있는 지표로 국가 간 경영자들에 대한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수로 형성되어 있다. 2009년의 경우 경영자 신뢰성의 평균은 5.57이었고 표준편차는 .9832였다. 한국은 경영자 신뢰성이 4.72로 57개국 중 45위였다(〈부표 8〉 참조). 한국과 유사한 순위에 있는 국가로는 이탈리아(42위), 리투아니아(43위), 베네수엘라(44위), 포르투갈(46위), 슬로베니아(47위), 그리스(48위)이었다.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싱가폴, 스웨덴, 대만, 영국, 미국, 한국만을 대상으로 경영자 신뢰성을 비교한 결과는 〔그림 III-1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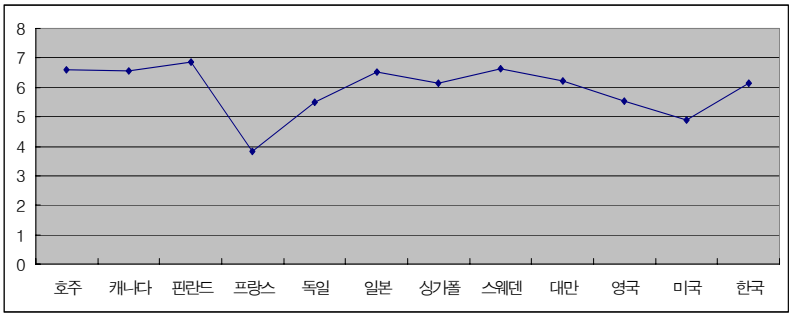
〔그림 III-16〕 국가별 경영자 신뢰성 지수



(4)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경영자 또는 기업이 사회적으로 수행해야할 책임성에 대한 측정지수이다.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의 평균은 5.34이었고 표준편차는 1.0346이었다. 한국은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이 6.16로 57개국 중 15위였다(〈부표 8〉 참조). 한국과 유사한 순위에 있는 국가로는 뉴질랜드(12위), 스위스(13위), 대만(14위), 싱가폴(16위), 카타르(17위)가 있다.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싱가폴, 스웨덴, 대만, 영국, 미국, 한국만을 대상으로 경영자 신뢰성을 비교한 결과는 〔그림 III-17〕과 같다.

〔그림 III-17〕 국가별 경영자 사회적 책임 지수



3. 국제사회조사기구의 ISSP

가. 개관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The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ISSP)는 국가 간 주요지표에 대한 조사 사업으로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에서의 비교를 통하여 국제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수집 프로그램이다

ISSP는 독일 뮌헨에 위치한 Allgemeinen Bevolkerungsumfragen der Socialwissenschaften(ALLBUS)와 미국 시카고 대학의 국가 의견연구센터(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NORC)의 일반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GSS)간의 협력을 통하여 시작되었다. 이 두 조사는 모두 시계열 연구를 위한 조사들이었다. 그 이후 1983년 후반에는 영국의 사회태도조사(British Social Attitudes Survey: BSA)가 추가되었고 호주국립대학의 사회과학연구학회(Research School of Social Sciences)가 1984년에 참여하였다. 1984년 이후에는 43개국[4]이 참여하는 국제 조사로 발전하였다(ISSP홈페이지, http://www.issp.org/index.shtml.).

ISSP는 몇 개의 주제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2000년부터는 환경, 사회적 관계, 가족과 변화하는 성역할, 국가정체성, 시민의식, 종교, 레저와 스포츠, 정부의 역할, 사회적 불평등 등을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1985년부터 ISSP에서 조사된 주제를 정리하면 〈표 III-5〉와 같다.

〈표 III-5〉 ISSP의 연도별 조사내역

연도	주제	연도	주제
1985	Role of Government I	1998	Religion II
1986	Social Networks	1999	Social Inequality III
1987	Social Inequality	2000	Environment II
1988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	2001	Social Relations and Support Systems
1989	Work Orientations I	200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II
1990	Role of Government II	2003	National Identity II
1991	Religion I	2004	Citizenship
1992	Social Inequality II	2005	Work Orientations III

4) 독일, 미국, 영국, 호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헝가리,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노르웨이, 필리핀, 뉴질랜드, 러시아, 일본,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슬로베니아, 폴란드, 스웨덴, 스페인, 사이프러스, 프랑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칠레, 덴마크,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베네수엘라, 벨기에, 핀란드, 멕시코, 대만, 대한민국, 우루과이, 크로아티아, 도미니카공화국, 터키, 중국, 대만

연도	주제	연도	주제
1993	Environment I	2006	Role of Government IV
1994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I	2007	Leisure Time and Sports
1995	National Identity I	2008	Religion III
1996	Role of Government III	2009	Social Inequality IV
1997	Work Orientations II	2010	Envirnment III

자료: ISSP홈페이지, http://www.issp.org/data.shtml.

한국의 경우에는 2003년부터 참여하고 있다. 즉,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 Ⅱ), 시민의식(Citizenship), 노동지향성(Work Orientation Ⅲ), 정부역할(Role Government Ⅳ), 레저시간과 스포츠(Leisure Time and Sports), 종교(Religion Ⅲ), 사회적 불평등(Social Inequality Ⅳ)의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2008년과 2009년도는 조사가 진행 중이고 2006년 자료까지 완전 공개된 상태이다. 2007년의 레저시간과 스포츠의 경우에는 일부 자료만 공개된 상태이다.

나. 조사방법 및 지표

한국이 참여한 2003년 이후의 ISSP의 조사항목 중 2003년의 국가정체성 2 조사의 경우에는 총 244개의 항목이 조사에 활용되었다. 조사항목에는 국가, 성별, 교육 등과 같은 국가별로 차별화된 문항과 국가에 대한 신뢰, 거주지역(시 등)에 대한 신뢰, 국가에 대한 자부심, 자신에게 중요한 사회조직 등과 같이 공통지표가 포함되었다, 이중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친밀감',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에 대한 친밀감', '이민자에 대한 불신'의 3개 지표가 사회적 자본 중 신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004년에 실시된 시민의식의 경우에는 총 252문항이 조사에 활용되었다. 이 가운데 시민의식과 관련해서는 투표참여, 세금납부, 준법의식, 정부감시, 적극적 연대(association) 참여, 타인의 의견 수용, 군복무, 시위참여, 기부, 공무원에 대한 신뢰, 정치관련 미디어 접촉(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의 지표가 포함되었다.

2005년에 실시된 노동지향성 3 조사의 경우에는 303개의 문항으로 조사지가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노동지향성의 경우에는 유급직업유지시간, 가사노동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 여가 시간, 소득수단으로서 직업, 직업안정성, 직업의 사회적 유용성, 노동조합의 유용성 등 85개의 공통지표가 포함되었다. 이 가운데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 매니저와 종업원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가 사회적 자본의 지표로 선정되었다.

2006년에 실시된 정부역할 4 조사의 경우에는 총 291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 가운데 정부역할과 관련되어서는 예외 없는 법 준수, 반정부 파업, 정부투자(환경, 건강, 법집행, 교육, 방위, 은퇴, 문화·예술 등), 정부책임(직업제공, 가격통제, 보건, 노인복지, 산업육성, 빈부 격차 해소,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환경보호, 실업 등), 타인과의 접촉 등 60개의 문항이 공통지표에 포함되었다. 이 가운데 정치에 대한 영향력, 대시민 정부서비스에 대한 신뢰, 신리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 타인에 대한 불신, 타인의 중요 결정에 대한 도움 요청, 자신의 중요 결정에 대한 타인 도움 요청, 일주일 동안 접촉한 타인 수가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지표로 판단되었다.

2007년의 경우에는 레저시간과 스포츠에 대한 조사로 총 246개 문항으로 조사도구가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텔레비전 시청 시간, 독서 시간, 영화감상시간, 쇼핑시간, 스포츠 참여 시간. 카드놀이 시간, 친척이나 친구와의 만남 활동 시간, 인터넷 활용 시간,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각종 단체 참여, 여가선용의 장애물(시간, 비용, 건강, 나이 등), 수면 시간 등 68개 문항이 공통문항으로 포함되었다. 이 가운데 타인과 만나기 위한 스포츠 활용, 스포츠 단체 참여, 문화 단체 참여, 종교 단체 참여, 지역사회 봉사단체 참여, 정치 단체 참여가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지표로 판단되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ISSP 조사지표 가운데 사회적 자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표로 판단된 지표를 정리하면 〈표 III-6〉과 같다.

〈표 III-6〉 2003-2007 ISSP 지표 중 사회적 자본 관련 지표

연도	영역	지표수	지표내용
2003	국가정체성	3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친밀감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에 대한 친밀감 이민자에 대한 불신
2004	시민의식	10	투표참여 세금납부 준법의식 정부감시 적극적 연대(association) 참여 타인의 의견 수용 군복무 시위참여 기부 공무원에 대한 신뢰
2005	노동지향성	3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 매니저와 종업원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2006	정부역할	7	정치에 대한 영향력 대시민 정부서비스에 대한 신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 타인에 대한 불신 타인의 중요결정에 대한 도움 요청 자신의 중요결정에 대한 도움 요청 일주일 동안 타인과의 접촉 횟수
2007	레저시간과 스포츠	4	타인과 만나기 위한 스포츠 활용 스포츠 단체 참여 문화 단체 참여 종교 단체 참여 지역사회 봉사단체 참여 정치 단체 참여

다. 한국과의 비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ISSP의 조사 지표 가운데 사회적 자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 27개 지표를 중심으로 ISSP 참여국간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1) 국가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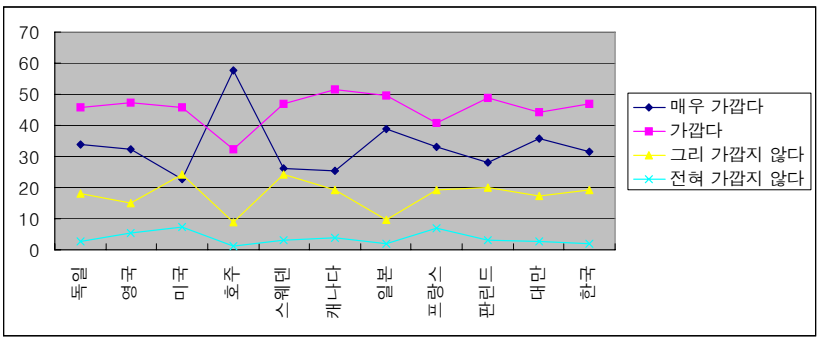
국가정체성의 경우 총 42개국(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구분하여 43개국으로 코딩됨)에 45993명이 응답한 자료이다. 42개국을 모두 비교하기 보다는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국에는 독일(서독), 영국, 미국, 호주,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일본, 대만, 캐나다를 포함시켰다. 주요국으로 선정된 국가들은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미 지역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되는 국가들이었다. 또한 ISSP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자료가 확보 가능한 국가들이었다.

(가) 지역에 대한 친밀감

지역에 대한 친밀감은 ISSP 조사에서 지역(city, town 등)이 자신과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응답지는 '매우 가깝다', '가깝다', '그리 가깝지 않다', '전혀 가깝지 않다', '선택하기 어렵다'의 5개 척도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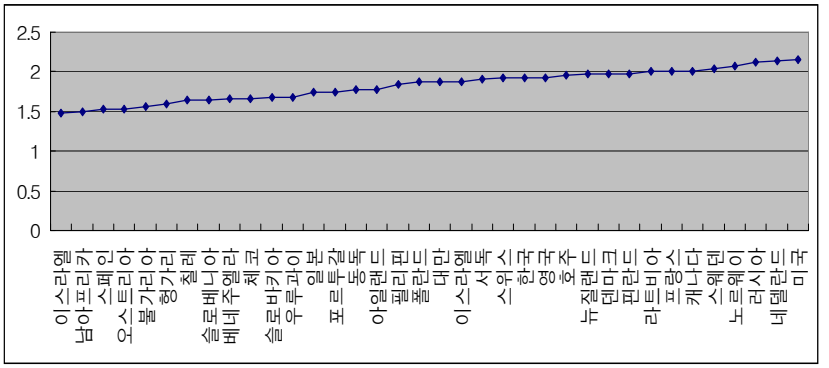
전체적으로는 지역을 가깝다고 느끼는 경우가 약 80%정도였다. 한국의 경우도 이런 비율은 다른 주요국과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부표 9〉 참조). 다만 호주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가깝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서 응답의 우선순위가 차이가 존재하였다.

〔그림 III-18〕 지역에 대한 친밀감 응답비율(ISSP 2003)



지역에 대한 친밀감을 신뢰의 정도로 보고 척도를 연속척도로 간주한 후 국가 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부표 12〉 참조). 다만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를 제외한 36개국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가 간에는 평균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네덜란드, 러시아, 노르웨이 등의 순이었고 한국은 1.92로 23위였다. 그런데 지역에 대한 친밀도의 경우 점수가 낮을수록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친밀도가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호주, 불가리아, 헝가리의 순이었고 한국은 23위였다.

〔그림 Ⅲ-19〕 국가별 지역에 대한 친밀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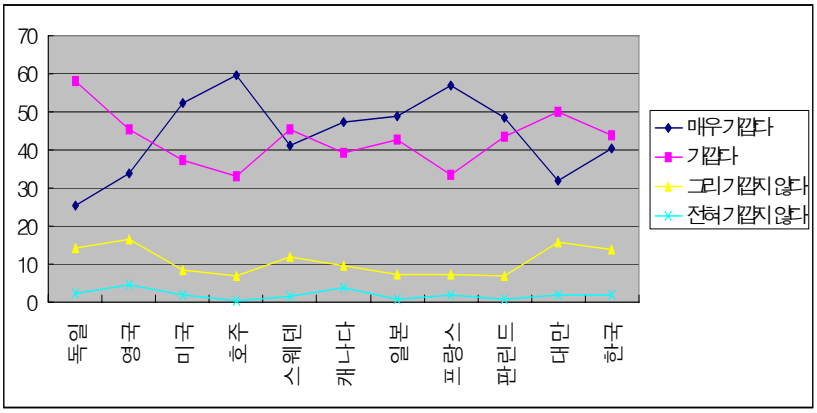


(나) 국가에 대한 친밀감

다음으로 국가에 대한 친밀감을 분석하였다. 응답지는 지역에 대한 친밀감과 동일하게 '매우 가깝다', '가깝다', '그리 가깝지 않다', '전혀 가깝지 않다', '선택하기 어렵다'의 5개 척도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는 국가를 가깝다고 느끼는 경우가 약 87%정도였다(〈부표 10〉 참조). 한국의 경우도 이런 비율은 다른 주요국과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매우 가깝다와 가깝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하였으나 독일의 경우는 매우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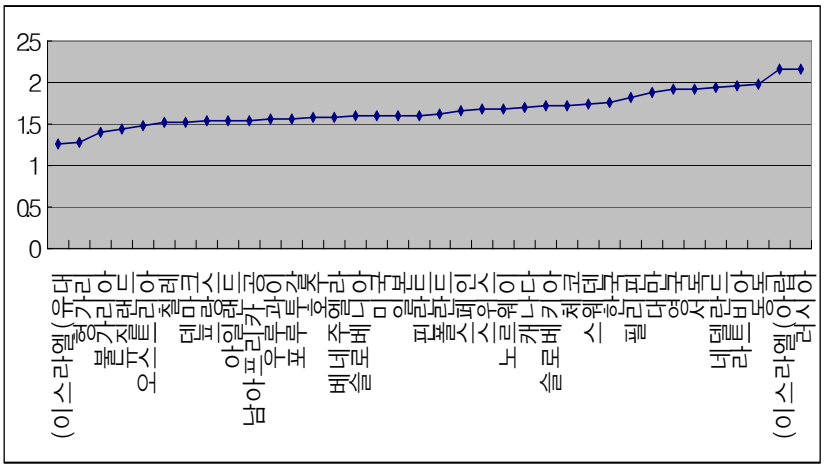
깝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0〕 국가에 대한 친밀감 응답비율(ISSP 2003)



국가에 대한 친밀감을 신뢰의 정도로 보고 척도를 연속척도로 간주한 후 국가 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부표 12〉 참조). 평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러시아였다.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아랍), 동독, 라트비아, 네덜란드 등의 순이었고 한국은 1.77로 27위였다. 그런데 국가에 대한 친밀도의 경우 점수가 낮을수록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친밀도가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유대), 헝가리, 불가리아, 뉴질랜드, 호주, 칠레의 순이었고 한국은 34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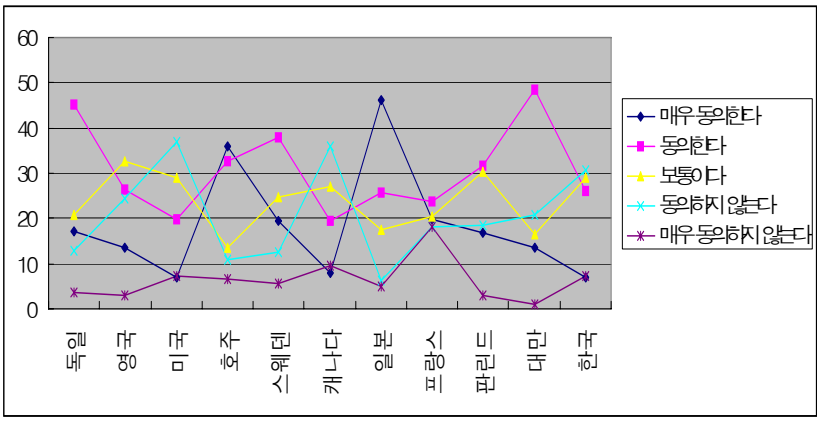
〔그림 III-21〕 국가별 국가에 대한 친밀도 평균



(다) 이민자에 대한 불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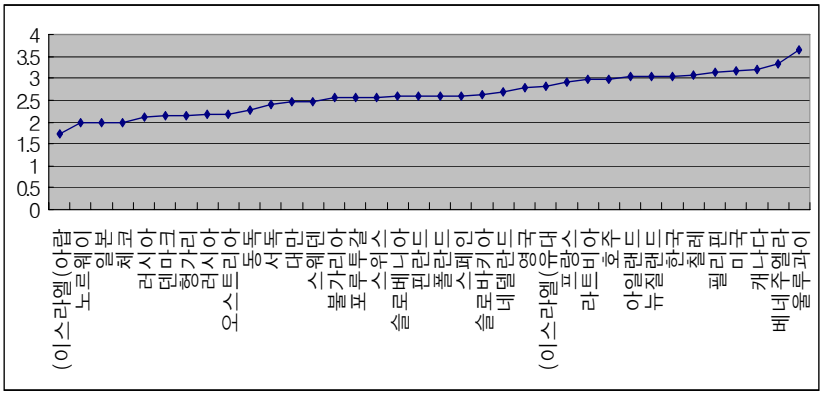
이민자에 대한 불신은 구체적으로 이민자가 많아질수록 범죄가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동의정도로 측정되었다. 응답지는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보통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의 5개 척도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는 국가를 가깝다고 느끼는 경우가 이민자로 인하여 범죄가 증가할 것 이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가 약 50% 정도였다. 반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약 28% 정도였다(〈부표 11〉 참조). 한국의 경우에는 동의하는 비율이 33%,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38%정도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50%가까이 나타나서 이민자에 대한 불신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만의 경우에도 동의 한다에 대한 응답이 50% 정도 나타났다. 캐나다나 미국의 경우에는 이민자에 의하여 범죄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불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2〕 이민자에 대한 불신 응답비율(ISSP 2003)



이민자에 대한 불신을 측정 척도를 연속척도로 간주한 후 국가 간 평균 비교를 실시하였다(〈부표 12〉 참조). 이민자가 범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정도가 가장 강한 국가는 이스라엘(아랍), 노르웨이, 일본, 체코, 러시아의 순이었고 한국은 3.05로 30위였다. 따라서 비교 국가 중에서 이민자에 대한 불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림 III-23〕 국가별 이민자에 대한 불신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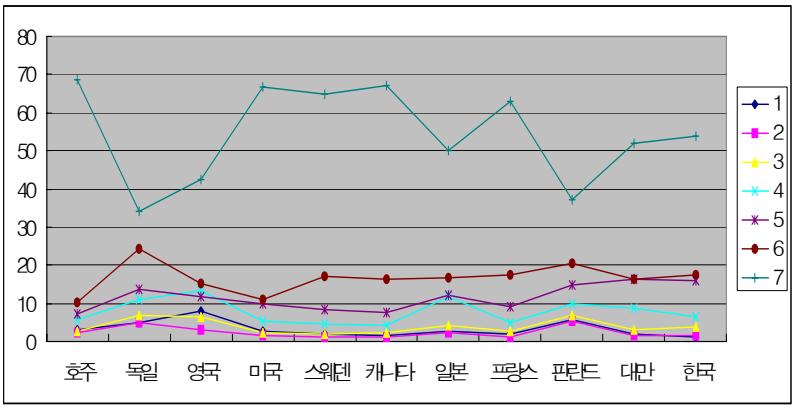
(2) 시민의식

시민의식의 경우 총 42개국(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구분하여 43개국으로 코딩됨)에 45,993명이 응답한 자료이다. 42개국을 모두 비교하기 보다는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국에는 독일(서독), 영국, 미국, 호주,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일본, 대만, 캐나다를 포함시켰다. 시민의식의 지표 가운데 투표참여, 세금납부, 준법의식, 정부감시, 적극적 연대(association) 참여, 타인의 의견 수용, 군복무, 시위참여, 기부, 공무원에 대한 신뢰, 정치관련 미디어 접촉(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한 관용성의 16개 지표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가) 투표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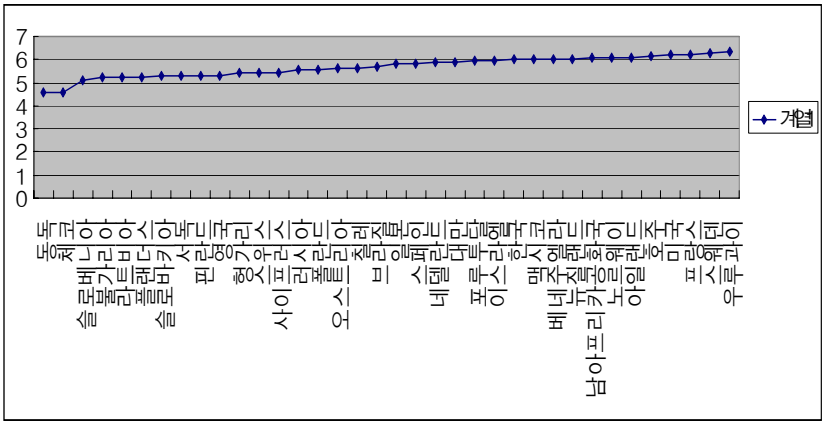
투표 참여의 경우 투표에 항상 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다. 척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부터 '매우 중요하다' 7점까지 리커트 7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우선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투표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약 83% 정도로 높은 투표참여 중요도 인식이 나타났다(〈부표 13〉 참조). 한국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응답비율이 존재하였다. 독일(서독)의 경우에는 비교국가 중에서는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III-24〕 투표참여의 중요성 응답비율(ISSP 2004)



투표참여의 중요성의 측정 척도를 연속척도로 간주한 후 국가 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부표 23〉 참조). 이 분석에서는 36개 국가를 포함하였다. 투표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평균 가장 높은 국가는 우루과이, 스웨덴, 프랑스, 미국, 호주의 순이었고, 한국은 6.02로 25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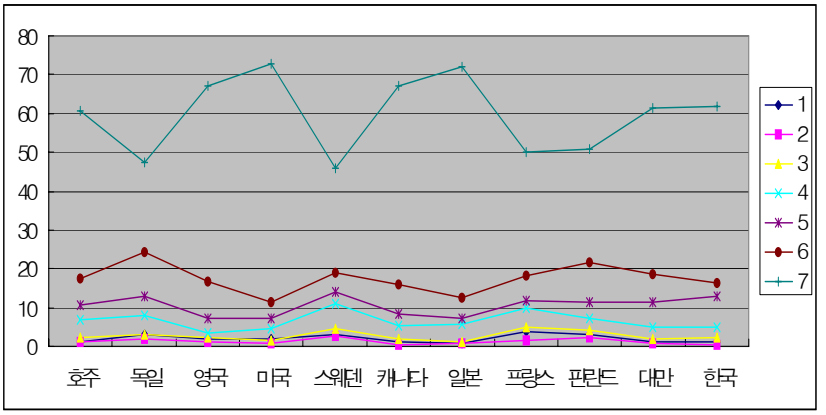
〔그림 III-25〕 국가별 투표참여의 중요성 평균



(나) 세금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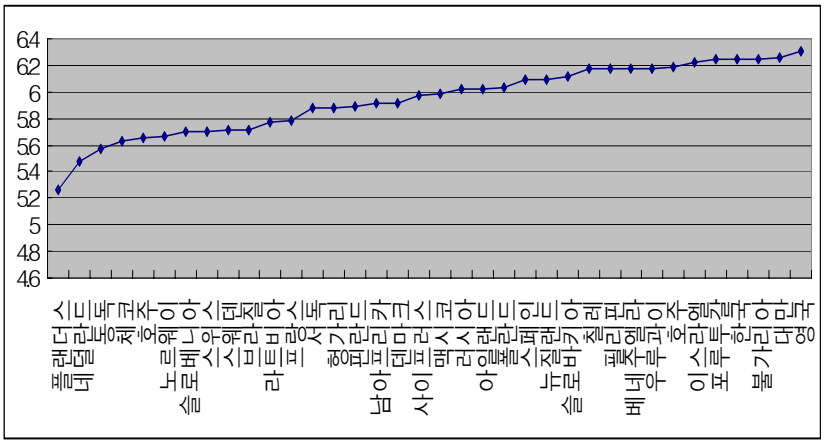
세금납부의 경우 세금을 피하기 위한 시도를 절대 하지 않는다가 시민의 자질로서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으로 측정되었다. 척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부터 '매우 중요하다' 7점까지 리커트 7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세금납부가 시민의식에서 중요하다는 비율이 약 87% 정도로 높은 중요도 인식이 나타났다(〈부표 14〉 참조). 한국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응답비율이 존재하였다. 비교국가 중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스웨덴이었고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이었다.

〔그림 III-26〕 세금납부의 중요성 응답비율(ISSP 2004)



세금납부의 중요성의 측정 척도를 연속척도로 간주한 후 국가 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부표 23〉 참조). 이 분석에서는 36개 국가를 포함하였다. 세금납부의 중요성에 대한 평균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 대만, 불가리아, 대한민국, 포르투갈, 이스라엘의 순이었다. 한국의 평균은 6.25로 33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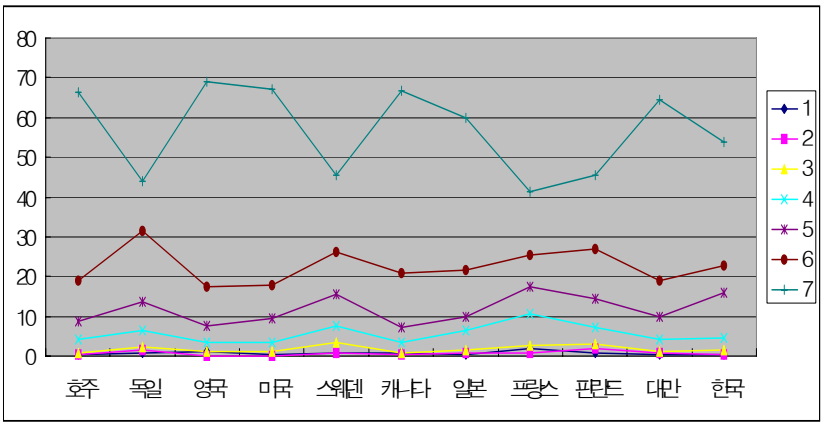
〔그림 III-27〕 국가별 세금납부의 중요성 평균



(다) 준법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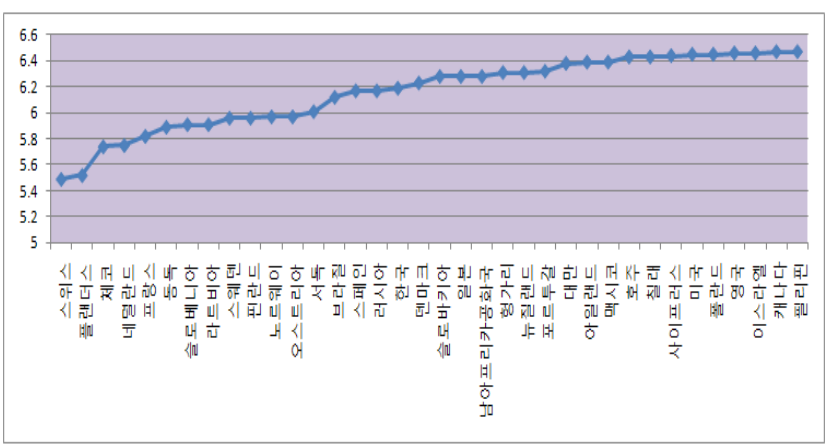
준법의식의 경우 항상 법을 지킨다가 시민의 자질로서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으로 측정되었다. 척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부터 '매우 중요하다' 7점까지 리커트 7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준법 의식이 시민의식에서 중요하다는 비율이 약 90% 정도로 높은 중요도 인식이 나타났다(〈부표 15〉 참조). 한국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응답비율이 존재하였다. 비교국가 중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프랑스였고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이었다.

〔그림 III-28〕 준법 의식의 중요성 응답비율(ISSP 2004)



준법 의식의 중요성의 측정 척도를 연속척도로 간주한 후 국가 간 평균 비교를 실시하였다(〈부표 23〉 참조). 이 분석에서는 36개 국가를 포함하였다. 준법 의식의 중요성에 대한 평균 가장 높은 국가는 필리핀, 캐나다, 이스라엘, 영국, 폴란드, 미국의 순이었다. 한국의 평균은 6.19로 17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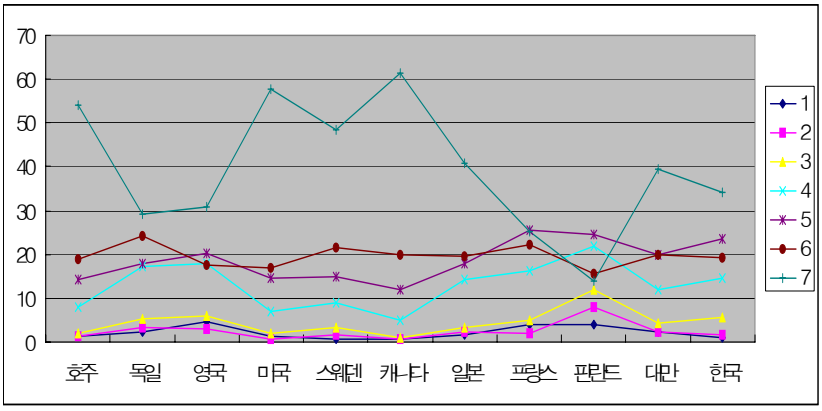
〔그림 III-29〕 국가별 준법의식의 중요성 평균



(라) 정부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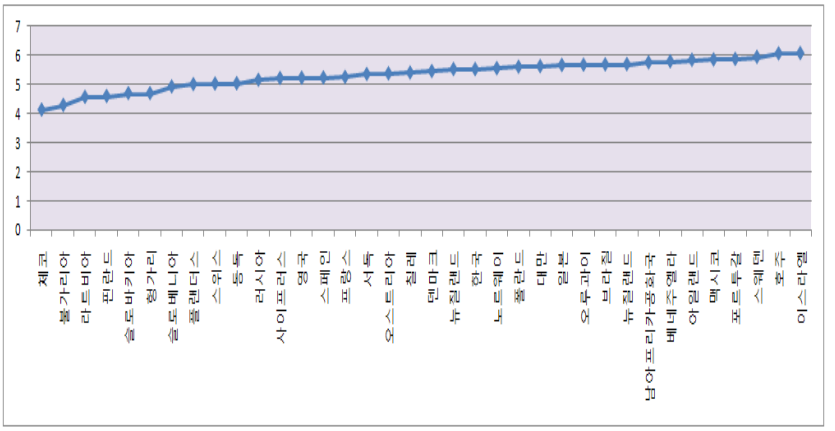
정부감시의 경우 항상 정부를 지켜본다가 시민의 자질로서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으로 측정되었다. 척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부터 '매우 중요하다' 7점까지 리커트 7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정부감시가 시민의식에서 중요하다는 비율이 약 79% 정도로 높은 중요도 인식이 나타났다(〈부표 16〉 참조). 한국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응답비율이 존재하였다. 비교국가 중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핀란드였고, 독일과 영국도 낮은 편이었다. 가장 높은 국가는 캐나다였다.

〔그림 III-30〕 정부감시의 중요성 응답비율(ISSP 2004)



정부감시의 중요성의 측정 척도를 연속척도로 간주한 후 국가 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부표 23〉 참조). 이 분석에서는 36개 국가를 포함하였다. 정부감시의 중요성에 대한 평균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 호주, 스웨덴, 포르투갈, 멕시코의 순이었다. 한국의 평균은 5.52로 21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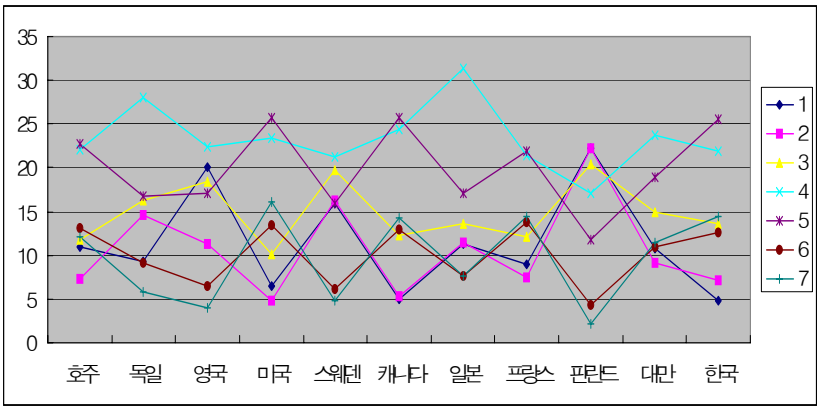
〔그림 III-31〕 국가별 정부감시의 중요성 평균



(마) 적극적 연대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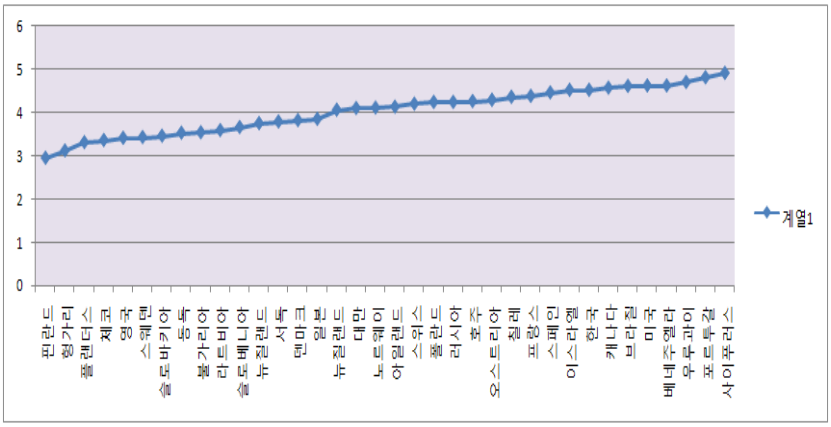
적극적 연대 참여의 경우 사회의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시민의 자질로서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으로 측정되었다. 척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부터 '매우 중요하다' 7점까지 리커트 7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적극적 연대 참여가 시민의식에서 중요하다는 비율이 약 41% 정도로 나타났다(〈부표 17〉 참조). 한국의 경우에는 이보다는 약간 높은 52%로 나타났다. 비교국가 중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핀란드였고,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이었다.

〔그림 III-32〕 적극적 연대 참여의 중요성 응답비율(ISSP 2004)



적극적 연대 참여의 중요성의 측정 척도를 연속척도로 간주한 후 국가 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부표 23〉 참조). 이 분석에서는 36개 국가를 포함하였다. 적극적 연대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평균 가장 높은 국가는 사이프러스, 포르투갈,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미국의 순이었다. 한국의 평균은 4.52로 8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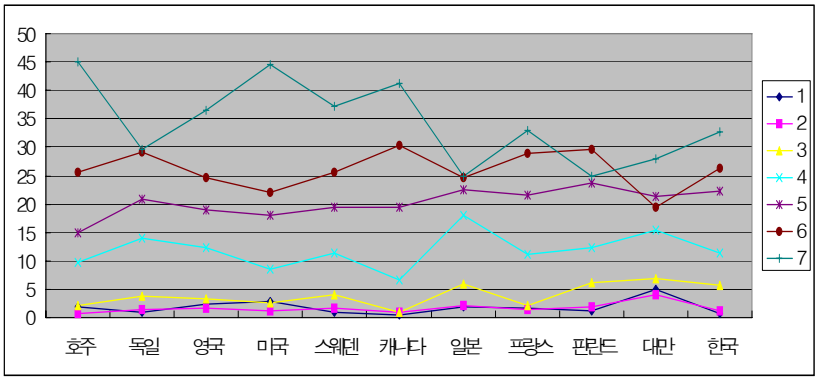
〔그림 III-33〕 국가별 적극적 참여 연대의 중요성 평균



(바) 타인의견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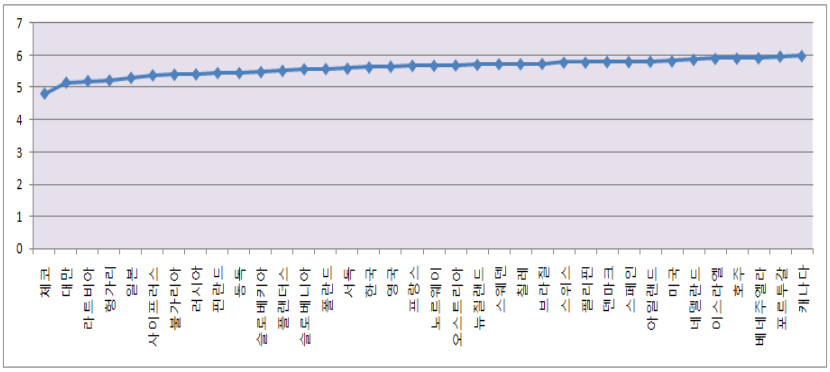
타인의견 이해의 경우 말 그대로 타인의 의견(opinion)을 이해하는 것이 시민의 자질로서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으로 측정되었다. 척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부터 '매우 중요하다' 7점까지 리커트 7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는 타인의견 이해가 시민의식에서 중요하다는 비율이 약 80% 정도로 나타났다(〈부표 18〉 참조). 한국의 경우에는 이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비교국가 중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핀란드와 일본이었고, 가장 높은 국가는 호주와 미국이었다.

〔그림 III-34〕 타인의견 이해의 중요성 응답비율(ISSP 2004)



타인의견 이해의 중요성의 측정 척도를 연속척도로 간주한 후 국가 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부표 23〉 참조). 이 분석에서는 36개 국가를 포함하였다. 타인의견 이해의 중요성에 대한 평균 가장 높은 국가는 캐나다, 포르투갈, 베네수엘라, 호주의 순이었다. 한국의 평균은 5.63으로 21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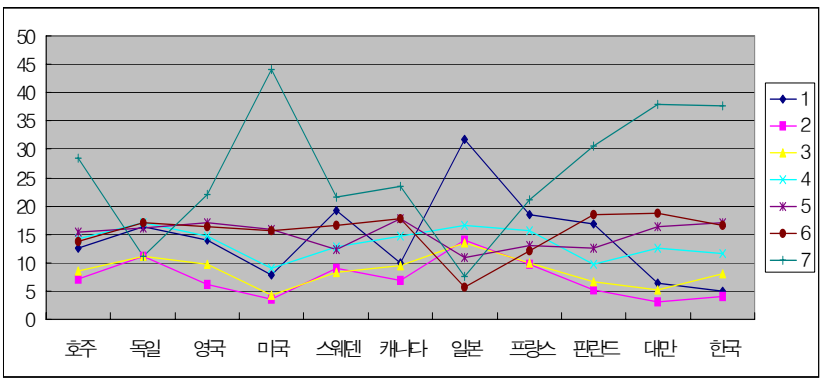
〔그림 III-35〕 국가별 타인의견 이해의 중요성 평균



(사) 군복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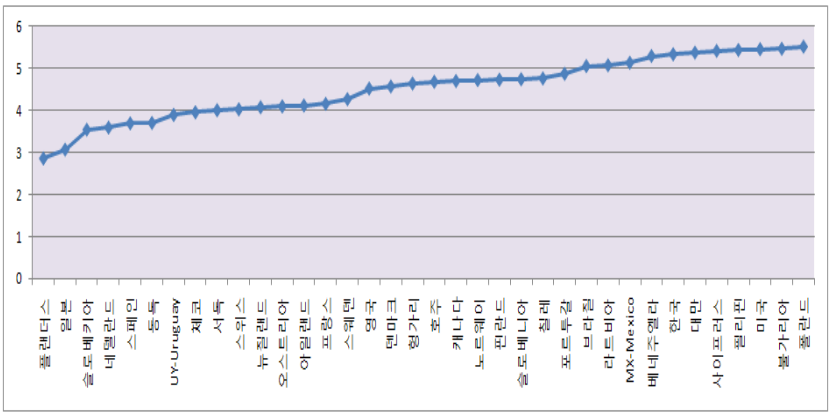
군복무의 경우 말 그대로 군에 복무하는 것이 시민의 자질로서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으로 측정되었다. 척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부터 '매우 중요하다' 7점까지 리커트 7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는 군복무가 시민의식에서 중요하다는 비율이 약 63% 정도로 나타났다(〈부표 19〉 참조). 한국의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약 72%로 나타났다. 비교국가 중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 독일이었고,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 대만, 한국이었다.

〔그림 III-36〕 군복무의 중요성 응답비율(ISSP 2004)



군복무의 중요성의 측정 척도를 연속척도로 간주한 후 국가 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부표 23〉 참조). 군복무의 중요성에 대한 평균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 불가리아, 미국, 필리핀의 순이었다. 한국의 평균은 5.33으로 7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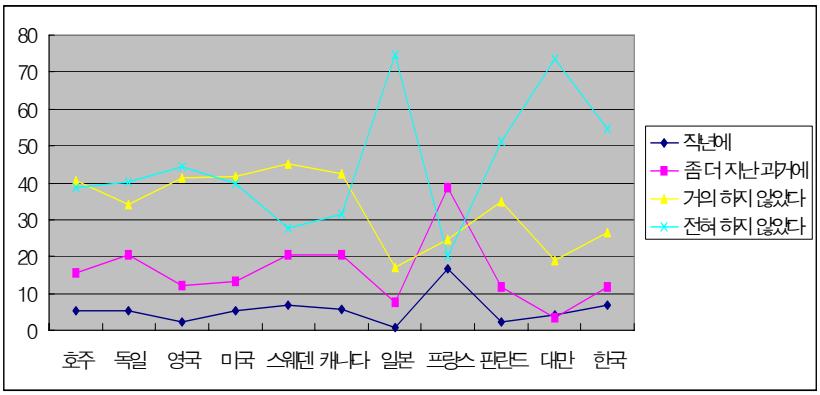
〔그림 III-37〕 국가별 군복무의 중요성 평균



(아) 시위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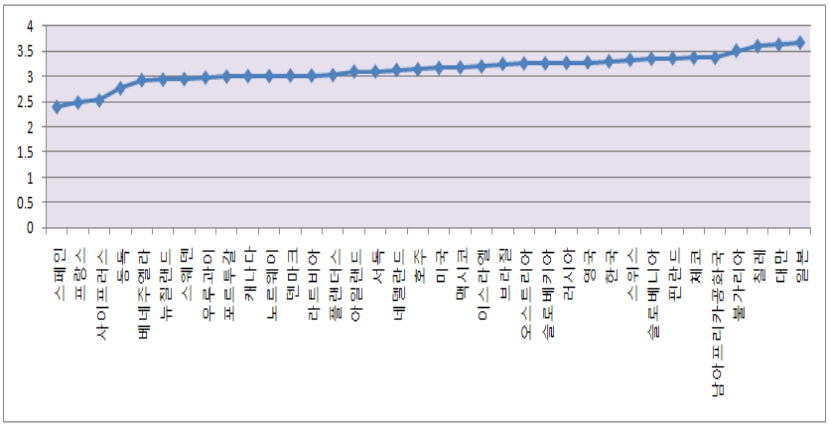
시위참여는 언제 시위에 참여했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측정되었다. 척도는 '작년에', ' 좀 더 지난 과거에', '거의 하지 않았다', '전혀 하지 않았다'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시위참여를 거의 하지 않았거나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응답비율이 약 78% 정도로 나타났다(〈부표 20〉 참조). 한국의 경우에는 이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시위참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과 대만이었고, 가장 낮은 국가는 프랑스와 스웨덴이었다.

〔그림 III-38〕 시위참여 응답비율(ISSP 2004)



시위참여의 중요성의 측정 척도를 연속척도로 간주한 후 국가 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부표 23〉 참조). 시위참여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 대만, 칠fp, 불가리아의 순이었다. 즉 이들 국가는 시위참여의 경험이 과거이거나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평균은 3.29로 27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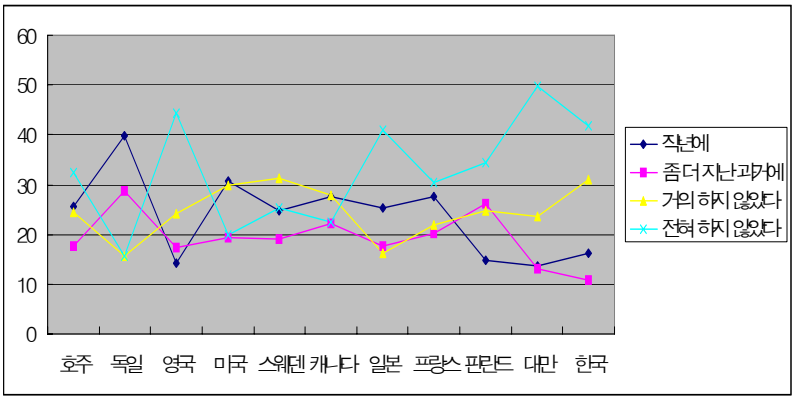
〔그림 III-39〕 국가별 시위참여의 평균



(자)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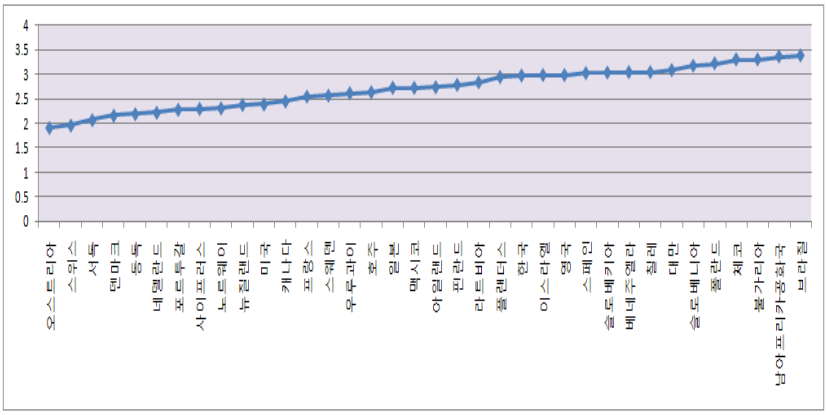
기부는 언제 기부를 하였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측정되었다. 척도는 '작년에', ' 좀 더 지난 과거에', '거의 하지 않았다', '전혀 하지 않았다'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는 기부를 거의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약 58% 정도로 나타났다. 반대로 1년 내에 기부를 한 경우는 약 23%정도로 나타났다(〈부표 21〉 참조). 한국의 경우에는 기부를 거의 안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 경우의 비율이 약 73%로 높게 나타났다. 기부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국가는 대만, 영국, 한국이었고, 가장 낮은 국가는 독일(서독), 미국이었다.

〔그림 III-40〕 기부 응답비율(ISSP 2004)



기부참여의 측정 척도를 연속척도로 간주한 후 국가 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부표 23〉 참조). 기부참여를 상대적으로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난 국가는 호주, 스위스, 서독, 덴마크, 동독의 순이었고, 반대인 경우는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불가리아, 체코 등이었다. 한국의 평균은 2.98로 23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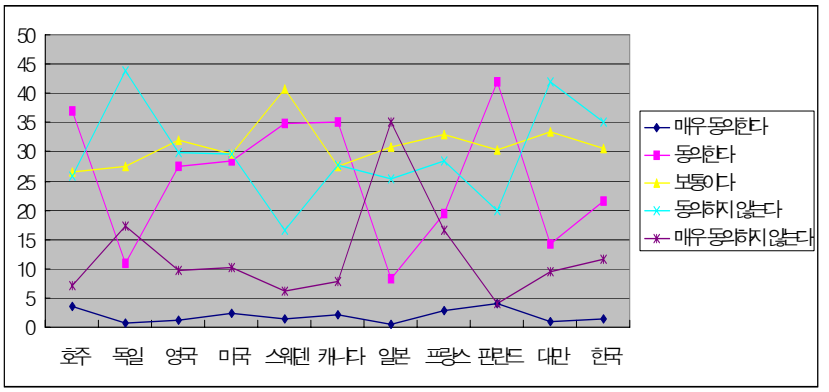
〔그림 III-41〕 국가별 기부 시기의 평균



(차) 공무원에 대한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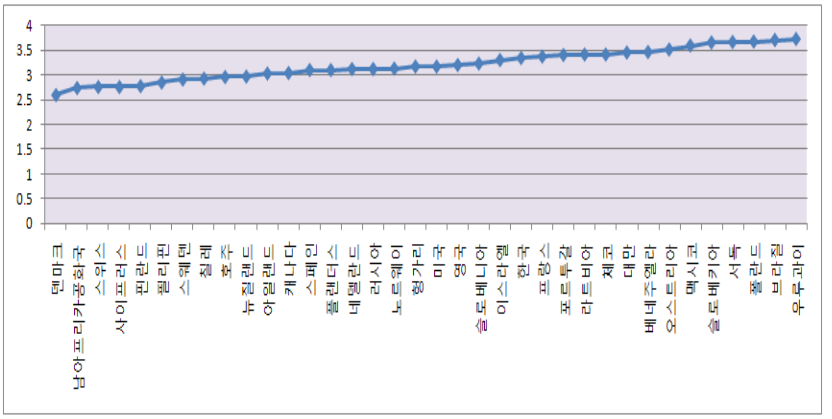
공무원에 대한 신뢰는 공무원에 대하여 대체로 신뢰한다라는 진술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로 질문이 만들어졌다. 척도는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보통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신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이 약 40%정도로 나타났고 동의하는 경우는 약 28%정도로 나타났다(〈부표 2 2〉 참조). 한국의 경우에는 기부를 공무원에 대한 신뢰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이 47%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에 대한 신뢰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국가는 독일, 대만, 한국이었고,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는 핀란드, 스웨덴이었다.

〔그림 III-42〕 공무원에 대한 신뢰 응답비율(ISSP 2004)



공무원에 대한 신뢰의 측정 척도를 연속척도로 간주한 후 국가 간 평균 비교를 실시하였다(〈부표 23〉 참조). 이 분석에서는 42개 국가를 모두 포함하였다. 공무원에 대한 신뢰의 평균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위스, 사이프러스의 순이었고, 반대인 경우는 우루과이, 브라질, 폴란드 등이었다. 한국의 평균은 3.34로 23위였다.

〔그림 III-43〕 국가별 공무원에 대한 신뢰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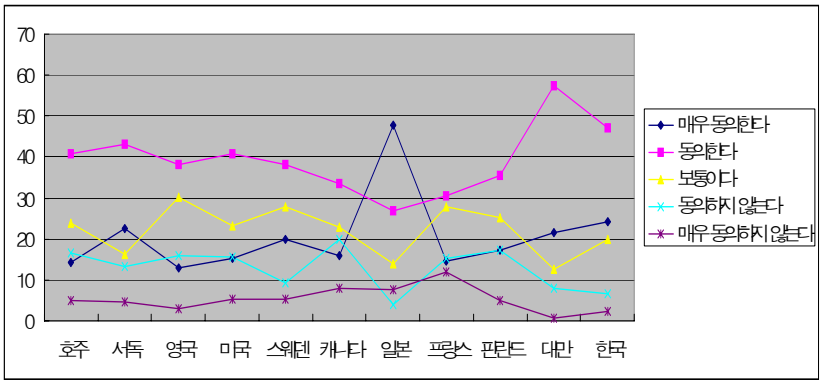
(3) 노동지향성

노동지향성의 경우 2005년 총 43개국(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구분)에 43,440명이 응답한 자료이다. 43개국을 모두 비교하기 보다는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국에는 독일(서독), 영국, 미국, 호주,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일본, 대만, 캐나다를 포함시켰다. 노동지향성의 지표 가운데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 매니저 및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의 3개 지표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가)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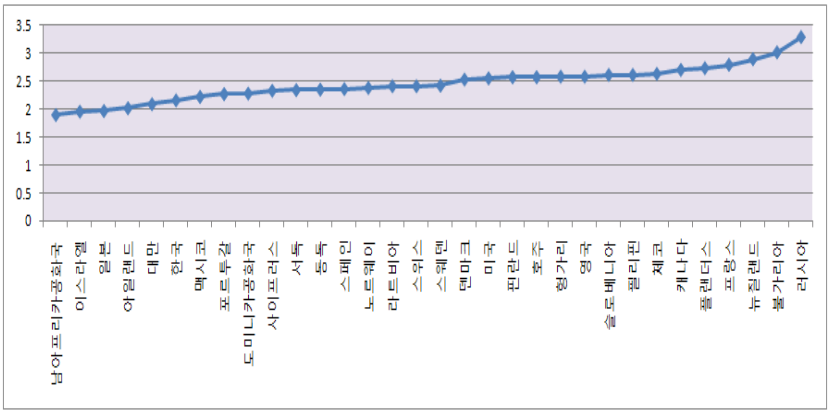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는 노동조합이 직업안정성에 중요하다는 기술에 대한 동의정도로 측정되었다. 척도는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보통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는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에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이 약 40%정도로 나타났고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도 약 20%정도로 나타나서 긍정적인 신뢰가 전체적으로 60%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24〉 참조). 부정적인 의견은 약 18% 정도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동의하는 경우가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에 매우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이었고 대만이나 한국의 경우에도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그림 III-44〕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 응답비율(ISSP 2005)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의 측정 척도를 연속척도로 간주한 후 국가 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부표 27〉 참조).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의 평균이 높은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라엘, 일본, 아일랜드, 대만의 순이었고, 반대인 경우는 러시아, 불가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등이었다. 한국의 평균은 2.16으로 6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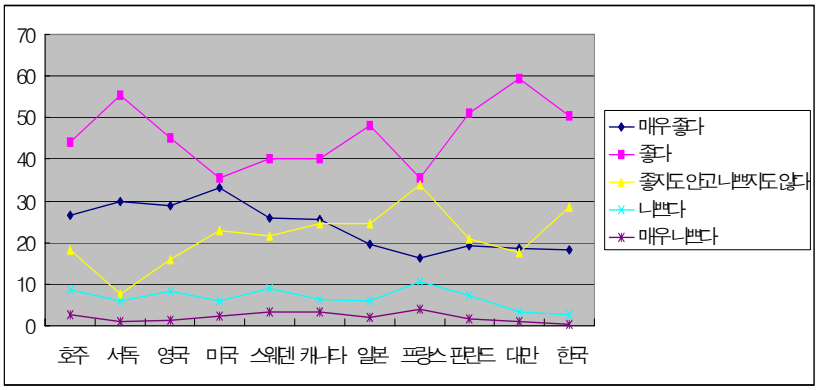
〔그림 III-45〕 국가별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의 평균



(나) 매니저와 종업원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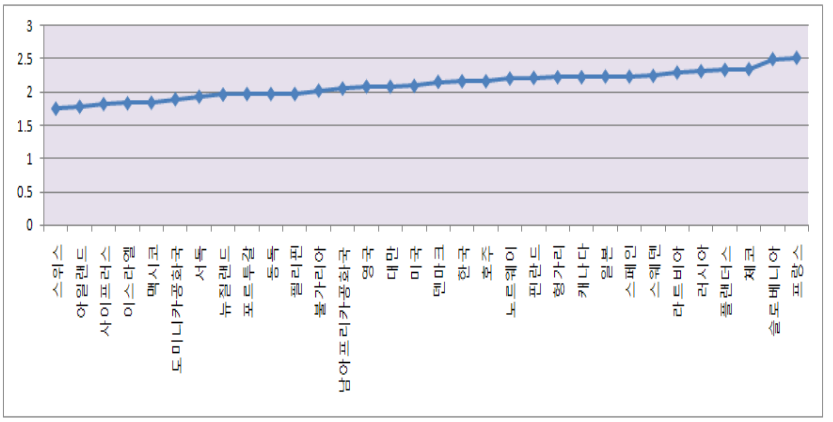
매니저와 종업원의 관계는 매니저와 종업원의 관계가 좋은가에 대한 질문으로 측정되었다. 척도는 '매우 좋다', '좋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는 매니저와 종업원의 관계가 '좋다'와 '매우 좋다'의 응답비율이 약 69%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부정적인 응답은 약 9%정도였다(〈부표 25〉 참조). 한국의 경우에도 이런 응답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매니저와 종업원의 관계가 좋다라는 응답비율이 높은 국가는 서독, 대만, 한국 등이었다.

〔그림 III-46〕 매니저와 종업원의 관계 응답비율(ISSP 2005)



매니저와 종업원의 관계의 측정 척도를 연속척도로 간주한 후 국가 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부표 27〉 참조). 매니저와 종업원의 관계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국가는 스위스,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이스라엘, 멕시코의 순이었고, 반대인 경우는 프랑스, 슬로베니아, 체코, 플랜더스, 러시아 순이었다. 한국의 평균은 2.16으로 18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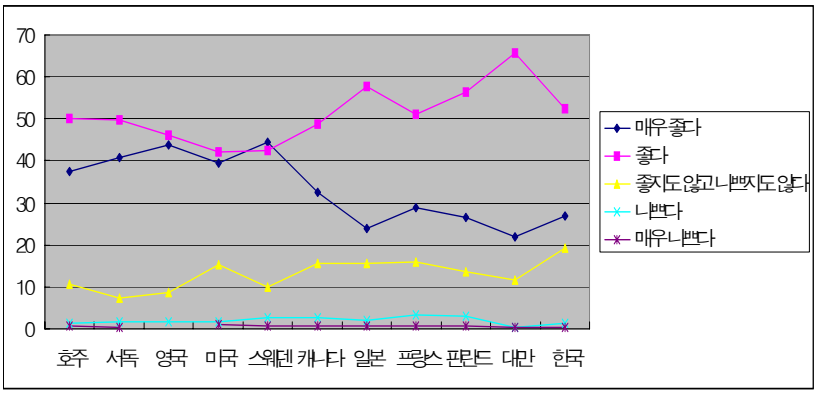
〔그림 III-47〕 국가별 매니저와 종업원의 관계의 평균



(다) 동료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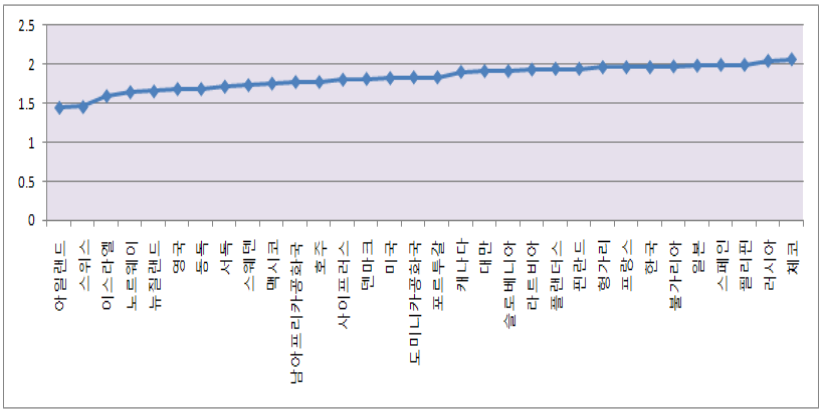
동료와의 관계는 매니저와 동료와 좋은가에 대한 질문으로 측정되었다. 척도는 '매우 좋다', '좋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는 동료와의 관계가 '좋다'와 '매우 좋다'의 응답비율이 약 84%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부정적인 응답은 약 7% 정도였다(〈부표 26〉 참조). 한국의 경우에도 이런 응답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동료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높은 국가는 호주, 서독, 영국, 미국, 스웨덴 등이었다.

〔그림 III-48〕 동료와의 관계 응답비율(ISSP 2005)



동료와의 관계의 측정 척도를 연속척도로 간주한 후 국가 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부표 27〉 참조). 동료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국가는 아일랜드, 스위스, 이스라엘, 노르웨이, 뉴질랜드의 순이었고, 반대인 경우는 체코, 러시아, 필리핀, 스페인, 일본 순이었다. 한국의 평균은 1.96으로 26위였다.

〔그림 III-49〕 국가별 동료와의 관계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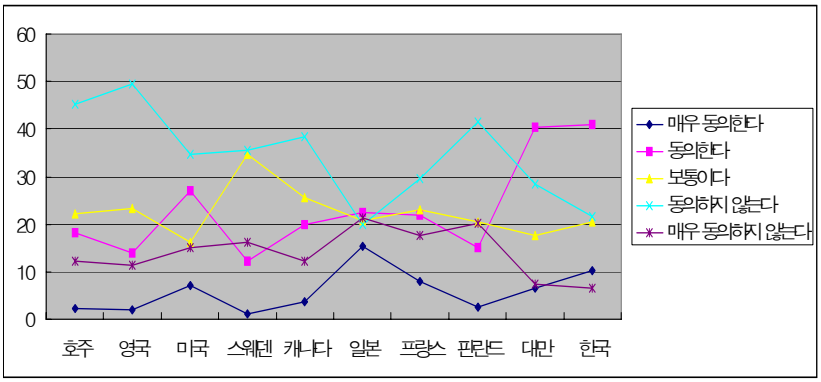
(4) 정부역할

정부역할의 경우 2006년 총 33개국에서 48,641명이 응답한 자료이다. 33개국을 모두 비교하기 보다는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국에는 호주, 캐나다, 대만, 핀란드, 프랑스, 일본, 한국, 스웨덴, 영국, 미국을 포함시켰다. 정부역할의 지표 가운데 정치에 대한 영향력, 대시민 정부서비스에 대한 신뢰, 타인과의 접촉의 3개 지표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가) 정치에 대한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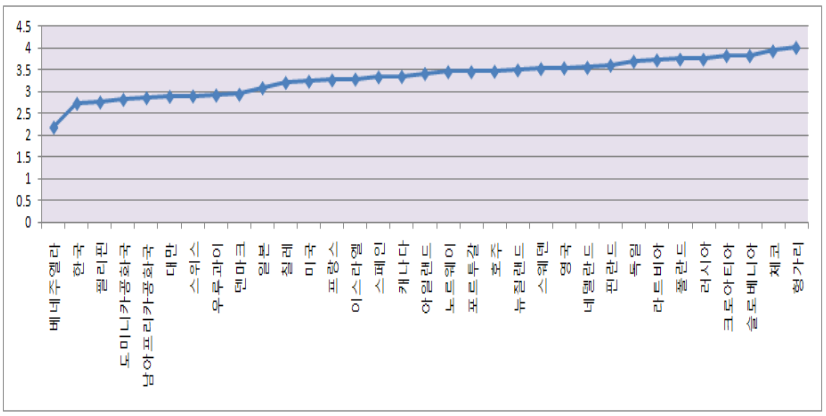
정치에 대한 영향력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기술에 대한 동의정도로 측정되었다. 척도는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보통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정치에 대한 영향력에 긍정적 응답 비율이 약 30%정도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약 48% 정도로 부정적 응답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28〉 참조). 한국의 경우에는 동의하는 경우가 약 51%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정치에 대한 영향력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국가는 대만, 한국 등이었고, 부정적 응답비율이 높은 국가는 영국, 호주 등이었다.

〔그림 III-50〕 정치에 대한 영향력 응답비율(ISSP 2006)



정치에 대한 영향력의 측정 척도를 연속척도로 간주한 후 국가 간 평균 비교를 실시하였다(〈부표 35〉 참조). 이 분석에서는 33개 국가가 포함되었다. 정치에 대한 영향력에 대하여 긍정적 방향으로 평균이 높은 국가는 베네수엘라, 한국, 필리핀, 도미니카 공화국의 순이었고, 반대인 경우는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순이었다. 한국의 평균은 2.73으로 2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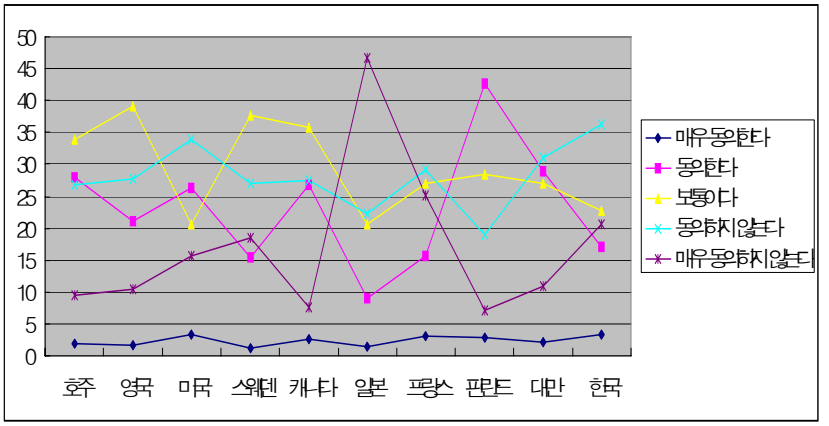
〔그림 III-51〕 국가별 정치에 대한 시민의 영향력의 평균



(나) 대시민 정부서비스에 대한 신뢰

대시민 정부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정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신뢰의 동의정도로 측정되었다. 척도는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보통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는 대시민 정부서비스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 응답 비율이 약 26%정도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약 45% 정도로 부정적 응답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29〉 참조). 한국의 경우에는 동의하는 경우가 약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57% 정도로 나타났다. 대시민 정부서비스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 의견이 많은 국가는 핀란드, 대만, 호주 등이었고, 부정적 응답비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 한국, 스웨덴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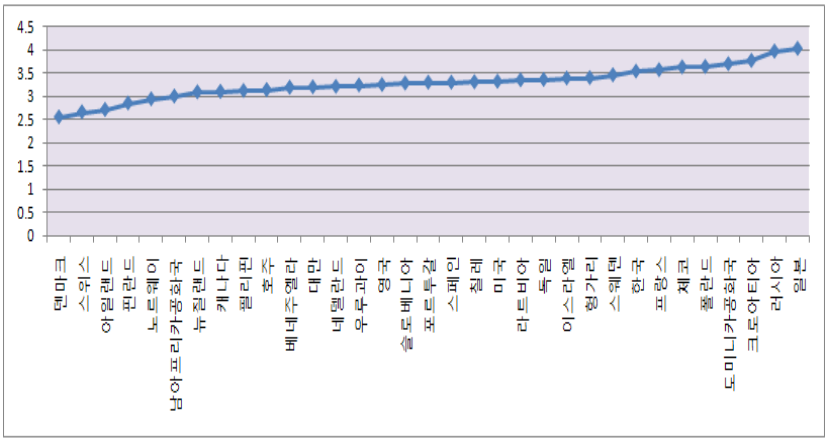
〔그림 III-52〕 대시민 정부서비스에 대한 신뢰 응답비율(ISSP 2006)



대시민 정부서비스에 대한 신뢰의 측정 척도를 연속척도로 간주한 후 국가 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부표 35〉 참조). 이 분석에서는 33개 국가가 포함되었다. 대시민 정부서비스에 대한 신뢰에 대하여 긍정적 방향으로 평균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 스위스, 아일랜드, 핀란드의 순이었고, 반대

인 경우는 일본, 러시아, 크로아티아, 도미니카공화국의 순이었다. 한국의 평균은 3.54로 26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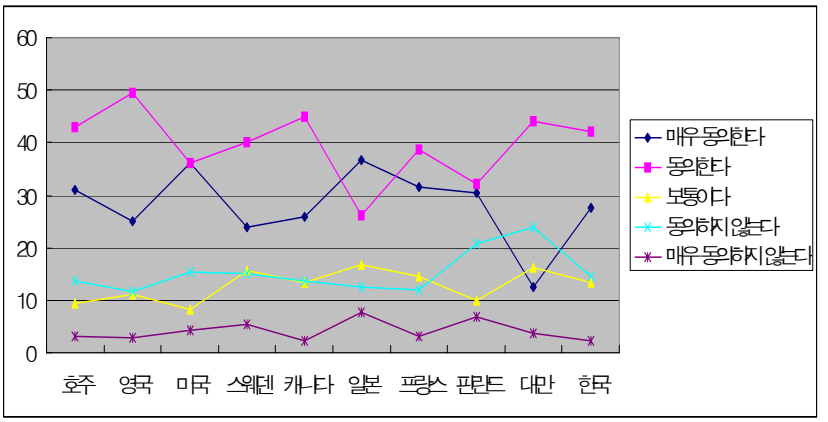
〔그림 III-53〕 국가별 대시민 정부서비스에 대한 신뢰의 평균



(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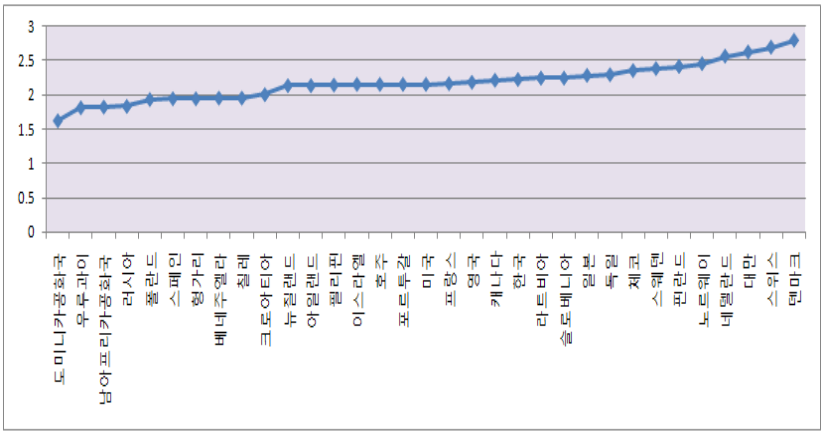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는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단지 몇 사람 존재한다는 진술에 대한 동의정도로 측정되었다. 척도는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보통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의 경우 동의정도가 강할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정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의정도가 약할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한다의 응답비율이 약 70% 정도 나타나 타인에 대한 신뢰정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되었다(〈부표 30〉 참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은 국가는 미국, 영국, 호주, 핀란드 등이었고,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국가는 대만이었다.

〔그림 III-54〕 신뢰할 수 있는 타인의 존재 응답비율(ISSP 2006)



타인에 대한 신뢰정도의 측정 척도를 연속척도로 간주한 후 국가 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부표 35〉 참조). 타인에 대한 신뢰에 대하여 평균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 스위스, 대만, 네덜란드의 순이었고, 반대인 경우는 도미니카 공화국, 우루과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시아의 순이었다. 한국의 평균은 2.22로 21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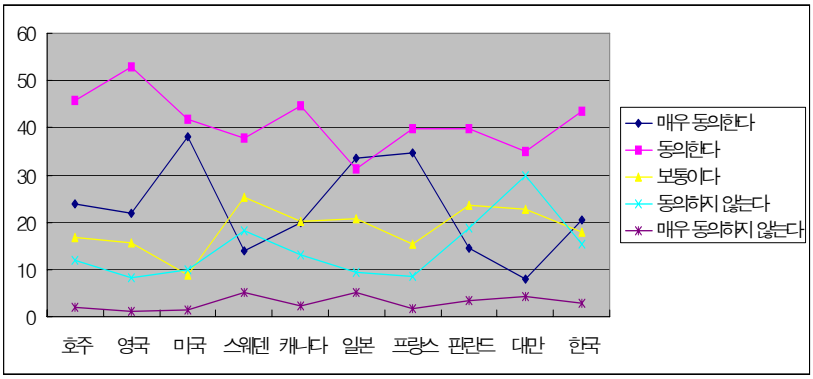
〔그림 III-55〕 국가별 신뢰할 수 있는 타인의 존재의 평균



(라) 타인에 대한 불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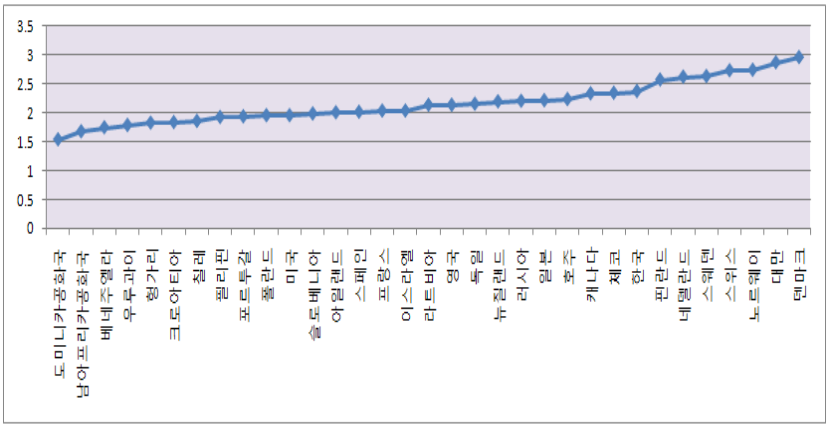
타인에 대한 불신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타인이 자신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는 진술에 대한 동의정도로 측정되었다. 척도는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보통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로 구성되었다. 동의할수록 타인에 대한 불신이 강한 것이고 동의하지 않을수록 타인에 대한 불신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불신의 경우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한다'의 응답비율이 약 64% 정도 나타나 타인에 대한 불신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부표 31〉 참조). 한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비율이 나타났다. 타인에 대한 불신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은 국가는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이었고,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국가는 대만이었다.

〔그림 III-56〕 타인에 대한 불신 응답비율(ISSP 2006)



타인에 대한 불신의 측정 척도를 연속척도로 간주한 후 국가 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부표 35〉 참조). 이 분석에서는 33개 국가가 포함되었다. 타인에 대한 불신에 대하여 평균이 높은 국가는 도미니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베네수엘라, 우루과이의 순이었고, 반대인 경우는 덴마크, 대만,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의 순이었다. 한국의 평균은 2.37로 26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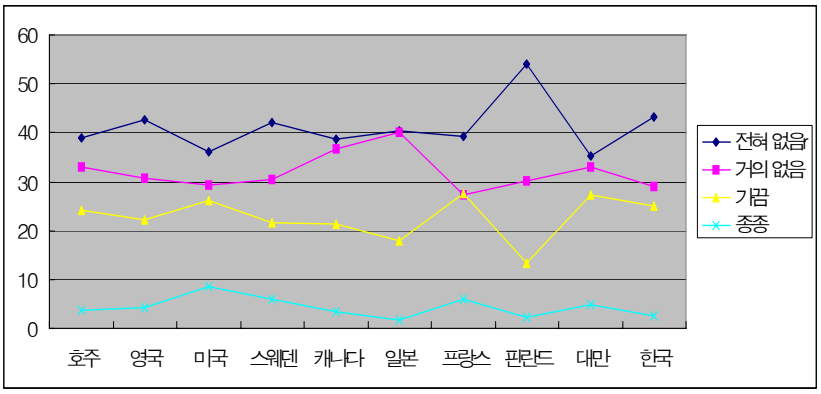
〔그림 III-57〕 국가별 타인에 대한 불신의 평균



(마) 타인의 중요결정에 대한 도움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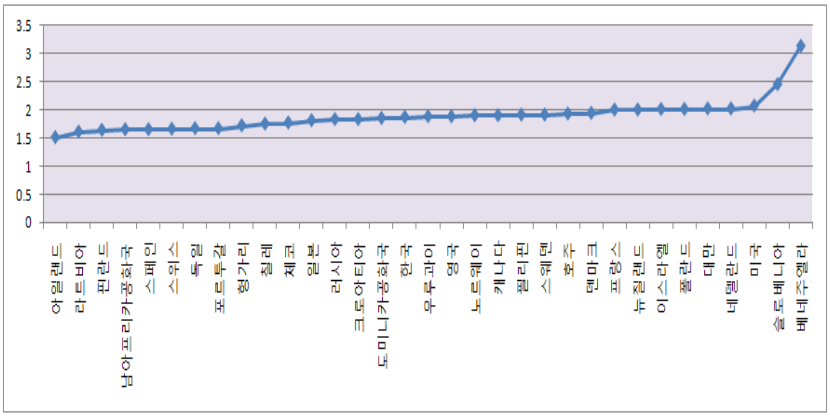
타인의 중요결정에 대한 도움 요청은 '타인이 중요한 결정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측정되었다. 척도는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종종'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는 타인의 중요결정에 대한 도움 요청의 경우 '전혀 없음'과 '거의 없음'의 응답비율이 약 72% 정도 나타나 타인에게 도움 요청을 받는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32〉 참조). 한국의 경우도 유사한 비율이 나타났다. 타인의 중요결정에 대한 도움 요청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국가는 핀란드였고 그 다음이 한국이었다.

〔그림 III-58〕 타인의 중요결정에 대한 도움 요청 응답비율(ISSP 2006)



타인의 중요결정에 대한 도움 요청의 측정 척도를 연속척도로 간주한 후 국가 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부표 35〉 참조). 이 분석에서는 33개 국가가 포함되었다. 타인의 중요결정에 대한 도움 요청을 받는 경험이 많은 국가는 베네수엘라, 슬로베니아, 미국, 네덜란드, 대만의 순이었고, 반대인 경우는 아일랜드, 라트비아, 핀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순이었다. 한국의 평균은 1.87로 18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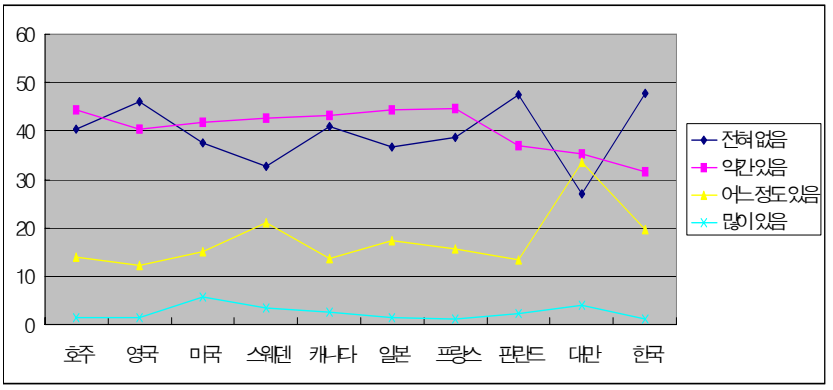
〔그림 III-59〕 국가별 타인의 중요요청에 대한 도움 요청의 평균



(바) 자신의 중요결정에 대한 타인의 도움 요청

자신의 중요결정에 대한 타인의 도움 요청은 '자신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타인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측정되었다. 척도는 '전혀 없음', '약간 있음', '어느 정도 있음', '많이 있음'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중요결정에 대한 타인의 도움 요청을 할 수 있는 타인의 수가 '전혀 없음'과 '약간 있음'의 응답비율이 약 80% 정도로 나타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타인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33〉 참조). 한국의 경우에는 '전혀 없음'의 응답비율이 50% 가까이 나타났다. 자신의 중요결정에 대한 타인의 도움 요청할 수 있는 타인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국가는 한국, 핀란드의 순이었다. 어느 정도 있다는 응답이 많은 국가는 대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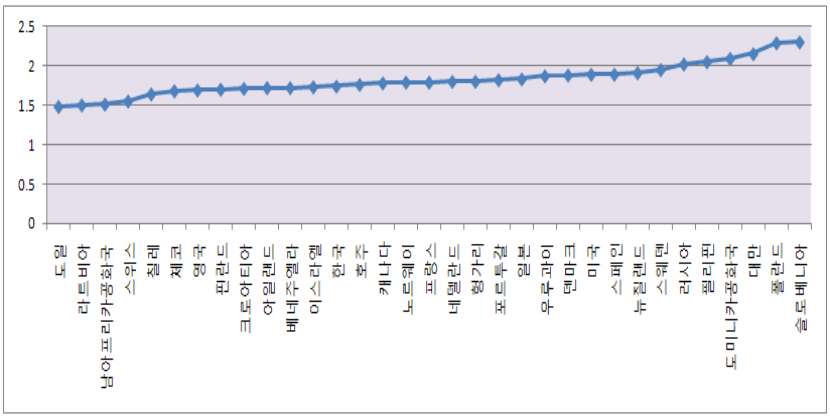
〔그림 III-60〕 자신의 중요결정에 대한 타인의 도움 요청 응답비율(ISSP 2006)



자신의 중요결정에 대한 타인의 도움 요청의 측정 척도를 연속척도로 간주한 후 국가 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부표 35〉 참조). 이 분석에서는 33개 국가가 포함되었다. 자신의 중요결정에 대한 타인의 도움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국가는 슬로베니아. 폴란드, 대만, 도미니카 공화국의

순이었고, 반대인 경우는 독일, 라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위스의 순이었다. 한국의 평균은 1.74로 21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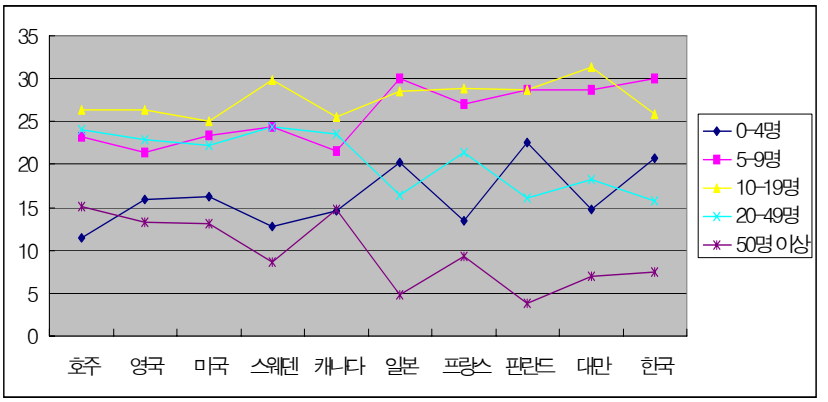
〔그림 Ⅲ-61〕 국가별 자신의 중요요청에 대한 타인의 도움 요청의 평균



(사) 일주일 동안의 타인과의 접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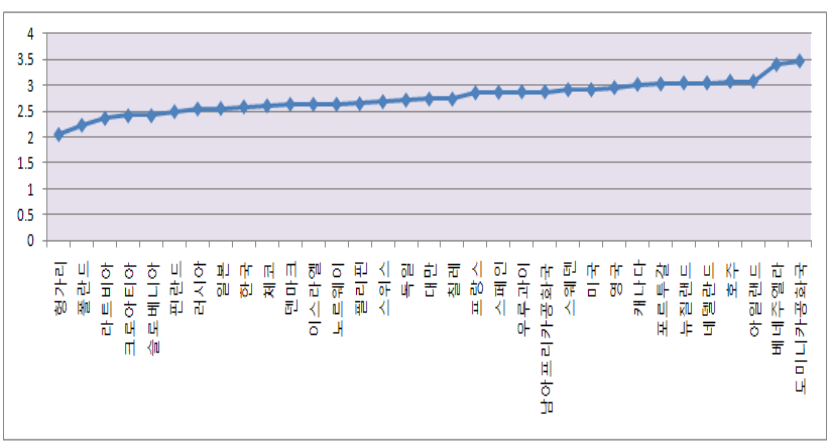
일주일 동안의 타인과의 접촉은 일주일 동안 면대면, 인터넷, 전화통화 등으로 얼마나 많은 타인과 접촉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측정되었다. 척도는 '0-4명', '5-9명', '10-19명', '20-49명', '50명 이상'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일주일 동안의 타인과의 접촉에서 10-19명이 약 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5-9명이었다(〈부표 34〉 참조). 한국의 경우에는 5-9명이 30%이상의 응답률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10-19명이었다. 일주일 동안의 타인과의 접촉에서 50명 이상의 응답이 많은 국가는 캐나다였고, 20-49명의 응답이 많은 국가는 스웨덴이었다.

〔그림 III-62〕 일주일 동안의 타인과의 접촉 응답비율(ISSP 2006)



일주일 동안의 타인과의 접촉의 측정 척도를 연속척도로 간주한 후 국가 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부표 35〉 참조). 일주일 동안의 타인과의 접촉에서 접촉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국가는 도미니카 공화국, 베네수엘라, 아일랜드, 호주, 네덜란드의 순이었고, 반대인 경우는 헝가리, 폴란드, 라트비아, 크로아티아의 순이었다. 한국의 평균은 2.59로 25위였다.

〔그림 III-63〕 국가별 일주일동안 타인과의 접촉빈도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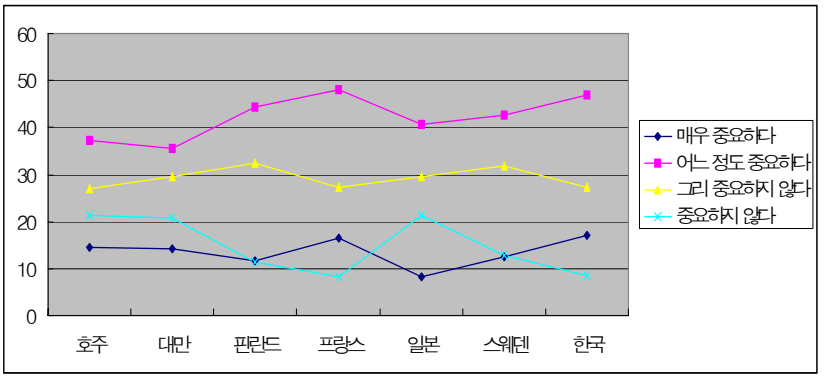
(5) 레저시간과 스포츠

레저시간과 스포츠의 경우 2007년 총 24개국에서 36,680명이 응답한 자료이다. 아직 모든 회원국가에서 수합된 자료가 공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대상국이 24개국으로 적다. 24개국을 모두 비교하기 보다는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국에는 호주, 대만, 핀란드, 프랑스, 일본, 한국, 스웨덴을 포함시켰다. 레저시간과 스포츠의 지표 가운데 스포츠의 사회적 목적에 대한 지표인 타인을 만나기 위해 스포츠 활용과 사회참여의 하위 지표인 스포츠 단체 참여, 문화 단체 참여, 종교 단체 참여, 지역사회 봉사단체 참여, 정치 단체 참여의 6개 지표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가) 사람을 만나기 위한 스포츠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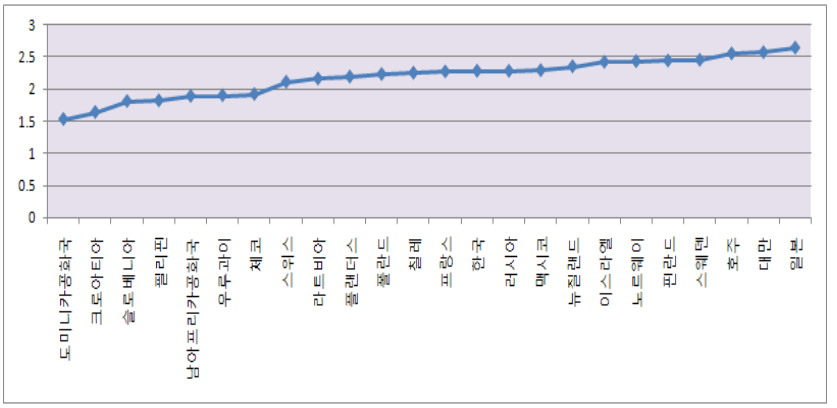
사람을 만나기 위한 스포츠 활동은 스포츠 활동의 목적이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것의 중요도에 대한 동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척도는 '매우 중요하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 '그리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사람을 만나기 위한 스포츠 활동에서 중요하다는 의견이 약 55% 정도 되었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약 15%정도였다(〈부표 36〉 참조). 한국의 경우에는 중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아서 약 64%정도 되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한 스포츠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 한국 등이었고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은 국가는 일본이었다.

〔그림 III-64〕 사람을 만나기 위한 스포츠 활동 응답비율(ISSP 2007)



사람을 만나기 위한 스포츠 활동의 측정 척도를 연속척도로 간주한 후 국가 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부표 42〉 참조). 이 분석에서는 24개 국가가 포함되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한 스포츠 활동의 중요성이 높은 국가는 도미니카 공화국,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필리핀의 순이었고, 반대인 경우는 일본, 대만, 호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의 순이었다. 한국의 평균은 2.28로 14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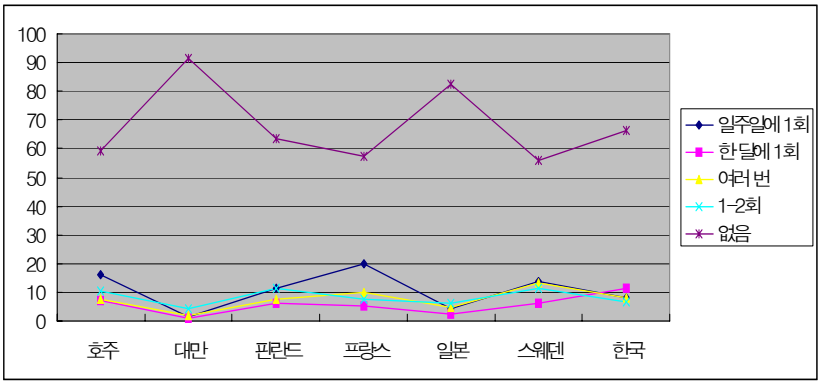
〔그림 III-65〕 국가별 사람을 만나기 위한 스포츠활동의 평균



(나) 스포츠 단체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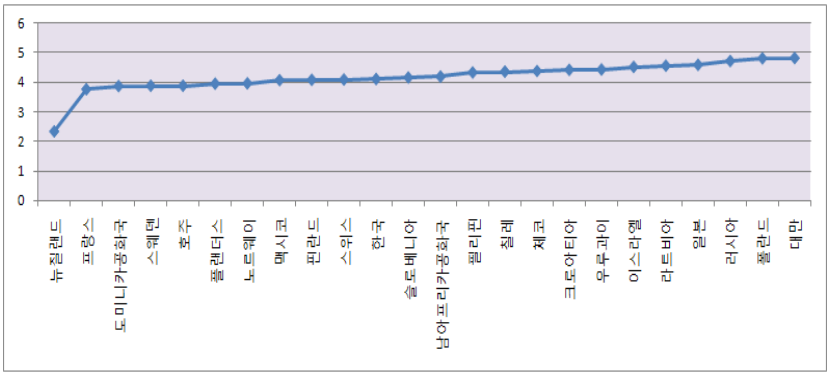
스포츠 단체 참여는 지난 12개월 동안 스포츠 단체에 참여한 횟수를 측정하였다. 척도는 '일주일에 1회', '한 달에 1회', '수 차례', '1-2회', '없음'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스포츠 단체 참여에서 전혀 없다라는 응답이 6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일주일에 1회가 11%, 연 1-2회가 8%정도로 나타났다(〈부표 37〉 참조). 한국의 경우에는 한 달에 1회가 11.5%로 나타나 일주일에 1회보다는 높은 응답비율이 나타났다. 스포츠 단체 참여 횟수가 많은 국가는 프랑스, 호주 등이었고 적은 국가는 대만, 일본 등 이었다.

〔그림 III-66〕 스포츠 단체 참여 응답비율(ISSP 2007)



스포츠 단체 참여의 측정 척도를 연속척도로 간주한 후 국가 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부표 42〉 참조). 이 분석에서는 24개 국가가 포함되었다. 스포츠 단체 참여 횟수가 높은 국가는 뉴질랜드, 프랑스, 도미니카 공화국, 스웨덴, 호주, 플랜더스의 순이었고, 반대인 경우는 대만, 폴란드, 러시아, 일본, 라트비아의 순이었다. 한국의 평균은 4.128로 11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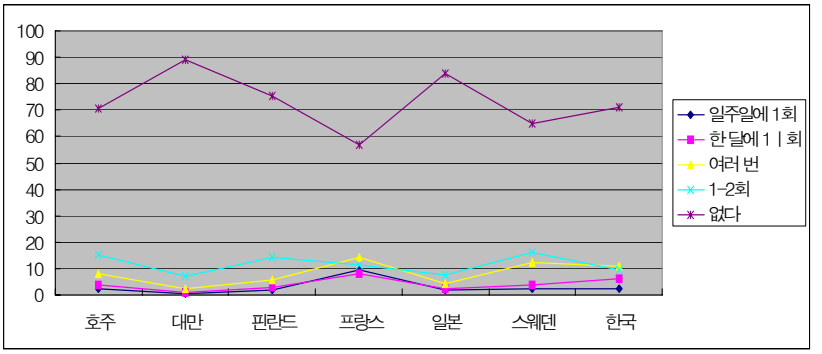
〔그림 III-67〕 국가별 스포츠 단체 참여의 평균



(다) 문화 단체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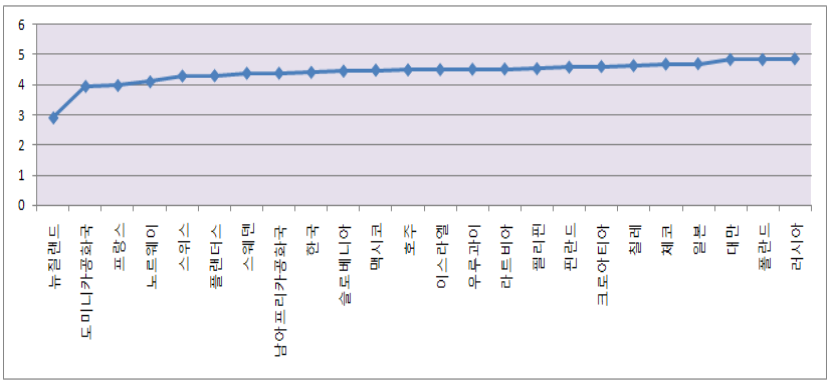
문화 단체 참여는 지난 12개월 동안 문화 단체에 참여한 횟수를 측정하였다. 척도는 '일주일에 1회', '한 달에 1회', '수 차례', '1-2회', '없음'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는 문화 단체 참여에서 '전혀 없다'라는 응답이 약 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연 1-2회가 11.7%로 나타났다(〈부표 38〉 참조). 한국의 경우에는 '전혀 없다'에 응답한 비율이 71.2%였고 '여러 번'이 약 11%로 나타났다. 문화 단체 참여 횟수가 많은 국가는 프랑스, 스웨덴, 호주 등이었고 적은 국가는 대만, 일본 등 이었다.

〔그림 III-68〕 문화 단체 참여 응답비율(ISSP 2007)



문화 단체 참여의 측정 척도를 연속척도로 간주한 후 국가 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24개 국가가 포함되었다. 문화 단체 참여 횟수가 높은 국가는 뉴질랜드, 도미니카 공화국, 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의 순이었고, 반대인 경우는 러시아, 폴란드, 대만, 일본의 순이었다. 한국의 평균은 4.41로 9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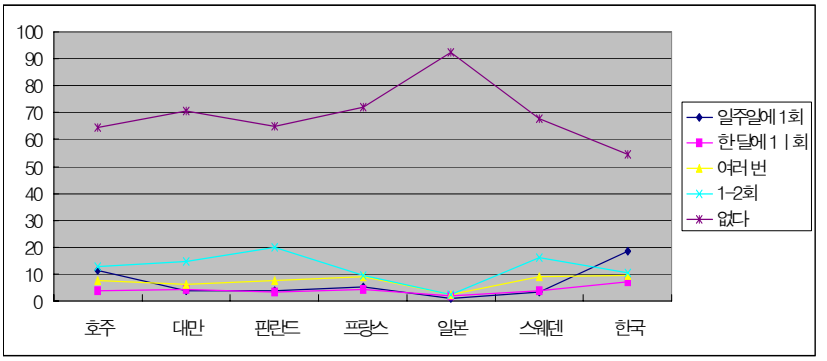
〔그림 III-69〕 국가별 문화 단체 참여의 평균



(라) 종교 단체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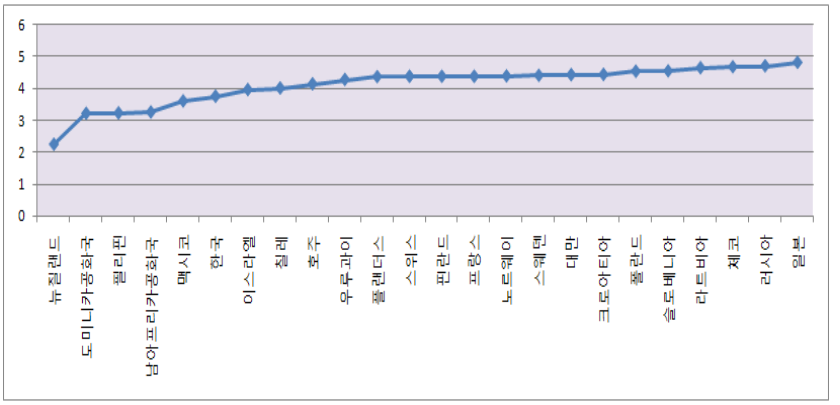
종교 단체 참여는 지난 12개월 동안 종교 단체에 참여한 횟수를 측정하였다. 척도는 '일주일에 1회', '한 달에 1회', '수 차례', '1-2회', '없음'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종교 단체 참여에서 '전혀 없다'라는 응답이 약 6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연 1-2회가 12.4%로 나타났다(〈부표 39〉 참조). 한국의 경우에는 '전혀 없다'에 응답한 비율이 약 55%였고 '일주일에 1회'가 약 18%로 높게 나타났다. 종교 단체 참여 횟수가 많은 국가는 한국, 호주 등이었고 적은 국가는 일본, 대만 등 이었다.

〔그림 Ⅲ-70〕 종교 단체 참여 응답비율(ISSP 2007)



종교 단체 참여의 측정 척도를 연속척도로 간주한 후 국가 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부표 42〉 참조). 이 분석에서는 24개 국가가 포함되었다. 종교 단체 참여 횟수가 높은 국가는 뉴질랜드, 도미니카 공화국, 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의 순이었고, 반대인 경우는 러시아, 폴란드, 대만, 일본의 순이었다. 한국의 평균은 4.41로 6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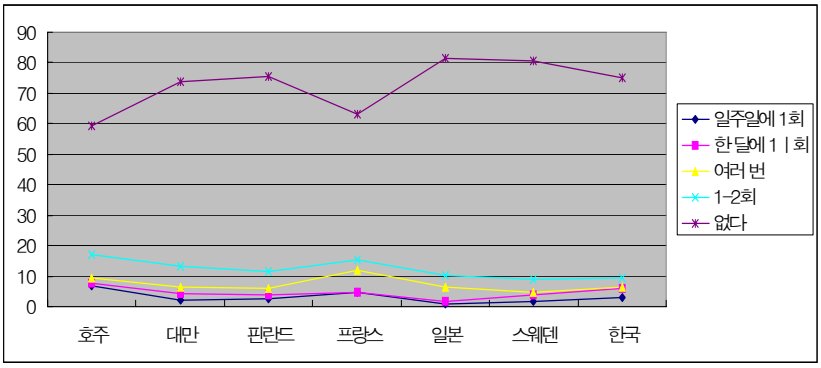
〔그림 Ⅲ-71〕 국가별 종교 단체 참여의 평균



(마) 지역사회 봉사단체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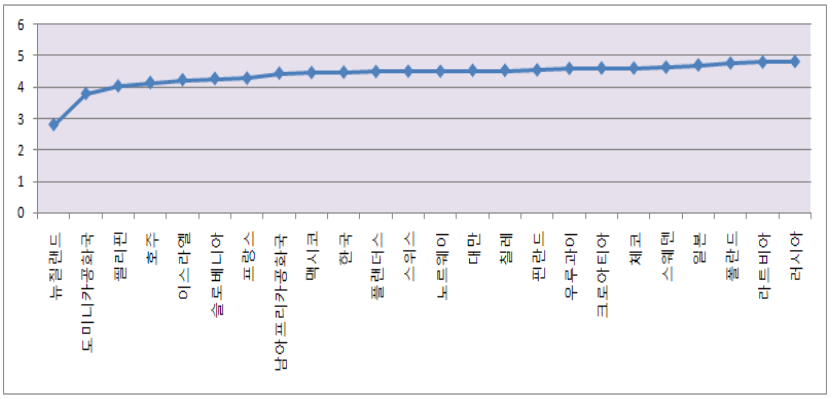
지역사회 봉사단체 참여는 지난 12개월 동안 지역사회 봉사단체에 참여한 횟수를 측정하였다. 척도는 '일주일에 1회', '한 달에 1회', '수 차례', '1-2회', '없음'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지역사회 봉사단체 참여에서 '전혀 없다'라는 응답이 약 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연 1-2회가 13.0%로 나타났다(〈부표 40〉 참조). 한국의 경우에는 '전혀 없다'에 응답한 비율이 약 75%였고 '연 1-2회'가 약 9.4%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봉사단체 참여 횟수가 많은 국가는 호주, 프랑스 등이었고 적은 국가는 일본, 스웨덴 등 이었다.

〔그림 III-72〕 지역사회 봉사단체 참여 응답비율(ISSP 2007)



지역사회 봉사단체 참여의 측정 척도를 연속척도로 간주한 후 국가 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부표 42〉 참조). 이 분석에서는 24개 국가가 포함되었다. 지역사회 봉사단체 참여 횟수가 높은 국가는 뉴질랜드, 도미니카 공화국, 필리핀, 호주, 이스라엘의 순이었고, 반대인 경우는 러시아, 라트비아, 폴란드, 일본의 순이었다. 한국의 평균은 4.47로 10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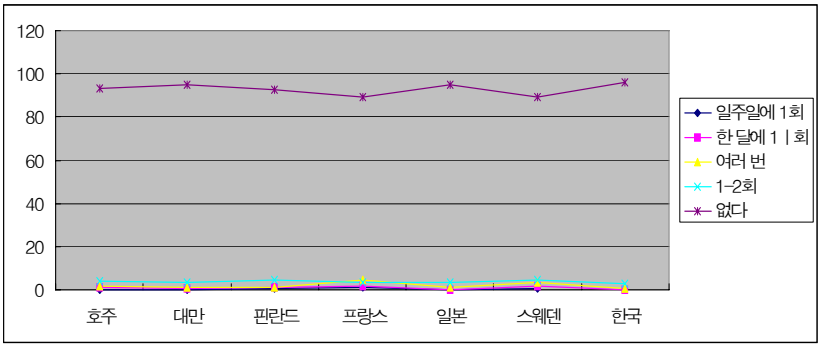
〔그림 Ⅲ-73〕 국가별 지역사회 봉사단체 참여의 평균



(바) 정치 단체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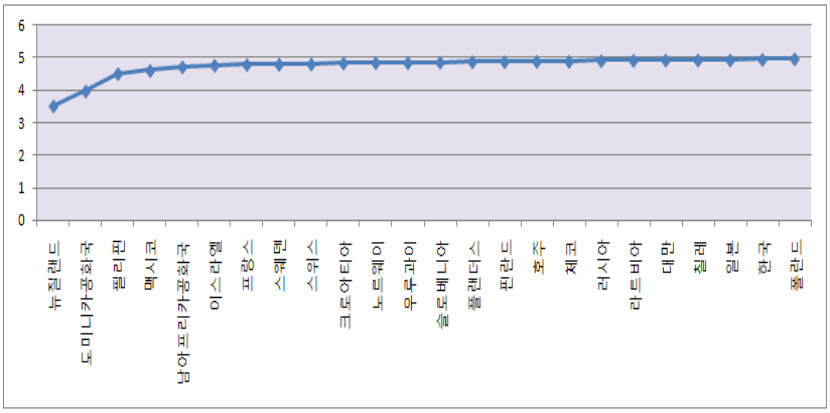
정치 단체 참여는 지난 12개월 동안 정치 단체에 참여한 횟수를 측정하였다. 척도는 '일주일에 1회', '한 달에 1회', '수차례', '1-2회', '없음'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정치 단체 참여에서 '전혀 없다'라는 응답이 약 9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연 1-2회가 3.8%로 나타났다(〈부표 41〉 참조). 한국의 경우에는 '전혀 없다'에 응답한 비율이 약 96%였고 '연 1-2회'가 약 4.5%로 나타났다. 비교 국가 간에 정치 단체 참여 횟수의 응답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II-74〕 정치 단체 참여 응답비율(ISSP 2007)



정치 단체 참여의 측정 척도를 연속척도로 간주한 후 국가 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부표 42〉 참조). 이 분석에서는 24개 국가가 포함되었다. 정치 단체 참여 횟수가 높은 국가는 뉴질랜드, 도미니카 공화국, 필리핀,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순이었고, 반대인 경우는 폴란드, 한국, 일본, 칠레의 순이었다. 한국의 평균은 4.95로 23위였다.

〔그림 III-75〕 국가별 정치 단체 참여의 평균



4.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의 세계가치조사

가. 개관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WVS) 결과는 대상국가의 문화적 변화를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이들 변화를 시간에 따라 모니터링하기 위해 일정한 시점을 두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시점은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되어 조정된다.

WVS는 70개국 이상에서 가치관과 신념을 조사하는 설문에 토대를 둔 세계인구의 80% 이상을 대상으로 사회구조 및 정치적 상황 변화를 조사하고 있다. WVS는 1981-1984 wave, 1989-1993 wave, 1994-1999 wave, 1999-2004 wave, 2005-2008 wave로 구분하여 현재까지 총 5차에 걸친 조사가 이루어졌다.

World Values Survey(WVS)는 세계 각국에서 연구하고 있는 사회과학자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문화/정치적 변화를 연구하는 조사로써 각 국가 사람들의 삶과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색한다. WVS는 전 세계의 사회과학자를 주축으로 각 나라와 인종을 대표하는 사람들 1,000여명과의 인터뷰에서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자료가 생산되었고 이를 토대로 국가 간 삶의 가치나 주관 그리고 다른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비교분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WVS의 주요 조사내용은 각 국의 삶/가치관, 환경, 일, 가족,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도덕, 민족성, 사회통계 등이며, 총 259개 문항을 통해 국가의 가치관 및 신념을 측정하고 있다. 259개 문항 중, 응답 국가 및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인터뷰 상황을 기록하도록 한 문항을 제외하고, 실제 가치관 및 신념 측정에 사용되는 문항은 모두 231개 문항이다.

WVS는 80개 이상의 국가들에 대해 적어도 하나의 조사웨이브(Survey Wave)에서 조사된 적이 있으며, 다른 조사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WVS는 광범위한 주제 분야를 다루고, 사회/문화/정치 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영향

력 있는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회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의 가치관과 경제발전, 환경오염과 환경보호, 정치 문화와 민주 시설 등의 주제를 연관시켜 다양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WVS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요구의 변화에 따라 조사 항목을 추가 및 조정함으로써 이러한 변화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나타내고 예측 가능하도록 정교화 되었다. WVS 프로젝트는 전 세계 국가별 재정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 국가별로 해당 국가의 사회여건을 대표할 수 있는 대상을 최소 1,000명 이상 표집 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내용의 상호 공유를 위해 참여국가간 서로의 자료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 국가들은 60개 이상의 국가별 자료를 활용하여 기본적인 가치 및 신념을 상호 비교할 수 있다. 또한 WVS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국제회의를 통해 국가별 조사결과와 해석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WVS는 전 세계 각 지역을 대표하는 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 자료는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각종 교육 및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WVS는 계속되는 조사를 통해 좀 더 다양한 사회를 탐색할 수 있도록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조사대상 국가의 경우 전 세계인구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이어서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WVS는 경제성장, 환경오염, 환경보호에 대한 태도, 정치 문화 및 민주제도 등 가치와 신념 수준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WVS의 조사대상 국가들의 문화적 변화에 대한 일정한 패턴은 제 1차 웨이브 조사가 실시된 1981년부터 1990년 조사결과에 따라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좀 더 심층적인 탐색을 위해 조사대상 국가들은 1995-2000년까지의 추가적인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웨이브 조사는 서구권 외의 국가사회에 조사를 적용하고,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 문화적 발달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제5차 웨이브조사는 2005-2008년에 실시되었고, 다음 웨이브조사는 현재 2010년부터 2012년에 실시될 예정에 있다.

나. 조사방법 및 지표

조사도구는 6개 대륙의 80개 이상의 국가에서 해당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사회집단을 표집 하여 면대면 조사가 수행되며, WVS 프로젝트는 제1차 웨이브조사가 1981년부터 시작되었다. 제1차 웨이브 조사는 주로 유럽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Jan Kerkhofs와 Ruud de Moor가 1981년에 실시한 유럽국가 가치조사(European Values Survey: EVS)로부터 시작되었다. EVS는 서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 14개 국가가 추가로 조사되어 여러 국가의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차 웨이브 조사부터는 다문화 및 시계열적인 분석을 위해 유럽 외의 국가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다만 국가마다 동일한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년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조사시점 차이로 인한 분석의 한계가 존재한다.

총 255개의 문항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1번부터 3번까지는 국가코드나 OECD 국가여부 등 국가관련 기초사항이고 4번부터 234번까지는 세계가치조사의 주된 조사항목으로 일의 중요성, 건강상태, 아동, 신뢰, 이웃, 사회참여, 직업관, 정치, 환경, 민주주의, 신임, 정보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235번부터 255번까지는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성별, 생년, 나이, 직업, 가정상태, 계급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다. 한국과의 비교

WVS의 255개 지표 가운데 사회적 자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신뢰, 사회참여, 호혜성, 정치관심과 관련된 지표들이다. 총 20개의 지표가 사회적 자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0개의 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III-7〉 사회적 자본 관련 WVS 지표(WVS 2005-2008)

영역	지표	WVS SPSS 파일상의 번호
사회참여	교회 신자 혹은 종교단체 회원	V24
	스포츠 혹은 레크레이션 회원	V25
	예술, 음악, 교육 회원	V26
	노동조합의 회원	V27
	정당 회원	V28
	환경 단체 회원	V29
	전문적 조직의 회원	V30
	자비롭고 인도주의적인 기관 회원	V31
	소비자 단체 회원	V32
	정치에 대한 관심	V95
신뢰	타인을 돕는 것의 중요성	V84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다.	V23
	당신은 가족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V125
	신뢰: 당신의 이웃들	V126
	신뢰: 당신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V127
	신뢰: 당신이 처음 만난 사람	V128
	신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V129
	신뢰: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	V130

총 114개국에서 WVS조사에 참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선택한 18개의 지표에 자료가 포함된 국가는 43개[5]로 60,579개의 사례가 수집되었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1,200개의 사례가 포함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표에 따라 응답국가나 사례 수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지표의 척도별 응답비율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43개국을 모두 비교하는 것보다는 주요국을 선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주요국으로는 미국, 일본, 호주, 스웨덴, 핀란드, 스위

5)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일본,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스웨덴, 아르헨티나, 핀란드, 한국, 폴란드, 스위스, 브라질, 칠레, 인디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중국, 대만, 터키, 우크라이나, 페루, 가나, 몰도바,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세르비아, 이집트, 멕시코, 요르단, 사이프러스, 트리니다드토바고, 안도라, 말레이시아, 부루키나파소, 에티오피아, 말리, 르완다, 잠비아, 독일

스, 중국, 대만, 독일, 한국을 선정하였다. 주요국으로 선정된 국가는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미의 국가 중 3만 불 이상의 국민소득과 향후 한국이 따라 가야 할 선진국에 해당되는 국가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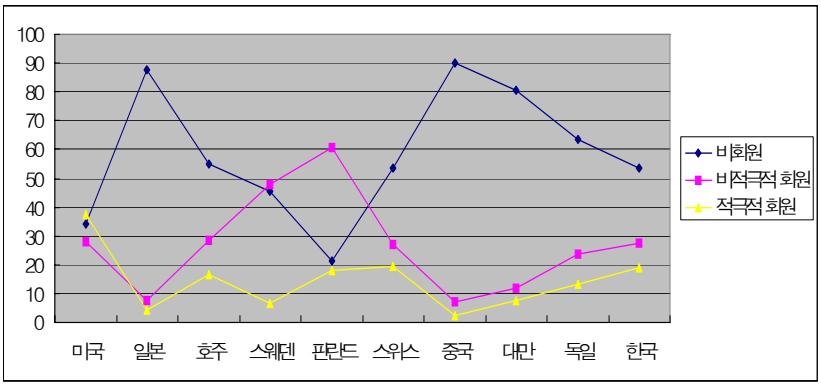
(1) 사회참여

사회참여의 경우에는 총 10개의 지표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지표의 척도는 , 비회원(Not a Member), 비적극적 회원(Inactive Member)과 적극적 회원(Active Member)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모르겠다와 같은 응답은 모두 무응답 처리하도록 WVS에서는 코딩규칙을 정하였다. 다만 정치에 대한 관심의 경우에는 정치에 대한 관심의 측정척도는 '매우 관심있다', '어느 정도 관심있다', '매우 관심없다', '전혀 관심없다'의 4개 척도로 구성되었다.

(가) 교회 신자 혹은 종교단체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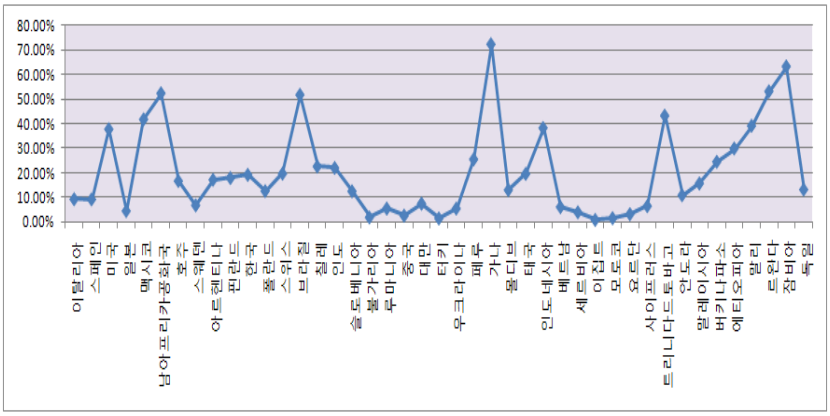
전체적으로는 비회원인 경우가 61%였고 비적극적 회원인 25%, 적극적 회원이 14%정도였다(〈부표 43〉 참조). 한국의 경우에는 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19% 정도로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이었으며, 중국과 일본은 회원 자체가 가장 적은 국가였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비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III-76〕 교회 신자 혹은 종교단체 회원 응답비율(WVS 2005-2008)



43개국의 응답비율을 분석한 결과, 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가나(72.1%), 잠비아(63.1%), 남아프리카 공화국(52.2%)로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였다. 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낮은 국가로는 이집트(0.8%), 터키(1.4%), 멕시코(1.5%)의 순이었다(〈부표 53〉 참조). 한국은 적극적 회원이 19.1%로 43개국 중 18위였다. 적극적 회원의 비율만을 가지고 참여국 전체를 비교하면 〔그림 III-7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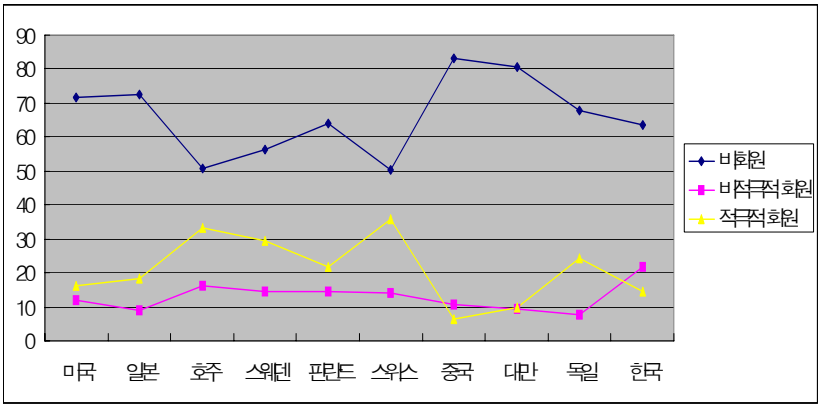
〔그림 III-77〕 교회 신자 혹은 종교단체 적극적 회원 비율



(나) 스포츠 혹은 레크레이션 단체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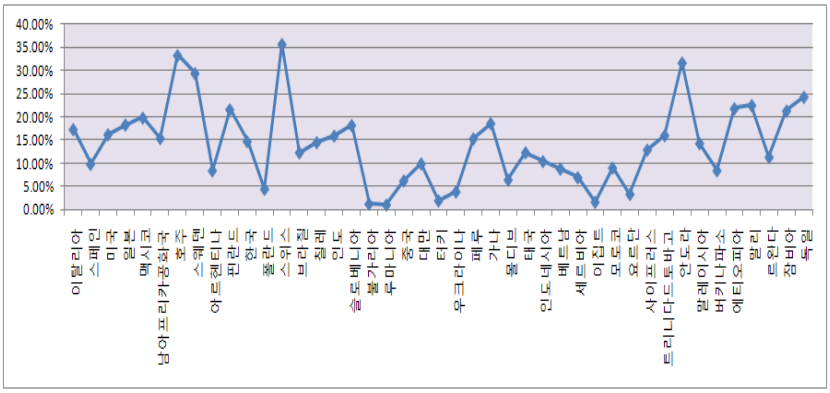
전체적으로는 비회원인 경우가 약 67%였고 비적극적 회원인 12.5%, 적극적 회원이 20.3%정도로 종교관련 단체의 회원비율보다는 높게 나타났다(〈부표 44〉 참조). 한국의 경우에는 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14.7% 전체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였으며, 중국과 대만은 회원 자체가 가장 적은 국가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비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III-78〕 스포츠 혹은 레크레이션 단체 회원 응답비율(WVS 2005-2008)



43개국의 응답비율을 분석한 결과, 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35.2%), 호주(33.3%), 안도라(31.7%)의 순이었다. 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낮은 국가로는 루마니아(1.0%), 불가리아(1.2%), 이집트(1.6%)의 순이었다(〈부표 53〉 참조). 한국은 적극적 회원이 14.7%로 43개국 중 20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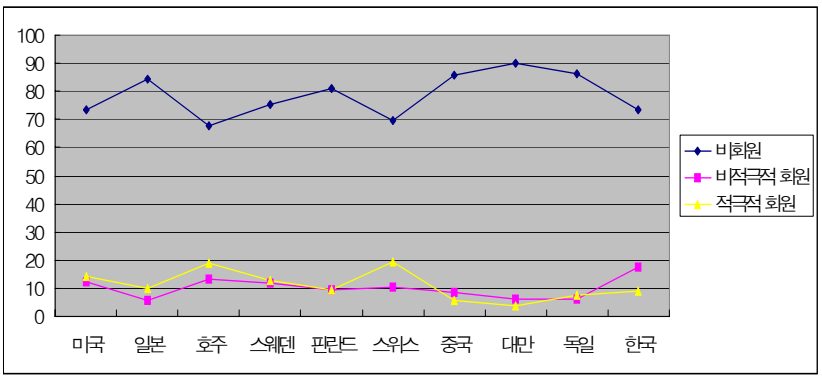
〔그림 III-79〕 스포츠 혹은 레크레이션 단체 적극적 회원 비율



(다) 예술, 음악, 교육 단체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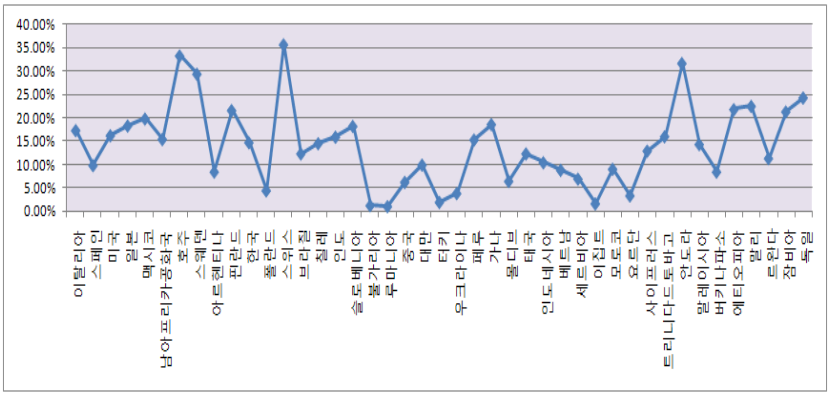
전체적으로는 비회원인 경우가 약 80%였고 비적극적 회원인 9.8%, 적극적 회원이 10.7%였다(〈부표 45〉 참조). 한국의 경우에는 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8.9% 전체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와 호주였으며, 대만, 중국, 독일은 회원 자체가 가장 적은 국가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비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III-80〕 예술, 음악, 교육 단체 회원 응답비율(WVS 2005-2008)



43개국의 응답비율을 분석한 결과, 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가나(23.0%), 안도라(21.9%), 잠비아(21.2%)의 순이었다. 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낮은 국가로는 이집트(0.8%), 요르단(1.1%), 루마니아(1.1%)의 순이었다(〈부표 53〉 참조). 한국은 적극적 회원이 8.9%로 43개국 중 20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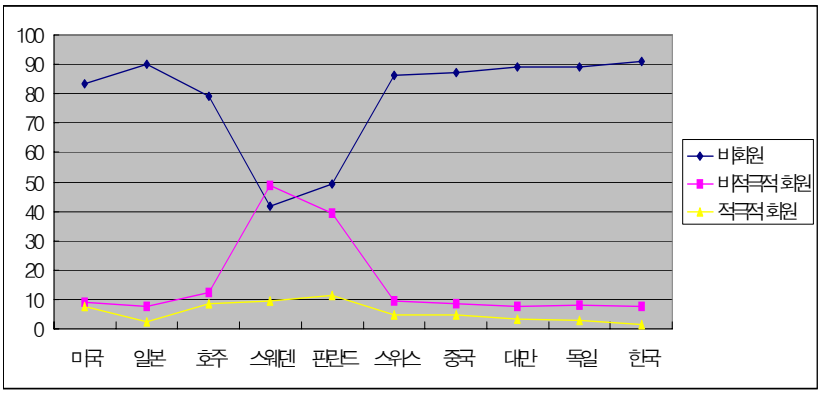
〔그림 III-81〕 예술, 음악, 교육 단체 적극적 회원 비율



(라) 노동조합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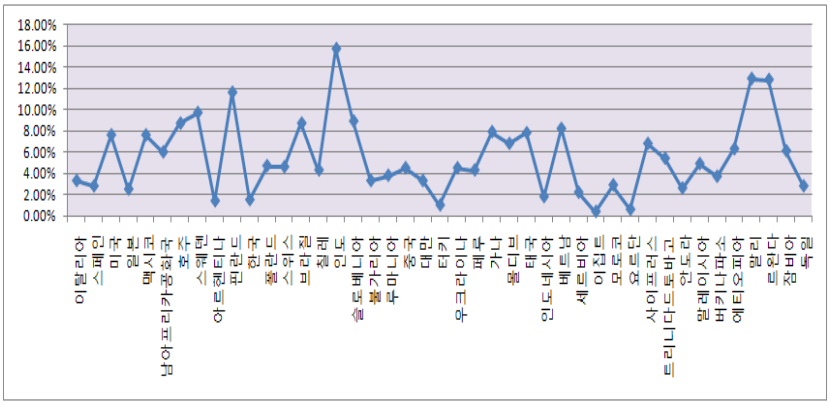
전체적으로는 비회원인 경우가 약 80%였고 비적극적 회원이 14%, 적극적 회원이 5.3%였다(〈부표 46〉 참조). 한국의 경우에는 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1.5%로 전체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적극적 회원의 비율도 7.7%로 전체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 스웨덴, 호주였으며, 비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많은 곳은 스웨덴과 핀란드였다.

〔그림 III-82〕 노동조합 회원 응답비율(WVS 2005-2008)



43개국의 응답비율을 분석한 결과, 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인도(15.7%), 말리(12.9%), 르완다(12.8%), 핀란드(11.6%)의 순이었다. 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낮은 국가로는 이집트(0.4%), 요르단(0.6%), 터키(1.0%) 순이었다(〈부표 53〉 참조). 한국은 적극적 회원이 1.5%로 43개국 중 39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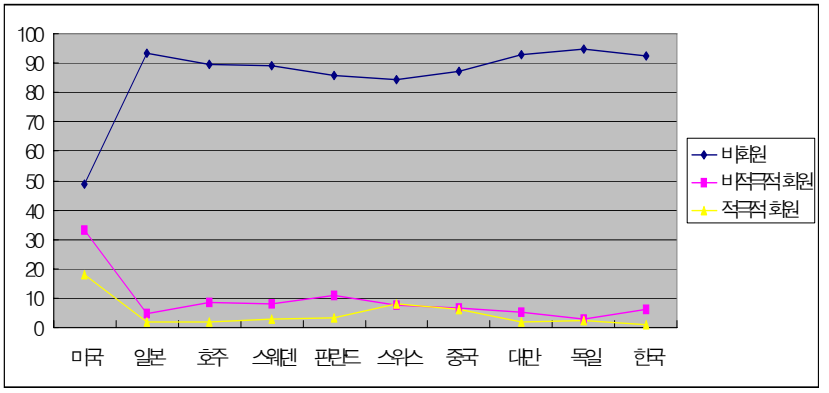
〔그림 III-83〕 노동조합 적극적 회원 비율



(마) 정당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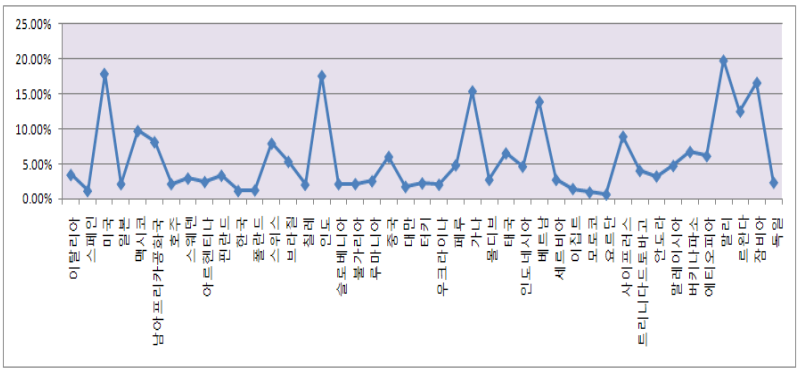
전체적으로는 비회원인 경우가 약 86%였고 비적극적 회원이 9.0%, 적극적 회원이 4.8%였다(〈부표 47〉 참조). 한국의 경우에는 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1.1%로 전체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적극적 회원의 비율도 6.4%로 전체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 스위스, 중국이었으며, 비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많은 국가 역시 동일하였다.

〔그림 III-84〕 정당 회원 응답비율(WVS 2005-2008)



43개국의 응답비율을 분석한 결과, 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말리(19.8%), 미국(17.9%), 인도(17.6%)의 순이었다. 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낮은 국가로는 요르단(0.6%), 모로코(0.9%), 한국(1.1%) 순이었다(〈부표 53〉 참조). 한국은 43개국 중 41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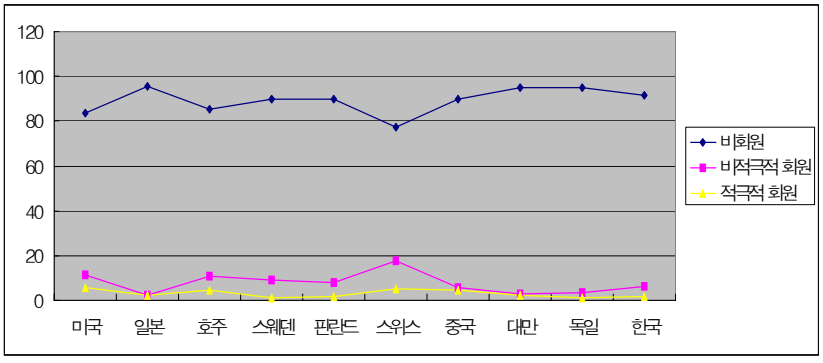
〔그림 III-85〕 정당 적극적 회원 비율



(바) 환경 단체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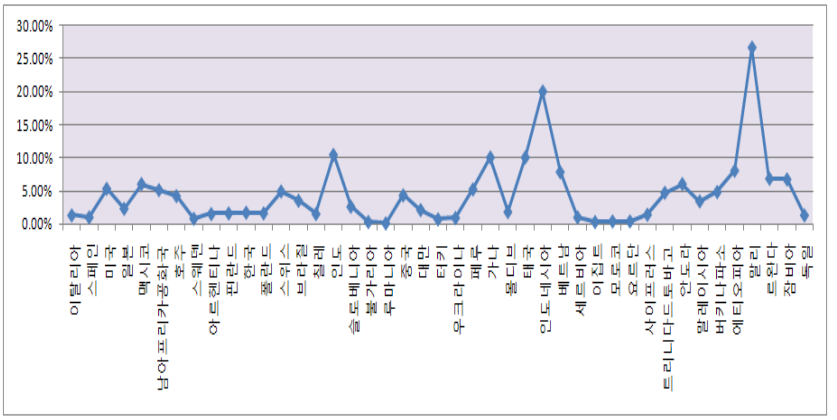
전체적으로는 비회원인 경우가 약 90%였고 비적극적 회원이 7.5%, 적극적 회원이 3.0%였다(〈부표 48〉 참조). 한국의 경우에는 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1.8%로 전체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적극적 회원의 비율도 6.4%로 전체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비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스위스, 미국, 호주였다.

〔그림 III-86〕 환경 단체 회원 응답비율(WVS 2005-2008)



43개국의 응답비율을 분석한 결과, 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말리(26.6%), 인도네시아(20.0%), 인도(10.5%)의 순이었다. 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낮은 국가로는 루마니아(0.2%), 이집트(0.4%), 불가리아(0.4%) 순이었다(〈부표 53〉 참조). 한국은 1.8%로 43개국 중 26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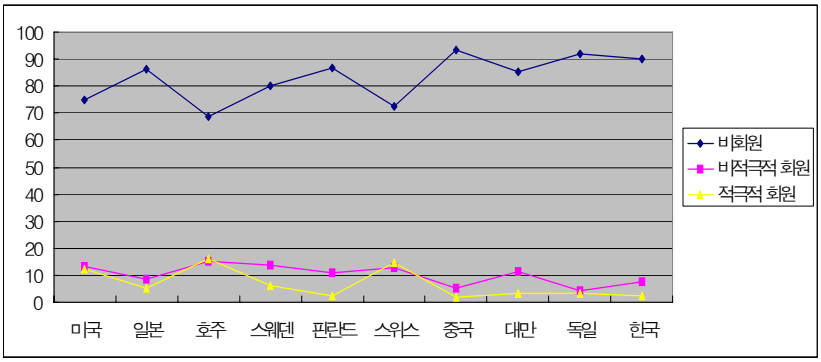
〔그림 Ⅲ-87〕 환경 단체 적극적 회원 비율



(사) 전문가 단체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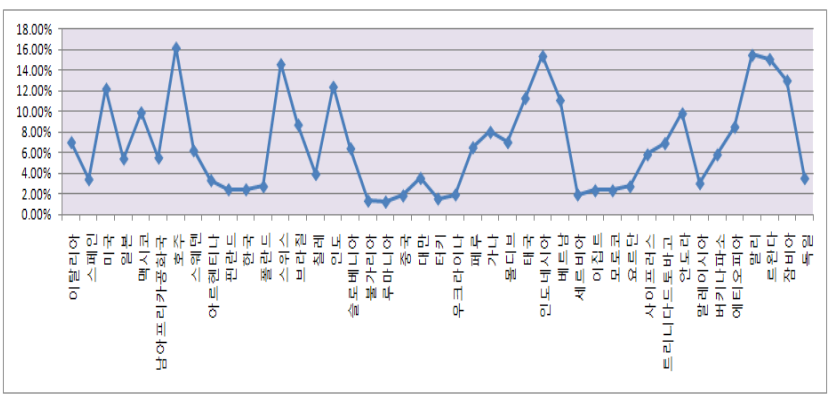
전체적으로는 비회원인 경우가 약 84%였고 비적극적 회원이 9.5%, 적극적 회원이 6.5%였다(〈부표 49〉 참조). 한국의 경우에는 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2.4%로 전체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적극적 회원의 비율도 7.4%로 전체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적극적 회원이 많은 국가는 호주, 미국, 스위스 등이었고 비적극적 회원의 경우도 유사하였다. 다만 대만, 스웨덴, 핀란드의 경우에는 비적극적 회원의 비율도 높았다.

〔그림 III-88〕 전문가 단체 회원 응답비율(WVS 2005-2008)



43개국의 응답비율을 분석한 결과, 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호주(16.2%), 말리(15.5%), 인도네시아(15.4%)의 순이었다. 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낮은 국가로는 루마니아(1.2%), 불가리아(1.3%), 터키(1.5%)의 순이었다(〈부표 53〉 참조). 한국은 2.4%로 43개국 중 35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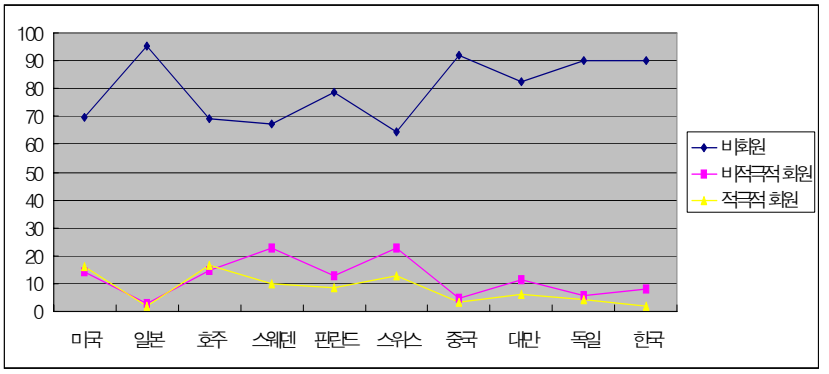
〔그림 III-89〕 전문가 단체 적극적 회원 비율



(아) 자비롭고 인도주의적 단체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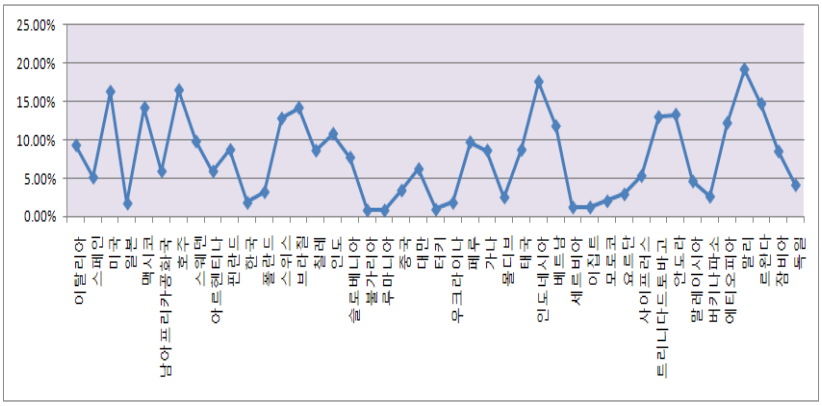
전체적으로는 비회원인 경우가 약 81%였고 비적극적 회원이 7.7%, 적극적 회원이 11.1%였다(〈부표 50〉 참조). 한국의 경우에는 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1.8%로 전체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적극적 회원의 비율도 8.1%로 전체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적극적 회원이 많은 국가는 미국, 호주, 스위스, 스웨덴 등이었고 비적극적 회원의 경우에는 스웨덴, 스위스, 호주, 미국 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90〕 자비롭고 인도주의적 단체 회원 응답비율(WVS 2005-2008)



43개국의 응답비율을 분석한 결과, 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말리(19.2%), 인도네시아(17.6%), 호주(16.5%), 미국(16.3%)의 순이었다. 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낮은 국가로는 루마니아(0.8%), 불가리아(0.8%), 터키(0.9%)의 순이었다(〈부표 53〉 참조). 한국은 1.8%로 43개국 중 36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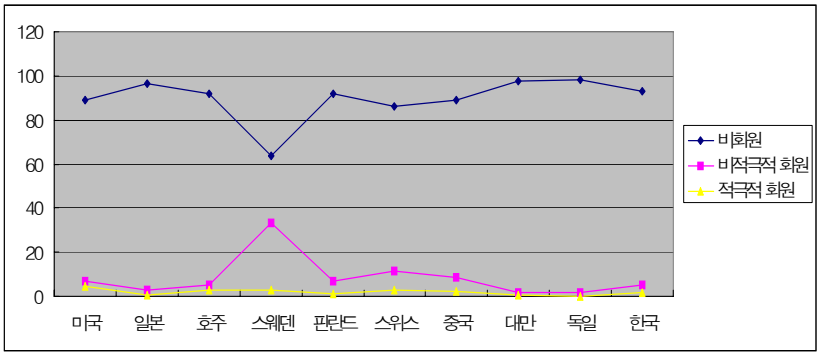
〔그림 Ⅲ-91〕 자비롭고 인도주의적 단체 적극적 회원 비율



(자) 소비자 단체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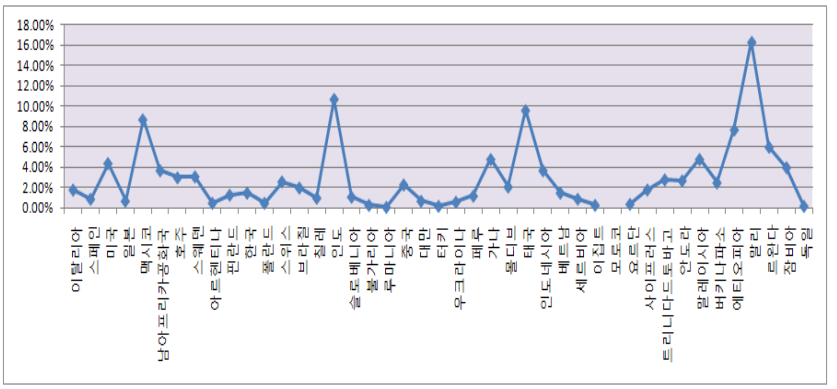
전체적으로는 비회원인 경우가 약 90%였고 비적극적 회원이 7.7%, 적극적 회원이 약 2%였다(〈부표 51〉 참조). 한국의 경우에는 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1.5%로 전체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적극적 회원의 비율도 5.4%로 전체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비극적 회원이 많은 국가는 스웨덴이었고 비회원의 경우에는 독일, 스위스, 대만, 일본 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92〕 소비자 단체 회원 응답비율(WVS 2005-2008)



43개국의 응답비율을 분석한 결과, 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말리(16.3%), 인도(10.7%), 태국(9.6%), 멕시코(8.7%)의 순이었다. 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낮은 국가로는 모로코(0.0%), 루마니아(0.1%), 독일(0.2%), 터키(0.2%)의 순이었다(〈부표 53〉 참조). 한국은 1.5%로 43개국 중 24위였다.

〔그림 III-93〕 소비자 단체 적극적 회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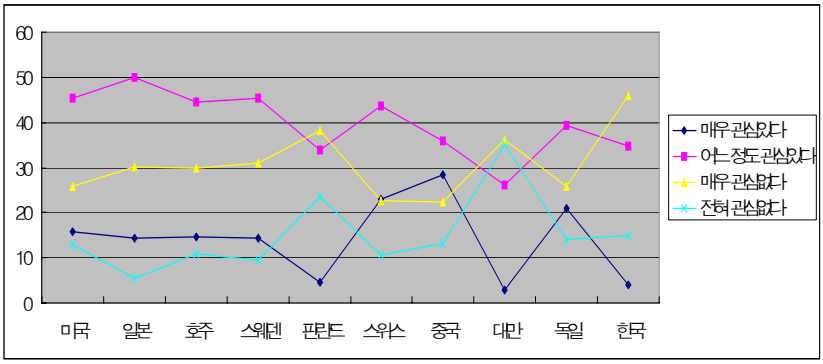


(차) 정치에 대한 관심

정치에 대한 관심의 측정척도는 '매우 관심있다', '어느 정도 관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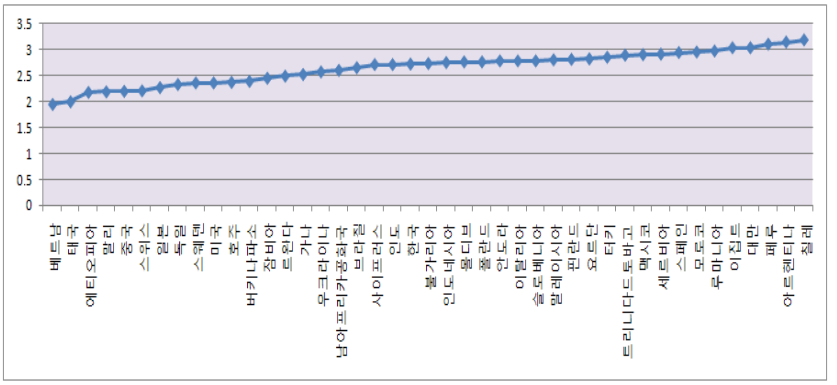
‘매우 관심없다’, ‘전혀 관심없다’의 4개 척도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관심있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약 4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매우 관심없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약 30%로 나타났다. 관심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약 55%였다(〈부표 52〉 참조). 한국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61%로 전체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전체에 비해 한국의 경우 정치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응답이 많았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은 국가들로는 중국, 일본, 호주 등이었고, 관심이 없다는 한국, 대만 등에서는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높았다.

〔그림 III-94〕 정치에 대한 관심 응답비율(WVS 2005-2008)



정치에 대한 관심의 측정 척도를 연속척도로 간주한 후 43개 국가 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부표 53〉 참조). 정치에 관심이 많을수록 평균점수는 낮아진다. 가장 평균이 낮은 국가는 베트남, 태국, 에티오피아, 말리, 중국, 스위스, 일본의 순이었고, 반대인 경우는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대만의 순이었고, 한국의 평균은 2.72로 21위였다.

〔그림 III-95〕 정치에 대한 관심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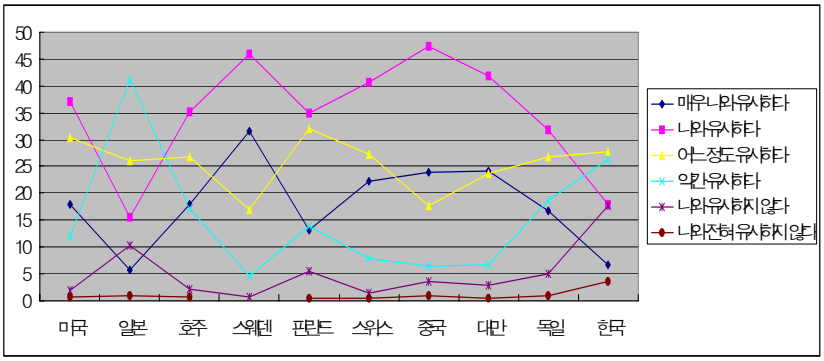
(2) 신뢰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인 요소로 논의되고 있다. WVS에서는 신뢰와 관련되어 타인에 대한 신뢰와 대상별로 신뢰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대상별로는 가족, 이웃,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 처음 만난 사람, 다른 종교인, 다른 국적인, 친척, 일반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가) 타인을 돕는 것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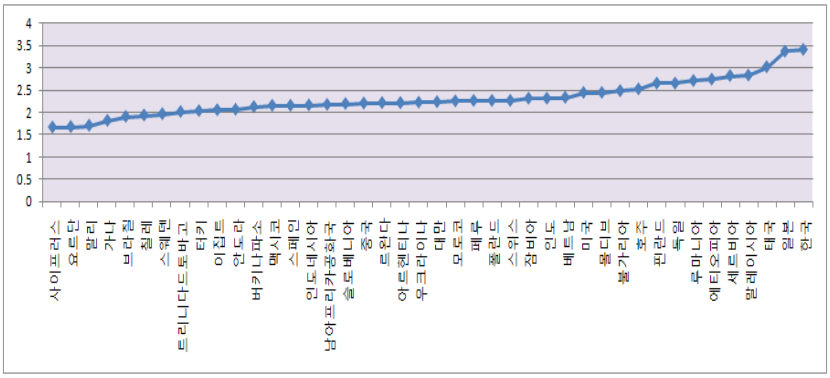
타인을 돕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동의를 '매우 나와 유사하다', '나와 유사하다', ' 어느 정도 유사하다', '약간 나와 유사하다', '나와 유사하지 않다', '전혀 나와 유사하지 않다'의 6개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나와 유사하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약 36%, '어느 정도 유사하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약 25%, '매우 나와 유사하다'가 약 18%로 긍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약 94% 정도 되었다(〈부표 54〉 참조). 한국의 경우에는 유사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약 80% 정도였고, 유사하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비율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매우 나와 유사하다나 나와 유사하다의 응답비율이 높은 국가는 스웨덴, 스위스, 중국 등이었고,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높은 국가는 한국과 일본 등 이었다.

〔그림 III-96〕 타인을 돕는 것의 중요성 응답비율(WVS 2005-2008)



타인을 돕는 것의 중요성의 측정 척도를 연속척도로 간주한 후 42개 국가 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부표 62〉 참조). 자신과 유사하다는 응답이 강할수록 평균점수는 낮아진다. 가장 평균이 낮은 국가는 사이프러스, 요르단, 말리, 가나, 브라질의 순이었고, 반대인 경우는 한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의 순이었고, 한국의 평균은 3.42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III-97〕 타인을 돕는 것의 중요성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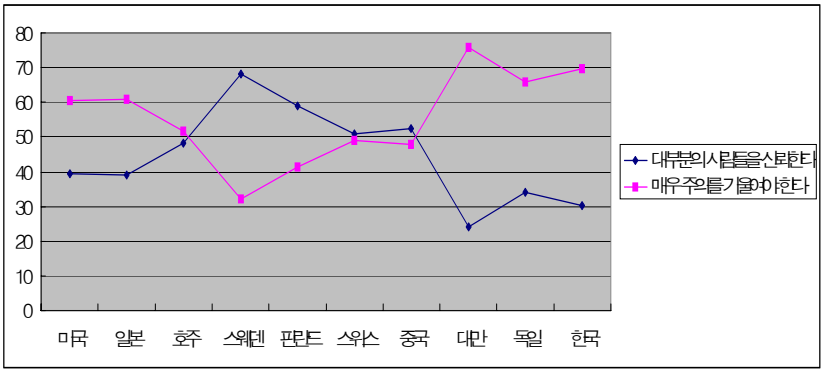


(나) 타인에 대한 신뢰

타인에 대한 신뢰의 측정척도는 '대부분의 타인은 신뢰할 수 있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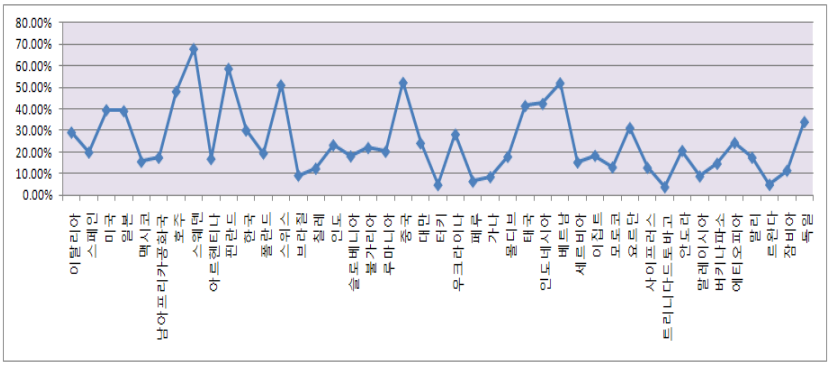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의 2개 척도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는 ‘대부분의 타인은 신뢰할 수 있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약 44%였고,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에 대한 응답비율은 약 56%였다(〈부표 55〉 참조).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의 응답비율이 약 70%로 타인에 대한 신뢰가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타인에 대한 신뢰의 응답비율이 높은 국가로는 스웨덴 핀란드 등이었고, 신뢰가 낮은 국가로는 대만, 한국, 독일 등이었다.

〔그림 III-98〕 타인에 대한 신뢰 응답비율(WVS 2005-2008)



43개국의 응답비율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타인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국가는 스웨덴(68.0%), 핀란드(58.8%), 중국(52.3%), 베트남(52.1%)의 순이었고,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의 응답비율이 높은 국가는 트리니다드토바고(96.2%), 터키(95.2%), 르완다(95.1%), 페루(93.6%)의 순이었다(〈부표 62〉 참조). 한국의 경우에는 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호주(16.2%), 말리(15.5%), 인도네시아(15.4%)의 순이었다. 적극적 회원의 비율이 낮은 국가로는 루마니아(1.2%), 불가리아(1.3%), 터키(1.5%)의 순이었다. 한국은 대부분의 타인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비율이 32.2%로 13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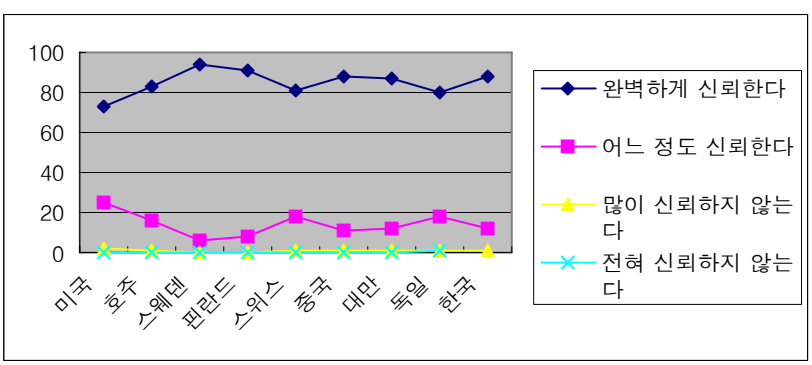
〔그림 III-99〕 타인에 대한 신뢰 비율



(다) 가족에 대한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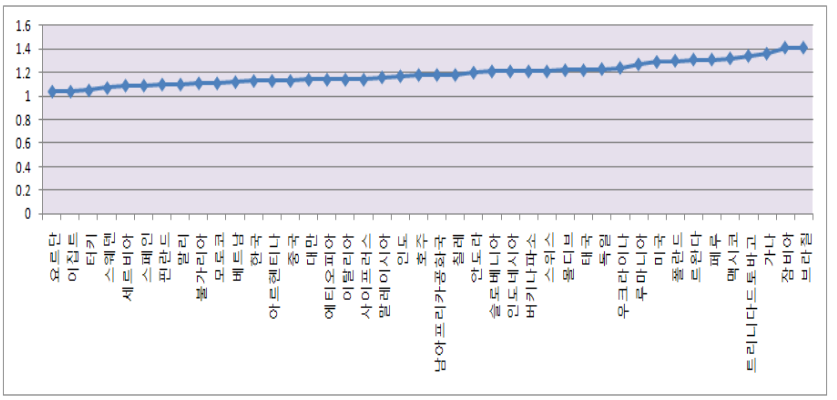
가족에 대한 신뢰의 측정척도는 '완벽하게 신뢰한다'와 '어느 정도 신뢰한다, '많이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의 4개 척도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완벽하게 신뢰한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약 85%였고, '어느 정도 신뢰한다'에 대한 응답비율은 약 14%였다.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는 약 1%정도였다(〈부표 56〉 참조). 한국의 경우에도 전체의 응답비율과 유사하였다.

〔그림 III-100〕 가족에 대한 신뢰 응답비율(WVS 2005-2008)



가족에 대한 신뢰의 측정 척도를 연속척도로 간주한 후 42개 국가 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부표 62〉 참조). 가족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평균점수는 낮아진다. 가장 평균이 낮은 국가는 요르단, 이집트, 터키, 스웨덴의 순이었고, 반대인 경우는 브라질, 잠비아, 가나의 순이었다. 한국의 평균은 1.13로 12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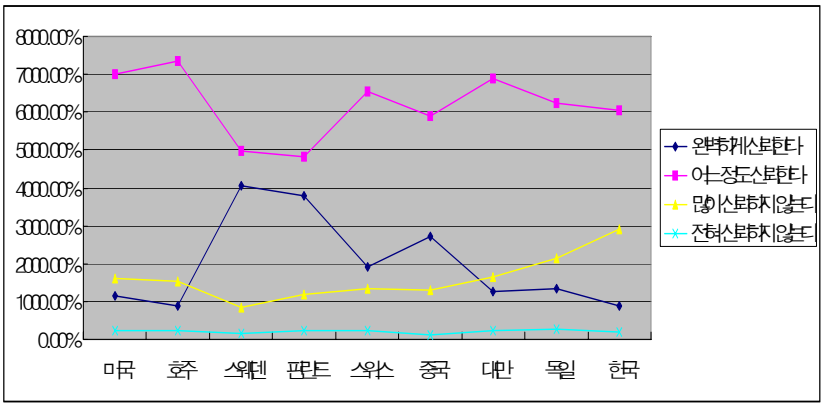
〔그림 III-101〕 가족에 대한 신뢰 평균



(라) 이웃에 대한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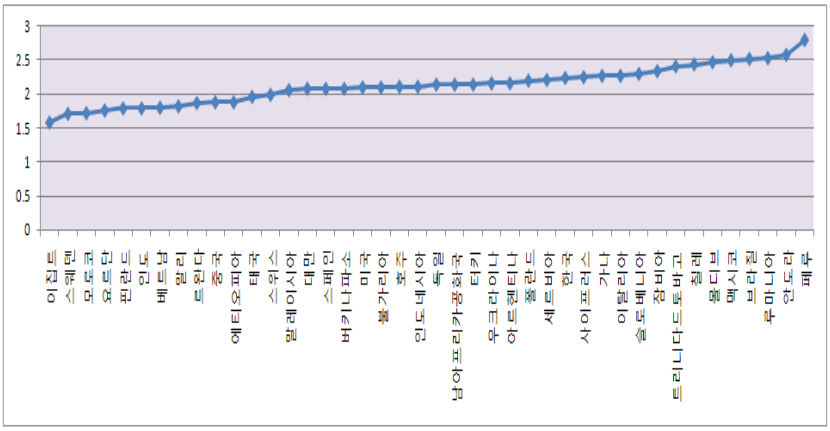
이웃에 대한 신뢰의 측정척도는 '완벽하게 신뢰한다'와 '어느 정도 신뢰한다, '많이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의 4개 척도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신뢰한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약 62.4%였고, '완벽하게 신뢰한다'에 대한 응답비율은 약 19%였다.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는 약 19%정도였다(〈부표 57〉 참조). 한국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응답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벽하게 신뢰한다의 응답비율이 높은 국가는 스웨덴, 핀란드 등이었고, 신뢰하지 않는 쪽의 응답이 많은 경우는 한국, 독일, 미국 등이었다.

〔그림 III-102〕 이웃에 대한 신뢰 응답비율(WVS 2005-2008)



이웃에 대한 신뢰의 측정 척도를 연속척도로 간주한 후 42개 국가 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부표 62〉 참조). 이웃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평균점수는 낮아진다. 가장 평균이 낮은 국가는 이집트, 스웨덴, 모로코, 요르단의 순이었고, 반대인 경우는 페루, 안도라, 루마니아의 순이었다. 한국의 평균은 2.24로 29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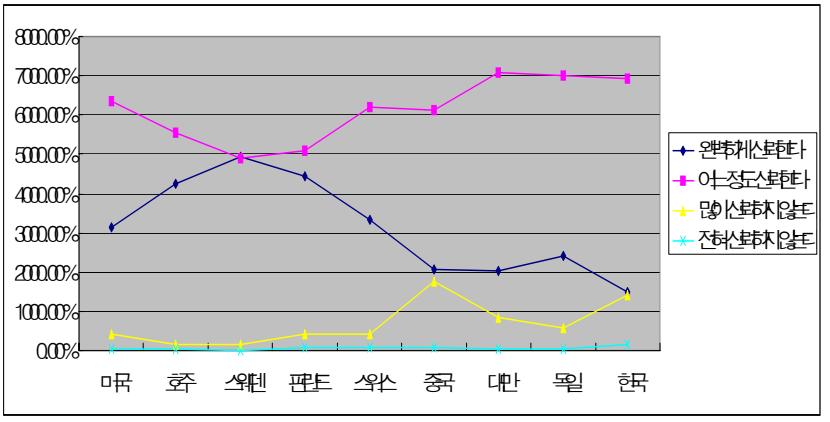
〔그림 III-103〕 이웃에 대한 신뢰 평균



(마)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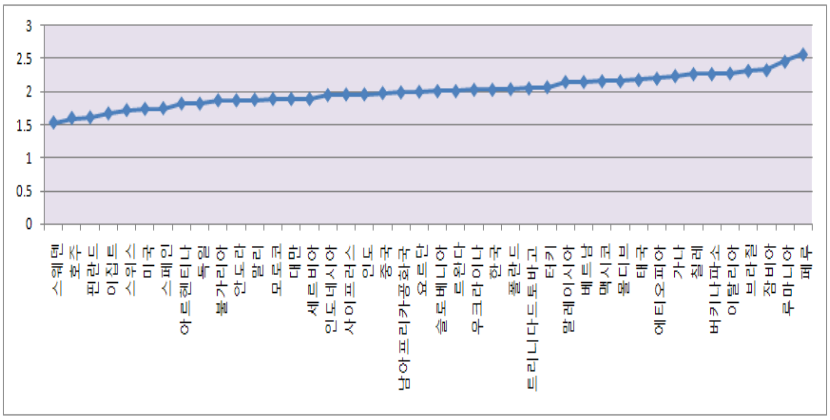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의 측정척도는 '완벽하게 신뢰한다'와 '어느 정도 신뢰한다, '많이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의 4개 척도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신뢰한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약 62.2%였고, '완벽하게 신뢰한다'에 대한 응답비율은 약 30%였다.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는 약 8% 정도였다(〈부표 58〉 참조). 한국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응답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벽하게 신뢰한다의 응답비율이 높은 국가는 스웨덴, 핀란드, 호주 등이었고, 신뢰하지 않는 쪽의 응답이 많은 경우는 중국, 한국, 대만 등이었다.

〔그림 Ⅲ-104〕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 응답비율(WVS 2005-2008)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의 측정 척도를 연속척도로 간주한 후 42개 국가 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부표 62〉 참조).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평균점수는 낮아진다. 가장 평균이 낮은 국가는 스웨덴, 호주, 핀란드, 이집트의 순이었고, 반대인 경우는 페루, 루마니아, 잠비아, 브라질의 순이었다. 한국의 평균은 2.03로 25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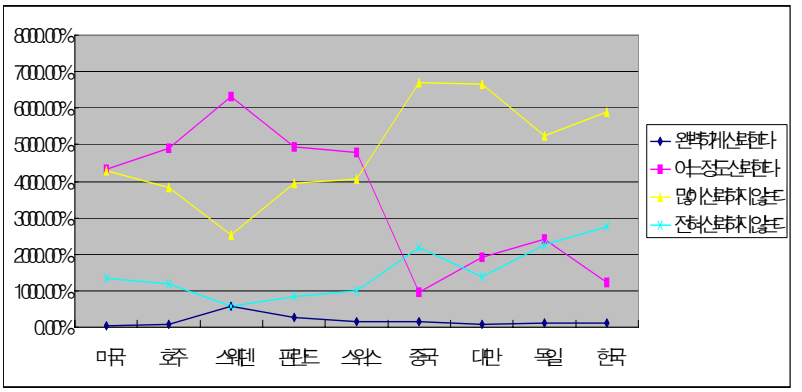
〔그림 III-105〕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 평균



(바)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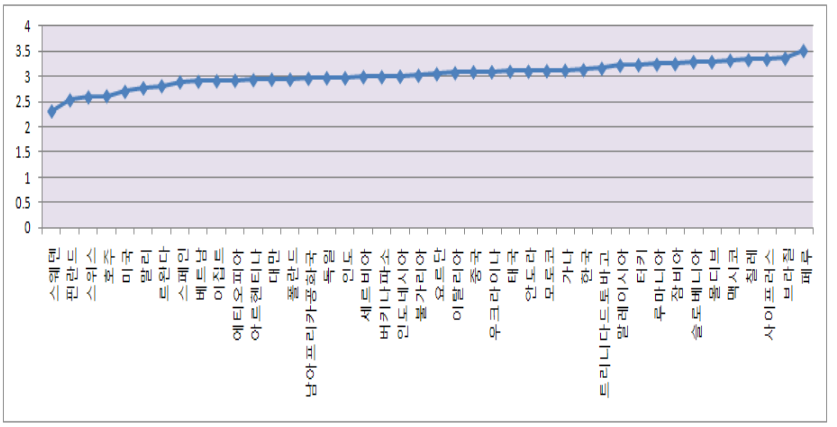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의 측정척도는 '완벽하게 신뢰한다'와 '어느 정도 신뢰한다, '많이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의 4개 척도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는 '많이 신뢰하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약 50%였고, '어느 정도 신뢰한다가 약 33%였다. 신뢰하는 경우는 약 34%,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는 약 64%였다(〈부표 59〉 참조). 한국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응답이 88%로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의 응답비율이 높은 국가는 스웨덴, 핀란드, 호주 등이었고, 신뢰하지 않는 쪽의 응답이 많은 경우는 중국, 한국, 대만 등이었다.

〔그림 III-106〕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 응답비율(WVS 2005-2008)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의 측정 척도를 연속척도로 간주한 후 42개 국가 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부표 62〉 참조).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평균점수는 낮아진다. 가장 평균이 낮은 국가는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호주, 미국의 순이었고, 반대인 경우는 페루, 브라질, 사이프러스, 칠레의 순이었다. 한국의 평균은 3.13으로 30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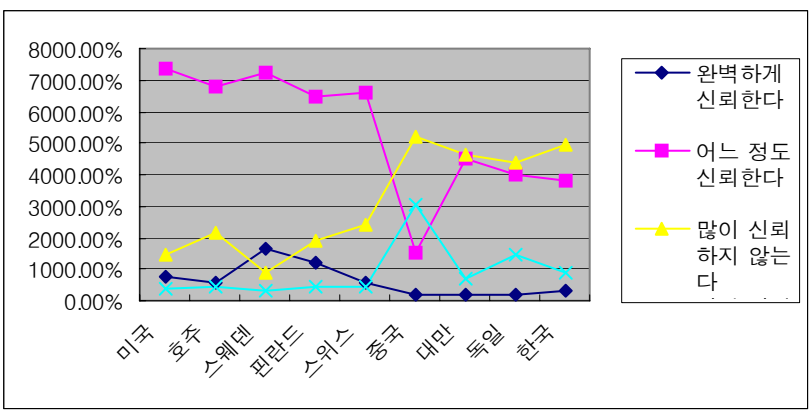
〔그림 III-107〕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 평균



(사) 타종교인에 대한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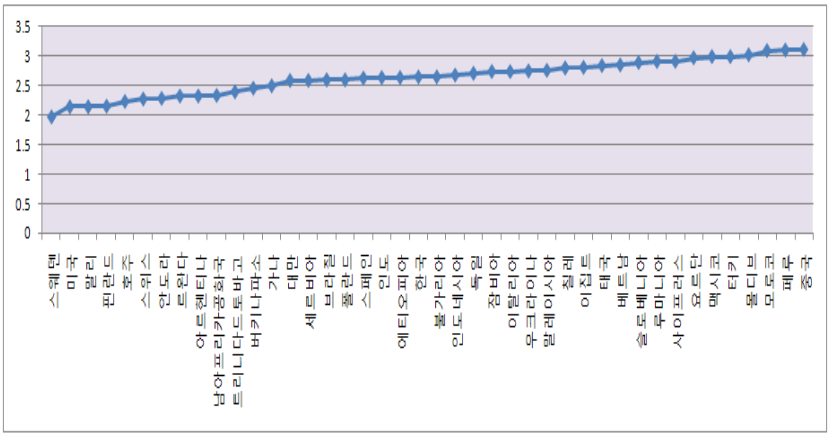
타종교인에 대한 신뢰의 측정척도는 '완벽하게 신뢰한다'와 '어느 정도 신뢰한다, '많이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의 4개 척도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신뢰한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약 52%였고, '많이 신뢰하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약 32%였다(〈부표 60〉 참조). 전체적으로는 타종교인에 대하여 신뢰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의 응답비율이 높은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미국 등이었고, 신뢰하지 않는 쪽의 응답이 많은 경우는 중국, 대만, 한국 등이었다.

〔그림 III-108〕 타종교인에 대한 신뢰 응답비율(WVS 2005-2008)



타종교인에 대한 신뢰의 측정 척도를 연속척도로 간주한 후 42개 국가 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부표 62〉 참조). 타종교인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평균점수는 낮아진다. 가장 평균이 낮은 국가는 스웨덴, 미국, 말리, 핀란드의 순이었고, 반대인 경우는 중국, 페루, 모로코, 몰도바의 순이었다. 한국의 평균은 2.65로 21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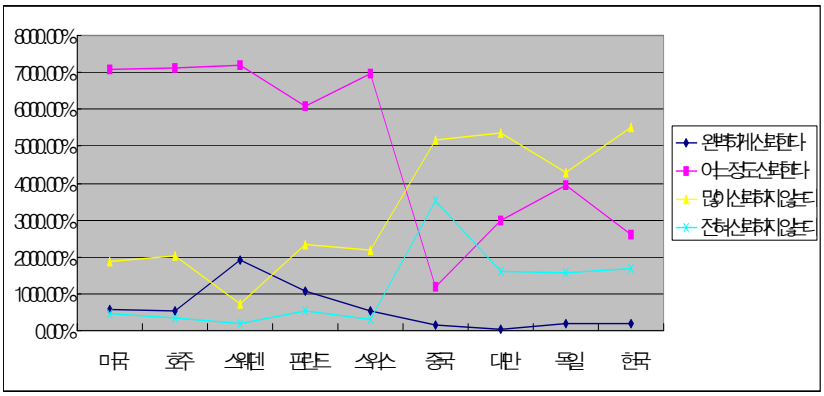
〔그림 III-109〕 타종교인에 대한 신뢰 평균



(아) 타국인에 대한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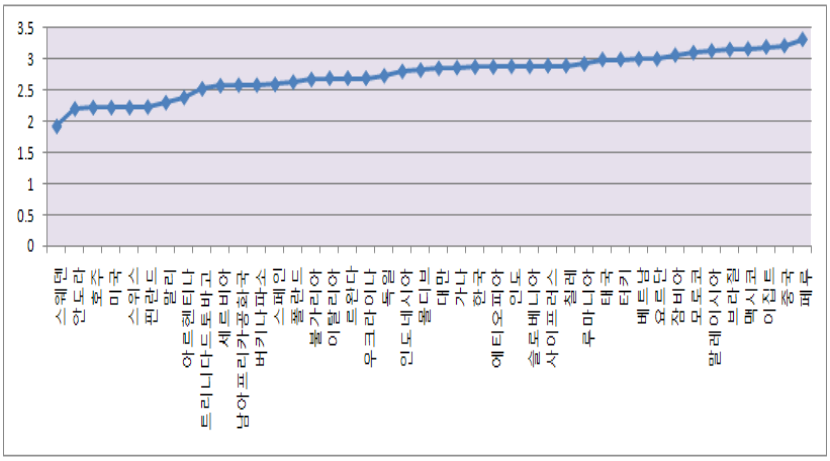
타국인에 대한 신뢰의 측정척도는 '완벽하게 신뢰한다'와 '어느 정도 신뢰한다, '많이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의 4개 척도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신뢰한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약 49%였고, '많이 신뢰하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약 34%였다(〈부표 61〉 참조). 전체적으로는 타국인에 대하여 신뢰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의 응답비율이 높은 국가는 스웨덴, 미국, 호주 등이었고, 신뢰하지 않는 쪽의 응답이 많은 경우는 중국, 대만, 한국 등이었다.

〔그림 III-110〕 타국인에 대한 신뢰 응답비율(WVS 2005-2008)



타국인에 대한 신뢰의 측정 척도를 연속척도로 간주한 후 42개 국가 간 평균비교를 실시하였다(〈부표 62〉 참조). 타종교인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평균점수는 낮아진다. 가장 평균이 낮은 국가는 스웨덴, 안도라, 호주, 미국의 순이었고, 반대인 경우는 페루, 중국, 이집트, 멕시코의 순이었다. 한국의 평균은 2.87로 24위였다.

〔그림 III-111〕 타국인에 대한 신뢰 평균



제2절 국내 비교 분석

1. 한국종합사회조사

가. 개관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는 한국인의 기본적 속성과 가치 및 행동방식 그리고 한국사회의 구조와 변화 연구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생성하기 위하여 전국표본으로 실시된 조사였다. KGSS는 시카고 대학의 NORC(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의 GSS(General Social Survey)를 기본 모형으로 하여 설문지의 내용 구성이 이루어졌다(석현호, 2005).

KGSS는 GSS에 기반 하여 국제 비교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즉, 반복핵심설문(replicating core questions)과 주제모듈(topical modules)로 구분되었고 주제 모듈은 연차적 주제모듈(ISSP annual topical module)과 특별주제모듈(special topical module)로 구분되었다. 연차적 주제모듈은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의 39개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주제를 변경하면서 조사되는 항목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모듈이다. 특별주제모듈에는 비상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들이 포함되어 조사가 실시된다. 그 외에 2006년부터 KGSS에는 2003년부터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개발한 동아시아사회조사(East Asia Social Survey: EASS)의 주제모듈(EASS biannual topical module)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인 설문항목을 정리하면 〈표 III-8〉과 같다.

〈표 III-8〉 KGSS의 조사 영역과 항목

영역		항목
반복핵심설문		- 인구통계학적 변인 - 정치문제: 국민자긍심, 북한에 대한 인식, 정치성향, 정당지지, 정권평가 - 경제문제: 기업, 노동조합, 경제활동, 고용, 가계 - 사회문제: 사회정책, 사회적 신뢰, 가족 및 가구 구성, 계층, 직업, 종교, 정보매체 -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문항: 민족 문제 등
주제 모듈	연차적 주제모듈	- 정부의 역할, 사회연결망, 사회불평등, 가족과 성역할 변화, 노동지향, 종교, 환경, 국가정체성, 시민권
	특별주제모듈	- 노동지향, 사회불평등, 가족과 성역할의 변화, 사회연결망, 불평등과 공정성, 문화 산업과 소비
	EASS 주제모듈	- 동아시아의 가족

출처: 석현호(2005), 1-2에서 정리.

연차적 주제 모듈의 경우 1년에 1개의 주제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KGSS에서는 2003년 ISSP의 회원국으로 인정되어 2003년 당해 모듈인 국가정체성III, 2004년 시민권, 2005년에는 노동지향III, 2006년 정부의 역할III, 2007년 스포츠와 레저(2007), 2008년 종교III 등의 주제로 조사되었다.

2006년도 KGSS의 표본은 다단계지역집락표집방법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크기는 2,000에서 2,500이었다. 조사는 직접 면접조사의 형태로 실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유효 표본율은 약 66%였다.

2005년에 발간된 KGSS 심포지움 보고서 가운데 본 연구와 관련되는 5개의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KGSS의 조사결과를 기술하였다. 5개의 분석결과는 박찬욱(2005)의 한국인 정치참여의 특징과 결정요인: 2004년 조사결과 분석, 최현(2005)의 한일 시티즌십 비교: 시민의 공적 영역 지향성과 능동성을 중심으로, 김석호(2005)의 단체참여와 참여평등: 한미 비교연구, 이재혁(2005)의 신뢰와 시민사회: 한국, 미국 조사 비교, 구혜란(2005)의 한국인의 사회적 지원망: 국제비교연구였다.

나. 조사분석결과

(1) 정치참여

한국인의 정치참여는 박찬욱(2005)의 심포지엄 논문에서 보고된 주요 분석 결과를 활용하였다. 여기서 정치참여는 '시민이 정치엘리트의 충원이나 공공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치참여의 행태에는 진정서 서명, 상품 구매·불매, 시위 참가, 정치집회 참가, 공직자 접촉, 언론기관 접촉, 인터넷토론 참가, 기부활동으로 보사되었고 정치참여의 수준은 저(1점), 중(2점), 고(3점)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는 〈표 III-8〉와 같다.

〈표 III-9〉 행위형태별 정치참여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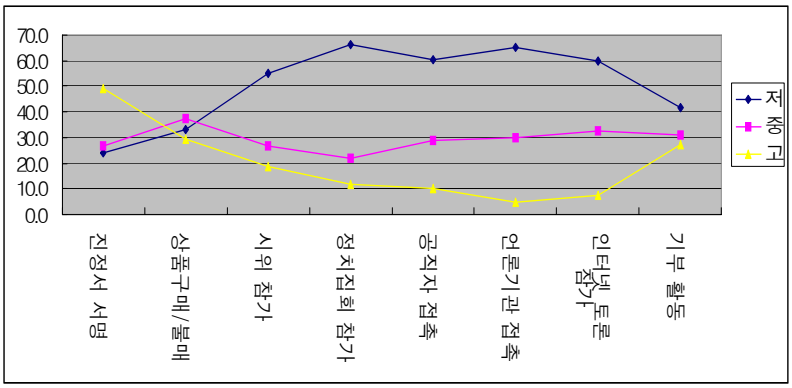
정치참여 형태	정치참여 수준			평균
	저(1)	중(2)	고(3)	
진정서 서명	24.3	26.6	49.1	2.25
상품 구매·불매	33.0	37.5	29.5	1.97
시위 참가	54.8	26.7	18.6	1.64
정치집회 참가	66.1	22.0	11.9	1.46
공직자 접촉	60.6	29.0	10.4	1.50
언론기관 접촉	65.0	30.0	5.0	1.40
인터넷토론 참가	59.9	32.5	7.6	1.48
기부 활동	41.9	31.0	27.1	1.85

출처: 박찬욱(2005), 143.

정치참여 형태별로 저, 중, 고의 응답 비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는 진정서 서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품구매·불매의 경우에는 저, 중, 고의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상품구매·불매의 형태와 관련하여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다른 6개의 정치참여 형태는 모두

저 수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집회 참가나 언론기관 접촉의 경우 저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112〕 KGSS의 한국인 정치참여 형태 비율



다음으로 KGSS의 한국인 정치참여 형태별 수준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가장 높게 나타난 형태는 진정서 서명이었고 그 다음으로 상품구매·불매였다. 그리고 기부 활동, 시위 참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수준은 언론기관 접촉으로 나타났다.

박찬욱(2005)은 한국인 정치참여 형태의 수준과 실제 시민사회조직이나 정당 등의 조직관여와의 관련성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즉, 정치참여 형태별 수준과 조직 관여 간의 상관계수를 분석하였는데, 조직관여에는 정당, 시민운동단체, 노조·사업자단체, 종교단체, 스포츠·문화단체, 동창모임, 향우회, 친목단체가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진정서 서명, 상품구매·불매, 집회나 시위 참가, 공직자와 접촉, 언론기관과 접촉, 기부 활동이 다른 조직관여에 비해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난 경우는 스포츠·문화단체, 동창모임, 친목단체의 순이었다. 그러나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3을 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시티즌십

시티즌십은 시민권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시민권은 시민의 권리로 한정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시티즌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시티즌십은 시민의 지위를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의무, 시민이 갖춘 혹은 갖추어야 할 자격과 덕목, 시민으로서의 활동, 시민적 지위의 법률적 표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최현, 2005). 이런 개념 하에 시티즌십을 국적 또는 특정 국가에 대한 소속, 국적을 가진 시민이 갖는 권리와 의무, 시민과 국가의 관계 또는 그것을 규정하는 제도, 시민의 의식, 시민이 국가공동체에 참여하는 실제적 능력 또는 시민사회의 정치적 수준의 4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최현(2005)의 연구에서는 네 번째 측면인 시민의 의식, 시민이 국가 공동체에 참여하는 실제적 능력 또는 시민사회의 정치적 수준을 활용하였다.

자료는 ISSP에서 실시한 시티즌십 주제모듈의 한국과 일본의 자료를 활용하여 5가지의 항목 영역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5개의 항목 영역에는 시민이 생각하는 시민적 덕목, 시민의 권리, 공적 영역에 대한 관심, 참여 또는 참여 희망 단체의 성격, 참여의 방식과 적극성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인 문항은 〈표 III-10〉과 같다.

〈표 III-10〉 시티즌십의 조사 항목

영역	항목
시민적 덕목	- 선거 참여, 정책 감시, 병역, 납세, 준법, 약자 보호, 정치적 관용 등의 중요성에 대한 7점 척도 설문
시민의 권리	- 정책 결정 참여, 최저생활유지, 평등한 대우, 불복종 등의 중요성에 대한 7점 척도 설문
공적 영역에 대한 관심	- 정치토론 참여에 관한 4범 척도 설문 - 정치적 관심에 대한 5점 척도 설문
참여 또는 참여희망단체의 성격	- 정당, 이익단체, 종교단체, 문화단체, 기타 단체에 대한 설문
참여의 방식과 적극성	- 탄원서 서명, 상품구매·불매 운동, 시위, 집회, 모금운동, 인터넷 토론에 참여 여부와 참여 의지에 관한 4점 척도 설문

출처: 최현(2005), 166에서 정리

분석결과는 주요 항목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 결과였다. 첫째, 한일 시민의 덕목 항목별로 중요도 인식의 평균점을 비교한 결과, 양국의 응답이 유사한 항목에는 탈세 안함, 준법, 투표, 다른 견해 이해, 못사는 자 국거주민돕기로 나타났다.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에는 군복무솔선, 정치윤리, 환경상품구매, 사회정치단체 참여 등으로 이 3개 항목에서 모두 한국 시민의 응답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이가 큰 항목은 군복무 솔선이었다.

둘째, 한일 극단주의자의 공개집회 허용 지지자의 비율을 비교하였다. 극단주의의 유형은 종교적 극단주의, 정부를 전복하려는 사람, 인종주의자의 3개 항목이었고 지지자의 비율은 모두 한국이 일본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종교적 극단주의자에 대한 지지자의 비율은 한국이 일본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일 시민의 권리 항목별 중요도 인식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시민의 권리 항목에는 정책에 대한 여론 반영, 정책 결정에 국민 참여, 평등한 대우, 적정 생활수준 유지, 소수자 권리 보호, 시민 불복종 운동 참가의 6개가 포함되었다. 한국과 일본 시민 모두에서 평균점이 높은 항목은 정책에 대한 여론 반영, 정책 결정에 국민 참여, 평등한 대우, 적정 생활수준 유지의 순이었다. 한국과 일본의 응답에서 차이가 나는 항목은 소수자 권리 보호와 시민 불복종 운동 참가의 2개 항목이었고 특히 소수자 권리 보호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중요도 인식의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과 일본 시민의 참여 의식과 활동을 비교하였다. 우선 한일 정치적 관심과 의견 교류 정도의 비교 결과 정치적 관심이 사도 또는 매우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에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약 1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주 또는 가끔 정치적 의견을 교환한다는 경우와 자주 또는 가끔 정치적 설득 노력을 한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비율은 한국이 일본보다 약 15%에서 2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일 정치뉴스를 접하는 빈도를 비교한 결과 양국 모두 거의 매일 접하는 경우가 한국은 60%이상, 일본은 50%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섯째, 민주주의 평가와 전망에 대한 응답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는 ISSP 설문 중 10년 전, 현재, 10년 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하여 평가하고 예측하도록 한 문항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척도는 10점 척도였다. 의식수준을 비교한 결과 10년 전에는 일본이 한국보다 민주주의 평가가 더 긍정적이었으나 현재 시점은 비슷하고 향후 10년 후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민주주의에서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단체참여와 참여평등

단체참여와 참여에서의 평등은 민주주의 시민사회에서 중요한 척도가 되었다. 사회적 자본에서도 사회참여 또는 미시적 수준에서의 단체참여 등은 사회적 자본 그 자체 또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기제로서 다루어져왔다. 이에 김석호(2005)는 KGSS의 일환으로 2004년 GSS에서 실시된 미국의 자료를 활용하고 한국의 자료는 KGSS에서 수집한 2004년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중 정치적 참여에 초점을 두고 분석이 이루어졌다.

우선 정치적 활동의 횟수와 횟수별 응답자의 수를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정치적 활동을 참여한 경험이 0회인 경우가 전체 응답자 중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한국이 미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치적 참여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항목에서 미국이 한국보다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참여적 정치문화로 인하여 실제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한국보다 많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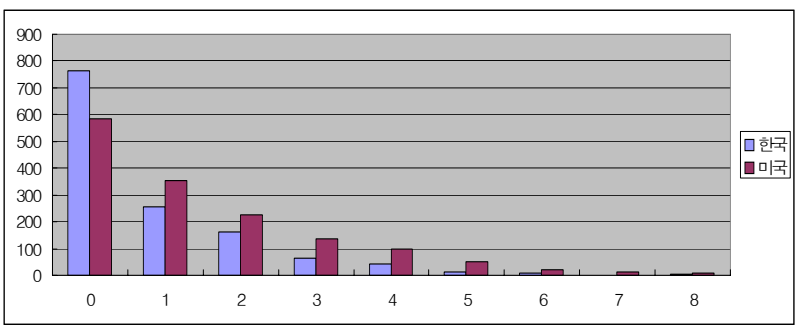
〈표 III-11〉 정치적 참여 횟수별 응답자수

	0	1	2	3	4	5	6	7	8
한국	764	254	160	66	42	13	7	2	4
미국	583	353	227	135	97	50	20	11	8

출

출처: 김석호(2005), 188에서 정리.

〔그림 III-113〕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참여횟수별 응답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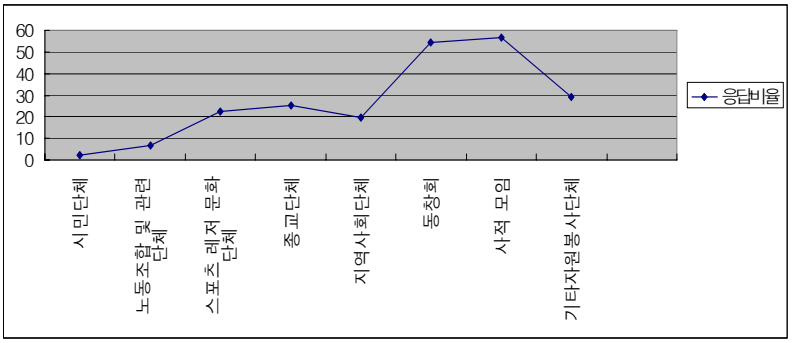


출

출처: 김석호(2005), 188에서 정리.

다음으로 각종 사회단체의 자발적 참여의 수준을 응답비율로 분석하였다. 김석호(2005)는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였으나 조사항목의 차이로 인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여기서는 한국의 분석결과만 소개하였다. 조사된 항목에는 시민단체, 노동조합 및 관련 단체, 스포츠·레저·문화단체, 종교단체, 지역사회단체, 동창회, 사적 모임, 기타 자원봉사단체였다.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사회단체는 사적 모임과 동창회였고 그 다음으로는 기타자원봉사단체였다. 가장 낮은 응답비율은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의 순이었다.

〔그림 III-114〕 한국의 사회단체참여 응답비율



출처: 김석호(2005), 190에서 정리.

(4) 신뢰

KGSS의 심포지엄 보고서에는 한국의 신뢰와 시민사회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었다. 신뢰는 전통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정되었으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KGSS에서는 이재혁(2005)의 연구가 신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전반적인 신뢰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항상 조심, 대체로 조심, 대체로 신뢰, 항상 신뢰 등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응답분포는 항상 조심이 14.6%, 대체로 조심이 48.7%, 대체로 신뢰가 34.1%, 항상 신뢰가 2.5%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체로 조심에 대한 응답이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았으며 항상 신뢰는 극히 미약한 수준의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주요 사회기관 운영자에 대한 신뢰가 분석되었다. 설문에서는 주요 사회기관으로 시민운동단체, 학계, 군대, 대법원, 의료기관, 금융기관, 종교기관, 교육기관, 방송국, 노동조합, 대기업, 신문사, 청와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부처, 국회가 포함되었고 척도는 매우 신뢰, 다소 신뢰, 신뢰하지 않음으로 구성되었다.

매우 신뢰와 다소 신뢰에 응답한 비율을 합하여 분석하면 가장 높은 신

뢰수준은 학계와 시민운동단체, 대법원, 의료기관, 군대 등의 순이었다. 낮은 신뢰 수준은 국회, 중앙정부부처, 지방자치정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한국의 신뢰수준을 미국과 비교한 결과에서는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국회나 중앙정부부처에 대한 신뢰에서는 미국이 매우 높게 나타나서 한국과는 대조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표 III-12〉 주요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 응답비율

	시민운동단체	학계	군대	대법원	의료기관	금융기관	종교기관	교육기관	방송국	노동조합	대기업	신문사	청와대	지방자치정부	중앙정부부처	국회
신뢰함	79.3	80.4	72.8	75.7	74.2	72.3	70.0	67.8	66.6	61.5	62.0	56.5	51.6	49.5	42.4	18.0

출처: 이재혁 (2005), 207-208에서 정리.

추가적으로 신뢰가 연령, 교육수준, 거구지역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되었다. 이재혁(2005)의 연구에서 연령은 청년층(18세-34세), 장년층(35세-54세), 노년층(55세 이상)으로 구분되었고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으로 구분되었다. 거주지 규모는 면 이하, 작은 도시, 대도시로 구분되었다. 신뢰는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대인간의 사회적 신뢰, 제도신뢰, 공적제도신뢰, 민간제도신뢰가 포함되었다. 제도신뢰는 앞서 분석된 16개 주요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의 합산이고 공적제도신뢰는 16개 주요 사회기관 중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청와대, 국회, 대법원의 5개 기관의 신뢰수준의 평균으로 값을 구하였다. 민간제도신뢰는 종교기관, 교육기관, 학계, 신문사, 방송사, 의료기관, 시민사회단체의 7개 기관의 신뢰수준 평균으로 값을 구하였다. 모두 10점 척도로 전환하여 평균을 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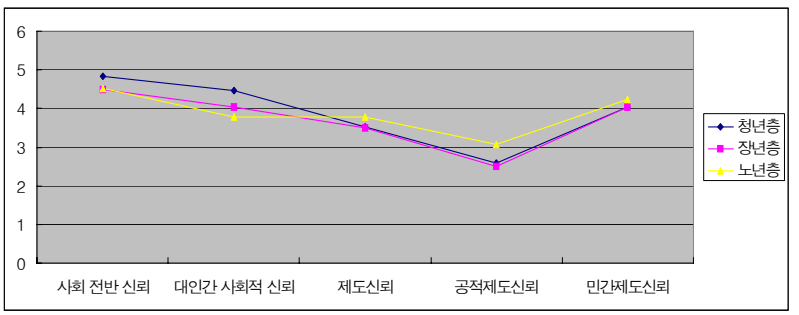
〈표 III-13〉 연령, 교육수준, 거구지역에 따른 신뢰수준

		사회전반 신뢰	대인간 사회적 신뢰	제도신뢰	공적제도신뢰	민간제도신뢰
연령	청년층	4.84	4.46	3.54	2.6	4.05
	장년층	4.48	4.05	3.49	2.51	4.05
	노년층	4.51	3.77	3.79	3.06	4.23
교육수준	중졸이하	4.33	3.47	3.66	2.82	4.26
	고졸	4.51	4.16	3.7	2.63	4.23
	전문대졸이상	4.83	4.45	3.43	2.62	3.9
거주지역	면이하	4.88	4.06	3.17	4.44	3.94
	작은도시	4.47	3.91	2.72	4.15	3.59
	대도시	4.62	4.24	2.54	3.99	3.49

출처: 이재혁(2005), 211-213에서 정리.

연령별로 신뢰 수준을 분석하면,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와 반대로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인간 사회적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주요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보다는 사회전반 또는 사람간의 신뢰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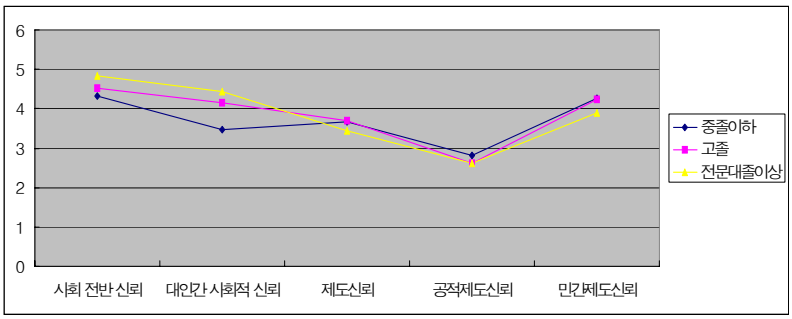
〔그림 III-115〕 연령별 신뢰 수준



출처: 이재혁(2005), 212.

다음으로 교육수준별 신뢰수준을 분석하였다. 교육수준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으로 구분한 결과 교육수준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없었고 거의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인간 사회적 신뢰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신뢰의 수준으로 다른 신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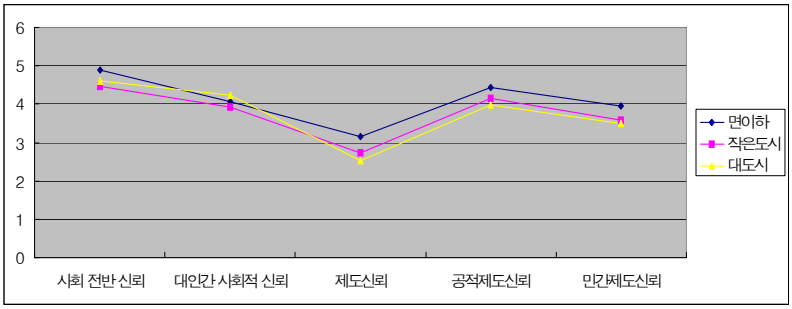
〔그림 Ⅲ-116〕 교육수준별 신뢰 수준



출처: 이재혁(2005), 213.

다음으로 거주지역별로 신뢰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이 역시 거주지역에 따라서 신뢰의 수준이 크게 차이난다기 보다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나 대인간 사회적 신뢰보다는 제도에 대한 신뢰가 거구지역에 따라서 더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Ⅲ-117〕 거주지역별 신뢰 수준



출처: 이재혁(2005), 214.

(5) 사회적 지원망

KGSS의 사회적 지원망은 구혜란(2005)의 분석에 의하여 보고되었다.

사회적 지원망은 사회적 관계에 의하여 형성되는 상호교환관계로서 일상적으로 또는 위급한 상화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개인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소개되고 있다(구혜란, 2005). 따라서 사회적 지원망은 개인이 사회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작용하는 동시에 사회적 삶의 결과라는 측면에서도 설명이 될 수 있다. 즉, 사회적 삶을 보다 다양하고 관계중심적으로 구성할수록 사회적 지원망은 넓혀지기 마련이다.

구혜란(2005)의 연구에서는 2001년 ISSP에서 조사한 사회관계와 사회적 지원체계(social relation and social support system)의 자료와 특별주제모듈로 부가된 2004년 KGSS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회적 지원의 내용은 도구적 지원, 서비스 지원, 물질적 지원, 정서적 지원, 사회활동적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서는 아플 때 식사준비나 장보기 등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가장 먼저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구혜란, 2005).

〈표 III-14〉 사회적 지원 변수의 정의와 측정

	사회 전반 신뢰	대인간 사회적 신뢰
도구적 지원	아플 때 식사준비나 장보기 등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관계범주: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기타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전문기관, 기타 및 지원요청 대상 없음
물질적 지원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정서적 지원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경우	
노부모부양가치	성인이 된 자녀는 노부모를 돌볼 의무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찬성정도	5점 척도
가족우선지원가치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먼저 자신과 가족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찬성정도	
친구지원가치	형편이 좋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친구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찬성정도	

출처: 구혜란(2005), 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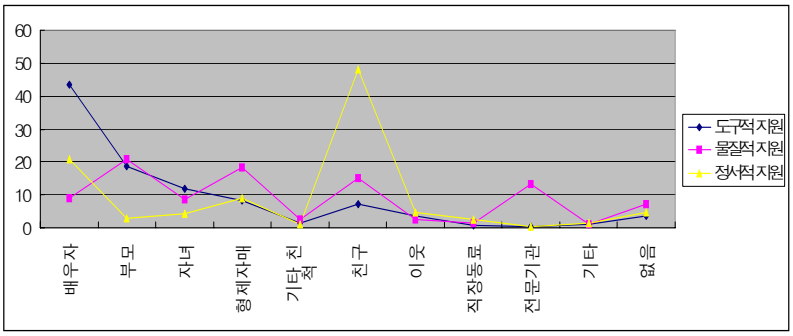
한국의 사회적 지원을 대상에 대한 응답에 따라 구분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구적 지원의 경우 배우자에게 상당 부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인 경우에도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물질적 지원의 경우에는 부모, 친구, 전문기관 순으로 나타났고, 정서적 지원의 경우에는 친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친구의 경우에는 정서적 지원에 대한 대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지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I-15〉 사회적 지원의 대상별 응답 비율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기타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전문 기관	기타	없음
도구적 지원	43.3	18.54	11.95	8.35	1.46	7.20	3.68	0.61	0.38	1.00	3.52
물질적 지원	8.93	20.92	8.78	18.24	2.67	15.11	2.44	1.60	13.13	1.15	7.02
정서적 지원	20.73	2.83	4.44	9.10	0.92	48.13	4.82	2.45	0.31	1.53	4.74

출처: 구혜란(2005), 246.

〔그림 III-118〕 사회적 지원의 대상별 응답 비율



출처: 구혜란(2005), 246에서 정리.

2. KDI의 사회적 자본 실태 조사

가. 개관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에서는 '비전 2030'의 발표를 계기로 사회적 자본 확충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와 관련된 실증적 자료 분석의 필요성에 토대하여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국제적 수준의 사회적 자본 관련 조사 및 연구들은 조사항목이 광범위하여 사회적 자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고, 동시에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항들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한국사회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관련 정책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형성하는데 조사 및 연구의 의의가 있다(김태종, 2006).

조사된 항목에는 신뢰와 관련된 제반 항목, 사회적 참여에 대한 내용(공식적·비공식적 조직 참여 여부, 활동 여부),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내용(이웃, 친구, 직장동료 등의 관계망의 크기, 교류의 빈도, 구성의 다양성), 한국사회에 특유한 사회조직으로서의 연고망의 성격(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등 참여 여부, 연줄을 통한 청탁 및 피청탁 여부 등) 등이 포함되었다(김태종, 2006). 관련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한국의 신뢰, 사회적 관계망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나. 조사분석결과

(1) 신뢰, 공정성, 이타성

KDI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조사 자료와 세계가치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신뢰 측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타인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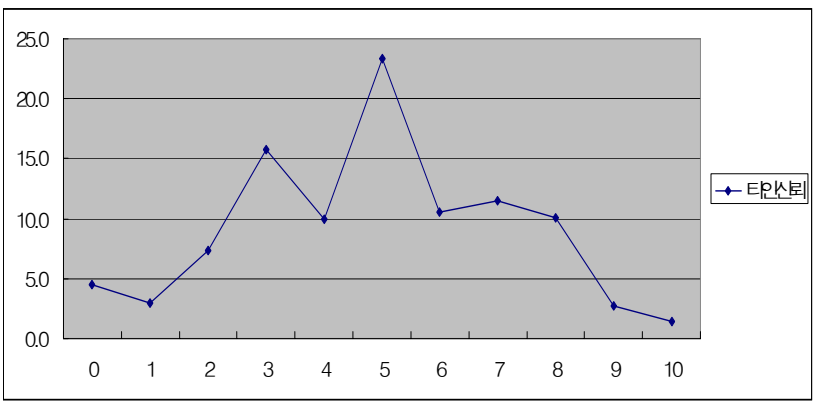
신뢰의 정도에 대한 질문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응답척도는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0점,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10점을 주도록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타인신뢰에 대한 응답분포에서 중앙값인 5점에 가장 많은 응답비율(23.4%)이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III-16〉 한국의 타인 신뢰에 대한 응답 비율

	0	1	2	3	4	5	6	7	8	9	10
응답 비율	4.5	3.0	7.3	15.7	9.9	23.4	10.5	11.5	10.1	2.7	1.4

출처: 한준(2006), 24에서 정리.

〔그림 III-119〕 한국의 타인 신뢰에 대한 응답 비율



출처: 한준(2006),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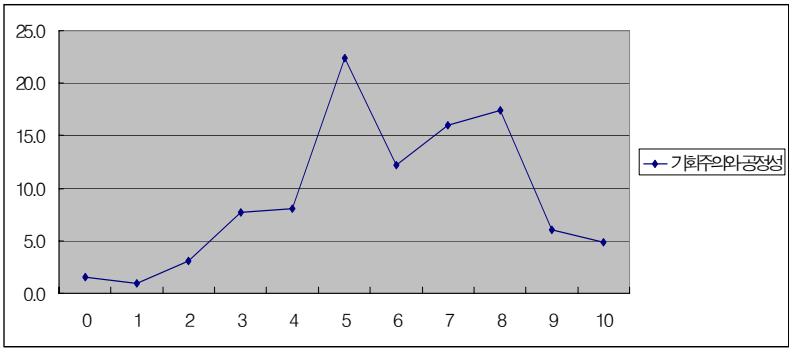
다음으로 한국의 기회주의와 공정성에 대한 자료가 분석되었다. 한국인들이 인식하는 한국사회의 기회주의와 공정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척도는 0점부터 10점까지였다. 0점으로 갈수록 기회주의가 많다는 것이고 10점으로 갈수록 공정성이 높다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중앙값인 5점에 대한 응답비율이 22.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8점이 17.4%, 7점이 16.0%의 순이었다. 대체로 공성하다는 응답비율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7〉 한국의 기회주의와 공정성에 대한 응답 비율

	0	1	2	3	4	5	6	7	8	9	10
응답 비율	1.5	0.9	3.1	7.7	8.0	22.4	12.2	16.0	17.4	6.0	4.8

출처: 한준(2006), 27에서 정리.

〔그림 III-120〕 한국의 기회주의와 공정성에 대한 응답 비율



출처: 한준(2006),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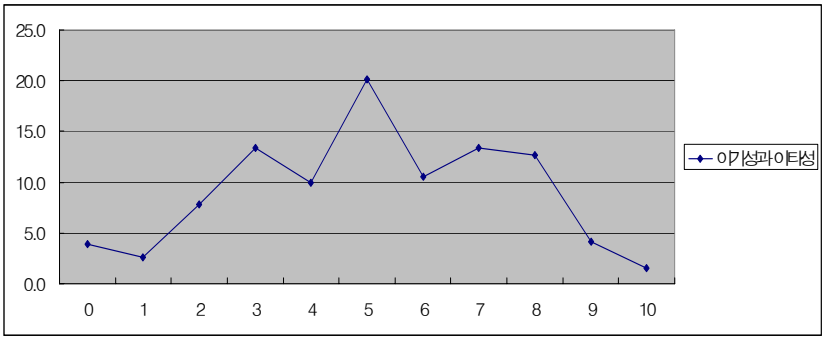
다음으로 한국의 이기성과 이타성에 대한 자료가 분석되었다. 한국인들이 인식하는 한국사회의 이기성과 이타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척도는 0점부터 10점까지였다. 0점으로 갈수록 이기성이 많다는 것이고 10점으로 갈수록 이타성이 높다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중앙값인 5점에 대한 응답비율이 20.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점과 7점이 모두 13.4%였고 8점이 12.7%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는 중앙값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대칭되도록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표 III-18〉 한국의 이기성과 이타성에 대한 응답 비율

	0	1	2	3	4	5	6	7	8	9	10
응답 비율	3.9	2.6	7.8	13.4	10.0	20.2	10.6	13.4	12.7	4.1	1.5

출처: 한준(2006), 29에서 정리.

〔그림 III-121〕 한국의 이기성과 이타성에 대한 응답 비율



출처: 한준(2006), 29.

(2)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관계망은 다양한 사회적 단체에 어느 정도나 참여하는지 친구, 이웃, 직장, 청탁 등과 관련되어 관계를 어느 정도나 맺고 있는지 등이 분석에 포함되었다(양정호, 2006). 우선 참여하는 사회적 단체에는 스포츠·레저동호회, 문화활동·취미동호회, 노동조합, 직업관련단체, 소비자단체, 국제구호·인권단체, 환경·동물보호단체, 종교단체, 정당, 교육·교사·학부모단체, 청소년·퇴직자·노인·여성친목봉사단체, 아파트단지 등 주민단체, 재향군인회 등 퇴역군인단체, 빈민구호 사회봉사단체, 사이버커뮤니티,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가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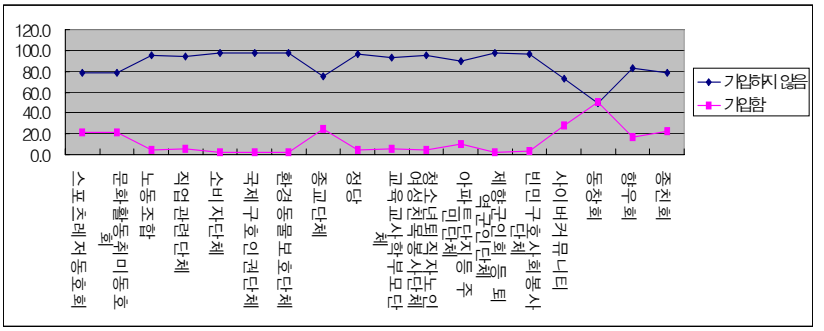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입하는 경우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응답 비율에서 가입비율이 높은 사회단체는 동창회, 종교단체, 종친회, 스포츠·레저단체, 문화활동·취미동호회의 순이었다. 특히 동창회는 절반가량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 참여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9〉 한국의 사회단체 참여 정도

구분	가입하지 않음	가입함
스포츠레저동호회	78.5	21.5
문화활동취미동호회	78.7	21.3
노동조합	95.3	4.7
직업관련단체	94.6	5.4
소비자단체	97.5	2.5
국제구호인권단체	97.7	2.3
환경동물보호단체	97.9	2.1
종교단체	75.3	24.7
정당	96.0	4.0
교육교사학부모단체	93.3	5.7
청소년퇴직자노인여성친목봉사단체	95.7	4.3
아파트단지등 주민단체	90.1	9.9
제향군인회 등 퇴역군인단체	97.6	2.4
빈민구호사회봉사단체	96.1	3.9
사이버커뮤니티	72.5	27.5
동창회	49.6	50.4
향우회	83.2	16.8
종친회	78.0	22.0

출처: 양정호(2006),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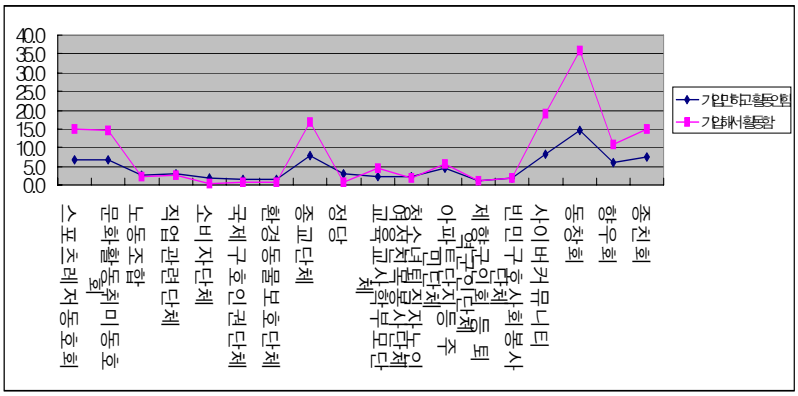
〔그림 III-122〕 한국의 사회단체 참여 정도



출처: 양정호(2006), 104에서 정리.

참여한 비율 가운데 가입만하고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와 가입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는 동창회, 사이버커뮤니티, 종교단체의 순이었다.

〔그림 III-123〕 한국의 사회단체 활동 정도



출처: 양정호(2006), 104에서 정리.

다음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 대상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교류를 분석하였다. 이들과의 관계의 다양성을 출신지역이 같은 사람들, 종교가 같은 사람들, 정치성향이 같은 사람들, 학력이 같은 사람들로 구분하여 조사가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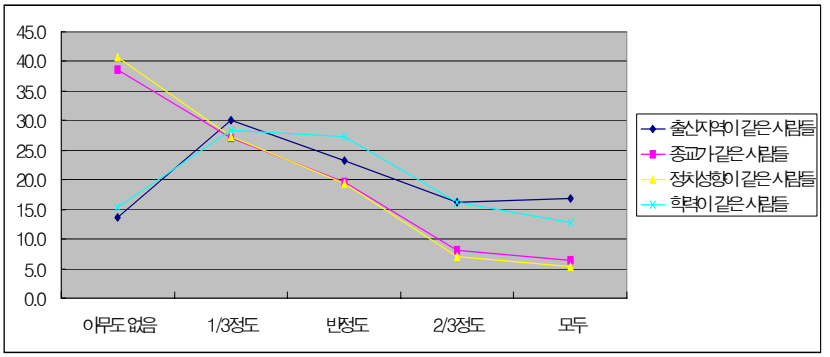
우선 친구의 경우 출신지역이나 학력이 같은 사람들로 구성된 경우가 종교나 정치성향이 같은 사람들로 구성된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 유형이 주로 1차적으로 공통성을 갖는 사람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I-20〉 친구 구성의 다양성

	아무도 없음	1/3정도	반정도	2/3정도	모두
출신지역이 같은 사람들	13.6	30.0	23.3	16.3	16.8
종교가 같은 사람들	38.7	27.1	19.7	8.2	6.3
정치성향이 같은 사람들	40.7	27.4	19.4	7.1	5.3
학력이 같은 사람들	15.3	28.3	27.3	16.2	12.9

출처: 양정호(2006), 106

〔그림 III-124〕 친구 구성의 다양성



출처: 양정호(2006), 106에서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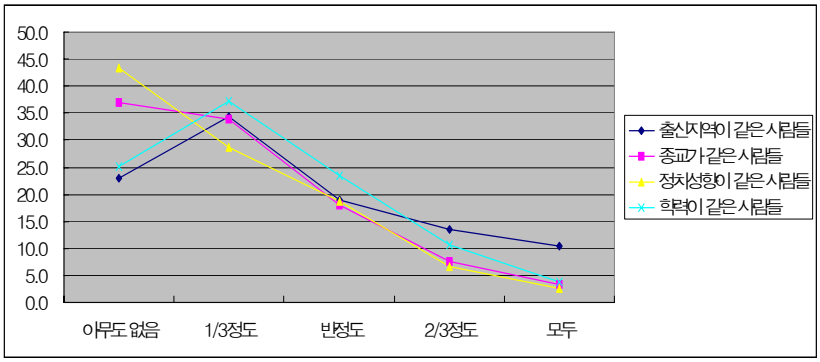
다음으로 이웃의 경우 4가지 다양성의 척도가 모두 유사한 비율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무도 없음의 경우 종교나 정치성향이 같은 사람들의 비율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 이웃 구성의 다양성

	아무도 없음	1/3정도	반정도	2/3정도	모두
출신지역이 같은 사람들	22.9	34.3	19.0	13.5	10.4
종교가 같은 사람들	36.9	34.0	18.1	7.7	3.3
정치성향이 같은 사람들	43.4	28.6	18.7	6.7	2.6
학력이 같은 사람들	25.2	37.1	23.4	10.7	3.7

출처: 양정호(2006), 107

〔그림 III-125〕 이웃 구성의 다양성



출처: 양정호(2006), 107에서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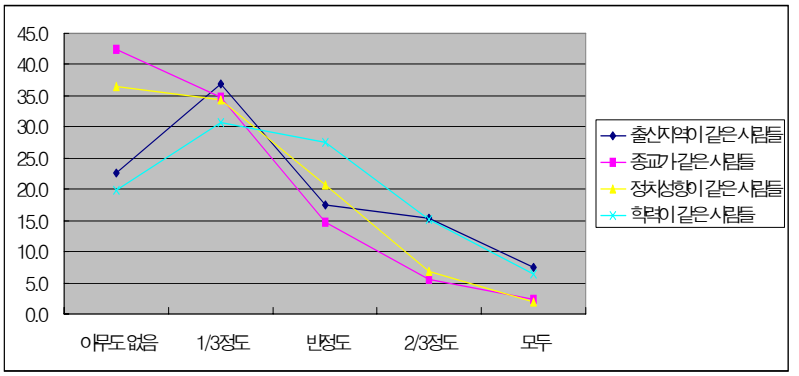
다음으로 직장 동료의 경우에도 앞서 친구나 이웃에서의 다양성의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신지역이나 학력이 같은 사람들이 종교나 정치성향이 같은 사람들보다 구성비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III-22〉 직장 동료 구성의 다양성

	아무도 없음	1/3정도	반정도	2/3정도	모두
출신지역이 같은 사람들	22.6	36.9	17.5	15.4	7.5
종교가 같은 사람들	42.5	34.8	14.8	5.5	2.4
정치성향이 같은 사람들	36.4	34.3	20.6	6.9	1.9
학력이 같은 사람들	19.9	30.8	27.6	15.2	6.4

출처: 양정호(2006), 108

〔그림 III-126〕 직장 동료 구성의 다양성



출처: 양정호(2006), 108에서 정리.

다음으로 이질집단에 대한 개방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질집단으로는 세대가 다른 사람들, 출신지역이 다른 사람들, 성별이 다른 사람들, 학력이 다른 사람들, 소득수준이 다른 사람들, 종교가 다른 사람들, 정치성향이 다른 사람들로 구분되었고 측정척도는 매우 불편함, 불편함, 보통, 불편하지 않음, 전혀 불편하지 않음의 5개 척도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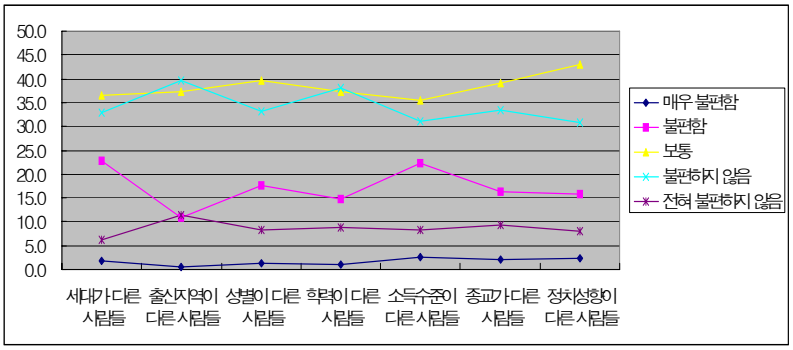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보통이나 불편하지 않은 쪽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불편하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는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나 소득수준이 다른 사람들인 경우로 나타나서, 세대 간 그리고 소득집단 간에 대한 개방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3〉 이질집단에 대한 개방성

	매우 불편함	불편함	보통	불편하지 않음	전혀 불편하지 않음
세대가 다른 사람들	1.7	22.9	36.4	32.8	6.2
출신지역이 다른 사람들	0.6	11.0	37.3	39.6	11.5
성별이 다른 사람들	1.3	17.5	39.6	33.2	8.4
학력이 다른 사람들	1.1	14.7	37.2	38.2	8.9
소득수준이 다른 사람들	2.5	22.3	35.6	31.2	8.4
종교가 다른 사람들	2.0	16.3	39.0	33.5	9.2
정치성향이 다른 사람들	2.3	15.8	43.1	30.8	8.0

출처: 양정호(2006), 108

〔그림 III-127〕 연줄행사 부탁받는 빈도



출처: 양정호(2006), 109에서 정리.

다음으로 연줄을 이용하여 청탁을 부탁받거나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되는 지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실시되었다. 연줄행사를 부탁받은 정도는 전혀받지 않는다, 별로받지 않는다, 가끔 받는다, 자주받는다의 4가지로 조사되었고, 연줄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의 정도는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많이 있다의 4가지로 척도가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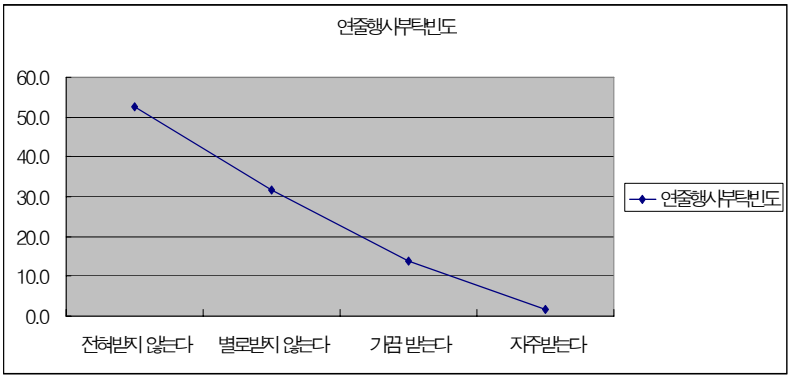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줄행사를 부탁받는 빈도의 경우에는 절반가량이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받는 경우에는 전체의 15.5%정도였다. 연줄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80%이상이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17.9%가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표 III-24〉 연줄행사 부탁빈도 및 사람정도

	전혀받지 않는다	별로받지 않는다	가끔 받는다	자주받는다
연줄행사부탁빈도	52.7	31.8	13.9	1.6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많이 있다
연줄부탁할 수 있는 사람정도	43.8	38.3	16.5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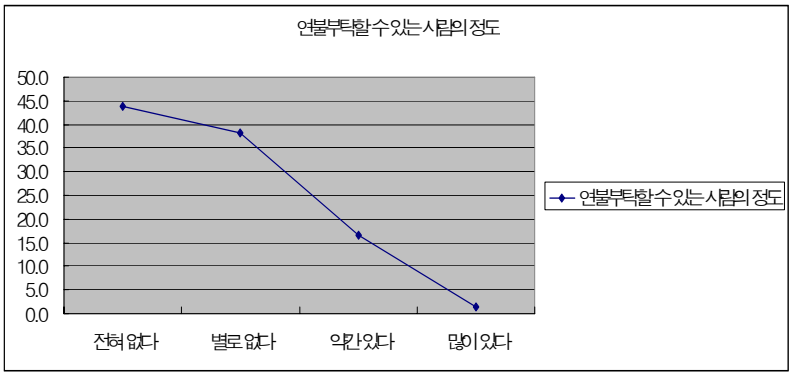
출처: 양정호(2006), 108

〔그림 III-128〕 연줄행사 부탁 빈도



출처: 양정호(2006), 108에서 정리.

〔그림 III-129〕 연줄행사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의 정도



출처: 양정호(2006), 108에서 정리.

3. KRIVET의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개발 조사

가. 개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KRIVET)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인적자원개발 및 관련 정책을 위하여 2006년부터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개발'을 주제로 3년 연속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2006년 1차년도 연구는 사회적 자본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이에 기초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전국 수준의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7년 2차년도 연구에서는 기업 수준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기업 내 사회적 자본과 조직역량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업의 사회적 자본을 관계적 차원(신뢰), 구조적 차원(네트워크), 인지적 차원(비전 및 가치공유)으로 측정하였다. 설문조사는 100개 기업(금융보험업과 사업서비스업)의 연구개발, 기획 및 상품개발 등 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부서의 팀장과 팀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8년 3차년도 연구에서는 기업 간 사회적 자본의 수준에 초점을 두었다. 즉, 기업이라는 조직 간의 사회적 자본의 핵심을

네트워크로 파악하고 자동차업종, 조선업종, 전자업종, 소프트웨어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거래 자료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표 III-25〉 KRIVET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개발 연도별 연구계획

연도	주 요 사 업 내 용
1차년 (2006년)	1. 사회적 자본 개념 정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2.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사회적 자본 측정 도구 및 프로그램 검토 3. 사회적 자본 측정 도구 개발 4. 설문조사 - 전국 규모 (가구 및 개인 조사) 5. 정책 시사점 도출 6. 세미나
2차년 (2007년)	1. 사회적 자본 개념 정의 (사회적 자본과 조직) 2. 측정 도구 개발 (조직의 사회적 자본) 3. 설문조사 (조직 구성원) 4. 사회적 자본과 직무 만족, 조직 몰입 등 5. 시사점 도출 6. 세미나 (2차년도 자료) 7 학술대회 (1차년도 자료)
3차년 (2008년)	1. 사회적 자본 개념 논의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 발전) 2. 측정 도구 개발 (질적 조사 방법) 3. Case study 4. 시사점 도출 5. 세미나 (3차년도 연구 결과) 6. 사회적 자본 국제 비교 7. 국제 세미나

출처: 이영현 외(2006), 9.

3년 동안의 연구 중에서 개인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파악하고 비교가능한 연구는 2006년 1차년도의 연구였다. 이에 KRIVET의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3차년도 연구 중 1차년도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1차년도 사회적 자본 조사를 위한 조사항목에는 생활수준과 의식, 신뢰, 네트워크, 지역참여, 시민참여, 교육훈련 및 학습이 포함되었다. 생활수준과 의식은 지역차원과 국가차원으로 구분하여 범죄로부터의 안전, 거주 환경, 근거리 내의 시설 상태, 거주기간, 지역 만족도, 이웃공동체가 지역차원의 측정항목으로 포함되었다. 국가차원에는 시설 및 기

관의 도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국민의 준법·공중도덕, 신고정신, 사회적 차별, 연고주의, 노력/능력에 의한 성공, 봉사활동, 일자리 정보 습득 경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 공공 서비스의 도움이 포함되었다.

신뢰에는 집단/사람에 대한 신뢰도, 사회 지도층에 대한 신뢰도,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신뢰도, 상거래 약속에 대한 신뢰도, 직장 내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의 5개 항목이 측정 항목으로 포함되었고, 네트워크에는 상담/도움을 받는 사람, 단체 참여여부와 참여의 적극성 정도, 참여단체 수,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체의 4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지역참여에는 지역사회 활동 참여시간, 지역사회 활동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지역 주민들 간의 도움 정도, 지역참여를 통한 효능감이 포함되었고 시민참여에는 투표 참여 여부, 시민참여 내용 및 빈도의 2가지 항목이 포함되었다. 교육훈련 및 학습에는 교육훈련/학습 관련 정보 습득 경로, 최근 참여한 교육훈련/학습, 현재 학습모임 참여여부 및 학습내용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KRIVET의 조사항목 중 한국의 사회적 자본 조사 분석과 관련된 다른 연구들과의 비교가 어려운 형태의 분석이나 자료수집이 이루어진 지역참여, 시민참여, 교육훈련 및 학습의 항목을 제외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III-26〉 KRIVET 1차년도 사회적 자본 조사 항목

영 역		조 사 내 용	
생활수준과 의식	지역 차원	① 범죄로부터의 안전 ③ 근거리 내의 시설 상태 ⑤ 지역 만족도	② 거주 환경 ④ 거주기간 ⑥ 이웃공동체
	국가 차원	① 시설 및 기관의 도움 ③ 국민의 준법·공중도덕 ⑤ 사회적 차별 ⑦ 노력/능력에 의한 성공 ⑨ 일자리 정보 습득 경로 ⑪ 공공 서비스의 도움	②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④ 신고정신 ⑥ 연고주의 ⑧ 봉사활동 ⑩ 정보에 대한 접근성
신뢰		① 집단/사람에 대한 신뢰도 ② 사회 지도층에 대한 신뢰도 ③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신뢰도 ④ 상거래 약속에 대한 신뢰도 ⑤ 직장 내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네트워크		① 상담/도움을 받는 사람 ② 단체 참여여부와 참여의 적극성 정도 ③ 참여단체 수 ④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체	
지역 참여		① 지역사회 활동 참여시간 ② 지역사회 활동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③ 지역 주민들 간의 도움 정도 ④ 지역참여를 통한 효능감	
시민 참여		① 투표 참여 여부 ② 시민참여 내용 및 빈도	
교육훈련 및 학습		① 교육훈련/학습 관련 정보 습득 경로 ② 최근 참여한 교육훈련/학습 ③ 현재 학습모임 참여여부 및 학습내용	

출처: 이영현 외(2006), 8.

설문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전문조사기관의 전문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대상자를 직접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기간은 2006년 7월 6일부터 2006년 8월 14일까지 총 6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은 전국 200개 읍/면/동에 2,000개 가구로 하나의 읍/면/동 당 열 가구씩 조사하며, 한 가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만 59세 이하 전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2,933가구, 4,071명이 조사되었다(이영현 외, 2006).

나. 조사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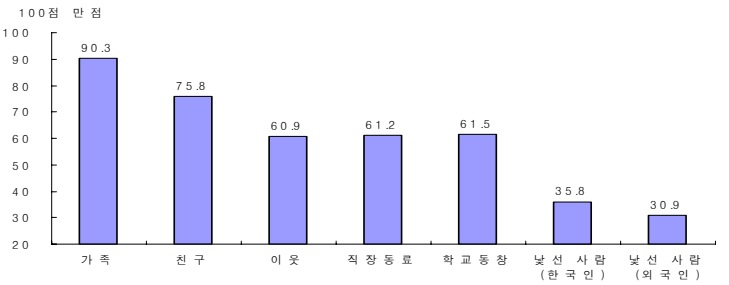
(1) 신뢰

KRIVET의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개발원에서는 신뢰의 수준을 개인적 신뢰, 사회적 신뢰, 제도적 신뢰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개인적 신뢰는 개인이 가족, 친구, 이웃, 직장동료, 학교동창, 낯선 사람(한국인), 낯선 사람(외국인)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사회적 신뢰는 주요 기관을 운영하거나 이끌어가는 사람들 즉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를 측정한 것으로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중앙정부 장관 및 차관, 지방정부 도지사·시장·군수, 초중등학교 교사, 대학교수, 법관, 대기업 경영주, 노동조합 간부, 군장성, 의사, 경찰관, 종교인, 언론인, 정당인에 대한 신뢰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제도적 신뢰는 공공정책의 결정과정, 타인과의 상거래, 그리고 취업·승진·수입 등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의 수준을 측정하였다(이영현 외, 2006).

(가) 개인적 신뢰

개인적 신뢰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뢰의 대상에는 가족, 친구, 이웃, 직장동료, 학교동창, 낯선 사람(한국인), 낯선 사람(외국인)이 포함되었고 각각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함', '약간 신뢰함', '보통', '신뢰하지 않는 편', '전혀 신뢰하지 않음'의 5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설문조사의 분석은 조사결과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분석이 시도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족에 대한 신뢰 정도가 90.3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친구가 75.8점, 학교동창이 61.5점, 직장동료가 61.2점의 순이었다. 가장 낮은 수준은 낯선 사람으로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더 낮은 신뢰수준을 보였다.

〔그림 Ⅲ-130〕 개인적 신뢰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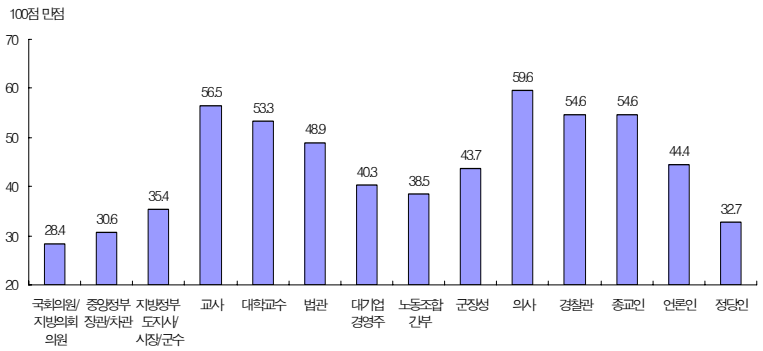
출처: 이영현 외(2006), 119.

(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신뢰는 개인적 신뢰와는 달리 사회적 기관 또는 사회적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구성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를 조사·분석하였다. 사회적 신뢰의 대상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중앙정부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교사, 대학교수, 법관, 대기업경영주, 노동조합간부, 군장성, 의사, 경찰관, 종교인, 언론인, 정당인이 포함되었다. 척도는 '매우 신뢰', '약간 신뢰', '보통', '신뢰 안하는 편', '전혀 신뢰안함'의 5점 척도를 하였고 분석에서는 100점으로 환산하여 활용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의사가 59.6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교사가 56.5점, 종교인이 54.6점, 경찰관이 54.6점 대학교수가 53.3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경우는 반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28.4점, 중앙정부 장관 및 차관이 30.6점, 정당인이 32.7점, 지방정부 도지사·시장·군수가 35.4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 또는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사회적 기관이나 구성원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31〕 사회적 신뢰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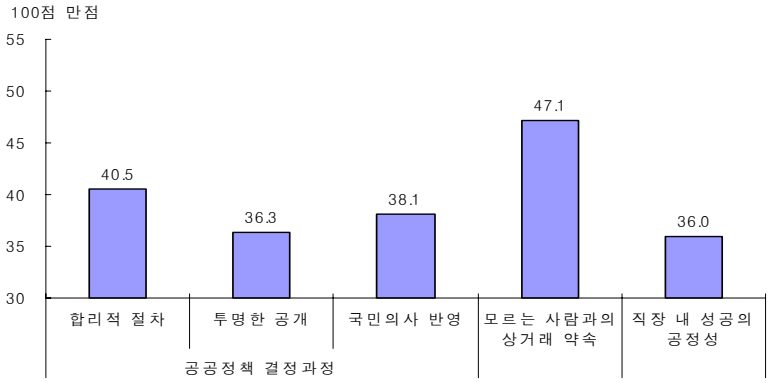
출처: 이영현 외(2006), 120.

(다) 제도적 신뢰

제도적 신뢰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즉, 정책이나 경제 등에서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조사·분석하였다. 조사항목에는 '공공정책 결정과정', '모르는 사람과의 상거래 약속', '직장 내 성공의 공정성' 등이 포함되었다. 척도는 '매우 그러함', '그러함', '보통',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의 5점 척도를 사용한 후 100점으로 환산하여 분석이 실시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장 높은 제도적 신뢰 수준이 나타난 항목은 모르는 사람과의 상거래 약속으로 47.1점이었다. 그리고 합리적 절차가 40.5점, 국민의사반영이 36.3점, 투명한 공개가 36.3점, 직장 내 성공의 공정성이 30.0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32〕 제도적 신뢰 수준



출처: 이영현 외(2006), 121.

(2)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국가마다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항목으로 한국의 경우 연고주의나 혈연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회적 관계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KRIVET의 조사에서는 개인의 중대사에 대한 네트워크의 활용 실태, 공식·비공식의 단체 참여 등이 주요한 조사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가) 개인중대사와 네트워크

개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개인적 중대사들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초대하는 등의 네트워크 활용 활동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중대사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가가 그 사람의 네트워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이영현 외, 2006).

개인중대사에는 집안에 결혼이나 상례 등의 경조사, 집안에 급한 환자 발생, 집안에 급전 필요, 직업이나 사업상의 도움 필요, 개인적으로 심각한 고민이나 문제 상담, 일상적인 사소한 문제나 고민의 대화 상대의 6개가

선정되어 조사에 포함되었다. 이 6개의 질문항목에 대하여 응답은 친척·친지, 학교동창·선후배, 직장동료, 이웃사람, 사이버 친구, 기타, 없음의 일곱 가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집안경조사의 경우 친척이나 친지에 대하여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른 대상에 대한 도움의 요청의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안에 급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친척이나 친지에 대하여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웃사람이 10%이상의 응답률이 나타났다. 집안에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친척이나 친지에 대하여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10% 이상의 응답이 나온 항목은 학교동창이나 선후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상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친척이나 친지에 대하여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학교동창이나 선후배가 20%이상 직장동료가 10%이상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상의 4개 항목의 경우 친척이나 친지에 대하여 도움을 청하는 경우의 비율이 배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고민을 상담하거나 개인의 사소한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청하는 대상은 학교동창이나 선후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친척이나 친지의 경우에도 2순위였으나 1순위와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그 외에 10% 이상의 응답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웃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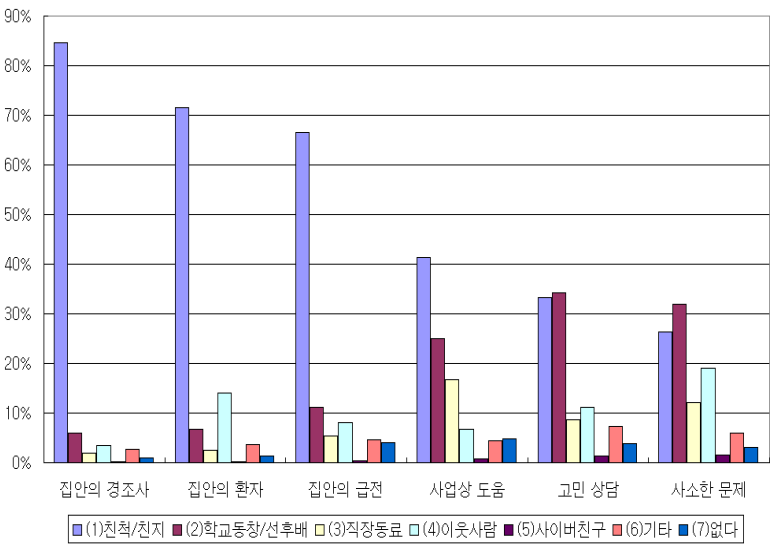
〈표 III-27〉 개인중대사와 네트워크

		친척 친지	학교 동창	직장 동료	이웃 사람	사이버 친구	기타	없다
전체	빈도	3449	246	83	141	5	106	40
	백분율	84.7	6.0	2.0	3.5	0.1	2.6	1.0
		친척 친지	학교 동창	직장 동료	이웃 사람	사이버 친구	기타	없다
전체	빈도	2913	273	101	569	9	150	53
	백분율	71.6	6.7	2.5	14.0	0.2	3.7	1.3
		친척 친지	학교 동창	직장 동료	이웃 사람	사이버 친구	기타	없다

		친척 친지	학교 동창	직장 동료	이웃 사람	사이버 친구	기타	없다
전체	빈도	2707	454	216	330	11	189	164
	백분율	66.5	11.2	5.3	8.1	0.3	4.6	4.0
		친척 친지	학교 동창	직장 동료	이웃 사람	사이버 친구	기타	없다
전체	빈도	1677	1014	683	278	28	184	196
	백분율	41.3	25.0	16.8	6.8	0.7	4.5	4.8
		친척 친지	학교 동창	직장 동료	이웃 사람	사이버 친구	기타	없다
전체	빈도	1351	1396	354	456	57	295	159
	백분율	33.2	34.3	8.7	11.2	1.4	7.3	3.9
		친척 친지	학교 동창	직장 동료	이웃 사람	사이버 친구	기타	없다
전체	빈도	1071	1302	494	777	60	241	126
	백분율	26.3	32.0	12.1	19.1	1.5	5.9	3.1

출처: 이영현 외(2006), 128-131에서 정리.

〔그림 III-133〕 개인중대사와 네트워크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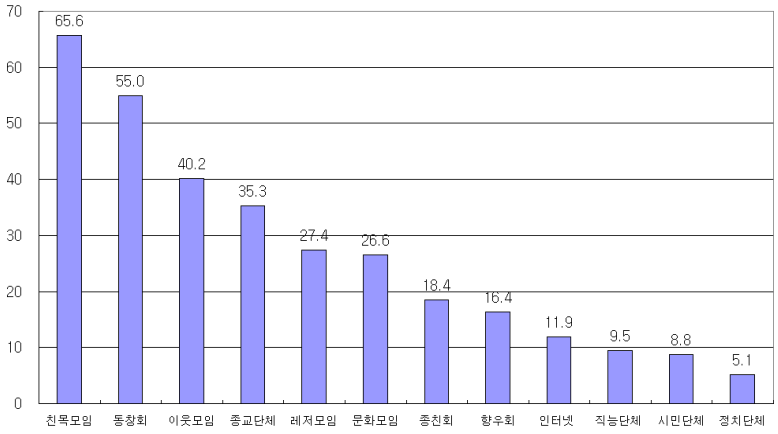
출처: 이영현 외(2006), 127.

(나)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종류와 수

다음으로 이영현 외(2006)의 연구에서는 한국인은 어떤 유형의 네트워크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종 단체를 1) 직능단체/노조, 2) 정당/정치단체, 3) 시민단체, 4) 향우회, 5) 동창회, 6) 반상회/이웃모임, 7) 레저/스포츠 모임, 8) 취미/문화/학술 모임, 9) 종교단체, 10) 계/친목모임, 11) 종친회, 12) 인터넷 동호회 등의 12개로 구분하고 이에 대하여 참여여부를 질문하였다.

가장 많은 참여비율은 친목모임으로 65.6%였으며 그 다음으로 동창회가 55.0%, 반상회·이웃모임이 40.2%, 종교단체가 35.3%, 레저·스포츠모임이 27.4%의 순이었다. 참여비율이 낮은 네트워크 종류에는 정당·정치단체가 5.1%, 시민단체가 8.8%, 직능단체·노조가 9.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34〕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종류



출처: 이영현 외(2006), 132.

다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수를 공식적 단체(법인이나 기관으로 등록된 단체, 시민단체 등)와 비공식적 단체(명칭은 있으나 등록되지 않은 단체, 동창회 등)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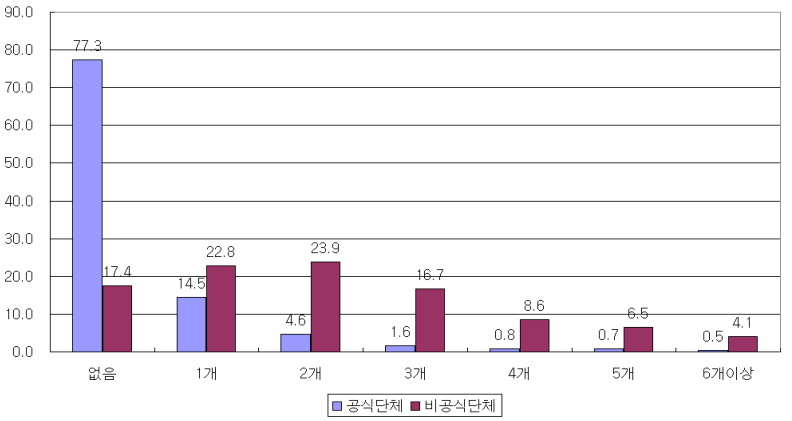
나누어 응답하도록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식적 단체에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77.3%로 가장 많았고, 1개의 단체에 가입한 경우가 14.5%, 2개의 단체에 참여한 경우가 4.6%, 3개의 단체에 참여한 경우가 1.6%, 4개의 단체에 참여한 경우가 0.8%, 5개의 단체에 참여한 경우가 0.7%, 6개 이상의 단체에 참여한 경우가 0.5%로 나타났다.

비공식적 단체에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17.4%였으며, 1개의 단체에 가입한 경우가 22.8%, 2개의 단체에 참여한 경우가 23.9%, 3개의 단체에 참여한 경우가 16.7%, 4개의 단체에 참여한 경우가 8.6%, 5개의 단체에 참여한 경우가 6.5%, 6개 이상의 단체에 참여한 경우가 4.1%로 나타났다.

공식적 단체의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비공식적 단체의 경우에는 1개나 2개의 단체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135〕 네트워크의 수



출처: 이영현 외(2006), 135.

(3) 생활수준 및 의식

이영현 외(2006)의 연구에서는 생활수준 및 의식은 지역수준이나 국가수준에서 거주민이 느끼고 있는 안정성, 편의성, 쾌적성, 보호성 등의 효용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역차원과 국가차원으로 구분하고 지역차원에서는 다시 지역 환경과 이웃공동체로 구분하였다. 국가차원은 법과 도덕, 차별과 보호, 공공서비스 및 정보의 3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표 III-28〉과 같다.

〈표 III-28〉 사회생활 측정 영역 및 항목

대분류	중분류(영역)	항 목
지역 차원	지역환경	안전도 거주환경 지역 이용시설 유무/양호함 현거주지 거주 기간 현거주지 만족도
	이웃공동체	인사/어른 공경 이웃방문횟수/주민 친밀도 주민들의 차이 정도 및 문제 발생 지역사회 소속감 지역주민 참여와 타인 배려
국가 차원	법과 도덕	준법정신과 공중도덕 수준 범죄행위 목격시 신고 정도 연고주의와 개인능력
	차별과 보호	차별의 정도 사회적 약자 보호 봉사활동경험 봉사활동 횟수/금액/시간
	공공서비스 및 정보	재난상황시 도움 시설 공공서비스 정보원천 정보접근성

출처: 이영현 외(2006),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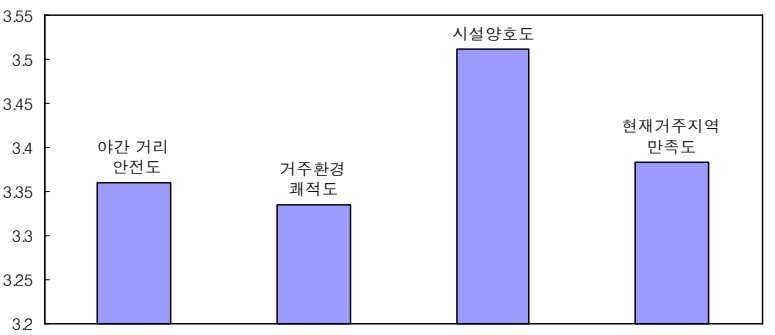
(가) 지역차원의 생활수준 및 의식

지역차원의 생활수준 및 의식은 지역 환경과 이웃공동체가 조사되었는데 지역의 환경은 주로 물리적 주변 환경을 측정하는 것이며, 이웃공동체는 지역 주체들의 친밀도와 참여와 배려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지역의 환경은 현재 거주지역의 안전성, 거주 환경의 쾌적성, 지역 시설의 양호함, 지역 거주 만족도 등으로 측정하였다. 거주 환경의 쾌적성은 공기, 소음 없음, 물, 공원의 하위 항목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 시설 양호함은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얼마나 잘 구비되어 있는가를 보기 위해 걸어서 30분 이내에 혹은 차를 타고 10분 이내에 각종 시설, 즉 초등학교, 병원 및 보건소, 시장 및 쇼핑센터, 도서관, 학원, 문화예술시설, 공설운동장 또는 체육관이 갖추어져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의 환경과 관련되어 시설양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현재 거주 지역 만족도, 야간거리안전도, 거주환경 쾌적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척도가 5점 척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지역의 환경에 대하여 거주민들이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II-136〕 지역의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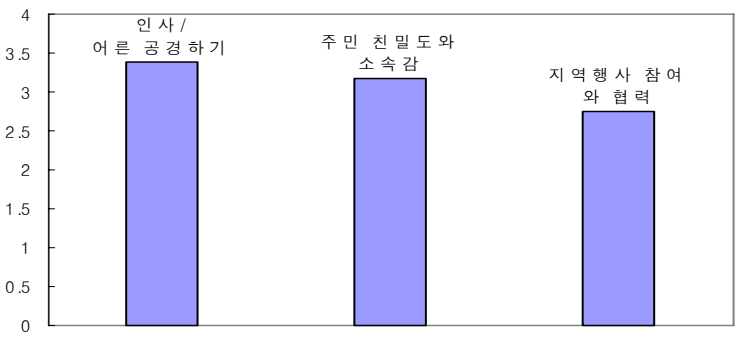


출처: 이영현 외(2006), 157.

다음으로 이웃공동체와의 친밀도를 이웃과의 인사 및 어른 공경, 주민 친밀도와 소속감, 지역행사 참여와 협력으로 측정하였다. 주민 친밀도와 소속감은 그 안에 이웃 방문의 횟수, 친밀감, 지역사회 소속감의 하위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사나 어른 공경하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주민친밀도와 소속감, 지역행사 참여와 협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응답 역시 조사척도가 5점 척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이웃공동체의 친밀감에 대하여 거주민들이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II-137〕 이웃공동체



출처: 이영현 외(2006), 161.

(나) 국가차원의 생활수준 및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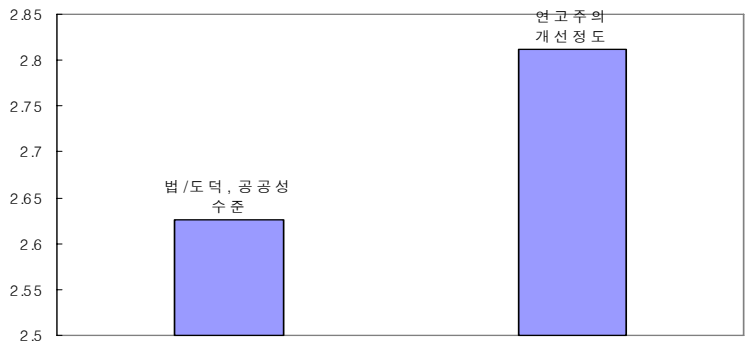
국가차원의 생활수준 및 의식은 법과 도덕 수준, 차별과 사회보호, 공공서비스 및 정보의 영역이 조사되었다. 법과 도덕 수준은 준법정신과 공중도덕의 수준, 연고주의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며, 차별과 사회보호는 사회에서의 차별 정도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적/사적의 보호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며, 공공서비스 및 정보는 시민사회가 제공하는

공공시설 및 서비스와 정보 서비스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이영현 외, 2006).

우선 법과 도덕 수준, 공공성 및 공정성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준법정신과 공중도덕 수준, 범죄행위 목격 시 신고 정도, 연고주의와 개인의 노력으로 측정되었으며, 법과 도덕수준은 준법정신, 법적용 공평성, 공중도덕, 공공재 사용, 탈세 정도의 하위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범죄행위 목격 시 신고는 사회 내에서의 범법행위와 기업 내에서의 범법행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연고주의는 지연, 학연, 혈연, 종교적 연고, 이념적 연고의 하위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고주의의 개선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과 도덕, 공정성 등의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물론 5점 척도로 조사된 것을 감안한다면 법과 도덕 수준, 공공성 및 공정성, 연고주의의 개선 등은 모두 응답척도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Ⅲ-138〕 법과 도덕/ 공공성 수준 및 연고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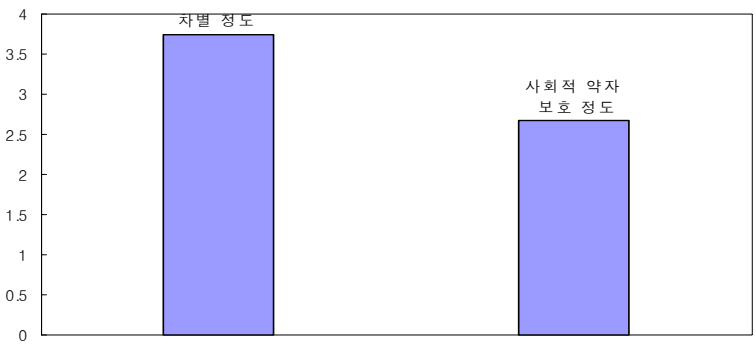
출처: 이영현 외(2006), 166.

다음으로 사회적 차별과 취약 계층 보호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실시되었다. 사회적 차별은 특정 대상에 대한 차별의 정도로 측정되었고,.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는 사회의 약자에 대한 보호 정도로 측정되었다. 차

별의 대상으로 여성, 장애인, 혼혈인, 외국인, 청소년과 고령자, 지역, 학력이 포함되었고, 사회적 약자로는 고아/장애인,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가출청소년과 노숙자, 혼혈인/탈북자가 포함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차별정도가 많은 것으로 인식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정도는 중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나 혼혈인,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저학력에 대한 차별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역에 대한 차별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식되었고, 여성 차별, 연령차별은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인식되었다(이영현 외, 2006).

〔그림 Ⅲ-139〕 사회적 차별과 취약 계층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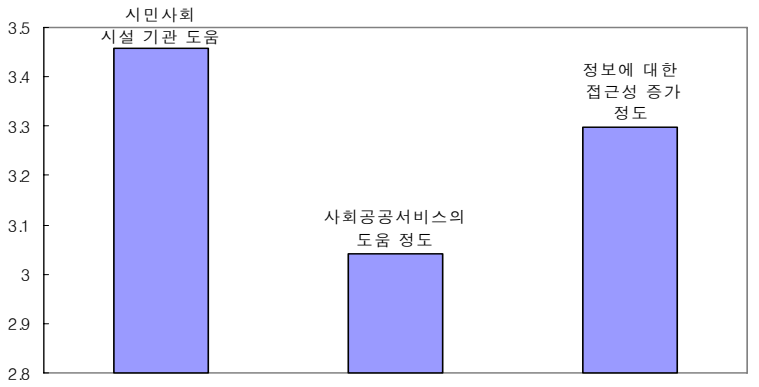
출처: 이영현 외(2006), 169.

다음으로 공공서비스 및 정보 제공의 영역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재난상황 시 공공 기관의 도움정도와 사회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 정도, 정보의 원천 및 정보 접근성이 조사되었다. 공공기관으로는 119 구급대, 경찰서, 동/읍/면사무소의 도움 정도를 조사하였으며, 공공서비스로는 탁아서비스, 정부기관 민원서비스, 장애인 복지시설 및 서비스, 경로우대 서비스를 조사하였다(이영현 외 2006).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민사회시설의 도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증가, 사회공공서비스의 도움 제공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사회시설의 도움의 경우 119 구급대 등의 도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민사회의 기관의 도움 정도는 119 구급대가 가장 높았으며, 동/읍/면사무소가 가장 낮았다. 일선행정기관인 동/읍/면사무소가 경제적 궁핍이나 재난의 시기 등 도움이 필요할 때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영현 외, 2006).

〔그림 Ⅲ-140〕 공공서비스 및 정보 제공 수준



출처: 이영현 외(2006), 175.

제3절 종합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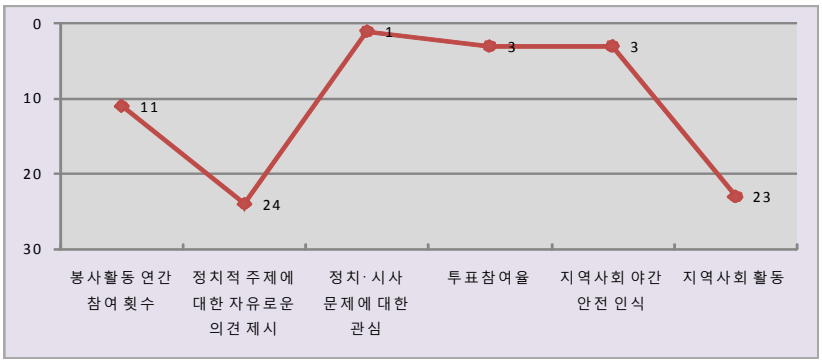
1. 분석 종합

본 연구에서 ESS, WCY, ISSP, WVS에서 실시된 사회적 자본 관련 실증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의 수준과 해외국가의 수준을 비교하였다. ESS의 경우 6개의 지표를 중심으로 한국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정치·시사 문제에 대한 관심, 투표참여율, 지역사회야간안

전인식에서는 상위권으로 나타났고, 봉사활동연간참여횟수의 경우는 중위권, 정치적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지역사회활동은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이를 실천하는 개념인 투표참여의 경우 비교적 상위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우 정치에 대한 개인수준의 관심과 참여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정치적 주제에 대한 의견 제시에서 심리적 제한을 느낀다는 점에서는 의견 제시 등에서는 타인의 눈치를 본다든지, 또는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동양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동양적 문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또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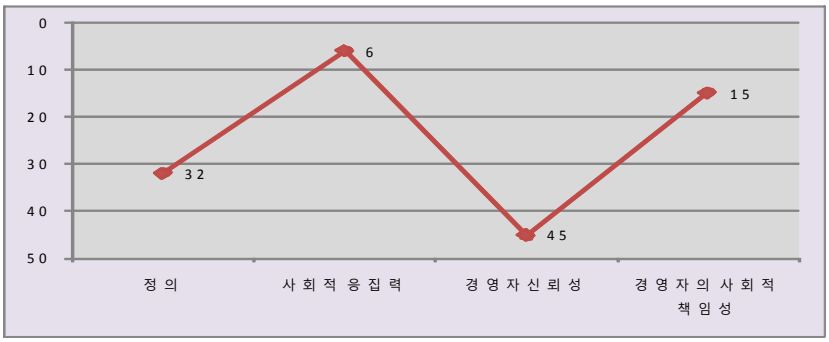
〔그림 Ⅲ-141〕 ESS 조사대상 국가 중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수준(순위)



WCY의 경우에는 정의, 사회적 응집력, 경영자 신뢰성,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성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사회적 응집력의 경우 한국의 순위는 최상위권에 해당되었고,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성 역시 상위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의나 경영자 신뢰성은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나 경영자 신뢰성은 유사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즉, 경영자의 신뢰성이 경영자가 조직원에게 믿을 수 있는 경영행위를 하고 대사회적으로도 부정

이나 불성실한 경영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는 경영자가 지켜야할 사회적 정의를 올바르게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응집력과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성 역시 유사한 측면을 공유하고 있다.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성은 사회적 공헌이나 조직원의 일자리 보존, 기업의 사회봉사 등으로 보다 구체화될 수 있고 이는 사회통합이나 사회적 관용성의 강화라는 측면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응집력은 이런 사회통합이나 사회적 관용성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의가 기업적 측면에서 구체화된 것이 경영자의 신뢰성이라고 할 수 있고, 사회적 응집력이 기업적 측면에서 구체화된 것이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WCY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응집력이나 통합은 높은 순위이지만 사회적 정의나 신뢰성은 낮은 순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이는 사회적 정의는 제도나 법적 조건을 구비함으로써 그리고 이런 제도나 법적 사항을 강제함으로써 실현되고 있다는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특성을 갖는 반면에, 사회적 응집력이나 신뢰는 제도가 구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인식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이해가능하다. 한국이 점차 선진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 학생인권에 대한 법조항 정비, 경영자 비리에 대한 공정한 법 적용 등은 사회적 정의의 실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강하게 줄 수 있다. 반면에 사회적 응집력은 특히 사회계층간의 상호이해와 협력, 공동체의식, 자원봉사나 사회기부와 같은 사회적 책임 수행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데, 이런 측면은 실제로 사회구성원의 인식과 참여의 변화를 인식형성 요소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인식 향상이 쉽지 않다. 즉, 보다 사회적 성숙도가 실제적으로 높아지고 사회의 문화와 인식에 변화가 발생되어야 사회적 응집력이나 통합에 대한 인식도가 향상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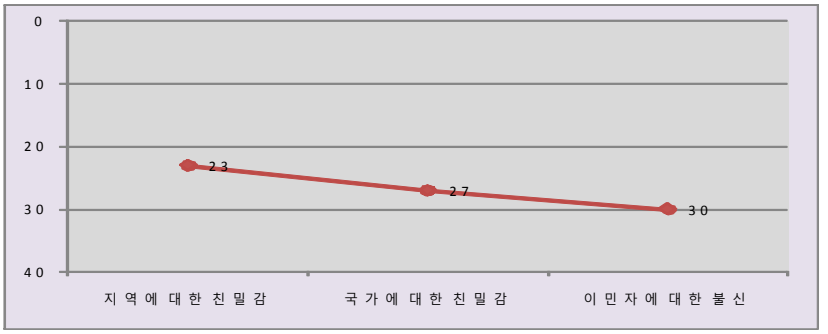
〔그림 III-142〕 WCY(2009) 조사대상 국가 중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수준(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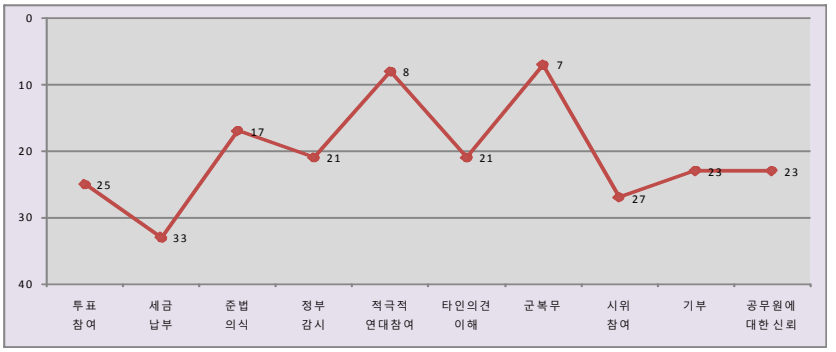
ISSP의 경우에는 지역에 대한 친밀감, 국가에 대한 친밀감, 이민자에 대한 불신 등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지표, 투표참여나 사회참여와 같은 시민의식에 대한 지표,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 매니저와 종업원의 관계와 같은 노동지향성에 대한 지표, 정치에 대한 영향력, 타인에 대한 불신 등 정부역할에 대한 지표, 스포츠 단체 참여나 정치 단체 참여와 같은 레저와 스포츠 등의 참여 및 사회참여 등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었다.

전체적으로 국가정체성에 대한 지표들은 순위가 낮은 편이었고, 시민의식의 경우에는 지표에 따라 순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적극적 연대참여나 군복무는 순위가 비교적 상위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금납부나 시민참여 등은 한국이 하위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43〕 ISSP(2003) 국가정체성 부문 조사대상 국가 중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수준(순위)



〔그림 III-144〕 ISSP(2004) 시민의식 부문 조사대상 국가 중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수준(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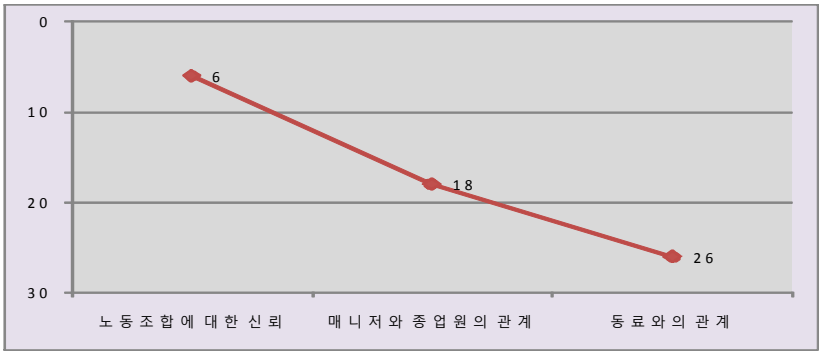


노동지향성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가 높은 순위로 나타났지만, 매니저와 종업원의 관계나 동료와의 관계는 중간 이하의 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조합이 노조원의 권익을 신장하고 보호하는 등의 행위를 정당하게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반대로 기업의 경영층에 대한 불신의 반대급부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경영자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이에 반대의 입장이 많이 나타나는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노동관계에서 매니저나 동료와의 관계성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서 조직구성원 간의 개인적 관계에서 신뢰성은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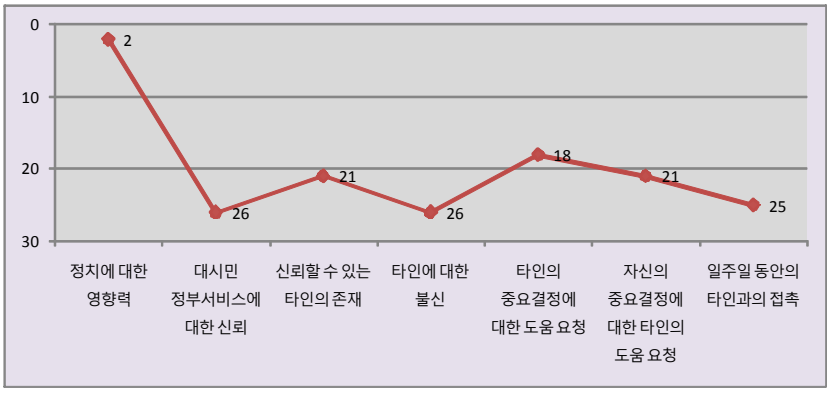
리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정부역할의 경우에는 정치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인식은 상위순위로 나타났으나 다른 지표들은 모두 하위 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포함된 지표는 단지 정부역할이라는 측면보다는 타인과의 관계에 관련된 지표들도 포함되어 있다. 타인에 대한 불신이나 타인과의 접촉 또는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등에 대한 지표들인데 이 지표들의 경우 모두 중하위에 한국이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45〕 ISSP(2005) 노동지향성 부문 조사대상 국가 중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수준(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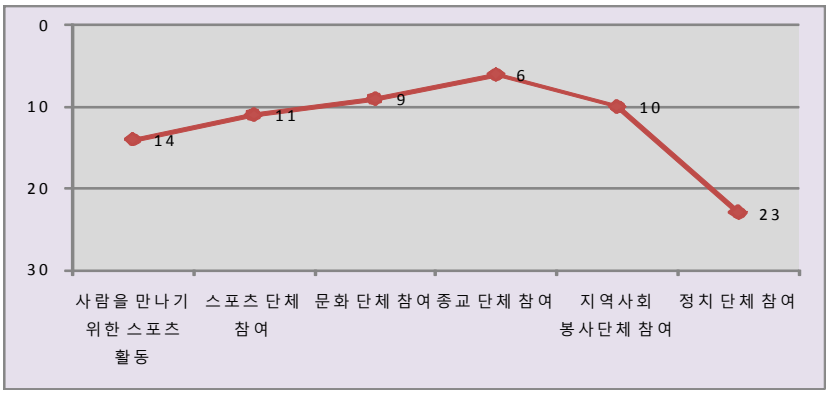


〔그림 III-146〕 ISSP(2006) 정부역할 부문 조사대상 국가 중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수준(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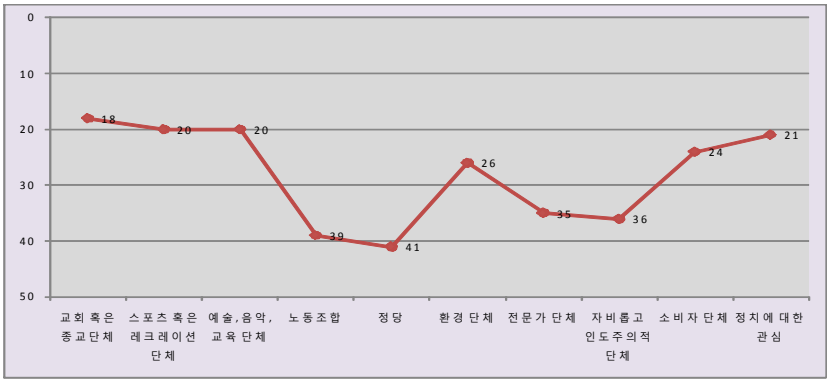
레저나 스포츠 활동의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사회적 단체 참여로 볼 수 있다. 지표에는 스포츠 단체, 문화 단체, 종교 단체, 지역사회 단체, 정치 단체에 대한 참여가 포함되었다. 종교 단체나 문화 단체의 경우에는 상위 순위였으나 정치 단체는 하위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47〕 ISSP(2007) 레저시간과 스포츠 부문 조사대상 국가 중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수준(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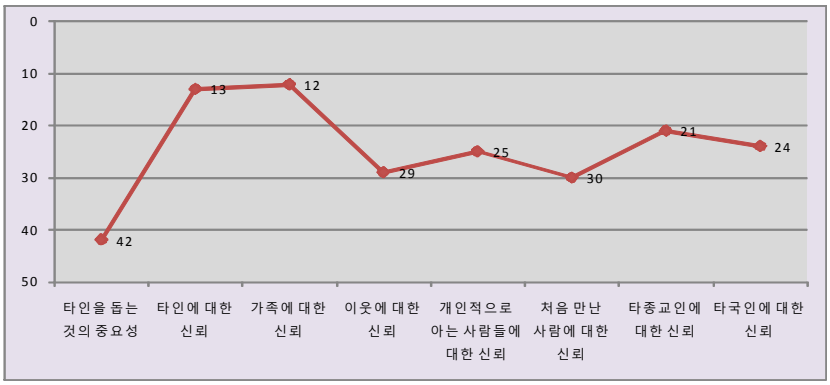
WVS에서는 사회참여와 신뢰로 구분되어 18개의 지표가 분석되었다. 사회참여에서는 종교 단체나 스포츠 단체, 예술·음악·교육 단체 등에 대한 참여가 중간 정도의 순위였고 반면에 노동조합 참여나 정당 참여, 전문가 단체 참여, 인도주의적 단체 참여 등은 하위 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순위가 중간 정도 인 것에 비해 정당 참여는 소극적인 서로 상반되는 결과도 포함하였다.

〔그림 III-148〕 WVS(2005-2008) 사회참여 부문 조사대상 국가 중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수준(순위)



신뢰 부분에서는 타인에 대한 신뢰나 가족에 대한 신뢰는 중간 이상의 순위였고, 타인을 돕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하위순위였다. 그 외의 지표에서는 중간 정도의 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나 일반적 타인에 대한 신뢰는 이웃이나 타종교인 또는 타국인 등에 대한 신뢰보다는 높았지만 상위순위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림 III-149〕 WVS(2005-2008) 신뢰 부문 조사대상 국가 중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수준(순위)



각각의 조사가 대상이나 방식 또는 조사지표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임의로 통합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지표나 영역에 대한 순위결과를 통합적으로 보면, 정치적 관심이나 정치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높게 인식하지만 실제로 정치관련 단체나 정당 참여 그리고 시위 참여 등에서는 낮은 순위로 나타났고 정치와 관련되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정치에서의 인식이나 관심은 높지만 실천이나 참여의 수준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타인에 대한 신뢰나 믿음의 경우에는 지표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는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족과 같이 신뢰의 동심원에서 자신과 가까운 존재에 대한 신뢰는 높지만 동심원에서 밖에 존재할수록 신뢰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동료에 대한 신뢰도 그리 높은 것으로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적 타인에 대한 신뢰는 상대적 순위가 다른 지표에 대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대상을 규정할 경우 신뢰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종교인이나 타국인 또는 초면에 만난 사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경우 신뢰의 수준은 저하되었다. 이는 실제로 생활에서 만나는 타인에 대한 신뢰는 낮은 것으로 판단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대상을 타인이 아니라 지역이나 국가 등 보다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존재로 확대할 경우에도 순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친밀감 역시 낮았다. 이는 개인적 수준에서 타인이든 또는 지역이나 국가와 같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행정단위든지 간에 신뢰감이나 친밀감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참여의 경우에는 문화 단체나 교육 단체, 종교 단체에 대한 참여는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였으나 정치나 시민 단체, 소비자 단체, 노동조합, 정당 등에 대한 참여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의 취미나 종교와 같이 사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참여는 높아지고 있으나 공공성이 관련되거나 이익옹호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참여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봉사활동단체에 대한 참여나 봉사활동의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사점

국제수준에서 한국을 포함하여 사회적 자본관련 실증조사는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실증조사와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사회적 자본이 개인에게는 삶의 새로운 만족을 증진시키고,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성을 통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재규명 또는 재발견의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조직이나 사회의 수준에서 보면 사회적 자본은 사회의 다양한 비용을 경감시키고, 사회통합과 소통 향상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경우에도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민간의 노력이 강구되고 있다.

국제수준에서 한국의 사회적 자본을 분석한 결과, 첫째, 신뢰의 동심원에서 개인에 멀리 위치하고 있는 타인이나 지역, 국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에 가까이 있는 가족과 같은 대상에 대한 신뢰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는 특성이 강하다. 그러나 타인이 자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지역이나 국가와 같은 기관들이 실제로는 그 다지 개인들에게는 실효성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신뢰로운 정책이나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인식할수록 신뢰의 동심원은 좁아지기 마련이다. 특히 특정 대상으로 구체화될 경우 신뢰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이런 노력의 필요성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이나 각종 노력은 신뢰의 측면에서 보면 신뢰의 동심원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즉, 타국인이나 해외이주인구, 타종교인 등 나와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와 관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직장에서의 신뢰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법이 요구된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와의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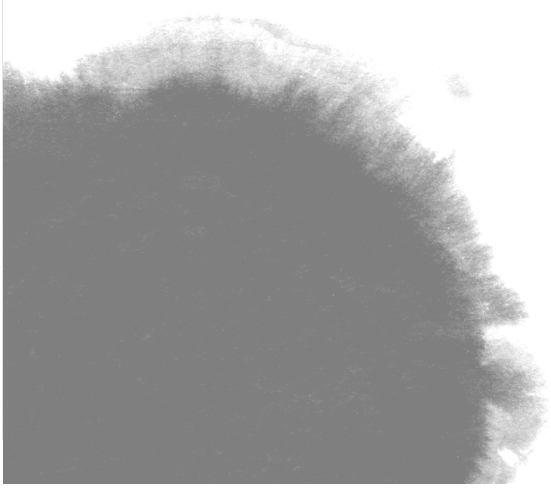
은 직장이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희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직장 수준에서 종업원들이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직장에 대한 몰입이 높아지고 직장동료와의 긍정적 관계보다는 이미 한국 사회는 이익중심의 직장으로 변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잦은 직장이동, 평생직장보다는 평생직업의 의미 강화, 개인의 이익 우선시, 경쟁과 성과 중심의 인적자원 관리 등은 이미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직장에서 신뢰관계에서의 변화를 발생시키고 있다. 즉, 자신의 경력이나 이익을 보다 강력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단체에 대하여 신뢰를 보내기 쉽다는 것이다. 즉, 조직에 대한 몰입보다는 자신의 경력이나 이와 관련되어 노동조합에 대한 몰입이 커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노동구조나 인적자원관리의 모습이 변화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변화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런 변화를 인식하고 직장에서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기업의 성과와 개인의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취미·교양·종교와 관련된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소비 등과 관련되는 단체에 대한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다. 국제비교결과,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사회단체의 참여가 취미나 교양 또는 종교와 관련된 단체의 참여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또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단체의 참여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사회적 또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단체의 참여비율이 높아지게 된다는 점에서 이런 단체에 대한 참여 유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소비자 단체나 자원봉사 단체와 같이 사회적 자본의 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참여유도가 우선되어야 민주사회 그리고 공익사회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정치 부분의 경우 정치에 대한 관심은 높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것을 꺼리는 한국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의사소통하는 부분에서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KIHASA

04

사회적 자본의 정책 예산 분석



제4장 사회적 자본의 정책 예산 분석

제1절 정책 예산 규모 분석

1. 정부 예산체계 구조

예산체계란 예산의 분류와 예산 관리를 통칭하는 개념이다(강경종, 백성준, 김종우, 2006). 예산의 분류란 예산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하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機關), 장(章), 관(款), 항(項), 세항(細項), 세세항(細細項), 목(目)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기관, 장, 관, 항은 예산 심의 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항목으로 입법 과목이라 하며, 세항, 세세항, 목은 행정부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는 사항이므로 행정 과목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예산은 세입 및 세출 예산 모두 기관, 장, 관, 항, 목으로 분류한다. 기관은 행정 조직상의 별도 기관을 지칭하고, 장, 관, 항, 목은 예산을 구체적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윤성식, 2003).

〈표 Ⅳ-1〉 우리나라 정부예산 구조 예시(교육과학기술부)

장(분야) 관(부문)	장(분야) 항(프로그램)	장(분야) 세항(단위사업)	목	2009년도 예산액	2008년도 예산액	증(△)감
장(분야) 050 교육				38,022,304,698	35,814,603,816	2,207,700,882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33,277,254,400	31,276,953,845	2,000,300,555
	1000 학교교육 내실화			35,538,395	43,850,941	△8,312,546
	1031 초중등교육 역량강화			9,136,000	12,795,846	△3,659,846
			210	1,128,683	1,113,998	14,685
			220	4,500	18,296	△13,796

출처: 기획재정부. (2009a). 2009 나라살림 예산, p. 21.

한편, 우리나라는 세출에 대해 미국과 같이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을 분류하고 있다. 기능별 세출예산이란 소관 부처와 상관없이 지출항목을 기능별로 묶는 것으로서 의회와 국민에게 정부활동에 대한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능별 세출은 크게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통일·외교, 국방,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통신,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성질별 지출예산은 인건비, 물품비, 자산 취득처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 또는 지출 대상을 나타내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건비, 물건비, 연구개발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 등, 예비비 및 기타로 구분되어 있다(기획재정부, 2009).

하지만 장, 관항, 세항, 세세항으로 이루어진 현행 예산구조는 각 체계의 정의 및 역할이 모호하며, 각 부처별로 예산구조의 수준도 상이한 문제를 안고 있다(강경종 외, 2006). 따라서 예산은 사업(programs)에 따라 분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중앙정부 예산의 경우 2007년부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예산의 경우 2008년부터 사업 예산제도 혹은 프로그램예산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었다.

여기서 사업이란 기획 예산(PPBS)에서 의미하는 사업의 순수한 형태보다는 부처의 품목별 예산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집합하여 분류한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며(예, 보건, 사회보장, 고용, 주택, 교통 등), 기능은 사업(programs)으로 다시 구분된다. 미국의 경우, 사업은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된 하부 사업과 활동들로 구성된다. 사업은 품목별 예산 항목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사업을 단위로 사업 목표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하게 된다. 사업의 투입 항목은 품목별 예산에 의해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의 산출을 측정하면 효율성을 그리고 궁극적인 사업성과를 판단하면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기존 항목별 예산에서 일부 예산 항목만을 추출하여 사업 예산

(program budget)을 구성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 관련 항목만을 추출하여 에너지 사업 예산을 작성할 수 있다(윤성식,2003).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업(programs)[6]중심의 예산 관리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예산(program budgeting)은 예산의 계획·편성·배정·집행·결산·평가·환류의 전 과정과 체계를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그것을 프로그램의 성과 평가와 직접 연계시키는 예산 기법으로서 예산 관리의 질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성과 지향 예산 체계이다(임성일,2004). 여기서 프로그램이란 동일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 사업(projects)의 묶음이며, 정책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최소 단위이다.

프로그램 예산의 기본 구조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기능-정책-프로그램-단위사업의 계층 구조를 가진다. 우리나라가 프로그램 예산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중기 재정 계획과 단년도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여 투입 통제 위주의 품목별 예산 구조를 사업의 결과에 대한 성과 관리가 가능한 사업 중심 구조로 개편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사회적 자본 축적을 위한 교육투자 방안을 위한 예산분석의 틀은 사회적 자본 형성 및 축적을 위한 기관별 사업을 규정하고, 각 부처의 정책사업 중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사업을 추출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사업의 수준은 정부 부처 예산안의 기능별 프로그램 혹은 단위사업 수준일 수도 있고, 정부부처별 한 해 사업계획의 범주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사업(programs)은 여러 개의 과제(projects)들로 구성되고, 각 과제들의 예산은 지출 기능별(예, 인건비, 시설·기자재비, 사업운영비, 연구개발비 등)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 관련 사업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영역별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정책 대상, 정책 목적, 지원 대상 기관의 특성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사업 예산을 도출하고 분석할 경우, 관련

6) 프로그램이란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묶음을 말한다(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2004).

사업의 범위를 정의하고, 사업들을 일정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하여 이들 사업들의 하위 계층 구조(하위 과제, 지출 기능별 예산 등)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사업 분류

부처별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 예산 분석을 위해 각 부처의 2009년도 예산편성을 고찰하여 사회적 자본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분류하였다. 부처별 사업은 프로그램(program)별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되는 사회적 자본 영역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부처별 각 정책 사업별로 해당되는 사회적 자본 하위영역과 직·간접 및 인프라 관련성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사회적 자본 하위영역은 홍영란 외(2007)의 연구에 따라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 신뢰 및 관용성 영역,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은 홍영란 외(2007)의 연구에서 활용한 방식에 따라 사회적 자본 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사업(SCF1: Social Capital Formation Policy 1), 사회적 자본 형성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사업(SCF2: Social Capital Formation Policy 2),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정책(SCF3: Social Capital Formation Policy 3)으로 구분하였다.

기획재정부에서 출간한 '2009 나라살림-2009년도 예산-'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처로서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를 선정하여 전문가 집단 조사를 통해 분석된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정책사업에 대한 분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도 단위사업 중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정책은 〈표 IV-2〉와 같이 7개 사업이 있었다. 먼저 학생지도 강화 사업은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지원을 통해 학력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문가 조사 결과, 학생지도 강화 사업의 경우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전체 전문가의 70%가 응답하였으며,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에는 간접적 관련 정책(SCF2)이라는 의견이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e-러닝 활성화 사업은 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e-Learning 기반을 조성하여 자발적인 학습참여와 협력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70%이었으며, 관련성에서는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60%를 차지하였다.

지방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 운영사업은 지방교육과 관련한 행정 업무관리, 성과관리, 지식관리, 예산·회계관리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함으로써 교육공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체 응답자중 73.3%가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하였으며,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정책이라는 의견이 76.7%를 차지하였다.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은 수도권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를 지원하여 대학 간 인재육성 역할분담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체 응답자 중 56.7%가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정책이라는 의견이 46.7%이었다.

이공계 국가장학사업은 우수인재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공계 대학(원)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간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사결과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53.3%)에 대한 간접적 관련 정책이라는 의견(50.0%)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사업은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비를 지출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전문가 중 66.7%가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의 사업이라고 응답하였고,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한 직접적 사업이라는 의견이 56.7%이었다.

전문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의 근로와 장학금을 연계하여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교육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66.7%가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에 관한 사업이며, 56.7%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직접적인 사업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Ⅳ-2〉 교육과학기술부의 단위사업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단위사업	사회적 자본 하위영역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생 지도 강화	시민의식/사회참여	21	70.0	SCF1	13	43.3
	신뢰/관용성	6	20.0	SCF2	15	50.0
	네트워크/파트너십	3	10.0	SCF3	2	6.7
e-러닝 활성화	시민의식/사회참여	8	26.7	SCF1	3	10.0
	신뢰/관용성	1	3.3	SCF2	9	30.0
	네트워크/파트너십	21	70.0	SCF3	18	60.0
지방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운영	시민의식/사회참여	2	6.7	SCF1	2	6.7
	신뢰/관용성	6	20.0	SCF2	5	16.7
	네트워크/파트너십	22	73.3	SCF3	23	76.7
수도권대학 특성화	시민의식/사회참여	9	30.0	SCF1	5	16.7
	신뢰/관용성	4	13.3	SCF2	11	36.7
	네트워크/파트너십	17	56.7	SCF3	14	46.7
이공계국가장학사업	시민의식/사회참여	9	30.0	SCF1	3	10.0
	신뢰/관용성	5	16.7	SCF2	15	50.0
	네트워크/파트너십	16	53.3	SCF3	12	40.0

단위사업	사회적 자본 하위영역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시민의식/ 사회참여	20	66.7	SCF1	17	56.7
	신뢰/관용성	3	10.0	SCF2	4	13.3
	네트워크/ 파트너십	7	23.3	SCF3	9	30.0
전문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시민의식/ 사회참여	11	36.7	SCF1	10	33.3
	신뢰/관용성	12	40.0	SCF2	13	43.3
	네트워크/ 파트너십	7	23.3	SCF3	7	23.3

나. 통일부

통일부의 2009년도 단위사업 중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것은 총 4개 사업이 있었다(표 IV-3〉 참조). 새터민 및 이산가족지원정보화 사업은 새터민 활동 및 이산가족 관련 정보통합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새터민과 이산가족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의 사업이라는 의견(43.3%)과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사업이라는 의견(43.3%)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 사업은 정착금과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비용을 지급하여 새터민이 사회일원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의 사업이라는 의견(56.7%)과 사회적 자본 형성에 직접적인 사업이라는 의견(50.0%)이 많았다.

통일교육추진 사업은 북한의 실상 및 안보현실에 관한 대국민 교육을 통해 올바른 통일관, 안보관, 북한관을 정립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의 사업이라는 의견(53.3%)과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한 간접적 사업이라는 의견이 60.0%를 차지하였다.

사이버 통일교육 사업은 사이버 통일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교원, 공무원, 청소년 대상의 통일강좌를 운영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경우 역시 시민의식 및 사회참

여 영역의 사업이라는 의견(46.7%)과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한 간접적 사업이라는 의견(46.7%)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Ⅳ-3〉 통일부의 단위사업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단위사업	사회적 자본 하위영역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새터민 및 이산가족지원 정보화	시민의식/사회참여	10	33.3	SCF1	10	33.3
	신뢰/관용성	7	23.3	SCF2	7	23.3
	네트워크/파트너십	13	43.3	SCF3	13	43.3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	시민의식/사회참여	17	56.7	SCF1	15	50.0
	신뢰/관용성	10	33.3	SCF2	12	40.0
	네트워크/파트너십	3	10.0	SCF3	3	10.0
통일교육추진	시민의식/사회참여	16	53.3	SCF1	8	26.7
	신뢰/관용성	12	40.0	SCF2	18	60.0
	네트워크/파트너십	2	6.7	SCF3	4	13.3
사이버통일교육	시민의식/사회참여	14	46.7	SCF1	4	13.3
	신뢰/관용성	11	36.7	SCF2	14	46.7
	네트워크/파트너십	5	16.7	SCF3	12	40.0

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의 2009년 단위사업 중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나타났다(표 Ⅳ-4〉 참조). 공직선거관리 사업은 공정한 공직자 선거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을 통해 선거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선거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사대상 전문가 중 66.7%가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70.0%가 사회적 자본 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사업이라고 응답하였다.

주민생활지원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복지, 보건, 주거, 평생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등 주민생활 관련 8대 주민서비스를 포탈시스템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주민서비스 업무에 대한 신뢰와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경우 전체 응답 중 43.3%가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에 해당한다고 응답하였으며, 56.7%가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사업이라고 응답하였다.

생산적 정보문화 조성 사업은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및 인터넷 중독 예방 등 정보취약계층의 사회통합과 가상공간에서의 민주적인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43.3%의 전문가가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응답하였고, 40.0%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직접적인 사업이라고 응답하였다.

통합적 재난안전체계 구축 사업은 행안부와 소방방재청 간의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합함으로써 재난안전 업무의 중복문제 해소와 합리적 역할분담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경우 63.3%의 전문가가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의 사업이라고 응답하였고,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에서는 인프라 구축 관련 사업이라는 의견이 70.0%를 차지하였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사회적 공익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전문가의 40.0%가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응답하였고, 50.0%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직접적인 사업이라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관협력지원 사업은 지역의 인적·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지자체 사업에서 기업,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73.3%가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43.3%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직접적인 사업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Ⅳ-4〉 행정안전부의 단위사업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단위사업	사회적 자본 하위영역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공직선거관리	시민의식/사회참여	20	66.7	SCF1	21	70.0
	신뢰/관용성	10	33.3	SCF2	6	20.0
	네트워크/파트너십			SCF3	3	10.0
주민생활지원통합정보시스템운영	시민의식/사회참여	7	23.3	SCF1	7	23.3
	신뢰/관용성	10	33.3	SCF2	6	20.0
	네트워크/파트너십	13	43.3	SCF3	17	56.7
생산적정보문화조성	시민의식/사회참여	11	36.7	SCF1	12	40.0
	신뢰/관용성	6	20.0	SCF2	7	23.3
	네트워크/파트너십	13	43.3	SCF3	11	36.7
통합적재난안전체계구축	시민의식/사회참여	3	10.0	SCF1	4	13.3
	신뢰/관용성	8	26.7	SCF2	5	16.7
	네트워크/파트너십	19	63.3	SCF3	21	70.0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시민의식/사회참여	11	36.7	SCF1	15	50.0
	신뢰/관용성	7	23.3	SCF2	9	30.0
	네트워크/파트너십	12	40.0	SCF3	6	20.0
민관협력지원	시민의식/사회참여	4	13.3	SCF1	13	43.3
	신뢰/관용성	4	13.3	SCF2	5	16.7
	네트워크/파트너십	22	73.3	SCF3	12	40.0

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의 2009년도 사업 중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사업은 16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5〉 참조).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사업

은 가치 있는 종교문화 활동과 보존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종교단체 참여 촉진과 종교문화의 전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40.0%의 전문가가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60.0%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간접적인 사업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종교문화기반 구축 사업은 종교 문화재 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비용을 지원하여 종교문화의 보존과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경우 해당되는 사회적 자본 영역에 대해서는 전문가 간의 의견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신뢰 및 관용성,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에 해당된다고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가 모두 33.3%를 차지하고 있어 종교문화기반 구축 사업의 경우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사업이지만, 정확한 하위영역 구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60.0%의 전문가가 종교문화기반 구축 사업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간접적인 사업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국어·민족문화의 진흥 지원 사업은 한국어의 해외보급 및 민족문화 계승/창달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식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63.3%가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응답하였고, 43.3%가 사회적 자본형성에 간접적인 사업이라고 응답하였다.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역사예술, 공연 등 지역의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산업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56.7%가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에서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 간접적인 사업이라는 의견(40.0%)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이라는 의견(40.0%)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해외문화원 운영 사업은 다른 국가의 문화홍보 및 한국과의 지속적이고 상호적인 문화교류 관계형성을 위해 주재 문화원의 활동을 지원하여 타국가에 대한 국민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경우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60.0%)으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사업(4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문화협력 강화 사업은 한국과의 수교기념행사, 재외 한국문화원, 외국방송사와의 방송교류협력 등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과 지속가능한 국제교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체 응답 중 73.3%가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의 사업이라고 응답하였고, 50.0%가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사업이라고 응답하였다.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은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독창적 문화예술을 전수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46.7%가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의 사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63.3%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간접적인 사업이라고 응답하였다.

문화예술단체지원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지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 등)를 지원함으로써 학교와 사회단체 간 문화예술교육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53.3%가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의 사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56.7%가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간접적 사업이라고 응답하였다.

공연예술활성화 사업은 전통공연, 무용, 연극 등 공연예술을 위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63.3%가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의 사업이라고 응답하였고, 53.3%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간접적인 사업이라고 응답하였다.

전통예술유산의 창조적 계승 사업은 문화유산과 전통예술의 계승 및 전수를 위한 각종 사업활동을 지원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예술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63.3%가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에 해당한다고 응답하였고, 43.3%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간접적인 사업이라고 응답하였다.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은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위한 문화공간(예, 문화예술지원센터 등) 확충 및 운영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50.0%가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63.3%가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응답하였다.

문화콘텐츠 진흥 사업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문화콘텐츠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한국 고유문화에 대한 홍보 및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53.3%가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의 사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43.3%가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응답하였다.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 활성화 사업은 창작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보호와 합법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 교육홍보, 저작권유통 등의 기반을 조성하여 저작활동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체 응답 중 50.0%가 신뢰 및 관용성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50.0%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직접적인 사업이라고 응답하였다.

사이버미술관 확충 사업은 국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미술정보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사이버미술관 확충사업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문화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경우 53.3%의 전문가가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70.0%가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사업이라고 응답하였다.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 사업은 정치연설, 정책관련 언론보도 등 국민 대상의 정책홍보를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제고와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53.3%의 응답자가 신뢰 및 관용성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43.3%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직접적인 사업이라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포털시스템 운영 사업은 부처별 정책관련 뉴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43.3%가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60.0%가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사업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Ⅳ-5〉 문화체육관광부의 단위사업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단위사업	사회적 자본 하위영역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시민의식/사회참여	12	40.0	SCF1	8	26.7
	신뢰/관용성	11	36.7	SCF2	18	60.0
	네트워크/파트너십	7	23.3	SCF3	4	13.3
종교문화기반구축	시민의식/사회참여	10	33.3	SCF1	2	6.7
	신뢰/관용성	10	33.3	SCF2	18	60.0
	네트워크/파트너십	10	33.3	SCF3	10	33.3
국어 · 민족문화의 진흥지원	시민의식/사회참여	19	63.3	SCF1	8	26.7
	신뢰/관용성	4	13.3	SCF2	13	43.3
	네트워크/파트너십	7	23.3	SCF3	9	30.0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시민의식/사회참여	17	56.7	SCF1	6	20.0
	신뢰/관용성	4	13.3	SCF2	12	40.0
	네트워크/파트너십	9	30.0	SCF3	12	40.0
해외문화원운영	시민의식/사회참여	5	16.7	SCF1	5	16.7
	신뢰/관용성	7	23.3	SCF2	11	36.7
	네트워크/파트너십	18	60.0	SCF3	14	46.7
국제문화협력 강화	시민의식/사회참여	3	10.0	SCF1	4	13.3
	신뢰/관용성	5	16.7	SCF2	11	36.7
	네트워크/파트너십	22	73.3	SCF3	15	50.0
문화예술교육지원	시민의식/사회참여	14	46.7	SCF1	9	30.0
	신뢰/관용성	12	40.0	SCF2	19	63.3
	네트워크/파트너십	4	13.3	SCF3	2	6.7
문화예술단체지원	시민의식/사회참여	10	33.3	SCF1	3	10.0
	신뢰/관용성	4	13.3	SCF2	17	56.7
	네트워크/파트너십	16	53.3	SCF3	10	33.3

단위사업	사회적 자본 하위영역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공연예술활성화	시민의식/사회참여	19	63.3	SCF1	8	26.7
	신뢰/관용성	4	13.3	SCF2	16	53.3
	네트워크/파트너십	7	23.3	SCF3	6	20.0
전통예술유산의 창조적 계승	시민의식/사회참여	19	63.3	SCF1	6	20.0
	신뢰/관용성	5	16.7	SCF2	13	43.3
	네트워크/파트너십	6	20.0	SCF3	11	36.7
문화예술공간조성	시민의식/사회참여	15	50.0	SCF1	3	10.0
	신뢰/관용성	3	10.0	SCF2	8	26.7
	네트워크/파트너십	12	40.0	SCF3	19	63.3
문화콘텐츠 진흥	시민의식/사회참여	16	53.3	SCF1	6	20.0
	신뢰/관용성	7	23.3	SCF2	11	36.7
	네트워크/파트너십	7	23.3	SCF3	13	43.3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활성화	시민의식/사회참여	11	36.7	SCF1	15	50.0
	신뢰/관용성	15	50.0	SCF2	5	16.7
	네트워크/파트너십	4	13.3	SCF3	10	33.3
사이버미술관 확충	시민의식/사회참여	10	33.3	SCF1	1	3.3
	신뢰/관용성	4	13.3	SCF2	8	26.7
	네트워크/파트너십	16	53.3	SCF3	21	70.0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	시민의식/사회참여	8	26.7	SCF1	13	43.3
	신뢰/관용성	16	53.3	SCF2	10	33.3
	네트워크/파트너십	6	20.0	SCF3	7	23.3
정책포털시스템 운영	시민의식/사회참여	10	33.3	SCF1	9	30.0
	신뢰/관용성	7	23.3	SCF2	3	10.0
	네트워크/파트너십	13	43.3	SCF3	18	60.0

마.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도 사업 중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사업은 총 14개로 문화체육관광부 다음으로 많은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6〉 참조). 자활지원 사업은 근로무능력자 대상의 창업지원사업(재원: 저소득층생업자금융자,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문가 응답 중 63.3%가 이 사업이 신뢰와 관용성 영역에 해당한다고 응답하였으며, 50.0%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직접적인 사업이라고 응답하였다.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의 방과 후 프로그램(예,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운영을 통해 학습부진문제를 해소하고, 생활지도를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경우 신뢰와 관용성 영역에 해당된다는 의견(46.7%)과 사회적 자본 형성에 직접적인 사업이라는 의견(53.3%)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은 취약지역 아동의 양육여건을 지원하고,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운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이탈방지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뢰와 관용성 영역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50.0%이었고, 사회적 자본 형성과의 관련성에서는 직접적인 사업이라는 의견이 56.7%를 차지하였다.

저소득 장애인 지원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 대상의 창업자금 지원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자립기회 제공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뢰 및 관용성 영역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56.7%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자본 형성에 직접적인 사업이라는 의견이 56.7%로 나타났다.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사업은 장애인의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뢰와 관용성 영역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63.3%이었으며, 사회적 자본 형성에 간접적인 사업이라는 응답이 50.0%로 나타났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 사업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활동 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회적 자본 영역 중 신뢰 및 관용성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는 의견이 56.7%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자본 형성에 직접적인 사업이라는 의견이 46.7%를 차지하였다.

장애인 단체 지원 사업은 장애인 복지와 사회통합을 제공하는 장애인 단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민간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경우 신뢰와 관용성 영역의 사업이라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중 40.0%를 차지하였고, 사회적 자본 형성에 간접적이라는 의견이 43.3%이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소개하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에 도우미를 배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뢰와 관용성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는 의견이 50.0%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자본 형성에 간접적인 사업이라는 의견이 36.7%로 가장 많았다.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사업은 결혼이민자가 한국 문화환경에 조기 정착하여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한국어 교육, 생활교육, 영유아의 보육시설이용료 지원, 언어문화적 격차해소, 자녀학습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회적 자본 영역 중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50.0%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자본 형성에 직접적인 사업이라는 응답이 66.7%로 가장 많았다.

다문화 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사업은 전문 언어지도사 파견, 다문화언어교실 운영 등 아동연령에 맞는 개별·모둠 수업을 통해 다문화 가족 아동의 언어발달을 촉진하여 한국에 대한 적응과 소속감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53.3%가 시민의식 및 시민참여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56.7%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직접적인 사업이라고 응답하였다.

아동·청소년 참여·인권 증진 사업은 아동·청소년 정책 및 사업 과정에 아동·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참여권과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66.7%의 전문가가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과 관련한 사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53.3%가 사회적 자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청소년 국가 간 국제교류 사업은 세계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통하

여 국제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세계 시민의식과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 자본 영역 중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는 의견이 46.7%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는 의견이 50.0%로 가장 많았다.

노인복지 지원 사업은 기초노령연금, 무료경로식당운영, 지역경로당 개보수, 노인돌보미 바우처, 독거노인도우미 파견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뢰 및 관용성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전체의 43.3%이었고,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에서는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는 의견이 36.7%로 가장 많았다.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현직에서 은퇴한 노인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제공을 통해 노인의 경제적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43.3%가 신뢰 및 관용성 관련 사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46.7%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간접적인 사업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Ⅳ-6〉 보건복지가족부의 단위사업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단위사업	사회적 자본 하위영역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자활지원	시민의식/사회참여	9	30.0	SCF1	15	50.0
	신뢰/관용성	19	63.3	SCF2	11	36.7
	네트워크/파트너십	2	6.7	SCF3	4	13.3
방과 후 활동지원	시민의식/사회참여	13	43.3	SCF1	16	53.3
	신뢰/관용성	14	46.7	SCF2	11	36.7
	네트워크/파트너십	3	10.0	SCF3	3	10.0
드림스타트 지원	시민의식/사회참여	12	40.0	SCF1	17	56.7
	신뢰/관용성	15	50.0	SCF2	10	33.3
	네트워크/파트너십	3	10.0	SCF3	3	10.0
저소득장애인지원	시민의식/사회참여	11	36.7	SCF1	17	56.7

단위사업	사회적 자본 하위영역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신뢰/관용성	17	56.7	SCF2	10	33.3
	네트워크/ 파트너십	2	6.7	SCF3	3	10.0
장애인자립자금융자	시민의식/ 사회참여	7	23.3	SCF1	12	40.0
	신뢰/관용성	19	63.3	SCF2	15	50.0
	네트워크/ 파트너십	4	13.3	SCF3	3	10.0
장애인 선택적복지	시민의식/ 사회참여	11	36.7	SCF1	14	46.7
	신뢰/관용성	17	56.7	SCF2	10	33.3
	네트워크/ 파트너십	2	6.7	SCF3	6	20.0
장애인단체지원	시민의식/ 사회참여	9	30.0	SCF1	8	26.7
	신뢰/관용성	12	40.0	SCF2	13	43.3
	네트워크/ 파트너십	9	30.0	SCF3	9	30.0
장애인일자리지원	시민의식/ 사회참여	10	33.3	SCF1	10	33.3
	신뢰/관용성	15	50.0	SCF2	11	36.7
	네트워크/ 파트너십	5	16.7	SCF3	9	30.0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시민의식/ 사회참여	15	50.0	SCF1	20	66.7
	신뢰/관용성	13	43.3	SCF2	6	20.0
	네트워크/ 파트너십	2	6.7	SCF3	4	13.3
다문화가족아동청소년 언어발달지원	시민의식/ 사회참여	16	53.3	SCF1	17	56.7
	신뢰/관용성	13	43.3	SCF2	8	26.7
	네트워크/ 파트너십	1	3.3	SCF3	5	16.7
아동・청소년 참여.인권증진	시민의식/ 사회참여	20	66.7	SCF1	16	53.3
	신뢰/관용성	10	33.3	SCF2	11	36.7
	네트워크/ 파트너십			SCF3	3	10.0
아동・청소년 국가 간 국제교류사업	시민의식/ 사회참여	9	30.0	SCF1	3	10.0
	신뢰/관용성	7	23.3	SCF2	12	40.0
	네트워크/	14	46.7	SCF3	15	50.0

단위사업	사회적 자본 하위영역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파트너십					
노인복지지원	시민의식/ 사회참여	11	36.7	SCF1	9	30.0
	신뢰/관용성	13	43.3	SCF2	10	33.3
	네트워크/ 파트너십	6	20.0	SCF3	11	36.7
노인일자리지원	시민의식/ 사회참여	12	40.0	SCF1	8	26.7
	신뢰/관용성	13	43.3	SCF2	14	46.7
	네트워크/ 파트너십	5	16.7	SCF3	8	26.7

바. 노동부

노동부의 2009년 사업 중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사업은 총 5개 사업이었다(〈표 IV-7〉 참조). 사회적 일자리 확충 사업은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해 일반 시장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업취약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아통합교육도우미, 방과 후 교실 선생님, 간병사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사업의 경우 조사대상 전문가 중 50.0%가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의 사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43.3%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직접적인 사업이라고 응답하였다.

고용평등 환경 개선 사업은 기업의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상의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46.7%가 신뢰 및 관용성 영역 사업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은 SCF1, SCF2, SCF3에 대해 각각 33.3%의 동일한 응답분포를 보여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았다.

노사협력 사업은 노사협력사례 홍보, 노사문화우수기업선정,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사대상 전문가 중 50.0%가 신뢰 및 관용성 영역의 사업이라고 응답하였고, 46.7%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직접적인 사업이라고 응답하였다.

노사문화 구축 사업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협의회 조직/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자본 영역 중 신뢰 및 관용성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는 의견이 53.3%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적 자본 형성에 직접적인 사업이라는 의견이 43.3%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협력 지원 사업은 ILO 분담금 납부를 통해 고용·노동문제에 대한 국제적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의 사업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63.3%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는 의견이 56.7%로 가장 많았다.

〈표 Ⅳ-7〉 노동부의 단위사업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단위사업	사회적 자본 하위영역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사회적일자리확충	시민의식/사회참여	15	50.0	SCF1	13	43.3
	신뢰/관용성	10	33.3	SCF2	10	33.3
	네트워크/파트너십	5	16.7	SCF3	7	23.3
고용평등환경개선	시민의식/사회참여	11	36.7	SCF1	10	33.3
	신뢰/관용성	14	46.7	SCF2	10	33.3
	네트워크/파트너십	5	16.7	SCF3	10	33.3
노사협력	시민의식/사회참여	10	33.3	SCF1	14	46.7
	신뢰/관용성	15	50.0	SCF2	7	23.3
	네트워크/파트너십	5	16.7	SCF3	9	30.0
노사문화구축	시민의식/사회참여	8	26.7	SCF1	13	43.3
	신뢰/관용성	16	53.3	SCF2	8	26.7
	네트워크/파트너십	6	20.0	SCF3	9	30.0
국제기구협력지원	시민의식/사회참여	6	20.0	SCF1	2	6.7
	신뢰/관용성	5	16.7	SCF2	11	36.7
	네트워크/파트너십	19	63.3	SCF3	17	56.7

3.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사업 예산규모

사회적 자본 관련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라 각 부처별 2009년 단위사업의 사회적 자본 하위영역 및 관련성, 그리고 2008년 및 2009년 예산 현황 및 변화를 분석하였다. 단위사업별 해당되는 사회적 자본 하위영역 및 사회적 자본 형성과의 관련성은 가장 많은 응답분포를 보인 것을 제시하였으며, 응답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는 제시하지 않았다.

가. 교육과학기술부

사회적 자본 형성과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 단위사업의 예산규모는 〈표 IV-8〉과 같다. 교육과학기술부의 7개 단위 사업 중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에 해당되는 사업은 2개, 신뢰 및 관용성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은 1개, 그리고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은 4개이었다.

우선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의 사업을 살펴보면, 학생지도 강화 사업의 경우 2009년 예산규모는 200,000천원으로 2008년에 비해 38.8% 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사업의 경우는 2008년도에 607,000천원이었던데 반해 2009년에는 2,746,000천원으로 352.4%가 증액되었다.

신뢰 및 관용성 영역의 사업인 전문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 역시 2008년에 8,000,000천원이었으나, 2009년에는 27,000,000천원으로 237.5%가 증액되었다.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의 사업으로 e-러닝 활성화 사업의 경우 2009년 예산규모는 3,266,000천원으로 2008년에 비해 7.1%가 감소되었으며, 지방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 운영 사업은 2008년에는 해당 예산이 없었다가 2009년에 3,982,000천원이 신설되었다. 반면,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은 2008년에는 59,930,002천원이 투자되었으나, 2009년에는 폐지되었다. 이

공계 국가장학사업 예산은 2009년 89,700,000천원으로 2008년에 비해 9.3% 증액된 규모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 전체 예산 대비 사회적 자본 형성 관련 사업 예산의 규모는 2008년 0.4%이었으나, 2009년에는 0.3%로 다소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전체 예산이 2008년에 비해 6.8% 증액된데 반해 사회적 자본 관련 사업 예산은 17.9% 감액되었다. 이는 2008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이 2009년에는 폐지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8〉 교육과학기술부 사회적 자본 예산 규모

(단위: 천원)

관 (부문)	항 (프로그램)	세항 (단위사업)	사회적 자본영역	사회적 자본 관련성	2008년	2009년	증감 (%)
유아 및 초중등 교육	학교교육 내실화	학생 지도 강화	시민의식/ 사회참여	SCF2	817,000	500,000	-38.8
		e-러닝 활성화	네트워크/ 파트너십	SCF3	3,517,200	3,266,000	-7.1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네트워크/ 파트너십	SCF3	0	3,982,000	-
고등교육	대학의 특성화 다양화	수도권대학 특성화	네트워크/ 파트너십	SCF3	59,930,002	0	-100.0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이공계국가장학사업	네트워크/ 파트너십	SCF2	82,100,000	89,700,000	9.3
평생 · 직업 교육	평생학습 체제 구축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시민의식/ 사회참여	SCF1	607,000	2,746,000	352.4
	직업교육 체제 구축	전문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신뢰/ 관용성	SCF2	8,000,000	27,000,000	237.5
사회적 자본 관련 사업 예산 소계					154,971,202	127,194,000	-17.9
교육과학기술부 전체예산					37,817,265,615	40,392,019,481	6.8
교육과학기술부 전체예산 대비 사회적 자본 관련 예산 비율					0.4%	0.3%	

나. 통일부

사회적 자본 형성과 관련한 통일부의 2009년 단위사업의 예산규모는 〈표 IV-9〉와 같다. 통일부의 4개 단위 사업 중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에 해당되는 사업은 3개이었고, 신뢰 및 관용성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은 없었다. 그리고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은 1개이었다.

우선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의 사업을 살펴보면,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원 사업은 2009년도 55,510,082천원으로 2008년 45,224,738천원에 비해 22.7%가 증액되었으나, 통일교육추진은 2009년 사업 예산이 1,751,730천원으로 2008년에 비해 8.2% 감액되었고, 사이버 통일교육 사업은 2009년 사업 예산이 255,583천원으로 2008년에 비해 15.1%가 감액되었다.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의 사업으로 새터민 및 이산가족 지원정보화 사업은 2009년 예산이 108,817천원으로 2008년 예산 111,346천원에 비해 2.3%가 감액되었다.

통일부의 2009년 단위사업 중 사회적 자본 형성과 관련한 사업은 전반적으로 2008년에 비해 감소된 양상을 보이나, 전체 예산규모에 대비해서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전체 예산 대비 사회적 자본 형성 관련 사업 예산의 규모는 2008년 6.1%이었으나, 2009년에는 12.2%로 두 배 가량 증액되었으며, 특히 통일부의 전체 예산이 2008년 대비 39.2% 감액된 데 반해 사회적 자본 관련 사업 예산은 21.2%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타 부처에 비해 사회적 자본 형성과 관련한 사업에 비중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9〉 통일부 사회적 자본 예산 규모

(단위: 천원)

관 (부문)	항 (프로그램)	세항 (단위사업)	사회적 자본영역	사회적 자본 관련성	2008년	2009년	증감 (%)
통일	인도적 사업	새터민 및 이산가족지원 정보화	네트워크/ 파트너십	SCF3	111,346	108,817	-2.3

관 (부문)	항 (프로그램)	세항 (단위사업)	사회적 자본영역	사회적 자본 관련성	2008년	2009년	증감 (%)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	시민의식/ 사회참여	SCF1	45,224,738	55,510,082	22.7
	통일교육	통일교육추진	시민의식/ 사회참여	SCF2	1,908,307	1,751,730	-8.2
		사이버통일교육	시민의식/ 사회참여	SCF2	301,127	255,583	-15.1
사회적 자본 관련 사업 예산 소계					47,545,518	57,626,212	21.2
통일부 전체예산					775,384,536	471,528,741	-39.2
통일부 전체예산 대비 사회적 자본 관련 예산 비율					6.1%	12.2%	

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의 사회적 자본 형성 관련 단위사업 6개 중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의 사업은 공직선거관리 사업 1개이었고, 신뢰 및 관용성 영역의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은 5개로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먼저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의 사업인 공직선거관리 사업의 경우 2009년 사업 예산은 499,531천원으로 2008년 9,881,158천원에 비해 94.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 사업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2009년 사업 예산이 886,000천원으로 2008년 대비 19.5% 감액되었으며, 생산적 정보문화 조성 사업 역시 2008년 예산 41,887,560천원보다 26.7% 감액된 30,720,269천원이 2009년 예산으로 집행되었다. 통합적 재난안전체계 구축사업의 경우는 2009년에 1,846,000천원의 예산이 신규로 투자되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은 2008년 10,000,000천원보다 50.0% 감소한 5,000,000천원이 2009년에 투자되었다. 반면, 민관협력지원 사업 예산은 2008년 6,254,292천원이었으나, 2009년에는 12,330,483천원으로 2008년 대비 97.2%가 증액되었다.

하지만, 통일부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관련한 세부 사업 예산 규모를 합

산하여 보면 2008년에 비해 2009년에는 약 25.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일부의 전체 사업 예산 중 사회적 자본 형성 관련 사업 예산은 2008년과 2009년 모두 0.2%로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예산 대비 사회적 자본 형성 관련 사업 예산의 일부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0〉 행정안전부 사회적 자본 예산 규모

(단위: 천원)

관 (부문)	항 (프로그램)	세항 (단위사업)	사회적 자본영역	사회적 자본 관련성	2008년	2009년	증감 (%)
지방행정 · 재정지원	지방행정	공직선거관리	시민의식/ 사회참여	SCF1	9,881,158	499,531	-94.9
		주민생활지원 통합정보시스템운영	네트워크/ 파트너십	SCF3	1,100,000	886,000	-19.5
정부자원 관리	국가사회정보화	생산적정보문화조성	네트워크/ 파트너십	SCF1	41,887,560	30,720,269	-26.7
재난방재 · 민방위	재난안전	통합적재난안전체계구축	네트워크/ 파트너십	SCF3	0	1,846,000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네트워크/ 파트너십	SCF1	10,000,000	5,000,000	-50.0
		민관협력지원	네트워크/ 파트너십	SCF1	6,254,292	12,330,483	97.2
사회적 자본 관련 사업 예산 소계					69,123,010	51,282,283	-25.8
행정안전부 전체예산					31,913,533,726	31,955,027,826	0.1
행정안전부 전체예산 대비 사회적 자본 관련 예산 비율					0.2%	0.2%	

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회적 자본 형성 관련 사업 중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의 사업은 8개이었고, 신뢰 및 관용성 영역 사업은 2개,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 사업은 5개이었다. 그리고 종교문화기반 구축 사업은 전문가

조사에서 사회적 자본 하위영역 구분이 모호한 사업으로 나타나 제외하였다.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 사업을 살펴보면,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사업의 2009년 예산은 10,409,813천원으로 2008년에 비해 약 50.2%가 증액되었다. 국어·민족문화의 진흥 지원 사업 역시 2008년에 비해 2009년 예산은 6.6% 증액된 7,821,362천원이었고,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사업 역시 2008년에 비해 108.7% 증액된 22,568,597천원이 2009년 사업 예산으로 책정되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2008년 예산 32,452,379천원에 비해 27.4% 증액된 41,356,860천원이 2009년에 투자되었으며, 공연예술활성화 사업은 2008년에 비해 17.0% 증액된 19,846,159천원이 2009년에 투자되었다. 전통예술유산의 창조적 계승 사업 역시 2008년 대비 38.1% 증액된 9,183,102천원이 2009년도에 투자되었고, 문화예술 공간 조성 사업은 2008년 대비 49.2% 증액된 13,166,000천원, 문화콘텐츠 진흥 사업은 58.2% 증액된 82,022,486천원이 2009년 예산으로 책정되었다.

신뢰 및 관용성 영역의 사업을 살펴보면, 저작권보호와 이용 활성화 사업은 2008년 사업 예산의 경우 15,028,377천원이었으나, 2009년에는 53.2% 증액된 23,023,777천원이 투자되었고,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 사업의 경우 역시 2008년에 6,400,083천원에서 92.9% 증액된 12,348,755천원이 2009년에 투자되었다.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의 사업을 살펴보면, 해외문화원 운영 사업의 경우 2008년 대비 32.0%가 증액된 13,258,000천원이 2009년 사업 예산으로 책정되었으며, 국제문화협력 강화 사업은 247.9% 증액된 13,917,255천원이,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은 19.1% 증액된 40,188,000천원, 사이버 미술관 확충 사업은 200.0% 증액된 300,000천원이 2009년 사업 예산으로 책정되었다. 다른 모든 단위사업이 2008년에 비해 증액된데 반해 정책포털 시스템 운영 사업은 39.4%가 감액된 1,295,600천원이 2009년에 투자되었다. 또한 사회적 자본 영역 구분이 되지 않은 종교문화기반 구축 사업 역시 2008년에 비해 5.6%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사업 중 사회적 자본 형성 관련 사업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사업 예산이 2008년에 비해 4.2% 가량 감소한데 반해 사회적 자본 형성 관련 사업 예산은 42.1% 증액되었으며, 전체 사업 예산 대비 비중 역시 2008년 11.8%에서 2009년 17.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부처에 비해 사회적 자본 형성 관련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투자가 많은 부처로 판단되었다.

〈표 Ⅳ-11〉 문화체육관광부 사회적 자본 예산 규모

(단위: 천원)

관 (부문)	항 (프로그램)	세항 (단위사업)	사회적 자본영역	사회적 자본 관련성	2008년	2009년	증감 (%)
문화예술	종교문화지원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시민의식/ 사회참여	SCF2	6,929,734	10,409,813	50.2
		종교문화기반 구축	-	SCF2	20,650,000	19,492,000	-5.6
		국어 · 민족문화 의진흥지원	시민의식/ 사회참여	SCF2	7,338,100	7,821,362	6.6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시민의식/ 사회참여	-	10,815,898	22,568,597	108.7
		해외문화원운영	네트워크/ 파트너십	SCF3	10,047,549	13,258,000	32.0
		국제문화협력 강화	네트워크/ 파트너십	SCF3	4,000,785	13,917,255	247.9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시민의식/ 사회참여	SCF2	32,452,379	41,356,860	27.4
		문화예술단체 지원	네트워크/ 파트너십	SCF2	33,732,000	40,188,000	19.1
		공연예술활성화	시민의식/ 사회참여	SCF2	16,956,471	19,846,159	17.0
		전통예술유산의 창조적 계승	시민의식/ 사회참여	SCF2	6,647,343	9,183,102	38.1
	문화예술기반 시설확충	문화예술공간 조성	시민의식/ 사회참여	SCF3	8,824,000	13,166,000	49.2
	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콘텐츠진흥	시민의식/ 사회참여	SCF3	51,849,191	82,022,486	58.2
		저작권의보호와이용활성화	신뢰/ 관용성	SCF1	15,028,377	23,023,777	53.2
	국립현대미술	사이버미술관	네트워크/	SCF3	100,000	300,000	200.0

관 (부문)	항 (프로그램)	세항 (단위사업)	사회적 자본영역	사회적 자본 관련성	2008년	2009년	증감 (%)
	관운영	확충	파트너십				
	국정홍보기획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	신뢰/관용성	SCF1	6,400,083	12,348,755	92.9
		정책포털시스템 운영	네트워크/파트너십	SCF3	2,136,305	1,295,600	-39.4
사회적 자본 관련 사업 예산 소계					141,673,770	201,373,879	42.1
문화체육관광부 전체예산					1,197,330,761	1,147,051,873	-4.2
문화체육관광부 전체예산 대비 사회적 자본 관련 예산 비율					11.8	17.6	

마.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도 단위사업 중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의 사업은 3개, 신뢰 및 관용성 영역의 사업은 10개,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 사업은 1개로 나타났다.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 사업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사업의 경우 2008년에는 22,986,216천원이 투자되었으나, 2009년에는 폐지되었다. 반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2009년 473,000천원의 예산이 신설되었다. 아동·청소년 참여·인권증진 사업은 2008년 643,000천원에서 2.6% 감액된 626,000천원이 2009년 사업 예산으로 투자되었다.

신뢰 및 관용성 영역의 사업에서는 저소득 장애인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2008년에 비해 증액된 예산이 2009년에 투자되었다. 2008년에 비해 자활지원 사업의 경우 3.7% 증액된 328,441,364천원,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162.1% 증액된 74,062,000천원,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은 128.9% 증액된 22,544,853천원, 장애인자립자금 융자 사업은 53.6% 증액된 2,457,070천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 사업은 90.6% 증액된 142,943,336천원, 장애인 단체 지원 사업은 7.0% 증액된 9,131,000천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5.4% 증액된 13,652,954천원, 노인복지 지원 사업은 54.8% 증액된 2,470,007,972천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38.2% 증액된

131,408,396천원이 2009년 예산으로 투자되었다. 반면 저소득 장애인 지원 사업은 2008년 13,539,215천원에서 2009년 7,453,762천원으로 45.0%가 감액되었다.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 사업인 아동·청소년 국가 간 국제교류 사업의 경우 2008년 사업 예산이 1,637,544천원이었으나, 2009년에는 1,224,000천원으로 약 25.3%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적 자본 형성 관련 사업은 2008년에 비해 약 52.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건복지가족부 전체 예산이 13.5% 증가한 것에 비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전체 예산 대비 사회적 자본 형성 관련 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8년 11.3%, 2009년 15.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2〉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적 자본 예산 규모

(단위: 천원)

관 (부문)	항 (프로그램)	세항 (단위사업)	사회적 자본영역	사회적 자본 관련성	2008년 예산액	2009년 예산액	증감 (%)
기초생활 보장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신뢰/ 관용성	SCF1	316,771,709	328,441,364	3.7
취약계층 지원	아동복지지원	방과후활동 지원	신뢰/ 관용성	SCF1	28,261,200	74,062,000	162.1
		드림스타트 지원	신뢰/ 관용성	SCF1	9,849,405	22,544,853	128.9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저소득장애인 지원	신뢰/ 관용성	SCF1	13,539,215	7,453,762	-45.0
		장애인자립자금융자	신뢰/ 관용성	SCF2	1,600,070	2,457,070	53.6
		장애인선택적 복지	신뢰/ 관용성	SCF1	74,977,977	142,943,336	90.6
		장애인단체 지원	신뢰/ 관용성	SCF2	8,531,000	9,131,000	7.0
		장애인일자리 지원	신뢰/ 관용성	SCF2	12,951,978	13,652,954	5.4
보육·가족및 여성	가족기능강화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시민의식/ 사회참여	SCF1	22,986,216	0	-100.0

관 (부문)	항 (프로그램)	세항 (단위사업)	사회적 자본영역	사회적 자본 관련성	2008년 예산액	2009년 예산액	증감 (%)
		다문화가족아동청소년언어발달지원	시민의식/사회참여	SCF1	0	473,000	
노인 · 청소년	아동 · 청소년 정책	아동 · 청소년 참여.인권증진	시민의식/사회참여	SCF1	643,000	626,000	-2.6
		아동 · 청소년 국가간 국제교류사업	네트워크/파트너십	SCF3	1,637,544	1,224,000	-25.3
	노인생활안정	노인복지지원	신뢰/관용성	SCF3	1,596,049,853	2,470,007,972	54.8
		노인일자리지원	신뢰/관용성	SCF2	95,052,710	131,408,396	38.2
사회적 자본 관련 사업 예산 소계					1,814,430,348	2,771,923,728	52.8
보건복지가족부 전체예산					16,021,282,498	18,176,622,013	13.5
보건복지가족부 전체예산 대비 사회적 자본 관련 예산 비율					11.3	15.2	

바. 노동부

2009년 노동부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관련한 5개 사업에서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은 1개이었고, 신뢰 및 관용성 영역의 사업은 3개,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의 사업은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의 사업인 사회적 일자리 확충 사업은 2008년 140,395,713천원에서 2009년 189,125,395천원으로 약 34.7% 증액되었다.

신뢰 및 관용성 영역 사업 중, 고용평등환경 개선 사업은 2009년 사업 예산이 1,555,000천원으로 2008년 대비 3.3% 증액되었으며, 노사문화 구축 사업 역시 2009년 사업 예산은 11,960,000천원으로 2008년 대비 60.9% 증액되었다. 반면 노사협력 사업은 2008년 예산 9,836,000천원에 비해 30.5% 감액된 6,836,000천원이 2009년 예산으로 투자되었다.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의 사업인 국제기구협력 지원 사업은 2008년 7,439,276천원에서 70.4% 증액된 12,675,384천원으로 증가하였다.

노동부의 경우 전체 사업 예산이 2008년이 비해 약 24.7% 증액에 따라 사회적 자본 형성 관련 사업 예산 역시 3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부의 전체 사업 예산 대비 사회적 자본 형성 관련 예산 역시 2008년 18.6%, 2009년 19.9%로 다소 증가하였다.

〈표 Ⅳ-13〉 노동부 사회적 자본 예산 규모

(단위: 천원)

관 (부문)	항 (프로그램)	세항 (단위사업)	사회적 자본영역	사회적 자본 관련성	2008년 예산액	2009년 예산액	증감 (%)
노동	고용정책	사회적일자리 확충	시민의식/ 사회참여	SCF1	140,395,713	189,125,395	34.7
	고용평등실현	고용평등환경 개선	신뢰/ 관용성	-	1,504,911	1,555,000	3.3
	노사정책	노사협력	신뢰/ 관용성	SCF1	9,836,000	6,836,000	-30.5
		노사문화구축	신뢰/ 관용성	SCF1	7,432,094	11,960,000	60.9
	국제노동협력	국제기구협력 지원	네트워크/ 파트너십	SCF3	7,439,276	12,675,384	70.4
사회적 자본 관련 사업 예산 소계					166,607,994	222,151,779	33.3
노동부 전체예산					894,427,397	1,115,746,492	24.7
노동부 전체예산 대비 사회적 자본 관련 예산 비율					18.6	19.9	

제2절 정책 예산 집행 과정 분석

1. 정책 예산 집행과정의 개괄

가. 정부 재원 배분 현황 및 특징

2009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으로 전년대비 6.5% 증가한 273.8조원 규모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4대 재정전략과 12대 과제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다. 이에 정부는 ①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②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③미래대비 투자 강화 및④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에 재원배분의 중점을 두고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다.

〔그림 Ⅳ-1〕 4대 재정전략과 12대 중점과제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서민생활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②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 확대 ③ 지역발전을 위한 SOC 투자 확충	④ 내실있는 복지전달을 통한 맞춤형 복지 확대 ⑤ 교육기회 확대 및 글로벌 인재양성 강화 ⑥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돈 버는 농업으로 전환
녹색성장, 안심사회 등 미래대비 투자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
⑦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지원 ⑧ 재해투자를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 ⑨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법치사회 구현 ⑩ 최첨단 정예강군을 지향하는 국방 투자 ⑪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및 글로벌코리아 추진	⑫ 공무원 정원 및 보수인상 동결

출처: 대한민국정부(2008). 2009년 예산안 개요.

2009년도 주요 분야별 재원 배분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D 분야가 2008년 대비 가장 높은 10.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SOC, 보건·복지, 교육, 국방 분야 등이 총지출 증가율 6.5%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통일·외교 분야는 2008년 대비 2.2%의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규모면에서는 보건·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73.7조원의 재원이 배분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반공공행정 47.5조원, 교육 38.7조원, 국방 28.6조원 순이었다. 통일 ·외교 분야는 가장 적은 2.9조원의 재원이 배분되었다.

〈표 Ⅳ-14〉 2009년도 주요 분야별 재원 배분 안

(단위: 조원, %)

구분	2008	2009	증가율
R&D	11.1	12.3	10.8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2.6	13.2	5.0
SOC	19.6	21.1	7.9
농림수산식품	16.0	16.6	4.1
보건·복지	67.7	73.7	9.0
교육	35.6	38.7	8.8
문화·체육·관광	3.3	3.4	3.4
환경	4.5	4.7	5.6
국방(일반회계)	26.6	28.6	7.5
통일·외교	2.8	2.9	2.2
공공질서·안전	11.7	12.2	4.4
일반공공행정	45.9	47.5	3.5
예산(순계)	195.1	209.2	7.2
총지출	257.2	273.8	6.5

출처: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08) 재인용

2009년도 총지출 대비 각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 분야의 비중이 29.9%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 23.7%, 경제 분야 22.1%, 교육 분야 14.1%, 국방 분야 10.2% 순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에서 각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2008년과 비교해 보면, 사회 분야는 전년대비 0.6%p, 교육 분야는 0.3%p, 국방 분야는 0.1%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 분야는 0.3%p,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는 0.7%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09년 예산안 편성에서 중점을 둔 것으로 제시한 경제분야의 재원배분 비중은 전년에 비해 감소(△0.3%p)하였으며 복지분야를 포함한 사회분야의 비중은 전년에 비해 증가(0.6%p)하였다.

〈표 Ⅳ-15〉 2009년도 총지출 대비 각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 현황

(단위: 조원, %, %p)

구분	2008		2009		비중 증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사회	75.4	29.3	81.8	29.9	0.6
교육	35.6	13.8	38.7	14.1	0.3
경제	57.6	22.4	60.6	22.1	-0.3
국방	25.9	10.1	27.8	10.2	0.1
일반행정 및 기타	62.7	24.4	64.9	23.7	-0.7
총지출	257.2	100.0	273.8	100.0	-

주1) 2008년 본예산 기준
주2) 사회분야: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환경
주3) 경제분야 :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통신, 과학기술
주4) 일반행정 및 기타: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통일외교, 예비비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08). 2009년도 예산안 분석 I

2009년 예산에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미래에 대한 투자 확대, 실용정부 구현 등 현 정부의 차별화된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분야별로 재원을 배분하였다. 그러나 총지출에서 분야별 재원배분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GDP 대비 비중으로 볼 때, 최근 재원배분의 변화 추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2008년에 비해 경제분야 재원배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및 비중으로 보았을 때, 2009년 예산이 경제분야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이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재량적으로 분야별 재원배분을 큰 폭으로 수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선, 재정운용의 기조는 중기적 관점에서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중립 내지는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내에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재정 건전성 확보를 재정운용의 목표로 설정한 상황에서 경제성장이 둔화된다면 급격한 재정지출의 확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정된 재정 총량 하에서, 재정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보건 등 사회분야 지출은 대부분 의무지출의 성격을 가지며, 고령화 등 사

회여건 변화에 따라 이와 같은 의무지출의 재정 소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즉, 현재의 복지제도 하에서도 자연 증가(automatically increase)에 의해 향후 사회분야의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고도화, 개방화, 선진화되어감에 따라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여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은 시장경제가 역동적·신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의 규율을 설정하고 집행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 성장 단계와 정부의 역할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 분야에 대한 재원배분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08). 결론적으로 재정 총량의 급격한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무지출 성격의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시장 친화적 경제정책 변화에 따라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은 점차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정부의 재정 전략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분야별 재원 배분을 점검하는 첫 번째 단계로서 분야를 구분하는 분류기준은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분야별로 분류하는 기준은 자료의 목적, 종류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연도별 또는 국가별 비교를 위해서 일관된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비교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분류기준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재정통계지침(GFSM)에 기초한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하는 「한국통합재정수지」의 기능적 분류가 있다.

통합재정의 기능별 분류는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등 14개 분야로 분류되어 있다.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일관된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각 국의 재정여건에 따른 운영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 재정의 포괄범위, 작성시점 등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다.

〈표 Ⅳ-16〉 IMF와 통합재정의 분류기준

IMF 기능별 분류		통합재정 기능별 분류	
701	General public services	1	일반공공행정
702	Defence	2	국방
703	Public order and safety	3	공공질서 및 안전
704	Economic affairs	4	교육
705	Environmental protection	5	보건
706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6	사회보장 및 복지
707	Health	7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발
708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8	오락, 문화, 종교
709	Education	9	연료 및 에너지
710	Social protection	10	농림수산, 수렵
		11	광업, 제조업, 건설업
		12	수송 및 통신
		13	기타 경제사업
		14	주분류 외 지출

출처: IMF(2001).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기획재정부(2008). 2007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이후 정부는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라 과거 '장-관-항' 구조에서 '분야-부문-프로그램'의 구조로 재정운용체계를 변경하였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처음 수립한 2004년부터 분야별 재원배분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 후 매년 수정·보완되어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에 따라 법정 서류가 된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예비비를 포함한 16개 분야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단년도 예산안도 편성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에 따라 2008년 2월 큰 폭의 정부조직 개편이 있었으며 그에 따라 2009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프로그램예산체계의 분야 분류기준도 일부 변화가 있었다. 환경보호(070)를 환경으로, 농림해양수산(100)을 농림수산으로, 산업·중소기업(110)을 산업·중소기업·에너지로, 수송 및 교통(120)을 교통 및 물류로, 지역개발(140)을 국토 및 지역개발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포괄범위도 일부 변경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예산체계 하에서

정부는 16개 분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2009년 예산안」에서는 16개 분야 전체의 재원배분 현황은 제시하지 않고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통일·외교, 국방,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R&D, SOC, 보건복지 등 주요 12개 분야의 재원배분만을 제시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08).

나. 분야별 재원배분의 국제동향

우리나라 분야별 재원배분의 방향이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OECD 국가 등 외국과의 비교를 많이 시도하게 된다. 외국과의 분야별 재원배분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된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제 비교에 사용되는 IMF나 OECD의 통계는 그 기준이 서로 다르고 각국의 재정운용에서도 분류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IMF의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방식은 예산 및 기금을 포함한 정부 지출에서 채무상환 등을 차감하여 집계하고, OECD의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하는 일반정부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재정 통계에 의한 국제비교는 각국의 재정규모, 경제수준, 복지제도 등 재정지출에 영향을 주는 경제·사회적 여건의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과의 비교는 자료의 한계와 각국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상을 파악하는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제비교 결과를 해석하는데 이런 한계를 감안해야 한다.

(1) 중앙정부 통합재정 기준(IMF 기준)

중앙정부의 통합재정 기준으로 분야별 재원배분을 국제 비교하면 〈표 IV-21〉과 같다. 최근 지출 비중이 확대되어 온 우리나라의 복지 및 삶의

질 분야는 미국, 스웨덴 등 다른 나라들이나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향후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복지 및 삶의 질 분야의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경제 분야에 대한 재원 배분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분야에 대한 지출 비중은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 분야에 대한 지출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7〉 분야별 재원배분의 국제 비교(중앙정부 통합재정 기준)

(단위: 총지출 대비 비중,%)

구분	미국 (2005)	호주 (2005)	스웨덴 (2004)	캐나다 (2005)	뉴질랜드 (2005)	OECD 평균	한국 (2005)
국방	20.1	6.1	5.5	5.8	2.5	4.8	10.4
경제	6.6	6.6	9.9	5.5	7.4	9.1	25.1
복지 및 삶의 질	56.4	51.4	54.1	57.8	58.2	54.7	22.8
교육	2.7	9.6	6.1	2.0	20.2	8.5	14.2
기타	14.3	24.4	24.4	28.9	11.7	22.9	27.5

출처: IMF(2007).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2) 일반정부 기준(OECD 기준)

지방정부를 포괄하는 일반정부 기준으로 분야별 재정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면 〈표 IV-22〉와 같다. GDP 대비 분야별 정부지출 비중을 보면, 경제 분야와 국방 분야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 및 삶의 질 분야의 재정지출 비중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일반정부를 기준으로 비교하여도 우리나라의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은 중앙정부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와 유사한 결과를 얻게 된다. 복지 및 삶의

질 분야의 재정지출 비중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경제 분야와 국방 분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에 따라 정부지출의 비중도 변화해 갈 것이다. 우리나라의 복지분야 재정지출은 급속하게 진전되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국민연금제도의 성숙, 다양한 계층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복지 시스템 구축 등 복지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은 급격히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반면, 경제구조가 개방화, 선진화됨에 따라 경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Ⅳ-18〉 분야별 재원배분의 국제비교(일반정부 기준)

(단위: 총지출대비 비중, %)

구분	일반 행정	국방	공공 질서 안전	경제 사업	환경 보호	주택	보건	오락 문화 종교	교육	사회 보장
오스트리아 (2006)	14.3	1.7	2.9	9.8	0.7	1.2	14	2	12	41.4
벨기에 (2006)	17.5	2.1	3.4	10.3	1.3	0.8	14.2	2.7	12.1	35.7
체코 (2006)	11.2	2.8	4.9	15.9	2.6	2.8	16.4	3	11.3	29
덴마크 (2006)	11.7	3.1	1.9	6.8	1	0.9	13.8	3.1	15	42.6
핀란드 (2006)	13.3	3.1	3	9.3	0.7	0.6	13.9	2.3	12	41.8
프랑스 (2005)	13.4	3.6	2.6	5.4	1.5	3.4	13.7	2.8	11.5	42.2
독일 (2006)	13.3	2.3	3.5	7.2	1.1	2.1	13.6	1.3	8.9	46.7
아이슬랜드 (2006)	11.6	0.2	3.5	14.2	1.6	1.5	19.5	8.6	19.9	19.4
룩셈부르크 (2006)	10.5	0.6	2.4	11.7	2.5	1.7	11.9	4.5	11.7	42.5
네덜	15.9	3.2	3.8	10.3	1.8	2.2	12.8	3	11.1	35.9

구분	일반 행정	국방	공공 질서 안전	경제 사업	환경 보호	주택	보건	오락 문화 종교	교육	사회 보장
란드 (2006)										
포루 트칼 (2006)	14.9	2.8	4.1	8.3	1.2	1.2	15.5	2.2	15.3	34.5
스페인 (2006)	11.8	2.9	4.8	13	2.3	2.3	14.6	3.8	11.2	33.3
스웨덴 (2005)	13.6	3.1	2.4	9.1	0.7	1.6	12.4	1.9	13	42.2
영국 (2005)	11	5.7	5.8	6.3	2.3	2.1	16	2	13	35.8
미국 (2006)	13.2	11.6	5.8	10.1	0	1.7	21	0.8	16.9	19
한국 (2005)	13.1	9.3	4.7	22.1	2.9	4	12.4	2.8	17	11.8
평균	13.1	3.6	3.7	10.6	1.5	1.9	14.7	2.9	13.2	34.6

출처: OECD(2007).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다. 지방정부 예산집행 과정

1999년부터 시작된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2007년부터 중앙정부 예산계획에 적용된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2008년부터 지방정부에 도입되게 되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과거 품목별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율과 책임 기반 하에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배정, 집행, 평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이다(행정안전부, 2008).

그 동안 주요 선진국들은 투입과 통제 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로부터 예산집행에 따른 성과와 책임성을 중시하는 프로그램예산제도를 구축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기본적으로 다년도에 걸친 재정운영계획과 조직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하향식 접근을 골격으로 한다. 따라서 프로그램별 예산제도는 예산 계획·

편성·집행에 이르는 예산체계를 프로그램(사업) 단위로 구조화 하고, 이를 성과단위와 연결함으로써 성과를 관리하고자 하는 예산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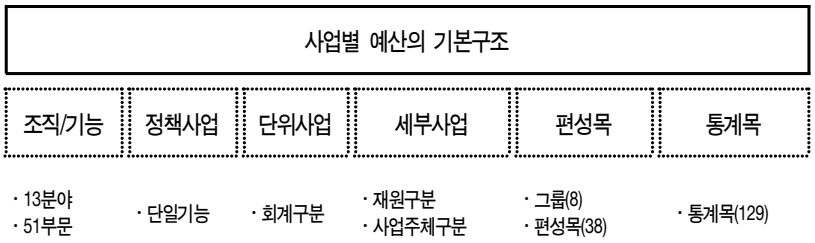
〈표 Ⅳ-19〉 품목별 예산제도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차이와 특성

구분	품목예산제도	프로그램예산제도
접근방법	투입과 통제 중심	성과와 자율 중심
예산편성의 초점	예산품목(지출통제)	프로그램/사업단위 (자율, 결과 책임)
시계	단년도 예산(전년도 예산에 점증)	다년도 예산 (재정운영계획에 근거)
예산운영방식	상향식(bottom-up) 미시적 적산방식	하향식(top-down)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사정	예산삭감과 증감액 위주 심의 분야·사업간 예산액 계수 조정	정책적인 예산심의 사업우선순위와 효과판단

출처: 이상용, 이효(2008).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실제로 예산체계의 기본구조와 사업원가의 산정시스템, 성과와 예산의 연계 등의 관점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사업 예산의 주요한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림 Ⅳ-2〕와 같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구조 속에서 프로그램과 사업단위를 체계화시키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는 정부조직의 기능을 토대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단위를 설정하고 그 아래에 품목을 위치시키는 예산분류체계를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별 예산제도는 기능(분야, 부문) 아래에 사업체계(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를 설정하고 그 아래에 예산품목(편성목, 통계목)을 설치하는 예산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림 Ⅳ-2〕 사업 예산제도의 형태: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이와 달리 예산구조에 사업체계를 직접 설정하지 않고 성과평가시스템에서 조직의 목표와 사업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그 결과를 성과평가체계와 연결시키는 형태를 들 수 있다. 그 한 유형이 일본의 사례이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사업별 예산제도는 기본적인 예산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관-항-목-절-사업-지원내역-설명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즉, 성질별 경비를 표시하는 절 다음에 사업을 위치시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능에 해당하는 분야-부문 다음에 사업군을 배치하는 구조와는 매우 상이한 형태이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정책사업과 예산을 연결하여 성과관리가 용이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개념에 기초하여 예산체계의 기본 틀을 형성하고 있다. 다음 〈표 Ⅳ-〉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13분야 51부문으로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단위(정책·단위·세부사업)을 설정하고 그 아래에 품목(편성목, 통계목)을 두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예산기능분류와 중기재정계획의 기능구분과 일치시켜 정책과 예산을 가능한 연계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표 Ⅳ-20〉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예산과목 분류

구분	기능	조직	사업	경상/사업	성질	부기
품목 중심	5장 16관	항 (실/국)	세항 (과/사업)	세세항 (대4, 소8)	· 목(8그룹 38목)-(경비성질) · 세목(109세목)-(경비내용)	산출 기초
사업 중심	13분야 51부문	· 정책사업(실/과) · 단위사업(회계/기금) · 세부사업(재원구분, 구분)		사업주체	· 편성목(8그룹 38편성목) (예산편성의 기본단위) ※통계목(129 통계목)	산출 기초

출처: 이상용, 이효(2008).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기존 5장 16관을 13분야 51부문으로 구성하여 UN 정부기능분류체계(COFOG), 중앙정부 세출기능분류와 일치하도록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Ⅳ-21〉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체계

분야(13)	부문(51)
일반공공행정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 · 재정지원, 재정 · 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 재난방재 · 민방위
교육	유아 및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평생 · 직업교육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 및 관광일반
환경보호	상하수도 · 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보호일반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 · 가족 및 여성, 노인 · 청소년, 노동, 보훈, 주책, 사회복지일반
보건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농림 · 해양수산	농업 · 농촌, 임업 · 산촌, 해양수산 · 어촌
산업 · 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진흥 · 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산업 · 중소기업 일반
수송 및 교통	도로, 도시철도, 해운 · 항만, 항공 · 공항,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과학기술	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예비비	예비비

2. 사회적 자본 교육투자 집행과정 사례

가.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 사업(통일부)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 사업은 새터민들이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이다.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원 사업은 상위 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0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거하여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주무부처는 통일부이며, 이 사업은 단위사업인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 사업과 새터민 행정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9년도 예산액은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 사업은 약 555억 원이고, 새터민 행정지원 사업 63억 원으로, 총 618억 원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으로 투자되었다.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 사업과 새터민 행정지원 사업의 2009년도 예산은 전년에 비해 24.7% 증가하였고, 이는 통일부 일반회계 예산의 50.9%를 구성하고 있다[7].

〈표 IV-22〉에서 2008년도의 경우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착금 지급예산의 부족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기인한다.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적응교육프로그램 운영, 정착지원금 지급 등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및 안정적 생활유지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새터민 교육훈련 사업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구료비·연금지금금,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터민 정착금 지급은 정

7) 이 중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 사업은 2008년 대비 22.7% 증가한 것임

책금과 민간경상보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새터민 행정지원 사업은 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구축,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지원, 그리고 북한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학교인 새터민 청소년학교 지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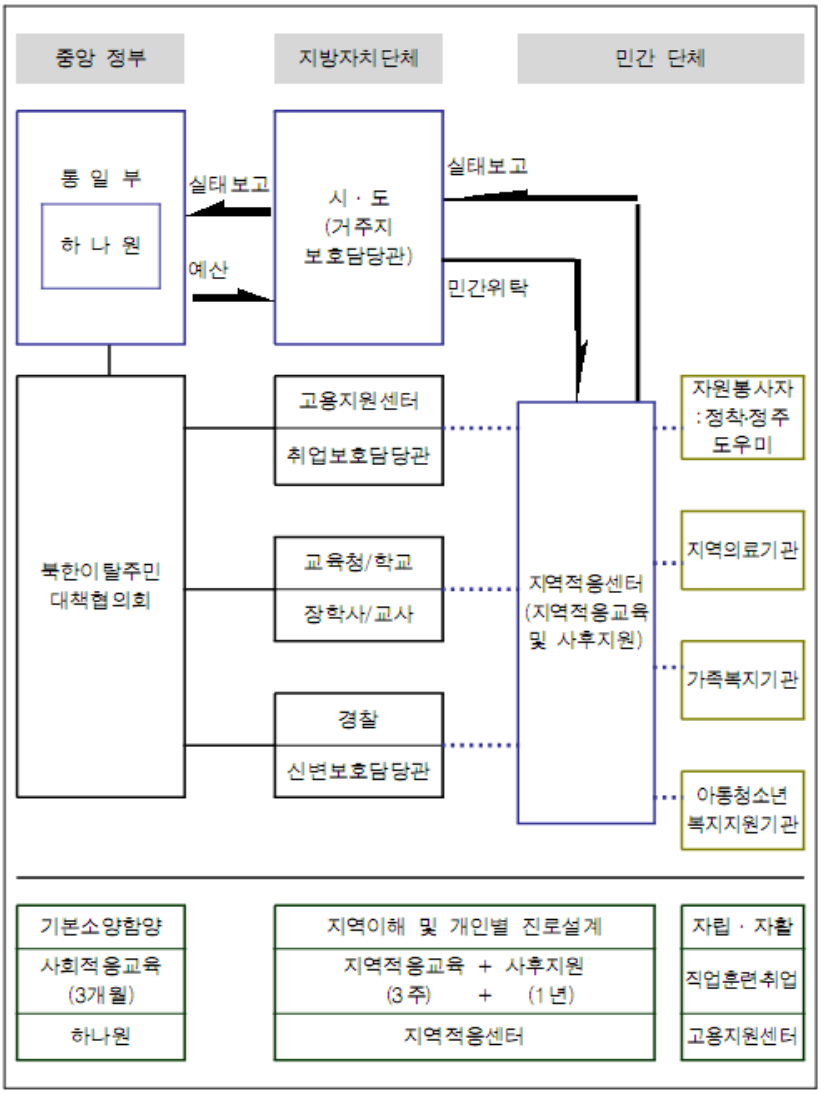
〈표 IV-2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예산 구조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명	2008년		2009년
	예산	집행	예산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	45,225	65,041	55,510
-새터민 교육훈련	5,459	6,310	7,829
-정착금 지급	39,766	58,731	47,681
새터민 정착 행정지원	4,350	4,311	6,331
합계	49,575	69,352	61,841

이와 같은 예산에 근거하여 통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착지원의 체계는 〔그림 IV-3〕과 같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먼저 통일부 소속의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된다. 그 후 거주지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담당관을 통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민간단체는 지역적응센터, 정착도우미, 정주도우미, 복지기관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그림 IV-3〕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체계도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09), p. 6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을 주로 담당하는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통일부 소속의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시설이다. 하나원 조직은 교육기획과, 교육훈련 1·2과, 관리후생과 등 4개과 78명의 직원(정원 외 정규직 16명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식 및 시설관리는 위탁 운영되고 있다.

탈북자들은 입국 후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합동신문을 마친 후, 하나원에 거주하며 12주간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내용은 문화적 이질감 해소, 심리안정, 진로지도 상담 등의 사회적응교육이다. 또한 하나원은 취적[8]·주거 알선 등 정착준비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며, 북한이탈주민에게 각종 정착금을 지급한다. 정착금의 종류 및 지원금액은 〈표 IV-23〉과 같다. 정착금의 종류에는 정착기본금·주거지원금·정착장려금·정착가산금·고용지원금 등이 있다.

〈표 IV-23〉 정착금의 종류 및 지원금액

(단위: 만원)

종류	내용	지원금액
정착기본금	-초기지급금: 하나원 수료 시 지급 -분할지급금: 1년간 분기별로 분할지급	600
주거지원금	-실 입주보증금만 지원하고 잔액은 5년 후 지급	1,300
정착장려금	-직업훈련 장려금: 6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시 지급 -자격취득 장려금: 자격증 취득 시 지급 -취업 장려금: 동일업체에 1년 이상 취업을 유지한 경우 지급	최대 2,140
	-지방거주장려금: 광역시·경기도(주거지원금의 5%) 기타지역(주거지원금의 10%)	최대 130
정착가산금	-연령·장애·장기치료·결손가정아동보호 가산금	최대 1,540
고용지원금	-최대 3년까지 급여의 1/2을 사업주에게 지급	최대 70 (월 기준)

주) 지원금액은 1인 기준임.

하나원을 통해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 중에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에서의 취업·자활을 위한 지원금은 주로 정착장려금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정착기본금이 정착을 위한 기본적인 수요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이라면, 정

8) 취적(就籍)은 호적이 없는 무적자(無籍者)가 호적에 기재되는 것을 말함.

착장려금은 취업노력 및 취업여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먼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때 지급하는 직업훈련 장려금이 있고, 자격증 취득 시 지급하는 자격취득장려금이 있다. 또한 2007년에 가장 많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취업장려를 위한 제도변경의 핵심을 담고 있는 취업장려금이 있는데, 이는 동일한 업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새터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기존에 비해 총액이 600만원 증액되었다.

〈표 Ⅳ-24〉 정착장려금 지급기준

(단위: 만원)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직업훈련장려금	5개월 이하	-	미지급
	6개월-12개월	개월×20	
	1년 과정, 기능대학, 우선선정직종	200	추가
자격취득장려금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200	
취업장려금	1년차	450	(종전)200
	2년차	500	(종전)300
	3년차	550	(종전)400
최대총액	2,140 (종전 1,540)		

주) 지급대상은 2005년 1월 1일 입국자부터이며, 취업장려금 변경금액은 2007년 4월부터 적용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08a), p. 176.

이러한 정착장려급 지급제도는 2007년 4월부터 새로 적용되었는데, 변경된 제도의 핵심취지는 취업을 통한 자립·자활 의지를 제고하는 것이다. 즉 기본금은 감액하면서 취업장려금을 증액하여, 안정적으로 취업을 유지 할 경우 종전보다 더 많은 정착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하지만 취업장려금은 '동일업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할 경우'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안정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보다 수급 가능한 금액이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새터민의 열악한 취업여건과 장기근무의 어려움이 맞물리면서 취

업장려금 지급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취업장려금제도는 2005년 신설되어 2006년 첫 지급대상이 생겼는데 2006년에는 1년차 3명이 지급받았다. 2007년에는 총 28명이 받았는데 1년차 27명 2년차 1명이었다. 2008년에는 9월까지 총 119명이 받았는데 1년차 109명, 2년차 10명이다.

2006년 3명이었던 1년차 수급자는 2007년에 1명으로 줄었고, 2007년 27명이던 1년차 수급자는 2008년 10명으로 줄었다. 이로 인해 2008년 취업장려금 예산은 6억1,800만원인데 집행률은 약 87%에 그치는 정도에 머물렀다. 이에 더하여 아직까지 3년차 수급자는 한 명도 없다(통일부, 2008).

또한 2005년 총 입국자 1,383명 중 50% 가량을 취업가능인구로 가정하면, 취업가능인구 692명 중에서 1년차 취업장려금 수급자가 3명(0.4%)이라는 점, 2005~2006년 총 입국자 3,401명 중 취업가능인구 1,700명 중에서 1년 이상 근속으로 취업장려금을 수급 받은 사람이 28명(1.6%)에 불과하다는 점은 저조한 지급실적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은 저조한 지급실적은 새터민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조사(2007.11)에 의하면, 취업장려금 수혜경험자는 응답자 221명 중 5명으로서 비율은 2.3%에 불과하다. 종합하면 새터민들은 취업능력이 충분하지 못해 취업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고용여건도 열악하여 일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가 많다. 이는 결국 장기근무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1년 이상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할 때 받을 수 있는 취업장려금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나. 신뢰 및 관용성 영역: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보건복지가족부)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은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문화 등의 종합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를 조기 진단·치료함으로써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정 및 차상위가정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0~12세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빈곤아동가정을 방문하는 개별사례관리를 통해 개별아동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조정함으로써 빈곤아동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미국의 헤드스타트(Head Start), 영국의 슈어스타트(Sure Start)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4년부터 민간에서 추진하는 위스타트(We Start)사업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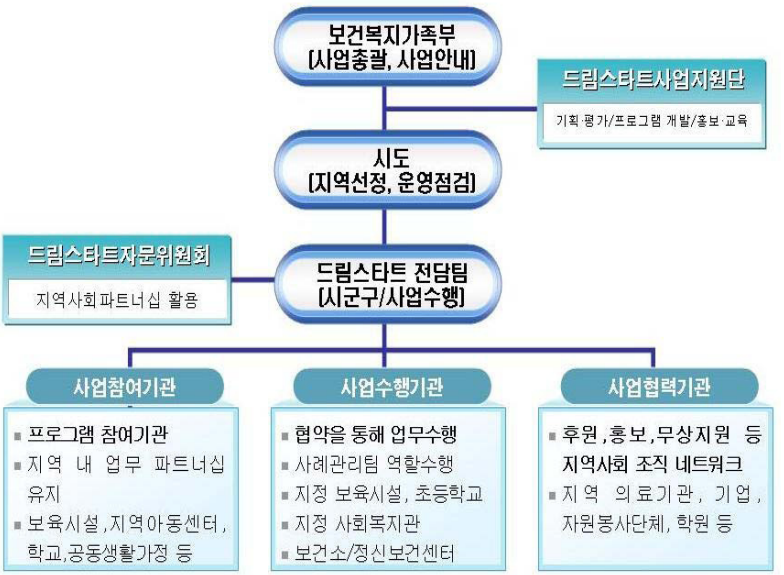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과 부모(주양육자)를 대상으로 개입하는 2세대 프로그램(two-generation program)을 지향하고 있으며, 드림스타트 사업의 대상이 되는 모든 아동에게 인테이크(intake)를 실시하고, 사업대상 아동을 단순프로그램 참여대상 아동과 집중사례관리 대상아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단순프로그램 참여대상 아동은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과 같은 일회성의 성격을 띤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드림스타트 전담팀과 연락하여 정보제공 서비스를 받게 된다. 집중사례관리 대상아동은 문제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저위험 아동과 고위험 아동으로 구분한다. 대상아동의 부모에게는 아동양육에 필요한 부모교육과 직업훈련 관련기관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며, 일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보육서비스 제공 등 대상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사업 총괄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을 통해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을 설치하여 드림스타트 사업의 기획과 평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도는 시범지역 추천, 드림스타트 사업계획의 검토·조정, 예산집행 지도감독과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시·군·구는 해당 과 내에 드림스타트팀을 구성하여 직접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드림스타트 센터에 건강, 복지, 보육·교육 영역을 전담할 공무원 3인 이상을 전담발령하고 공무원을 제외한 사례관리자 3인 이상을 배치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각 센터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자문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림 Ⅳ-4〕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체계도



출처: 강은정 외(2008). p. 26.

이 사업은 빈곤아동 밀집지역에 대해 시·군·구별 고밀집 1개 지역을 거점 사업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2008년 32개 지역에서, 2009년에는 75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추진기구는 빈곤아동 밀집지역에 드림스타트센터를 설치하여 아동필요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드림스타트의 전국적 보급·기반 확립을 위해 당초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을 2009년까지 3년간 유지할 계획이었다.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유지하면서 지원받은 조건은 드림스타트센터의 운영비를 100% 국고에서 지원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9년 핵심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2012년까지 232개소로 연차 확대가 예정됨에 따라,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

로 전환되면서 2009년부터 센터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와 재원분담을 전제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센터운영비는 통합정보화망 구축, 지원센터 운영비 및 민간전문인력 인건비와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지원비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Ⅳ-25〉 2008년도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운영비 실행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내역	사업비
1. 기본사업비		71
가. 통합정보화사업 구축	-H/W 및 상용S/W, S?W(통합사례관리)	10
나. 지원센터 운영비	-센터·프로그램실 설치(보수), 사무기기 구입, 여비, 교육비 등	61
2. 프로그램 운영비		229
가. 건강서비스	(프로그램 예시)	83
	-방문보건서비스 -발달검사,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 -임산부, 영유아 영양지원 -모성건강지원 등	65
	-건강서비스 전문인력인건비	18
나. 보육·교육서비스	(프로그램 예시)	68
	-영유아 인지발달 -기초학력향상	50
	-보육·교육서비스 전문인력인건비	18
다.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예시)	66
	-문화체험, 전문상담 및 치료 -아동학대, 안전, 아동관리, 유해환경 예방 등	48
	-복지서비스 전문인력 인건비	18
라. 지역사회 조직화	(프로그램 예시)	12
	-부모, 실무자, 지역사회 참여자 대상 전문교육비 -희망스타트 위원회 지원, 자원봉사활동비 등	12
계		300

주) 2007년 선정 16개 시범지역.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08b), p. 177.

따라서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요구안에는 75개 지역에 1개소당 3억 원을 지원하여 225억 원을 국고에서 100% 지원하도록 요청하였으

나, 예산협의과정에서 예산 지원구조를 변경함으로써 151억 원으로 삭감되었다[9].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미 지자체가 전담공무원 3인의 인건비 및 센터 공간확보 비용 등으로 연간 1.5억 여원의 실비를 부담하는 사업구조에서, 센터운영비가 100% 국고에서 지원되던 것을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함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추진 유인이 감소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국고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0].

기존의 많은 지자체가 센터 운영비를 지방비로 부담할 경우 드림스타트 사업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75개 지역으로 확대하더라도 지자체의 사업추진 실적은 매우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의 국고지원비율 상향조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여타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서울 30%, 지방 50%)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업추진의 연속성과 지자체의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수요파악을 통해 동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지자체부터 먼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지원지자체와 운영비단가의 조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고,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도에 대학의 자율적 발전계획에 따른 대학 교육역량 제고를 통해 국내·외 산업체 및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부수준의 우수인력 양성인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을 계획하였다. 2009년도 예산안에서는 2008년 종료되는 NURI사업과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을 폐지하고,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통합하여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수도권)과 지방

9) 예산 지원구조를 국고 100%에서 서울 2개 지역에 50%, 지방 73개 지역에 67%로 변경함.

10)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자체 사업실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 사업의 지방비 부담 시 기존 32개 지역 사업지역 중 절반이 넘는 17개 지역이 사업포기 의사를 제출함.

대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개편하였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 단위사업 중 전문가 조사 결과 사회적 자본 영역 중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의 사업이며,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분류된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의 경우 2009년도에는 별도 예산이 투자되지 않고,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 통합되어 운영되었기 때문에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을 사례로 고찰하였다.

2009년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은 〈표 IV-5〉와 같이 (수도권)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과 지방대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지역별로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총 90개교를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수도권)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는 총 7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0개교에 평균 2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소재 대학은 지방대학 경쟁력기반확충(균특회계)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총 2,45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60개교에 평균 4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08c).

〔그림 IV-5〕 2009년도 대학교육지원사업 개편 내용

(단위: 억원)

개편전(2008년)			개편후(2009년)	
사업명	예산		사업명	예산
NURI(균특)	2,463		대학교육역량강화 -(수도권)대학교육역량강화	700
수도권대학특성화(균특)	599	⇨	지방대 경쟁력 기반확충 -지방대 교육역량강화	2,452
대학교육역량강화	500		-광역경제권 거점대학 육성(균특)	500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균특)	220	⇨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균특)	220
합계	3,782		합계	3,872

주) 2009년 예산액은 2008년 국회에 제출된 계획안이며, 실제 예산규모는 다를 수 있음.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08c), p. 35.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의 운영을 살펴보면, 소재지별·규모별로 8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재원을 배분한다. 즉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대학(198.2억, 40%), 지방대학(268.3억, 54%), 산업대(30.0억, 6%)로 구분하고, 규모별로는 수도권 대학은 1만명 이상, 5천~1만명, 5천명 미만으로, 지방대학은 1만명 이상, 5천-1만명, 5천명 미만으로, 그리고 산업대는 5천명 이상, 5천명 미만으로 구분한다. 8개 유형별 재원 배분은 〈표 IV-〉와 같다. 8개 유형별로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장학금지급률, 1인당 교육비를 각각 반영한 5개지표의 총점인 교육지표 포뮬러에 따라 지원대학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음으로 대학별 지원액 및 지원대학 수 결정의 결정은 표준지원경비, 재학생수, 성과지수를 반영한 재원배분 포뮬러에 의한다. 유형별 총액 한도 내에서 재원을 배분하는데 예산 소진 시까지 교육지표 포뮬러에 따라 결정된 우선순위가 높은 대학부터 순서대로 지원하되, 지원 총액 한도 내에서 지원여부와 지원액은 결정된다.

〈표 IV-26〉 2008년도 대학역량강화사업 재정지원 내역 예시

(단위: 백만원)

구분		재원 배분	신청 대학	지원 대학	평균 지원액	최대값	최소값
수도권 대학	1만명 이상	13,814	22	12	1,151	1,439	451
	5천-1만명	4,504	18	6	751	842	562
	5천명 미만	1,502	14	5	300	498	194
지방 대학	1만명 이상	15,415	28	15	1,028	1,236	569
	5천-1만명	7,908	29	11	719	842	554
	5천명 미만	3,504	28	10	350	517	147
산업대	5천명 이상	2,503	9	4	626	852	390
	5천명 미만	500	3	1	500	500	500
합계		49,650	151	64	776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08c), p. 37.

최근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보면, 2008년도 예산사업을 성과 중심 포뮬러방식에 의한 교육역량강화 사업으로 개편하였다. 이러한 개편은 소수의 명문대가 모든 학문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독과

점적 구조에서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고등교육시장 구조를 바꾸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학 간 경쟁과 평가를 바탕으로 교육여건 및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대해 중점적으로 재정 지원하여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런데 경제 이론에 의하면, 시장구조(독과점 구조 등)와 시장참여자(대학기관, 교직원 등)의 행태가 시장성과에 영향을 주고, 한편 시장성과는 시장구조와 시장참여자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등 다양한 경로에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재정지원 개편은 후자의 경로에 의존하여 대학 경쟁력을 향상하려고 개편한 것이다. 그런데 시장구조의 변화가 시장성과에 영향을 주며 우리나라 고등교육시장과 같이 독과점 구조가 강한 경우는 시장구조개편이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이는 국내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성화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까지 진행하여 왔던 대학의 특성화 분야 육성하려는 정책에서 성과 중심의 재정지원방향으로 전문대를 포함하여 5,460억 원의 예산을 계획한 것은 후자의 방향으로 과도하게 예산을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 전통적인 표준교육비에 기초한 포뮬러 대신에 산출 또는 성과와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한 성과 중심 포뮬러를 도입하였다. 그 배경은 대학 간 경쟁과 평가를 바탕으로 교육여건 및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대해 중점적으로 재정 지원하여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중심 포뮬러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지원대학을 결정하고 재원을 배분하는 기준이 표준교육 여건을 제공하는데 따른 최소 필수 교육비에 기초하지 않고, 1인당 교육비를 반영하여 결정하므로 대학이 비용을 부풀리거나 과대 보고하게 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포뮬러펀딩에서 기준이 되는 1인당 교육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 여건과 비용에 대한 철저한 사전연구가 있어야 한다. 둘째,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교육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 하더라도 취업률 등 성과지표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성과중심 포뮬러펀딩에 의한 재정 지원은 이러한 요소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성과중심 포뮬러펀딩 방식은 사회적으로 서열화 되어 있는 대학구조에 의해 상위 대학에게 부당한 혜택을 부여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명문대학들은 그 동안 축적한 평판과 사회로부터의 인적·물적 지원으로 우수 학생과 재원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명문대학들의 경쟁우위는 큰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좋은 교육성과를 얻을 수 있게 한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학교들은 우수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더라도 우수 학생 및 재원 확보의 제한으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교육성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경쟁 환경에 처해있다. 그런데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성과중심의 포뮬러는 지원대학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교육지표 포뮬러를 사용하여, 5개 지표 총점에 따라 지원대학의 우선순위는 물론 재원배분을 결정한다. 이때 지표로는 취업률 지수와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1인당 교육비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명문대학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재원을 배분받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제3절 종합 논의

1.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예산 규모에 대한 논의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실제로 국가수준에서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정책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 6개 부처의 전체 사업 중 의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예산 분석은 곧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예산 규모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부처의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사업 역시 주요 선진국에 비

해서는 다소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IV-27〉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여섯 개 부처의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사업은 총 52개로 사회적 자본 형성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책사업이 20개,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이 14개, 그리고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업이 15개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직접성 사업규모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우선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실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직접적 관련 사업은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 1개에 그치고 있으며,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업과 인프라 구축 관련 사업이 각각 3개로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는 그리 많지 않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집행하는 전체 예산 중 학교교육과 관련한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이 연구에서 분석한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사업 외에도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학교교육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사업 중 학교교육 운영에 투자된 사업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회적 자본 형성에 대한 여러 사업 중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업이 한 개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시민교육, 다문화 교육, 성인 평생교육 등 가정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망라한 교육 사업을 관장하는 부처로서 매우 빈약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부 역시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사업 중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업은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의 한 개 사업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각각 간접적 사업(2개) 및 인프라 구축 관련 사업(1개)에 해당되었다. 통일부의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업은 새터민에 대한 정착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으로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및 취업을 위한 교육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에 관련한 것이며, 기타 내국민을 위한 사회적 자본 관련 교육투자는 상당수 간접적으로 이뤄지거나 기반투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투자규모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본에 관한 직접적 관련 정책 사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에 관한 사업 1개 및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 관련 사업이 2개, 그리고 인프라 구축 관련 사업이 2개로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직접적 교육투자 혹은 기반 투자 측면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타 부처에 비해 사회적 자본 형성과 관련한 사업을 다수 시행하고 있었으며, 직접성 사업이 3개 인프라 관련 사업이 6개, 그리고 간접성 사업이 5개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의 영역 중 시민의식과 사회참여, 특히 종교, 여가, 문화활동 등 국민의 사회적 참여를 도모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중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의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업이 없는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체로 이들 사업은 간접적 지원 사업이거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이어서 실제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자본 관련 사업을 상대적으로 많이 관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달리 사회적 자본에 대한 직접적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의 사업이 3개, 신뢰 및 관용성 영역의 사업이 5개로 타 부처에 비해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의 사업 중 신뢰 및 관용성 영역의 사업이 많은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 상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통합 관련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노동부의 경우 사회적 자본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이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에서 1개, 신뢰 및 관용성 영역의 사업이 2개로 비교적 사회적 자본에 대한 교육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기업의 노사문화 증진,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이 노동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며, 특히 근로자 교육훈련 및 고용과 관련한 주요 사업을 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Ⅳ-27〉 정부부처별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사업 분포

부처	구분	SCF1	SCF2	SCF3	계
교육과학기술부	시민의식/사회참여	1	1		2
	신뢰/관용성		1		1
	네트워크/파트너십		1	3	4
통일부	시민의식/사회참여	1	2		3
	신뢰/관용성				0
	네트워크/파트너십			1	1
행정안전부	시민의식/사회참여	1			1
	신뢰/관용성				0
	네트워크/파트너십	3		2	5
문화체육관광부	시민의식/사회참여		5	2	7
	신뢰/관용성	2			2
	네트워크/파트너십	1		4	5
보건복지가족부	시민의식/사회참여	3			3
	신뢰/관용성	5	4	1	10
	네트워크/파트너십			1	1
노동부	시민의식/사회참여	1			1
	신뢰/관용성	2			2
	네트워크/파트너십			1	1
계		20	14	15	49

주)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중 사회적 자본 영역이 구분되지 않은 사업(종교문화기반구축) 및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 구분이 되지 않은 사업(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노동부 사업 중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 구분이 되지 않는 사업(고용평등환경개선) 총 3개 사업 제외

2. 사회적 자본 정책예산 집행에 대한 논의

부처별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은 다른 사업의 예산집행과 대동소이하다. 즉, 사회적 자본 형성과 관련한 단위사업 역시 단위사업 내의 세부 사업, 즉 목(目)단위의 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별 단위사업 예산집행이 실제로 사회적 자

본 형성에 어느 정도 직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다소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신뢰 및 관용성,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에 대한 세 사업 예산 집행과정을 고찰한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예산 집행과정은 몇 가지 개선점이 요구된다. 우선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 범위의 문제가 있다. 우선 단위사업이 직접적으로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련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목 단위의 사업에서 보면 여러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즉, 간접적 요소뿐만 아니라 인프라 측면의 요소까지 하나의 단위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사업 내에 여러 독립적인 사업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한 예로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원 사업의 경우 새터민 교육훈련에 대한 예산과 정착금 지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새터민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새터민의 시민의식과 사회참여를 위한 직접적인 교육투자 외적인 예산이 하나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고, 더욱이 실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에 대한 예산은 다른 간접적 혹은 인프라 측면의 예산에 비해 소규모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사회적 자본이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투자보다는 집단적 조직체에 대한 투자로 인한 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이 대개 개인단위에서 투자된다는 점인데, 사회적 자본은 인적 자본과 달리 교육으로 인한 개인 성과가 아닌 사회적 성과이다. 따라서 비록 개인단위에 예산이 투자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개인의 발전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 간의 집단적 상호작용과 네트워크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예로 제시한 새터민 교육훈련 역시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등 개인의 교육과 성과 측면에서 투자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는 기타 여러 관련 분야와의 상호 융합된 형태로 지원될 필요성이 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이 교육, 고용, 복지를 포괄하여 연계하는 개념을 지니는 것과 같이 사회적 자본 역시 교육 자체만으로는 기대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충분히 이루는데 한계를 지닌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문화 등에 대한 종합적 투자 사업이며, 개인이나 국가수준에 대한 투자가 아닌 지역단위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축적되기 위해서는 투자전략의 방향 설정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즉,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나 광역수준의 지역에 대한 투자보다는 소규모 지역에 대한 투자가 더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왜냐하면 교육투자를 통한 사회적 성과로서 사회적 자본은 가정과 지역사회 단체 중심의 결속형 사회적 자본과 함께 지역사회의 외부 요소(예, 교육기관, 사회단체)와의 연결 혹은 연계형 사회적 자본이 모두 형성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이나 지역 내 사회단체 중심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가 바람직할 수 있다. 즉, 연결·연계형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인프라 구축을 통한 투자로도 어느 정도 기대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여러 소규모 조직들이 충분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한 후에는 이들 조직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연계형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역규모가 비교적 협소하고, 단일 민족성이 강하며, 타문화나 지역에 대한 배타성이 극심하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일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여러 교육적 처방을 통해 해소할 소지가 많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 방식에 대한 문제이다. 실제로 모든 부처의 사업들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성과중심의 포뮬러 펀딩을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이 투입된 회계연도 내에 기대한 사업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에 따라 다음연도 사업의 예산규모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성과관리 측면에서 이러한 예산투자 방식은 충분히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나, 이는 일부 단기간에 사업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국한되게 된다. 특히 사회적 자본과 같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기대한 성과의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단기 성과중심의 예산 책정이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 이는 교육에 대한

예산기획 과정의 문제점을 예로 들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과 같이 성과 중심의 예산 책정은 대학의 서열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일부 명문대에 예산이 과다 투입될 소지를 안고 있다. 이는 사회적 자본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띨 가능성이 있다. 즉, 지역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가 이루어질 때 이미 사회적 자본이 일정 수준 이상 형성된 지역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성과가 교육투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 보다는 기존에 축적된 성과일 가능성이 있고, 이는 곧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가 일부 지역에 편향될 가능성을 가진다. 또 한 측면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과연 기대한 성과를 달성했는지에 여부에 의해 투자규모를 결정할 때 바람직한 형태의 사회적 자본이 축적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은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금년도에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가 금년이나 내년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렇다고 투자에 상응하는 사회적 자본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잠재적 성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사회적 자본 투자에 대한 방식이 거시적인 마스터플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는 성과 중심의 투자보다는 기본적인 필요예산을 책정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 투자방식을 병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어떤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회적 자본 수준 형성이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구명한다면 중장기적인 교육투자를 통해 기대한 사회적 자본 투자 대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KIHASA

05

사회적 자본 교육투자 활성화 방안

제5장 사회적 자본 교육투자 효율화 방안

제1절 사회적 자본 교육투자의 기본 방향

사회적 자본은 집단 또는 사회구성원간의 관계성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집단이 중요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 단위가 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집단 또는 사회구성원간의 관계성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집단이 중요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 단위가 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사회적 실효 측면에서의 중요성은, '집단 내 구성원들이 사회와 연결된 규범과 신뢰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다분히 실제적인 목적과 관계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은 ① 정보공유의 역할을 하여 공식·비공식제도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② 개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조정역할을 하며, ③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역할 수행한다(Serageldin & Grootaert, 2000).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인적 자본의 개발 뿐 만 아니라, 기업, 사회조직, 지역, 국가 등의 실질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홍영란 외, 2006). 이에 이번 절에서는 사회적 자본 교육투자의 기본 방향을 가정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1. 가정교육

사회적 자본의 형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 경험하는 집단이 가정이라는 점에서 그렇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와 자녀간의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콜만과 호퍼(Coleman & Hoffer, 1987)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학업 성취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한다. 콜만은 부모의 자녀 학교활동에 대한 관여, 자녀의 친구 부모와의 네트워크, 학교에 관한 부모와 자녀의 토론 등과 같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여가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통제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은 가족구성원간의 관계(Anderberg & Balestrino, 2003)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밖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따라 교육, 직장, 지역, 사회, 종교 조직 등과 같은 외부체제와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자본과 가정교육간의 관련성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고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 학교, 지역사회, 직장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동의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교육수준, 근무조건, 직업 등 부모의 환경적 조건 및 자녀 수, 부모의 존재, 가족구성 등 가족 구조를 위시하여 부모와 자녀와의 의사소통, 지원, 관심, 투자, 학습 보조, TV 시청 통제 등 부모와 아동과의 관계가 자녀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되게 경험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홍영란 외, 2006). 따라서 부모의 학습활동에 대한 관여 및 교육에 대한 보조 활동, 부모의 자녀 친구 부모와의 네트워크, 부모와 자녀와의 활발한 대화, 부모의 교육적 인식, 가정과 지역사회의 관계, 부모의 사회적 상호관계 등을 이끌 수 있는 교육전략이 유효하다(홍영란 외, 2006).

2. 학교교육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적지 않은 연구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는 학교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경우도 있었고, 미래의 사회적 주요 구성원으로 등장할 청소년들의 사회적 자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도 있었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중요한 장소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학교교우와의 친밀한 관계성의 형성, 교사와의 관계 등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사회적 자본 자체가 학생들의 학업성적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학교는 교사들이 일하는 장소로서 교사의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곳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권대봉, 1999). 많은 연구자들이 학교에 대한 연구에서 주요 대상을 청소년으로 삼고 있으나 교사의 측면에서 보면 직장이면서 학습의 장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 형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학교교육 또는 학교는 청소년과 교사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의 경우 학교를 매개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사회적 자본 형성에 대한 학교교육투자의 효과에 대한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평생교육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형성 매체 중에 하나는 평생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에는 취미나 여가와 같은 영역과 함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역 등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고 있으며 대상 역시 전 생애를 포함하는 등 매우 광범위한 교육영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으로서 사회적 자본 개념은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사회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들을 비롯하여 정부 각 부문 정책 담당자와 실천가들의 광범위한 관심 대상이 되고 있으며 학문적 논의 뿐 만 아니라 국가 정책 차원에서 적극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홍영란 외, 2006).

국가정책 수준에서 평생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위한 투자의 경우 우선 사회적 자본의 형성·관리·활용의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사회적 자본 분야의 지식 확충과 개발, 민간 에이전트 육성을 위해 정부의 예산사업 프로그램을 적극 편성하고 실행(정기오, 2006; 홍영란 외, 2006)하여야 한다. 권력기관으로서 정부의 양극화 해소 노력이 부적할 경우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며, 당위성의 실천은 여러 영역 행위자들 간의 신뢰와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김운호, 2006)이다.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정책이나 노력들은 사회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평생교육을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World Bank의 보고서들은 발전 패러디임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Grootaert(2001)는 낮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과 느린 성장 간에는 높은 상관이 있고,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빈곤타파와 친환경적 개발 및 균등한 성장에 이바지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 간 계층 간 차이들 때문에 획일적인 정책적 접근은 금물이다(Chase & Holmemo, 2005; Wetterberg, 2004).

또한 공공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책임감 향상을 통해 공공적 신뢰증진 노력이 필요하다. World Bank(2003)의 연구에서 투명한 공공 시스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 일관성 있는 추진, 특히 의사소통을 통한 정보교환 전략 등을 강조하였다. 이는 특정집단(권력층, 백인 등)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독점현상 및 갈등 해소의 노력과 맥을 같이한다.

평생교육을 기반으로 정보문화 창출을 통해 구성원 간의 신뢰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Bain 외(2002)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인터넷과

출판물 및 미디어를 이용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문화 창출의 적극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을 강화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사회 단체들이 소외계층의 조직화 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사회적 자본 분배의 불평등을 감소시켜야 한다(Bain 외, 2002; Grootaert, 2001). 구체적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연결형과 고리형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도움으로써 외부원조, 경제적 성장, 수입 불평등 감소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 위원회에 소외계층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Ibanez & Lindert, 2002).

또한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을 거시적 정책과 미시적 정책으로 구분한 후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Saguaro 보고서를 통해 관용성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보면, 낮은 사회적 자본의 상황에서 높은 관용성은 개인주의적 사회의 특성이다. 그리고 낮은 사회적 자본에서 낮은 관용성은 무정부주의적 사회의 특성이다. 반면에 사회적 자본이 높고 높은 관용성의 수준을 보이는 사회는 시민공동체의 특성을 보이며, 높은 사회적 자본에서 낮은 관용성을 보이는 사회는 파벌주의적 공동체의 특성을 보인다(Putnam, 2000).

제2절 사회적 자본 교육투자 규모 확대 방안

1. 사회적 자본 영역별 교육투자 사업의 균형성 확보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부처별 사업을 살펴보면,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전혀 사업이 이뤄지지 않거나, 혹은 전체 영역에 고루 분포된 사업이 있더라도 사회적 자본 형성에 간접적이거나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업만 있을 뿐 직접적인 사업은 없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부처별 고유업무의 특성 상 일부 사회적 자본 영역에 대한 사업이 전혀 없거나 소수일 경우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이 거의 없는 경우는 문제소지가 있으며 해당 부처, 나아가 국가차원에서 사회적 자본 형성에 대한 관심부족의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는 사회적 자본의 세 영역, 즉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신뢰 및 관용성,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모든 영역에 대해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은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 한 개만 존재하고 있고, 더욱이 신뢰 및 관용성 영역은 간접적인 사업만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행정안전부와 노동부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부처에서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역시 신뢰 및 관용성 영역에 대한 사업은 없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실제 해당 부처의 성격과 다루고 있는 정책들을 고려할 때, 즉 공직 및 행정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 측면, 소외된 계층에 대한 행정지원 측면 등 신뢰와 관용성 영역에 대한 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포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되는 사업에서는 그에 관련한 사업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국가차원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사회적 자본과 직접적인 사업이더라도 실제 세부 예산투입구조를 볼 경우, 실제 사회적 자본 형성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사회적 자본 형성에 간접적인 사업인 경우에는 더욱 이러한 문제가 커진다. 간접적인 사업은 실제 예산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보다는 해당 사업을 통한 추후 성과로서 사회적 자본 형성이 이뤄지거나 일부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라고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정책 역시 해당 인프라를 통해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히 있겠지만, 해당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사회적 자본 형성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을 할 수 없으며, 그렇다 할지라도 사회적 자본 형성에만 초점을 둔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조사된 6개 부처의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사업이 대체로 직접성 있는 사

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40.8%)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절대적인 수치가 아닐뿐더러 간접적인 사업이 전체의 28.6%, 인프라 구축 관련 사업이 30.6%로 오히려 사회적 자본 형성에 직접적인 사업보다 그렇지 않은 사업의 비중이 많다고 볼 수 있다.

2.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 예산의 현실화

정부부처별 사회적 자본 관련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전체 예산의 0.3-0.4%만이 투자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자본 형성과 관련하여 교육적 측면의 정책이 중요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 예산 규모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대부분의 학교교육 운영재정을 지방에 이전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 형성에 투자하는 실제 예산규모보다 협소한 부분만 파악되었을 소지가 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 투자하는 교육관련 사업 중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이는 대체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적자본 축적에 대한 투자는 활발하지만, 사회적 자본 형성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2009년 예산 증감을 보면 전체 사업 예산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본 형성과 관련한 사업 예산은 거의 20% 가량이 삭감되었다는 점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다. 행정안전부 역시 0.2% 수준의 예산만을 사회적 자본 형성 관련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2008-2009년 예산 증감에서 보면 교육과학기술부보다 더 큰 폭의 예산삭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의 경우는 오히려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사업 예산을 확대한 사례이다. 특히 통일부의 경우 전체 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4.2%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본 형성 관련 사업은 42% 가량 증가하였으며, 보건복지가족부 역시 전체 사업 예산 증가 대비 사회적 자본 형성 관련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증

가하였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경우 2009년 사업 예산 중 사회적 자본 형성과 관련한 사업 예산은 각각 18%, 15%로 타 부처에 비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두 부처에 다루는 사회적 자본 관련 사업 역시 각각 16개, 14개로 다른 부처에 비해 상당히 많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 직접적인 사업이 총 8개로 다른 부처가 1-4개정도의 직접성 사업을 실시하는데 비해 상당히 많은 사업을 관장하고 있었다. 이는 부처별 관장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사업이 다수 포함될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사업들이 광의적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투자 규모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더욱이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가 편향성을 띤다는 것을 나타낸다.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 그 자체에 대한 투자도 있겠으나, 교육을 통한 투자 역시 중요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회적 자본 관련 사업들은 교육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는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 외적인 영역에 대한 투자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실제 앞서 부처별 사회적 자본 형성 관련 사업들은 반드시 교육측면만을 선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업들이 교육 영역보다는 그 외의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들이며, 사업의 직·간접성 역시 교육에 대한 직·간접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본 형성과 관련한 사업투자 규모는 매우 적은 것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정부에서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는 매우 협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사업, 그리고 각 사업에 대한 예산 규모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지만, 이와 더불어 정책 혹은 사업 대상에 대한 교육적 측면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인적자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자본은 교육을 통한 성과로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교육을 제외한 상태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기대한 성과창출

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기대한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표면상으로는 교육과 관련이 없다고 할지라도 일부 사업(예, 생산적 정보문화조성)의 경우 세부 예산지출 내용에서 사업 수혜대상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외 기자재 및 시설 투자비에 비해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하지만, 모든 사회적 자본 형성 관련 정책사업은 교육과 일정 수준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자본의 영역 및 구성요소들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기에는 제한이 있으며, 또한 물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향상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자본은 건전한 시민의식과 참여를 통해 타인 혹은 타문화에 대한 신뢰와 융합, 그리고 협력을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교육과 학습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를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사업의 일정 부분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보해야 한다.

제3절 사회적 자본 교육투자 집행 효율화 방안

1. 정부 정책의 거시적 목표로서 사회적 자본 위상 정립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서는 '사람·지식 주도형 성장과 신뢰사회 구축'을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도 휴먼뉴딜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발전의 핵심목표로서 인적자본과 함께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부의 사회적 자본에 형성과 축적에 대한 정책적 투자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 원인에는 정부정책의 행정적 구조 및 절차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가적 비전과 목적의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기인한 부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은 더 이상 하나의 모토로

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과 과제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사업은 인적자본 투자에 의한 단기적 경제적 성과를 주로 정책사업 투자규모 결정 준거로 사용하고 있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단기간에 투자 대비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본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인적자본만큼이나 투자에 의한 효과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더욱이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은 상호 독립적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상호 융합을 통해 더 큰 성과를 나타낸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더 이상 개인의 인적 자본만으로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기대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없으며,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의 공유와 창출이 이루어질 때 국가발전에 필요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 역시 인적 자본과 같이 생애 단계별로 적절한 교육을 통해 형성되고 축적되며, 형식적 교육뿐만 아니라 비형식 혹은 무형식 학습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과 학습은 모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거시적으로 사회적 자본 축적을 지향하고 있다면,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인재강국이라는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인적 자본의 연계와 융합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전략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적 자본 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기대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자본 형성이 이를 지원하는 기반요소로서 작용하도록 정책적인 관심과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이 국가성장의 핵심전략으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정목표로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범국가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의 기본 목표로서 작동하도록 그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다.

2. 사회적 자본 교육투자를 위한 펀딩방식 마련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모든 부처는 프로그램 단위의 예산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부처 역시 정책 예산 투입시 성과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성과에 기반하여 다음 년도 사업 예산을 기획하게 된다. 즉, 사회적 자본 형성과 관련한 정책사업 예산규모를 성과중심의 포뮬러 펀딩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예산 집행과정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성과중심의 예산투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 예를 들면, 부처별로 사회적 자본 형성과 관련한 사업의 분포가 편향되어 있듯이 사회적 자본과 상대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가진 사업을 관장하는 부처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사업 예산을 거의 독과점 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이 경우 해당 부처의 정책사업 방향성에 의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대한 투자규모가 좌우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사회적 자본 형성에 매우 중요한 직접성 사업이 국정목표에 의해 타 사업으로 예산이 이전되거나, 해당 사업이 폐지될 경우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 형평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한 사업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충분한 성과를 나타내기 어렵다는 문제이다. 사회적 자본은 예산이 투자된 세부 사업항목에서는 기대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사회적 자본의 형성 여부는 관측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가시적이거나 계량적으로 나타내는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러한 제한점을 간과한 채 정책사업의 행정적 목표에 의해 사업 예산이 결정되게 된다면, 앞서 언급한 문제와 같이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예산, 특히 교육투자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예산규모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 역시 그 형성과 유

지를 위한 기본적인 예산규모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단기간에 기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사업에서는 예산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그나마 축적된 사회적 자본마저 훼손될 소지가 많다. 주요 선진국의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에서도 시사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정책사업은 중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연차적 사업을 통해 기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나타내며, 예산규모 역시 그에 필요한 수준에서 분할 투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의 효과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사회적 자본을 직접적으로 단기간에 측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면, 사회적 자본 형성과 관련한 전체 사업의 투자내역을 종합하여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부분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 자본 형성과 관련한 정부 예산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사회적 자본과 관련하여 투자된 예산의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려는 시도 역시 지금까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3. 사회적 자본 교육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책무성 강화

정부예산 투자는 과거와 달리 수혜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통제는 최소화하고, 협력적 정책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 역시 이러한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정책 예산은 소수의 수혜자에 의해 효과를 창출할 수 없다. 사회적 자본은 국가적 차원의 지향점이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실제 사업운영기관의 협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정책 예산은 대부분 국가의 계획에 의해 일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 사업의 경우 대응자금 등을 통해 실제 수혜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편을 마련해 놓고 있

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필요예산이 국고에 의해 지출되고 있다. 이는 행정상의 하부구조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자본 형성을 상위목표로서 설정한 정책사업이 사실상 없고, 만약 세부목표로 설정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다분히 선언적인 목표설정으로 인해 투자 대비 성과를 가시화 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목표로서 사회적 자본 형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하겠지만, 정책사업의 특성 상 사회적 자본을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본 형성에 대한 정부예산 투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부사업에서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에서도 지역사회의 경제적 복원과 활력을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의 필요성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핵심전략이며 수단이겠지만,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축적되는 단위는 국가 단위라기 보다는 지역사회 단위가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역시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는 사회적 자본 형성 관련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자구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 형성과 관련한 정부예산 투자 시 지역 주민 및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를 성과평가에 나타낼 수 있도록 일정 수준 통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경종, 김종우, 오유성, 정경진, 이영, 김관보(2005). 인적자원개발 사업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강경종, 백성준, 김종우(2006). 인적자원 중심의 예산체계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강은정 외(2008). 드림스타트의 건강영향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구혜정 (2002).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대안적 평생교육 탐색.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국회예산정책처(200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평가.

기획재정부(2009a). 2009 나라살림 예산.

기획재정부(2009b). 2009년도 예산개요 참고자료.

김관보 외(2004). 인적자원개발 예산관리 개선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김운회(2006). 사회적 자본의 교육적 형성 전략 논의를 위한 세미나(I) 자료집.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김태종, 박정후(2006).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기본조사 및 정책연구. KDI 국제정책대학원.

윤성식(2003). 예산론. 나남출판.

이영, 김진영(2004). 인적자원 개발관련 재정지원사업 구조 및 추이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재열(1998).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계간 사상, 여름호.

임경수(2007). 사회적 자본 측정 사례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사회참여 및 시민의식 영역.「사회적 자본 측정 사례 분석 및 정책적 함의」정책포럼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임성일(2004).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도입과 성과관리. 지방재정, 통권 130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pp.23-26.
정기오(2006).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의 교육적 형성 전략 논의를 위한 한국교육개발원 세미나 자료집.
조영하(2007). 사회적 네트워크의 측정과 정책적 연계: 캐나다 사례 연구. 「사회적 자본 측정 사례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정책포럼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조세연구원(2001). 인적자원 개발관련 재정지원사업 분석 및 효율화 방안.
한국교육행정학회(1995). 교육재정론.
홍영란 (2002). 사회적 자본과 사회통합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방향. 한국인력개발학회. 인력개발연구, 4 (1).
홍영란 (2003).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의 전략과 과제. 수탁연구 CR 2003-7. 한국교육개발원.
홍영란 외(2006), 「국가 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전략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홍영란 외(2006).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전략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홍영란, 현영섭, 박인섭, 정혜령(2007). 사회적 자본의 정책의제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Adler, P. & Kwon, S. W.(2000). Social capital :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in E. L. Lesser(ed.)(2000). Knowledge & Social Capital : Foundations & Applications. Boston : Butterworth Heinemann.
Anderberg, D. & Balestrino, A.(2003). Self-enforcing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the provision of education. Economica. 70.
Bain, K., Cesilini, S., Lederman, D., & Schady, N. (2002). Argentina

together we stand, divided we fall: Levels and determinants of social capital in Argentina. Report No. 24281-AR. Poverty Reduction and Economic Management Unit,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egion.

Bain, K., Cesilini, S., Lederman, D., & Schady, N. (2002). Argentina together we stand, divided we fall: Levels and determinants of social capital in Argentina. Report No. 24281-AR. Poverty Reduction and Economic Management Unit,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egion.

Bourdieu, P.(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Burt, R. S.(1997). The contingent value of social capital.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2.

Coleman, J. & Hoffer, T.(1987). Public and Private High Schools : TheIimpact of Communities. Basic Books.

Coleman, J.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upplement.

Coleman, J.(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ss :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Colleta N. J. & Cullen, M. L.(2000). Violent Conflict and the Transformation of Social Capital : Lessons from Cambodia, Rewanda, Guatemala, and Somalia. Washington, DC : The World Bank.

Cote, S. and Healy, T. (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aris.

Fukuyama, F.(1995). Trust :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 The Free Press.

Fukuyama, F.(1997). Social capital and the modern capitalist economy : Creating a high trust workplace. Stern Business.

Fukuyama, Francis(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Furtado, X.(1999). A Definition and Some Concerns. Discussion response.

Grootaert, C.(1998) Social Capital Household Welfare and Poverty in Indonesia. Working Paper. Washington, DC : The World Bank.

Grootaert, C. (2001). Does social capital help the poor? A synthesis of findings from the local level institutions studies in Bolivia, Burkina Faso and Indonesia.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Grootaert, C. (2001). Does social capital help the poor? A synthesis of findings from the local level institutions studies in Bolivia, Burkina Faso and Indonesia.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Grootaert, C., Narayan, D., Jones, V. N., & Wookcock, M. (2004). Measur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ed questionnaire. World Bank Working Paper No. 18.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Grootaert, Chris(1998). What is Social Capital?, The World Bank Resource Paper.

Ibanez, A. M., Lindert, K., & Woolcock, M. (2002). Social capital in Guatemala: A mixed methods analysis. Technical Paper No. 12. Guatemala Poverty Assessment Program.

Knack, S. (2000). Social capital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Luhmann, N.(1979). Trust and Power. New York : John Wiley & Sons.

Narayan, D.(1997). A Dimensional Approach to Measuring Social

Capital. Washington, DC : The World Bank.

OECD(2000), Literacy in the Information Age : Fin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Paris: OECD.

OECD(2000). Human and Social Capital and Sustained Growth and Development, Reconciling New Economies and Societies :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Paris : OECD.

OECD(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 The Role of Human & Social Capital. Paris : OECD.

Olson, M.(1982).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ONS (2005). Labour market participation :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Labour Market Trends. 3, 2005.

ONS (2005). Labour market participation :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Labour Market Trends. 3, 2005.

Portes, A.(1998). Social Capital :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Putnam, D.R.(2000).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Y: Simon & Schuster

Putnam, D.R.(2002), Better together, The report of the Saguaro Seminar: Civic Engagement in America, Cambridge, MA: Saguaro Seminar.

Putnam, R. D.(1993). Making Democracy Work :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Saguaro Seminar(2007). About Social Capital. 〈http://www.ksg.harvard .edu/saguaro/primer.htm〉.

SCCBS(2007). Dimensions of Social Capital. 〈http://www.ksg.harvard.edu /saguaro/communitysurvey/results5.html〉.

Schuller, T. & Field, J.(1998). Social capital, human capital and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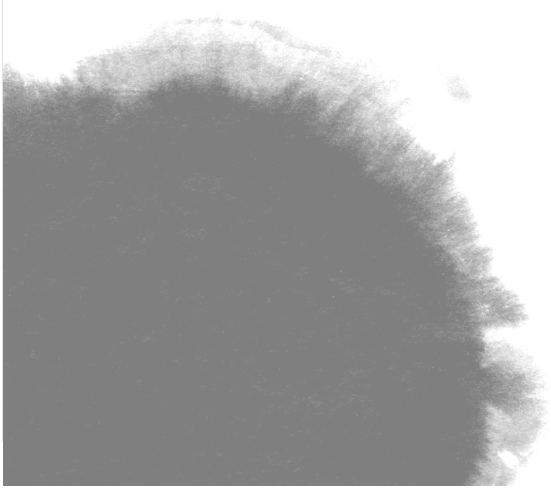
learning society.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7(4).

Serageldin, I. and C. Grootaert(2000). Defin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ing View, in P. Dasgupta and I. Serageldin(eds.),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The World Bank (2002). Bosna and Herzegovina: Local level institutions and social capital study.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Uphoff, N.(2000). Understanding social capital : Learning from the analysis and experience of participation. in P. Dasgupta & I. Serageldin(eds.) Social Capital : A Multifaceted Perspective. Sociological perspective on development series. Washington, DC : The World Bank.

부 록



부록

〔부록 1〕

국가별 사회적 자본 수준 비교 종합

〈부표 1〉 ESS: 봉사활동 연간 참여 횟수 빈도표

	연간봉사활동참여							합계
	일주일에 한번	한달에 한번	세달에 한번	반년에 한번	매우 드문정도	전혀 안함	잘 모르겠다	
오스트리아	263	296	149	136	457	1058	41	2,400
	11.0%	12.3%	6.2%	5.7%	19.0%	44.1%	1.7%	100.0%
벨기에	139	117	108	92	178	1163	1	1,798
	7.7%	6.5%	6.0%	5.1%	9.9%	64.7%	.1%	100.0%
불가리아	7	7	11	7	64	1279	23	1,398
	.5%	.5%	.8%	.5%	4.6%	91.5%	1.6%	100.0%
스위스	309	222	118	110	178	863	3	1,803
	17.1%	12.3%	6.5%	6.1%	9.9%	47.9%	.2%	100.0%
사이프러스	15	34	48	78	260	540	11	986
	1.5%	3.4%	4.9%	7.9%	26.4%	54.8%	1.1%	100.0%
독일	367	417	176	88	283	1572	7	2,910
	12.6%	14.3%	6.0%	3.0%	9.7%	54.0%	.2%	100.0%
덴마크	151	146	89	83	170	845	2	1,486
	10.2%	9.8%	6.0%	5.6%	11.4%	56.9%	.1%	100.0%
에스토니아	25	30	32	56	126	1233	15	1,517
	1.6%	2.0%	2.1%	3.7%	8.3%	81.3%	1.0%	100.0%
스페인	46	162	90	110	328	1128	3	1,867
	2.5%	8.7%	4.8%	5.9%	17.6%	60.4%	.2%	100.0%
핀란드	87	159	125	198	365	960	2	1,896
	4.6%	8.4%	6.6%	10.4%	19.3%	50.6%	.1%	100.0%
프랑스	233	161	82	83	119	1308	0	1,986
	11.7%	8.1%	4.1%	4.2%	6.0%	65.9%	.0%	100.0%
	219	194	126	156	265	1434	0	2,394
	9.1%	8.1%	5.3%	6.5%	11.1%	59.9%	.0%	100.0%
헝가리	23	35	23	42	135	1257	0	1,515
	1.5%	2.3%	1.5%	2.8%	8.9%	83.0%	.0%	100.0%
아일랜드	156	161	99	176	245	958	4	1,799
	8.7%	8.9%	5.5%	9.8%	13.6%	53.3%	.2%	100.0%
한국	511	1000	585	1101	2679	4156	491	10,523

	4.9%	9.5%	5.6%	10.5%	25.5%	39.5%	4.7%	100.0%
네덜란드	331	202	100	90	179	982	2	1,886
	17.6%	10.7%	5.3%	4.8%	9.5%	52.1%	.1%	100.0%
노르웨이	159	245	183	169	413	580	1	1,750
	9.1%	14.0%	10.5%	9.7%	23.6%	33.1%	.1%	100.0%
폴란드	13	26	27	54	112	1477	6	1,715
	.8%	1.5%	1.6%	3.1%	6.5%	86.1%	.3%	100.0%
포르투갈	54	63	82	188	362	1448	14	2,211
	2.4%	2.8%	3.7%	8.5%	16.4%	65.5%	.6%	100.0%
러시아	29	29	59	94	179	1930	117	2,437
	1.2%	1.2%	2.4%	3.9%	7.3%	79.2%	4.8%	100.0%
스웨덴	111	114	83	65	233	1314	5	1,925
	5.8%	5.9%	4.3%	3.4%	12.1%	68.3%	.3%	100.0%
슬로베니아	75	105	74	118	150	940	12	1,474
	5.1%	7.1%	5.0%	8.0%	10.2%	63.8%	.8%	100.0%
슬로바키아	27	46	35	59	250	1327	17	1,761
	1.5%	2.6%	2.0%	3.4%	14.2%	75.4%	1.0%	100.0%
우크라이나	31	57	59	102	140	1536	77	2,002
	1.5%	2.8%	2.9%	5.1%	7.0%	76.7%	3.8%	100.0%
합계	3,381	4,028	2,563	3,455	7,870	31,288	854	53,439
	6.3%	7.5%	4.8%	6.5%	14.7%	58.5%	1.6%	100.0%

〈부표 2〉 ESS:정치적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 빈도표

	정치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						합계
	매우 어렵다	비교적 어렵다	어렵지도 쉽지도 않다	비교적 쉽다	매우 쉽다	잘 모르겠다	
오스트리아	103	348	829	663	368	84	2395
	4.3%	14.5%	34.6%	27.7%	15.4%	3.5%	100.0%
벨기에	133	652	622	335	51	5	1798
	7.4%	36.3%	34.6%	18.6%	2.8%	.3%	100.0%
불가리아	69	186	499	397	65	178	1394
	4.9%	13.3%	35.8%	28.5%	4.7%	12.8%	100.0%
스위스	99	509	584	518	81	13	1804
	5.5%	28.2%	32.4%	28.7%	4.5%	.7%	100.0%
사이프러스	44	167	338	261	156	27	993
	4.4%	16.8%	34.0%	26.3%	15.7%	2.7%	100.0%
독일	112	579	1104	887	212	19	2913
	3.8%	19.9%	37.9%	30.4%	7.3%	.7%	100.0%
덴마크	65	240	447	583	159	10	1504
	4.3%	16.0%	29.7%	38.8%	10.6%	.7%	100.0%
에스토니아	89	376	627	274	61	90	1517
	5.9%	24.8%	41.3%	18.1%	4.0%	5.9%	100.0%
스페인	240	660	514	372	63	18	1867
	12.9%	35.4%	27.5%	19.9%	3.4%	1.0%	100.0%
핀란드	95	419	760	515	101	5	1895
	5.0%	22.1%	40.1%	27.2%	5.3%	.3%	100.0%

프랑스	209	879	505	344	41	8	1986
	10.5%	44.3%	25.4%	17.3%	2.1%	.4%	100.0%
영국	181	598	710	695	192	18	2394
	7.6%	25.0%	29.7%	29.0%	8.0%	.8%	100.0%
헝가리	95	257	477	473	144	62	1508
	6.3%	17.0%	31.6%	31.4%	9.5%	4.1%	100.0%
아일랜드	116	370	516	492	191	86	1771
	6.5%	20.9%	29.1%	27.8%	10.8%	4.9%	100.0%
네덜란드	124	565	644	437	80	31	1881
	6.6%	30.0%	34.2%	23.2%	4.3%	1.6%	100.0%
노르웨이	73	479	601	516	80	1	1750
	4.2%	27.4%	34.3%	29.5%	4.6%	.1%	100.0%
폴란드	130	465	594	374	97	55	1715
	7.6%	27.1%	34.6%	21.8%	5.7%	3.2%	100.0%
포르투갈	450	671	537	433	47	60	2198
	20.5%	30.5%	24.4%	19.7%	2.1%	2.7%	100.0%
러시아	266	653	991	286	58	179	2433
	10.9%	26.8%	40.7%	11.8%	2.4%	7.4%	100.0%
스웨덴	103	684	579	475	76	10	1927
	5.3%	35.5%	30.0%	24.6%	3.9%	.5%	100.0%
슬로베니아	136	301	566	310	92	70	1475
	9.2%	20.4%	38.4%	21.0%	6.2%	4.7%	100.0%
슬로바키아	118	418	758	327	84	59	1764
	6.7%	23.7%	43.0%	18.5%	4.8%	3.3%	100.0%
우크라이나	233	626	652	339	52	100	2002
	11.6%	31.3%	32.6%	16.9%	2.6%	5.0%	100.0%
한국	1476	4123	2682	608	108	1441	10438
	14.1%	39.5%	25.7%	5.8%	1.0%	13.8%	100.0%
합계	4759	15225	17136	10914	2659	2629	53322
	8.9%	28.6%	32.1%	20.5%	5.0%	4.9%	100.0%

〈부표 3〉 ESS:정치 · 시사 문제 관련 텔레비전 시청시간 빈도표

국가	정치 · 시사 관심									합계
	전혀 안본다	30분 미만	30-1시간	1시간-1시간반	1시간반-2시간	2시간-2시간반	2시간반-3시간	3시간 이상	잘 모르겠다.	
오스트리아	165	939	842	200	76	16	5	12	20	2275
	7.3%	41.3%	37.0%	8.8%	3.3%	.7%	.2%	.5%	.9%	100.0%
벨기에	113	464	809	258	68	24	9	6	0	1751
	6.5%	26.5%	46.2%	14.7%	3.9%	1.4%	.5%	.3%	.0%	100.0%
불가리아	128	285	515	206	87	42	32	40	13	1348
	9.5%	21.1%	38.2%	15.3%	6.5%	3.1%	2.4%	3.0%	1.0%	100.0%
스위스	110	831	548	120	28	18	2	2	1	1660
	6.6%	50.1%	33.0%	7.2%	1.7%	1.1%	.1%	.1%	.1%	100.0%
사이프러스	97	310	410	128	21	5	2	7	1	981
	9.9%	31.6%	41.8%	13.0%	2.1%	.5%	.2%	.7%	.1%	100.0%

독일	166	1161	1021	253	131	48	24	10	1	2815
	5.9%	41.2%	36.3%	9.0%	4.7%	1.7%	.9%	.4%	.0%	100.0%
덴마크	31	322	635	307	110	51	15	14	2	1487
	2.1%	21.7%	42.7%	20.6%	7.4%	3.4%	1.0%	.9%	.1%	100.0%
에스토니아	57	413	543	226	99	59	19	31	18	1465
	3.9%	28.2%	37.1%	15.4%	6.8%	4.0%	1.3%	2.1%	1.2%	100.0%
스페인	179	589	706	220	93	18	15	16	1	1837
	9.7%	32.1%	38.4%	12.0%	5.1%	1.0%	.8%	.9%	.1%	100.0%
핀란드	47	524	772	253	116	67	22	21	2	1824
	2.6%	28.7%	42.3%	13.9%	6.4%	3.7%	1.2%	1.2%	.1%	100.0%
프랑스	162	482	817	276	111	29	16	21	1	1915
	8.5%	25.2%	42.7%	14.4%	5.8%	1.5%	.8%	1.1%	.1%	100.0%
영국	232	615	903	300	114	63	46	55	6	2334
	9.9%	26.3%	38.7%	12.9%	4.9%	2.7%	2.0%	2.4%	.3%	100.0%
헝가리	88	671	474	97	80	21	27	26	0	1484
	5.9%	45.2%	31.9%	6.5%	5.4%	1.4%	1.8%	1.8%	.0%	100.0%
아일랜드	197	468	605	237	109	52	25	33	5	1731
	11.4%	27.0%	35.0%	13.7%	6.3%	3.0%	1.4%	1.9%	.3%	100.0%
네덜란드	90	557	700	284	118	50	16	25	2	1842
	4.9%	30.2%	38.0%	15.4%	6.4%	2.7%	.9%	1.4%	.1%	100.0%
노르웨이	42	432	721	315	122	53	16	15	0	1716
	2.4%	25.2%	42.0%	18.4%	7.1%	3.1%	.9%	.9%	.0%	100.0%
폴란드	88	577	650	150	95	30	25	30	4	1649
	5.3%	35.0%	39.4%	9.1%	5.8%	1.8%	1.5%	1.8%	.2%	100.0%
포르투갈	133	596	737	348	137	69	41	114	8	2183
	6.1%	27.3%	33.8%	15.9%	6.3%	3.2%	1.9%	5.2%	.4%	100.0%
러시아	262	835	768	217	108	32	34	27	43	2326
	11.3%	35.9%	33.0%	9.3%	4.6%	1.4%	1.5%	1.2%	1.8%	100.0%
스웨덴	106	571	776	246	112	31	21	15	2	1880
	5.6%	30.4%	41.3%	13.1%	6.0%	1.6%	1.1%	.8%	.1%	100.0%
슬로베니아	164	498	489	147	50	22	8	16	3	1397
	11.7%	35.6%	35.0%	10.5%	3.6%	1.6%	.6%	1.1%	.2%	100.0%
슬로바키아	118	577	719	164	65	22	9	26	4	1704
	6.9%	33.9%	42.2%	9.6%	3.8%	1.3%	.5%	1.5%	.2%	100.0%
우크라이나	174	709	566	175	100	43	28	53	32	1880
	9.3%	37.7%	30.1%	9.3%	5.3%	2.3%	1.5%	2.8%	1.7%	100.0%
한국	202	1482	2635	1455	1162	744	702	1989	146	10517
	1.9%	14.1%	25.1%	13.8%	11.0%	7.1%	6.7%	18.9%	1.4%	100.0%
합계	3151	14908	18361	6582	3312	1609	1159	2604	315	52001
	6.1%	28.7%	35.3%	12.7%	6.4%	3.1%	2.2%	5.0%	.6%	100.0%

〈부표 4〉 ESS:투표참여율 빈도표

	지난선거투표참여				합계
	했다	안했다	투표할만한 적격자가 없었다	잘 모르겠다	
오스트리아	1856	309	210	14	2389
	77.7%	12.9%	8.8%	.6%	100.0%
벨기에	1448	110	236	4	1798
	80.5%	6.1%	13.1%	.2%	100.0%
불가리아	927	428	36	8	1399
	66.3%	30.6%	2.6%	.6%	100.0%
스위스	950	499	272	83	1804
	52.7%	27.7%	15.1%	4.6%	100.0%
사이프러스	869	72	47	3	991
	87.7%	7.3%	4.7%	.3%	100.0%
독일	2122	564	206	1	2893
	73.3%	19.5%	7.1%	.0%	100.0%
덴마크	1331	106	0	2	1439
	92.5%	7.4%	.0%	.1%	100.0%
에스토니아	778	579	150	10	1517
	51.3%	38.2%	9.9%	.7%	100.0%
스페인	1331	353	169	10	1863
	71.4%	18.9%	9.1%	.5%	100.0%
핀란드	1427	279	182	8	1896
	75.3%	14.7%	9.6%	.4%	100.0%
프랑스	1333	376	252	23	1984
	67.2%	19.0%	12.7%	1.2%	100.0%
영국	1638	630	119	7	2394
	68.4%	26.3%	5.0%	.3%	100.0%
헝가리	1126	341	40	0	1507
	74.7%	22.6%	2.7%	.0%	100.0%
아일랜드	1283	398	103	8	1792
	71.6%	22.2%	5.7%	.4%	100.0%
네덜란드	1484	294	95	15	1888
	78.6%	15.6%	5.0%	.8%	100.0%
노르웨이	1364	230	154	2	1750
	77.9%	13.1%	8.8%	.1%	100.0%
폴란드	1061	549	103	7	1720
	61.7%	31.9%	6.0%	.4%	100.0%
포르투갈	1613	535	55	12	2215
	72.8%	24.2%	2.5%	.5%	100.0%
러시아	1493	782	91	71	2437
	61.3%	32.1%	3.7%	2.9%	100.0%
스웨덴	1601	198	128	0	1927
	83.1%	10.3%	6.6%	.0%	100.0%
슬로베니아	1024	321	87	44	1476
	69.4%	21.7%	5.9%	3.0%	100.0%
슬로바키아	1147	544	64	6	1761
	65.1%	30.9%	3.6%	.3%	100.0%
우크라이나	1693	249	53	7	2002
	84.6%	12.4%	2.6%	.3%	100.0%
한국	8982	1201	202	132	10517
	85.4%	11.4%	1.9%	1.3%	100.0%
합계	39881	9947	3054	477	53359
	74.7%	18.6%	5.7%	.9%	100.0%

〈부표 5〉 사회 야간 안전 인식 빈도표

	지역사회 야간 안전 인식					합계
	매우 안전하다	비교적 안전하다	비교적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	잘 모르겠다	
오스트리아	754	1117	423	86	15	2395
	31.5%	46.6%	17.7%	3.6%	.6%	100.0%
벨기에	354	1079	305	55	5	1798
	19.7%	60.0%	17.0%	3.1%	.3%	100.0%
불가리아	132	504	488	221	53	1398
	9.4%	36.1%	34.9%	15.8%	3.8%	100.0%
스위스	653	822	285	40	4	1804
	36.2%	45.6%	15.8%	2.2%	.2%	100.0%
사이프러스	384	471	101	24	8	988
	38.9%	47.7%	10.2%	2.4%	.8%	100.0%
독일	669	1548	567	114	14	2912
	23.0%	53.2%	19.5%	3.9%	.5%	100.0%
덴마크	713	588	133	57	4	1495
	47.7%	39.3%	8.9%	3.8%	.3%	100.0%
에스토니아	191	690	514	94	28	1517
	12.6%	45.5%	33.9%	6.2%	1.8%	100.0%
스페인	472	965	365	58	11	1871
	25.2%	51.6%	19.5%	3.1%	.6%	100.0%
핀란드	712	970	174	31	9	1896
	37.6%	51.2%	9.2%	1.6%	.5%	100.0%
프랑스	689	766	336	182	13	1986
	34.7%	38.6%	16.9%	9.2%	.7%	100.0%
영국	461	1067	566	277	23	2394
	19.3%	44.6%	23.6%	11.6%	1.0%	100.0%
헝가리	264	868	309	52	24	1517
	17.4%	57.2%	20.4%	3.4%	1.6%	100.0%
아일랜드	361	866	395	149	19	1790
	20.2%	48.4%	22.1%	8.3%	1.1%	100.0%
네덜란드	267	1261	299	51	11	1889
	14.1%	66.8%	15.8%	2.7%	.6%	100.0%
노르웨이	884	715	112	38	1	1750
	50.5%	40.9%	6.4%	2.2%	.1%	100.0%
폴란드	324	939	371	61	25	1720
	18.8%	54.6%	21.6%	3.5%	1.5%	100.0%
포르투갈	350	1367	392	87	23	2219
	15.8%	61.6%	17.7%	3.9%	1.0%	100.0%
러시아	317	939	831	291	51	2429
	13.1%	38.7%	34.2%	12.0%	2.1%	100.0%
스웨덴	764	848	231	76	3	1922
	39.8%	44.1%	12.0%	4.0%	.2%	100.0%
슬로베니아	399	905	136	15	20	1475
	27.1%	61.4%	9.2%	1.0%	1.4%	100.0%
슬로바키아	147	985	533	76	19	1760
	8.4%	56.0%	30.3%	4.3%	1.1%	100.0%
우크라이나	173	563	862	274	130	2002
	8.6%	28.1%	43.1%	13.7%	6.5%	100.0%
한국	174	4816	3801	940	777	10508
	1.7%	45.8%	36.2%	8.9%	7.4%	100.0%
합계	10608	25659	12529	3349	1290	53435
	19.9%	48.0%	23.4%	6.3%	2.4%	100.0%

〈부표 6〉 지역사회 활동 참여

	지역사회 활동 참여						합계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매우 적게 참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다소 적게 참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하다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다소 많이 참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매우 많이 참여한다	잘 모르겠다	
오스트리아	163	511	1078	444	117	87	2400
	6.8%	21.3%	44.9%	18.5%	4.9%	3.6%	100.0%
벨기에	276	528	629	284	76	5	1798
	15.4%	29.4%	35.0%	15.8%	4.2%	.3%	100.0%
불가리아	123	248	595	250	108	71	1395
	8.8%	17.8%	42.7%	17.9%	7.7%	5.1%	100.0%
스위스	109	529	805	272	45	44	1804
	6.0%	29.3%	44.6%	15.1%	2.5%	2.4%	100.0%
사이프러스	138	241	463	63	14	76	995
	13.9%	24.2%	46.5%	6.3%	1.4%	7.6%	100.0%
독일	236	824	1324	441	64	22	2911
	8.1%	28.3%	45.5%	15.1%	2.2%	.8%	100.0%
덴마크	81	344	696	274	89	13	1497
	5.4%	23.0%	46.5%	18.3%	5.9%	.9%	100.0%
에스토니아	343	415	547	119	21	72	1517
	22.6%	27.4%	36.1%	7.8%	1.4%	4.7%	100.0%
스페인	191	473	992	176	29	13	1874
	10.2%	25.2%	52.9%	9.4%	1.5%	.7%	100.0%
핀란드	185	506	766	346	84	9	1896
	9.8%	26.7%	40.4%	18.2%	4.4%	.5%	100.0%
프랑스	71	288	1188	351	80	8	1986
	3.6%	14.5%	59.8%	17.7%	4.0%	.4%	100.0%
영국	254	682	922	437	86	13	2394
	10.6%	28.5%	38.5%	18.3%	3.6%	.5%	100.0%
헝가리	269	490	561	135	33	28	1516
	17.7%	32.3%	37.0%	8.9%	2.2%	1.8%	100.0%
아일랜드	177	469	844	245	46	11	1792
	9.9%	26.2%	47.1%	13.7%	2.6%	.6%	100.0%
네덜란드	152	432	826	355	82	41	1888
	8.1%	22.9%	43.8%	18.8%	4.3%	2.2%	100.0%
노르웨이	58	310	1068	278	34	2	1750
	3.3%	17.7%	61.0%	15.9%	1.9%	.1%	100.0%
폴란드	217	451	800	158	31	58	1715
	12.7%	26.3%	46.6%	9.2%	1.8%	3.4%	100.0%
포르투갈	305	468	1164	141	28	112	2218
	13.8%	21.1%	52.5%	6.4%	1.3%	5.0%	100.0%
러시아	409	458	1001	230	72	267	2437
	16.8%	18.8%	41.1%	9.4%	3.0%	11.0%	100.0%
스웨덴	101	483	886	388	62	6	1926
	5.2%	25.1%	46.0%	20.1%	3.2%	.3%	100.0%
슬로베니아	190	395	662	189	28	11	1475
	12.9%	26.8%	44.9%	12.8%	1.9%	.7%	100.0%
슬로바키아	384	429	664	194	50	40	1761
	21.8%	24.4%	37.7%	11.0%	2.8%	2.3%	100.0%
우크라이나	156	341	924	340	130	111	2002
	7.8%	17.0%	46.2%	17.0%	6.5%	5.5%	100.0%
한국	2052	2157	4196	621	115	1304	10446
	19.6%	20.6%	40.2%	5.9%	1.1%	12.5%	100.0%
합계	6640	12472	23601	6731	1524	2424	53393
	12.4%	23.4%	44.2%	12.6%	2.9%	4.5%	100.0%

〈부표 7〉 ESS 지표에 따른 국가별 사회적 자본 수준

국가	봉사활동 연간 참여 횟수		정치적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		정치·시사 문제에 대한 관심 (TV시청)		투표참여율		지역사회 야간 안전 인식		지역사회 활동	
	평균	순위	평균	순위	3시간 이상 시청 비율	순위	선거참여율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네덜란드	10.8	2	2.9	16	14%	11	78.6%	7	2	12	3	5
노르웨이	7.3	6	3.0	10	09%	18	77.9%	8	2	24	3	8
덴마크	6.9	7	3.4	2	09%	16	92.5%	1	2	23	3	4
독일	8.7	3	3.2	5	04%	22	73.3%	12	2	13	3	12
러시아	1.1	22	2.7	21	12%	13	61.3%	22	2	4	3	18
벨기에	5.2	10	2.7	18	03%	23	80.5%	6	2	14	3	15
불가리아	0.4	24	3.2	6	30%	3	66.3%	19	3	2	3	2
사이프러스	1.8	17	3.3	3	07%	20	87.7%	2	2	21	3	20
스웨덴	4.1	12	2.9	17	08%	19	88.1%	5	2	20	3	7
스위스	10.9	1	3.0	11	01%	24	52.7%	23	2	18	3	10
스페인	2.8	15	2.7	20	09%	17	71.4%	15	2	16	3	14
슬로바키아	1.4	19	2.9	13	15%	10	66.1%	20	2	6	2	21
슬로베니아	4.0	14	2.9	12	11%	15	69.4%	16	2	19	3	16
아일랜드	6.1	9	3.2	7	19%	7	71.6%	14	2	8	3	13
에스토니아	1.3	20	2.9	15	21%	6	51.3%	24	2	5	2	24
영국	6.2	8	3.1	9	24%	5	66.4%	17	2	7	3	11
오스트리아	7.9	4	3.4	1	03%	21	77.7%	9	2	17	3	6
우크라이나	1.5	18	2.7	19	28%	4	84.6%	4	3	1	3	3
포르투갈	2.1	16	2.5	23	52%	2	72.8%	13	2	11	3	19
폴란드	0.8	23	2.9	14	18%	9	61.7%	21	2	10	3	17
프랑스	7.4	5	2.6	22	11%	14	67.2%	18	2	15	3	1
핀란드	4.1	13	3.1	8	12%	12	75.3%	10	2	22	3	9
한국	4.6	11	2.3	24	189%	1	85.4%	3	3	3	2	23
헝가리	1.3	21	3.2	4	18%	8	74.7%	11	2	9	2	22

〈부표 8〉 WCY 지표에 따른 국가별 사회적 자본 수준

구분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싱가폴	스웨덴	대만	영국	미국	한국
정의	순위	9	8	2	21	11	16	13	5	35	17	19	32
	지수	8.31	8.33	9.03	6.46	8.18	7.54	7.95	8.48	4.22	7.54	6.79	4.68
사회적 응집력	순위	8	21	11	27	12	34	1	16	39	36	32	6
	지수	7.58	6.42	7.23	6.00	7.10	5.70	8.59	6.74	4.83	5.33	5.81	7.69
경영자 신뢰성	순위	27	5	1	28	51	4	3	13	31	32	36	45
	지수	5.76	6.83	7.62	5.74	4.43	6.86	7.19	6.32	5.51	5.36	5.23	4.72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성	순위	6	8	3	39	26	9	16	5	14	25	38	15
	지수	6.61	6.55	6.88	3.82	5.51	6.52	6.13	6.65	6.21	5.53	4.88	6.16

〈부표 9〉 지역에 대한 친밀감 빈도분석(ISSP 2003)

구분	척도				합계
	매우 가깝다	가깝다	가깝지 않다	전혀 가깝지 않다	
독일	283	382	150	23	838
	33.8%	45.6%	17.9%	2.7%	100.0%
영국	273	400	125	45	843
	32.4%	47.4%	14.8%	5.3%	100.0%
미국	268	540	283	84	1175
	22.8%	46.0%	24.1%	7.1%	100.0%
호주	578	323	90	10	1001
	57.7%	32.3%	9.0%	1.0%	100.0%
스웨덴	294	527	271	34	1126
	26.1%	46.8%	24.1%	3.0%	100.0%
캐나다	305	615	230	45	1195
	25.5%	51.5%	19.2%	3.8%	100.0%
일본	421	539	106	21	1087
	38.7%	49.6%	9.8%	1.9%	100.0%
프랑스	516	636	300	107	1559
	33.1%	40.8%	19.2%	6.9%	100.0%
핀란드	369	644	261	41	1315
	28.1%	49.0%	19.8%	3.1%	100.0%
대만	711	884	345	57	1997
	35.6%	44.3%	17.3%	2.9%	100.0%
한국	414	612	253	27	1306
	31.7%	46.9%	19.4%	2.1%	100.0%
합계	4432	6102	2414	494	13442
	33.0%	45.4%	18.0%	3.7%	100.0%

〈부표 10〉 국가에 대한 친밀감 빈도분석(ISSP 2003)

구분	척도				합계
	매우 가깝다	가깝다	그리 가깝지 않다	전혀 가깝지 않다	
독일	212	481	119	18	830
	25.5%	58.0%	14.3%	2.2%	100.0%
영국	282	378	139	37	836
	33.7%	45.2%	16.6%	4.4%	100.0%
미국	623	442	102	23	1190
	52.4%	37.1%	8.6%	1.9%	100.0%
호주	600	332	68	4	1004
	59.8%	33.1%	6.8%	.4%	100.0%
스웨덴	476	524	140	16	1156
	41.2%	45.3%	12.1%	1.4%	100.0%
캐나다	567	471	113	47	1198
	47.3%	39.3%	9.4%	3.9%	100.0%
일본	527	461	79	10	1077
	48.9%	42.8%	7.3%	.9%	100.0%
프랑스	914	537	120	32	1603
	57.0%	33.5%	7.5%	2.0%	100.0%
핀랜드	634	570	93	12	1309
	48.4%	43.5%	7.1%	.9%	100.0%
대만	639	993	316	42	1990
	32.1%	49.9%	15.9%	2.1%	100.0%
한국	525	572	178	26	1301
	40.4%	44.0%	13.7%	2.0%	100.0%
합계	5999	5761	1467	267	13494
	44.5%	42.7%	10.9%	2.0%	100.0%

〈부표 11〉 이민자에 대한 불신 빈도분석(ISSP 2003)

구분	척도					합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보통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독일	136	356	164	101	29	786
	17.3%	45.3%	20.9%	12.8%	3.7%	100.0%
영국	113	219	272	204	26	834
	13.5%	26.3%	32.6%	24.5%	3.1%	100.0%
미국	83	235	345	437	84	1184
	7.0%	19.8%	29.1%	36.9%	7.1%	100.0%
호주	354	321	133	108	65	981
	36.1%	32.7%	13.6%	11.0%	6.6%	100.0%
스웨덴	221	430	281	142	65	1139
	19.4%	37.8%	24.7%	12.5%	5.7%	100.0%
캐나다	91	226	315	418	113	1163
	7.8%	19.4%	27.1%	35.9%	9.7%	100.0%
일본	498	277	187	66	52	1080
	46.1%	25.6%	17.3%	6.1%	4.8%	100.0%
프랑스	312	371	321	282	282	1568
	19.9%	23.7%	20.5%	18.0%	18.0%	100.0%
핀란드	215	408	390	235	36	1284
	16.7%	31.8%	30.4%	18.3%	2.8%	100.0%
대만	264	935	319	400	16	1934
	13.7%	48.3%	16.5%	20.7%	.8%	100.0%
한국	90	337	375	397	93	1292
	7.0%	26.1%	29.0%	30.7%	7.2%	100.0%
합계	2377	4115	3102	2790	861	13245
	17.9%	31.1%	23.4%	21.1%	6.5%	100.0%

〈부표 13〉 투표참여 빈도분석(ISSP 2004)

구분	척도							합계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중요하다 7	
호주	60	41	52	103	137	190	1282	1865
	3.2%	2.2%	2.8%	5.5%	7.3%	10.2%	68.7%	100.0%
독일	44	43	59	96	117	208	294	861
	5.1%	5.0%	6.9%	11.1%	13.6%	24.2%	34.1%	100.0%
영국	65	24	53	110	97	124	348	821
	7.9%	2.9%	6.5%	13.4%	11.8%	15.1%	42.4%	100.0%
미국	41	22	35	79	144	161	975	1457
	2.8%	1.5%	2.4%	5.4%	9.9%	11.1%	66.9%	100.0%
스웨덴	25	13	26	59	109	216	832	1280
	2.0%	1.0%	2.0%	4.6%	8.5%	16.9%	65.0%	100.0%
캐나다	19	14	26	49	88	195	799	1190
	1.6%	1.2%	2.2%	4.1%	7.4%	16.4%	67.1%	100.0%
일본	33	31	54	152	157	216	643	1286
	2.6%	2.4%	4.2%	11.8%	12.2%	16.8%	50.0%	100.0%
프랑스	29	15	35	68	127	242	876	1392
	2.1%	1.1%	2.5%	4.9%	9.1%	17.4%	62.9%	100.0%
핀란드	73	69	91	126	192	266	483	1300
	5.6%	5.3%	7.0%	9.7%	14.8%	20.5%	37.2%	100.0%
대만	36	30	53	155	284	290	913	1761
	2.0%	1.7%	3.0%	8.8%	16.1%	16.5%	51.8%	100.0%
한국	14	22	48	85	207	226	700	1302
	1.1%	1.7%	3.7%	6.5%	15.9%	17.4%	53.8%	100.0%
합계	439	324	532	1082	1659	2334	8145	14515
	3.0%	2.2%	3.7%	7.5%	11.4%	16.1%	56.1%	100.0%

〈부표 14〉 세금 납부 빈도분석(ISSP 2004)

구분	척도							합계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중요하다 7	
호주	24	18	44	123	192	319	1118	1838
	1.3%	1.0%	2.4%	6.7%	10.4%	17.4%	60.8%	100.0%
독일	27	15	25	67	110	210	407	861
	3.1%	1.7%	2.9%	7.8%	12.8%	24.4%	47.3%	100.0%
영국	17	9	19	28	60	138	549	820
	2.1%	1.1%	2.3%	3.4%	7.3%	16.8%	67.0%	100.0%
미국	28	9	22	64	107	165	1066	1461
	1.9%	.6%	1.5%	4.4%	7.3%	11.3%	73.0%	100.0%
스웨덴	37	32	60	141	177	241	584	1272
	2.9%	2.5%	4.7%	11.1%	13.9%	18.9%	45.9%	100.0%
캐나다	15	6	21	63	98	189	796	1188
	1.3%	.5%	1.8%	5.3%	8.2%	15.9%	67.0%	100.0%
일본	12	8	14	70	90	161	918	1273
	.9%	.6%	1.1%	5.5%	7.1%	12.6%	72.1%	100.0%
프랑스	51	21	65	133	159	246	678	1353
	3.8%	1.6%	4.8%	9.8%	11.8%	18.2%	50.1%	100.0%
핀란드	37	28	53	93	145	279	651	1286
	2.9%	2.2%	4.1%	7.2%	11.3%	21.7%	50.6%	100.0%
대만	20	12	31	89	198	322	1078	1750
	1.1%	.7%	1.8%	5.1%	11.3%	18.4%	61.6%	100.0%
한국	14	7	29	66	167	213	807	1303
	1.1%	.5%	2.2%	5.1%	12.8%	16.3%	61.9%	100.0%
합계	282	165	383	937	1503	2483	8652	14405
	2.0%	1.1%	2.7%	6.5%	10.4%	17.2%	60.1%	100.0%

〈부표 15〉 준법의식 빈도분석(ISSP 2004)

구분	척도							합계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중요하다 7	
호주	10	6	16	77	166	353	1240	1868
	.5%	.3%	.9%	4.1%	8.9%	18.9%	66.4%	100.0%
독일	7	13	20	56	117	274	381	868
	.8%	1.5%	2.3%	6.5%	13.5%	31.6%	43.9%	100.0%
영국	8	1	11	27	64	145	573	829
	1.0%	.1%	1.3%	3.3%	7.7%	17.5%	69.1%	100.0%
미국	5	2	18	52	141	263	986	1467
	.3%	.1%	1.2%	3.5%	9.6%	17.9%	67.2%	100.0%
스웨덴	11	12	44	97	198	333	576	1271
	.9%	.9%	3.5%	7.6%	15.6%	26.2%	45.3%	100.0%
캐나다	7	3	9	42	85	250	800	1196
	.6%	.3%	.8%	3.5%	7.1%	20.9%	66.9%	100.0%
일본	5	10	19	82	129	281	781	1307
	.4%	.8%	1.5%	6.3%	9.9%	21.5%	59.8%	100.0%
프랑스	24	12	35	145	240	346	562	1364
	1.8%	.9%	2.6%	10.6%	17.6%	25.4%	41.2%	100.0%
핀란드	10	25	39	95	189	353	598	1309
	.8%	1.9%	3.0%	7.3%	14.4%	27.0%	45.7%	100.0%
대만	10	11	19	75	176	332	1137	1760
	.6%	.6%	1.1%	4.3%	10.0%	18.9%	64.6%	100.0%
한국	7	7	22	60	207	297	704	1304
	.5%	.5%	1.7%	4.6%	15.9%	22.8%	54.0%	100.0%
합계	104	102	252	808	1712	3227	8338	14543
	.7%	.7%	1.7%	5.6%	11.8%	22.2%	57.3%	100.0%

〈부표 16〉 정부감시 빈도분석(ISSP 2004)

구분	척도							합계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중요하다	
호주	22	23	38	148	264	345	994	1834
	1.2%	1.3%	2.1%	8.1%	14.4%	18.8%	54.2%	100.0%
독일	21	29	47	149	156	210	254	866
	2.4%	3.3%	5.4%	17.2%	18.0%	24.2%	29.3%	100.0%
영국	38	24	47	143	163	141	247	803
	4.7%	3.0%	5.9%	17.8%	20.3%	17.6%	30.8%	100.0%
미국	19	12	29	100	211	246	838	1455
	1.3%	.8%	2.0%	6.9%	14.5%	16.9%	57.6%	100.0%
스웨덴	10	22	43	112	187	267	603	1244
	.8%	1.8%	3.5%	9.0%	15.0%	21.5%	48.5%	100.0%
캐나다	7	7	11	60	140	235	728	1188
	.6%	.6%	.9%	5.1%	11.8%	19.8%	61.3%	100.0%
일본	22	28	40	175	221	240	500	1226
	1.8%	2.3%	3.3%	14.3%	18.0%	19.6%	40.8%	100.0%
프랑스	53	25	69	218	343	301	338	1347
	3.9%	1.9%	5.1%	16.2%	25.5%	22.3%	25.1%	100.0%
핀란드	49	98	151	276	310	198	175	1257
	3.9%	7.8%	12.0%	22.0%	24.7%	15.8%	13.9%	100.0%
대만	41	41	75	207	344	344	684	1736
	2.4%	2.4%	4.3%	11.9%	19.8%	19.8%	39.4%	100.0%
한국	15	22	71	191	305	248	445	1297
	1.2%	1.7%	5.5%	14.7%	23.5%	19.1%	34.3%	100.0%
합계	297	331	621	1779	2644	2775	5806	14253
	2.1%	2.3%	4.4%	12.5%	18.6%	19.5%	40.7%	100.0%

〈부표 17〉 적극적 연대 참여 빈도분석(ISSP 2004)

구분	척도							합계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중요하다	
호주	196	129	209	395	407	235	216	1787
	11.0%	7.2%	11.7%	22.1%	22.8%	13.2%	12.1%	100.0%
독일	80	126	139	241	144	79	50	859
	9.3%	14.7%	16.2%	28.1%	16.8%	9.2%	5.8%	100.0%
영국	161	91	148	180	137	52	32	801
	20.1%	11.4%	18.5%	22.5%	17.1%	6.5%	4.0%	100.0%
미국	93	71	146	340	373	196	234	1453
	6.4%	4.9%	10.0%	23.4%	25.7%	13.5%	16.1%	100.0%
스웨덴	199	202	246	265	198	77	61	1248
	15.9%	16.2%	19.7%	21.2%	15.9%	6.2%	4.9%	100.0%
캐나다	58	62	143	285	300	150	167	1165
	5.0%	5.3%	12.3%	24.5%	25.8%	12.9%	14.3%	100.0%
일본	128	130	156	359	195	87	88	1143
	11.2%	11.4%	13.6%	31.4%	17.1%	7.6%	7.7%	100.0%
프랑스	120	100	161	285	292	183	192	1333
	9.0%	7.5%	12.1%	21.4%	21.9%	13.7%	14.4%	100.0%
핀란드	283	283	260	217	150	55	27	1275
	22.2%	22.2%	20.4%	17.0%	11.8%	4.3%	2.1%	100.0%
대만	186	158	257	410	326	190	198	1725
	10.8%	9.2%	14.9%	23.8%	18.9%	11.0%	11.5%	100.0%
한국	61	91	175	281	327	162	184	1281
	4.8%	7.1%	13.7%	21.9%	25.5%	12.6%	14.4%	100.0%
합계	1565	1443	2040	3258	2849	1466	1449	14070
	11.1%	10.3%	14.5%	23.2%	20.2%	10.4%	10.3%	100.0%

〈부표 18〉 타인의견 이해 빈도분석(ISSP 2004)

구분	척도							합계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중요하다	
호주	36	14	39	178	272	471	824	1834
	2.0%	.8%	2.1%	9.7%	14.8%	25.7%	44.9%	100.0%
독일	9	12	32	119	178	249	253	852
	1.1%	1.4%	3.8%	14.0%	20.9%	29.2%	29.7%	100.0%
영국	19	13	28	103	157	205	303	828
	2.3%	1.6%	3.4%	12.4%	19.0%	24.8%	36.6%	100.0%
미국	43	19	39	124	263	324	654	1466
	2.9%	1.3%	2.7%	8.5%	17.9%	22.1%	44.6%	100.0%
스웨덴	11	20	50	144	247	327	473	1272
	.9%	1.6%	3.9%	11.3%	19.4%	25.7%	37.2%	100.0%
캐나다	5	12	12	79	231	360	489	1188
	.4%	1.0%	1.0%	6.6%	19.4%	30.3%	41.2%	100.0%
일본	23	27	73	223	277	303	307	1233
	1.9%	2.2%	5.9%	18.1%	22.5%	24.6%	24.9%	100.0%
프랑스	24	21	28	154	298	397	455	1377
	1.7%	1.5%	2.0%	11.2%	21.6%	28.8%	33.0%	100.0%
핀란드	14	26	80	161	308	385	324	1298
	1.1%	2.0%	6.2%	12.4%	23.7%	29.7%	25.0%	100.0%
대만	85	68	118	268	370	337	482	1728
	4.9%	3.9%	6.8%	15.5%	21.4%	19.5%	27.9%	100.0%
한국	9	14	75	147	289	341	425	1300
	.7%	1.1%	5.8%	11.3%	22.2%	26.2%	32.7%	100.0%
합계	278	246	574	1700	2890	3699	4989	14376
	1.9%	1.7%	4.0%	11.8%	20.1%	25.7%	34.7%	100.0%

〈부표 19〉 군복무 빈도분석(ISSP 2004)

구분	척도							합계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2	3	4	5	6	매우 중요하다	
호주	216	124	147	244	267	239	492	1729
	12.5%	7.2%	8.5%	14.1%	15.4%	13.8%	28.5%	100.0%
독일	130	88	89	135	128	135	88	793
	16.4%	11.1%	11.2%	17.0%	16.1%	17.0%	11.1%	100.0%
영국	106	47	73	111	128	123	167	755
	14.0%	6.2%	9.7%	14.7%	17.0%	16.3%	22.1%	100.0%
미국	112	51	61	130	232	226	641	1453
	7.7%	3.5%	4.2%	8.9%	16.0%	15.6%	44.1%	100.0%
스웨덴	226	106	98	151	146	196	254	1177
	19.2%	9.0%	8.3%	12.8%	12.4%	16.7%	21.6%	100.0%
캐나다	110	77	106	162	196	197	259	1107
	9.9%	7.0%	9.6%	14.6%	17.7%	17.8%	23.4%	100.0%
일본	341	149	145	177	116	60	82	1070
	31.9%	13.9%	13.6%	16.5%	10.8%	5.6%	7.7%	100.0%
프랑스	223	117	121	189	157	146	255	1208
	18.5%	9.7%	10.0%	15.6%	13.0%	12.1%	21.1%	100.0%
핀란드	201	62	79	116	150	221	363	1192
	16.9%	5.2%	6.6%	9.7%	12.6%	18.5%	30.5%	100.0%
대만	108	52	87	214	278	320	648	1707
	6.3%	3.0%	5.1%	12.5%	16.3%	18.7%	38.0%	100.0%
한국	63	50	101	149	218	212	478	1271
	5.0%	3.9%	7.9%	11.7%	17.2%	16.7%	37.6%	100.0%
합계	1836	923	1107	1778	2016	2075	3727	13462
	13.6%	6.9%	8.2%	13.2%	15.0%	15.4%	27.7%	100.0%

〈부표 20〉 시위참여 빈도분석(ISSP 2004)

구분	척도				합계
	작년에	좀 더 지난 과거에	거의하지 않았다	전혀 하지 않았다	
호주	94	286	744	709	1833
	5.1%	15.6%	40.6%	38.7%	100.0%
독일	45	178	298	348	869
	5.2%	20.5%	34.3%	40.0%	100.0%
영국	20	99	341	365	825
	2.4%	12.0%	41.3%	44.2%	100.0%
미국	77	197	609	581	1464
	5.3%	13.5%	41.6%	39.7%	100.0%
스웨덴	84	257	562	347	1250
	6.7%	20.6%	45.0%	27.8%	100.0%
캐나다	65	240	493	368	1166
	5.6%	20.6%	42.3%	31.6%	100.0%
일본	11	94	213	943	1261
	.9%	7.5%	16.9%	74.8%	100.0%
프랑스	222	515	327	268	1332
	16.7%	38.7%	24.5%	20.1%	100.0%
핀란드	28	152	448	656	1284
	2.2%	11.8%	34.9%	51.1%	100.0%
대만	73	62	331	1289	1755
	4.2%	3.5%	18.9%	73.4%	100.0%
한국	89	151	345	708	1293
	6.9%	11.7%	26.7%	54.8%	100.0%
합계	808	2231	4711	6582	14332
	5.6%	15.6%	32.9%	45.9%	100.0%

〈부표 21〉 기부 빈도분석(ISSP 2004)

구분	척도				합계
	작년에	좀 더 지난 과거에	거의하지 않았다	전혀 하지 않았다	
호주	468	324	449	595	1836
	25.5%	17.6%	24.5%	32.4%	100.0%
독일	352	254	138	138	882
	39.9%	28.8%	15.6%	15.6%	100.0%
영국	116	141	198	363	818
	14.2%	17.2%	24.2%	44.4%	100.0%
미국	451	284	438	293	1466
	30.8%	19.4%	29.9%	20.0%	100.0%
스웨덴	303	233	384	311	1231
	24.6%	18.9%	31.2%	25.3%	100.0%
캐나다	324	262	328	263	1177
	27.5%	22.3%	27.9%	22.3%	100.0%
일본	313	220	200	508	1241
	25.2%	17.7%	16.1%	40.9%	100.0%
프랑스	359	260	282	394	1295
	27.7%	20.1%	21.8%	30.4%	100.0%
핀란드	188	331	315	437	1271
	14.8%	26.0%	24.8%	34.4%	100.0%
대만	240	232	415	878	1765
	13.6%	13.1%	23.5%	49.7%	100.0%
한국	209	138	397	536	1280
	16.3%	10.8%	31.0%	41.9%	100.0%
합계	3323	2679	3544	4716	14262
	23.3%	18.8%	24.8%	33.1%	100.0%

〈부표 22〉 공무원에 대한 신뢰 빈도분석(ISSP 2004)

구분	척도					합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보통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호주	65	689	495	483	134	1866
	3.5%	36.9%	26.5%	25.9%	7.2%	100.0%
독일	5	91	231	369	145	841
	.6%	10.8%	27.5%	43.9%	17.2%	100.0%
영국	9	225	262	244	80	820
	1.1%	27.4%	32.0%	29.8%	9.8%	100.0%
미국	33	416	434	433	149	1465
	2.3%	28.4%	29.6%	29.6%	10.2%	100.0%
스웨덴	19	432	503	206	77	1237
	1.5%	34.9%	40.7%	16.7%	6.2%	100.0%
캐나다	25	413	322	325	91	1176
	2.1%	35.1%	27.4%	27.6%	7.7%	100.0%
일본	7	106	392	325	446	1276
	.5%	8.3%	30.7%	25.5%	35.0%	100.0%
프랑스	37	261	442	382	224	1346
	2.7%	19.4%	32.8%	28.4%	16.6%	100.0%
핀란드	50	531	386	252	50	1269
	3.9%	41.8%	30.4%	19.9%	3.9%	100.0%
대만	18	245	576	726	163	1728
	1.0%	14.2%	33.3%	42.0%	9.4%	100.0%
한국	17	278	396	455	150	1296
	1.3%	21.5%	30.6%	35.1%	11.6%	100.0%
합계	285	3687	4439	4200	1709	14320
	2.0%	25.7%	31.0%	29.3%	11.9%	100.0%

〈표 III-23〉 ISSP(2004) 시민의식 부문 지표의 국가별 평균 및 순위

국가	투표참여		세금납부		준법의식		정부감시		적극적 연대참여		타인의견 이해		군복무		시위참여		기부		공무원에 대한 신뢰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남아프리카공화국	6.08	29	5.92	16	6.28	21	5.75	29							3.36	32	3.37	35	2.74	2
네델란드	5.87	21	5.48	2	5.75	4	5.69	28	4.06	21	5.87	6	3.6	33	3.12	17	2.22	6	3.12	15
노르웨이	6.09	30	5.67	6	5.97	11	5.55	22	4.11	19	5.68	18	4.72	16	3	11	2.31	9	3.13	17
뉴질랜드	6.05	28	6.09	24	6.31	23	5.52	20	3.75	25	5.71	16	4.08	26	2.93	6	2.38	10	2.97	10
대만	5.92	22	6.26	35	6.38	25	5.62	24	4.1	20	5.15	35	5.37	6	3.62	35	3.09	30	3.45	28
덴마크			5.92	17	6.23	18	5.45	19	3.82	23	5.8	10	4.57	20	3.01	12	2.16	4	2.6	1
동독	4.56	1	5.57	3	5.89	6	5.03	10	3.53	29	5.45	27	3.71	31	2.76	4	2.19	5		
라트비아	5.25	5	5.77	11	5.91	8	4.56	3	3.59	27	5.2	34	5.07	10	3.01	13	2.84	21	3.41	26
러시아	5.56	14	6.02	20	6.17	16	5.15	11	4.24	15	5.41	29			3.26	25			3.12	16
멕시코	6.04	26	5.98	19	6.39	27	5.85	32					5.13	9	3.17	20	2.73	18	3.59	31
미국	6.19	33			6.45	31			4.62	5	5.82	7	5.45	3	3.16	19	2.39	11	3.17	19
베네주엘라	6.05	27	6.17	28			5.79	30	4.62	4	5.92	3	5.29	8	2.92	5	3.05	28	3.46	29
불가리아	5.23	4	6.25	34			4.28	2	3.54	28	5.4	30	5.46	2	3.5	33	3.31	34		
브라질	5.68	18	5.71	10	6.12	14	5.68	27	4.61	6	5.74	13	5.05	11	3.24	22	3.39	36	3.7	35
사이프러스	5.44	13	5.97	18	6.44	30	5.21	12	4.91	1	5.38	31	5.41	5	2.52	3	2.3	8	2.76	4
서독	5.32	8	5.88	13	6.01	13	5.35	16	3.79	24	5.59	22	4.01	28	3.09	16	2.07	3	3.66	33
스웨덴	6.27	35	5.71	9	5.96	9	5.94	34	3.43	31	5.73	15	4.27	22	2.94	7	2.57	14	2.91	7
스위스	5.43	12	5.7	8	5.49	1	5.02	9	4.2	17	5.78	12	4.03	27	3.32	28	1.96	2	2.76	3
스페인	5.81	20	6.09	23	6.17	15	5.23	14	4.46	10	5.8	9	3.7	32	2.39	1	3.03	26	3.1	13
슬로베니아	5.11	3	5.7	7	5.91	7	4.92	7	3.66	26	5.57	24	4.74	14	3.34	29	3.18	31	3.23	21
슬로베키아	5.27	7	6.12	25	6.28	19	4.69	5	3.46	30	5.48	26	3.55	34	3.25	24	3.04	27	3.65	32

국가	투표참여		세금납부		준법의식		정부감시		적극적 연대참여		타인의견 이해		군복무		시위참여		기부		공무원에 대한 신뢰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아일랜드	6,11	31	6,02	21	6,39	26	5,84	31	4,13	18	5,81	8	4,12	24	3,09	15	2,74	19	3,03	11
영국	5,33	10	6,31	36	6,46	33	5,22	13	3,41	32	5,65	20	4,52	21	3,27	26	2,99	25	3,2	20
오스트리아	5,65	16	5,65	5	5,97	12	5,37	17	4,29	13	5,69	17	4,1	25	3,25	23	1,91	1	3,51	30
우루과이	6,32	36	6,18	29			5,67	26	4,7	3			3,9	30	2,97	8	2,62	15	3,72	36
이스라엘	5,97	24	6,22	31	6,46	34	6,07	36	4,52	9	5,9	5			3,19	21	2,99	24	3,3	22
일본	5,79	19			6,28	20	5,66	25	3,85	22	5,3	32	3,08	35	3,66	36	2,73	17		
체코	4,6	2	5,63	4	5,74	3	4,12	1	3,36	33	4,8	36	3,96	29	3,36	31	3,31	33	3,41	27
칠레	5,65	17	6,17	26	6,43	29	5,4	18	4,36	12	5,73	14	4,76	13	3,59	34	3,05	29	2,93	8
캐나다					6,47	35			4,57	7	5,99	1	4,7	17	3	10	2,45	12	3,04	12
포르투갈	5,96	23	6,25	32	6,32	24	5,87	33	4,81	2	5,97	2	4,87	12	2,99	9	2,28	7	3,4	25
폴란드	5,57	15	6,03	22	6,45	32	5,6	23	4,24	16	5,58	23	5,51	1			3,23	32	3,67	34
프랑스	6,22	34	5,79	12	5,82	5	5,25	15	4,38	11	5,68	19	4,16	23	2,48	2	2,55	13	3,37	24
플랜더스	5,26	6	5,26	1	5,52	2	5	8	3,31	34	5,52	25	2,87	36	3,02	14	2,95	22	3,1	14
핀란드	5,33	9	5,89	15	5,96	10	4,59	4	2,95	36	5,45	28	4,73	15	3,35	30	2,79	20	2,78	5
필리핀			6,17	27	6,47	36					5,78	11	5,43	4					2,85	6
한국	6,02	25	6,25	33	6,19	17	5,52	21	4,52	8	5,63	21	5,33	7	3,29	27	2,98	23	3,34	23
헝가리	5,4	11	5,88	14	6,31	22	4,69	6	3,12	35	5,22	33	4,64	19					3,17	18
호주	6,17	32	6,19	30	6,43	28	6,06	35	4,26	14	5,91	4	4,68	18	3,13	18	2,64	16	2,96	9

〈부표 24〉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 빈도분석(ISSP 2005)

구분	척도					합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보통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호주	270	771	450	313	93	1897
	14,2%	40,6%	23,7%	16,5%	4,9%	100,0%
독일	230	441	167	136	46	1020
	22,5%	43,2%	16,4%	13,3%	4,5%	100,0%
영국	111	330	261	137	27	866
	12,8%	38,1%	30,1%	15,8%	3,1%	100,0%
미국	226	600	343	228	77	1474
	15,3%	40,7%	23,3%	15,5%	5,2%	100,0%
스웨덴	259	499	365	120	68	1311
	19,8%	38,1%	27,8%	9,2%	5,2%	100,0%
캐나다	143	298	204	178	70	893
	16,0%	33,4%	22,8%	19,9%	7,8%	100,0%
일본	374	210	109	31	60	784
	47,7%	26,8%	13,9%	4,0%	7,7%	100,0%
프랑스	221	465	427	232	181	1526
	14,5%	30,5%	28,0%	15,2%	11,9%	100,0%
핀란드	208	428	304	206	59	1205
	17,3%	35,5%	25,2%	17,1%	4,9%	100,0%
대만	443	1185	258	161	14	2061
	21,5%	57,5%	12,5%	7,8%	,7%	100,0%
한국	361	704	296	100	36	1497
	24,1%	47,0%	19,8%	6,7%	2,4%	100,0%
합계	2846	5931	3184	1842	731	14534
	19,6%	40,8%	21,9%	12,7%	5,0%	100,0%

〈부표 25〉 매니저와 종업원의 관계 빈도분석(ISSP 2005)

구분	척도					합계
	매우 좋다	좋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호주	301	497	207	96	29	1130
	26.6%	44.0%	18.3%	8.5%	2.6%	100.0%
독일	171	317	44	34	6	572
	29.9%	55.4%	7.7%	5.9%	1.0%	100.0%
영국	134	209	74	39	6	462
	29.0%	45.2%	16.0%	8.4%	1.3%	100.0%
미국	334	360	232	61	24	1011
	33.0%	35.6%	22.9%	6.0%	2.4%	100.0%
스웨덴	219	341	184	77	29	850
	25.8%	40.1%	21.6%	9.1%	3.4%	100.0%
캐나다	148	231	141	36	20	576
	25.7%	40.1%	24.5%	6.3%	3.5%	100.0%
일본	102	251	128	31	10	522
	19.5%	48.1%	24.5%	5.9%	1.9%	100.0%
프랑스	166	367	347	109	41	1030
	16.1%	35.6%	33.7%	10.6%	4.0%	100.0%
핀란드	143	382	155	54	13	747
	19.1%	51.1%	20.7%	7.2%	1.7%	100.0%
대만	220	703	207	41	10	1181
	18.6%	59.5%	17.5%	3.5%	.8%	100.0%
한국	115	315	178	16	2	626
	18.4%	50.3%	28.4%	2.6%	.3%	100.0%
합계	2053	3973	1897	594	190	8707
	23.6%	45.6%	21.8%	6.8%	2.2%	100.0%

〈부표 26〉 동료와의 관계 빈도분석(ISSP 2005)

구분	척도					합계
	매우 좋다	좋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호주	417	557	119	14	6	1113
	37.5%	50.0%	10.7%	1.3%	.5%	100.0%
독일	232	282	42	10	1	567
	40.9%	49.7%	7.4%	1.8%	.2%	100.0%
영국	198	208	39	7	0	452
	43.8%	46.0%	8.6%	1.5%	.0%	100.0%
미국	400	426	154	18	11	1009
	39.6%	42.2%	15.3%	1.8%	1.1%	100.0%
스웨덴	378	360	84	23	5	850
	44.5%	42.4%	9.9%	2.7%	.6%	100.0%
캐나다	187	280	90	15	3	575
	32.5%	48.7%	15.7%	2.6%	.5%	100.0%
일본	124	300	81	11	4	520
	23.8%	57.7%	15.6%	2.1%	.8%	100.0%
프랑스	296	524	164	34	8	1026
	28.8%	51.1%	16.0%	3.3%	.8%	100.0%
핀란드	193	410	98	21	4	726
	26.6%	56.5%	13.5%	2.9%	.6%	100.0%
대만	259	773	137	5	3	1177
	22.0%	65.7%	11.6%	.4%	.3%	100.0%
한국	144	282	104	8	1	539
	26.7%	52.3%	19.3%	1.5%	.2%	100.0%
합계	2828	4402	1112	166	46	8554
	33.1%	51.5%	13.0%	1.9%	.5%	100.0%

〈부표 27〉 ISSP(2005) 노동지향성 부문 지표의 국가별 평균 및 순위

국가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		매니저와 종업원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남아프리카공화국	1,9	1	2,05	13	1,77	11
노르웨이	2,38	14	2,2	20	1,64	4
뉴질랜드	2,89	30	1,96	8	1,65	5
대만	2,09	5	2,08	15	1,91	19
덴마크	2,53	18	2,15	17	1,81	14
도미니카공화국	2,28	9	1,89	6	1,83	16
동독	2,35	12	1,97	10	1,68	7
라트비아	2,41	15	2,29	27	1,93	21
러시아	3,28	32	2,31	28	2,04	31
멕시코	2,22	7	1,84	5	1,75	10
미국	2,55	19	2,09	16	1,82	15
불가리아	3,01	31	2,02	12	1,97	27
사이프러스	2,33	10	1,82	3	1,8	13
서독	2,34	11	1,93	7	1,71	8
스웨덴	2,42	17	2,24	26	1,73	9
스위스	2,41	16	1,75	1	1,45	2
스페인	2,36	13	2,23	25	1,99	29
슬로베니아	2,61	24	2,49	31	1,91	20
아일랜드	2,02	4	1,78	2	1,44	1
영국	2,58	23	2,08	14	1,68	6
이스라엘	1,96	2	1,83	4	1,59	3
일본	1,97	3	2,23	24	1,98	28
체코	2,63	26	2,34	30	2,06	32
캐나다	2,7	27	2,22	23	1,9	18
포르투갈	2,27	8	1,97	9	1,83	17
프랑스	2,79	29	2,51	32	1,96	25
플랜더스	2,73	28	2,33	29	1,94	22
핀란드	2,57	20	2,21	21	1,94	23
필리핀	2,61	25	1,97	11	1,99	30
한국	2,16	6	2,16	18	1,96	26
헝가리	2,58	22	2,22	22	1,96	24
호주	2,57	21	2,16	19	1,77	12

〈부표 28〉 정치에 대한 영향력 빈도분석(ISSP 2006)

구분	척도					합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보통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호주	57	488	590	1208	329	2672
	2,1%	18,3%	22,1%	45,2%	12,3%	100,0%
영국	18	123	206	439	102	888
	2,0%	13,9%	23,2%	49,4%	11,5%	100,0%
미국	105	406	243	521	228	1503
	7,0%	27,0%	16,2%	34,7%	15,2%	100,0%
스웨덴	14	138	388	400	183	1123
	1,2%	12,3%	34,6%	35,6%	16,3%	100,0%
캐나다	34	179	231	345	110	899
	3,8%	19,9%	25,7%	38,4%	12,2%	100,0%
일본	176	256	235	227	243	1137
	15,5%	22,5%	20,7%	20,0%	21,4%	100,0%
프랑스	135	368	389	498	296	1686
	8,0%	21,8%	23,1%	29,5%	17,6%	100,0%
핀란드	30	173	235	473	231	1142
	2,6%	15,1%	20,6%	41,4%	20,2%	100,0%
대만	121	758	329	531	136	1875
	6,5%	40,4%	17,5%	28,3%	7,3%	100,0%
한국	162	641	321	339	102	1565
	10,4%	41,0%	20,5%	21,7%	6,5%	100,0%
합계	852	3530	3167	4981	1960	14490
	5,9%	24,4%	21,9%	34,4%	13,5%	100,0%

〈부표 29〉 대시민 정부서비스에 대한 신뢰 빈도분석(ISSP 2006)

구분	척도					합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보통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호주	53	744	907	715	252	2671
	2.0%	27.9%	34.0%	26.8%	9.4%	100.0%
영국	14	182	339	241	91	867
	1.6%	21.0%	39.1%	27.8%	10.5%	100.0%
미국	50	394	309	508	233	1494
	3.3%	26.4%	20.7%	34.0%	15.6%	100.0%
스웨덴	14	172	419	301	206	1112
	1.3%	15.5%	37.7%	27.1%	18.5%	100.0%
캐나다	23	240	320	246	67	896
	2.6%	26.8%	35.7%	27.5%	7.5%	100.0%
일본	17	104	234	253	532	1140
	1.5%	9.1%	20.5%	22.2%	46.7%	100.0%
프랑스	52	268	458	496	427	1701
	3.1%	15.8%	26.9%	29.2%	25.1%	100.0%
핀란드	31	478	320	212	80	1121
	2.8%	42.6%	28.5%	18.9%	7.1%	100.0%
대만	38	544	506	581	206	1875
	2.0%	29.0%	27.0%	31.0%	11.0%	100.0%
한국	52	270	359	573	326	1580
	3.3%	17.1%	22.7%	36.3%	20.6%	100.0%
합계	344	3396	4171	4126	2420	14457
	2.4%	23.5%	28.9%	28.5%	16.7%	100.0%

〈부표 3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 빈도분석(ISSP 2006)

구분	척도					합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보통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호주	832	1149	252	368	83	2684
	31.0%	42.8%	9.4%	13.7%	3.1%	100.0%
영국	226	447	100	105	26	904
	25.0%	49.4%	11.1%	11.6%	2.9%	100.0%
미국	546	546	124	231	64	1511
	36.1%	36.1%	8.2%	15.3%	4.2%	100.0%
스웨덴	269	451	177	171	60	1128
	23.8%	40.0%	15.7%	15.2%	5.3%	100.0%
캐나다	234	407	120	123	20	904
	25.9%	45.0%	13.3%	13.6%	2.2%	100.0%
일본	434	309	199	149	90	1181
	36.7%	26.2%	16.9%	12.6%	7.6%	100.0%
프랑스	550	673	250	209	54	1736
	31.7%	38.8%	14.4%	12.0%	3.1%	100.0%
핀란드	351	371	115	238	79	1154
	30.4%	32.1%	10.0%	20.6%	6.8%	100.0%
대만	237	842	308	459	69	1915
	12.4%	44.0%	16.1%	24.0%	3.6%	100.0%
한국	440	671	213	231	38	1593
	27.6%	42.1%	13.4%	14.5%	2.4%	100.0%
합계	4119	5866	1858	2284	583	14710
	28.0%	39.9%	12.6%	15.5%	4.0%	100.0%

〈부표 31〉 타인에 대한 불신 빈도분석(ISSP 2006)

구분	척도					합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보통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호주	639	1228	448	322	52	2689
	23.8%	45.7%	16.7%	12.0%	1.9%	100.0%
영국	201	484	144	74	10	913
	22.0%	53.0%	15.8%	8.1%	1.1%	100.0%
미국	574	632	133	151	20	1510
	38.0%	41.9%	8.8%	10.0%	1.3%	100.0%
스웨덴	155	423	283	204	56	1121
	13.8%	37.7%	25.2%	18.2%	5.0%	100.0%
캐나다	181	407	184	119	21	912
	19.8%	44.6%	20.2%	13.0%	2.3%	100.0%
일본	395	369	244	112	59	1179
	33.5%	31.3%	20.7%	9.5%	5.0%	100.0%
프랑스	596	687	266	149	27	1725
	34.6%	39.8%	15.4%	8.6%	1.6%	100.0%
핀란드	165	454	270	213	39	1141
	14.5%	39.8%	23.7%	18.7%	3.4%	100.0%
대만	157	681	443	577	83	1941
	8.1%	35.1%	22.8%	29.7%	4.3%	100.0%
한국	325	691	283	244	47	1590
	20.4%	43.5%	17.8%	15.3%	3.0%	100.0%
합계	3388	6056	2698	2165	414	14721
	23.0%	41.1%	18.3%	14.7%	2.8%	100.0%

〈부표 32〉 중요결정에 대한 도움 요청 빈도분석(ISSP 2006)

구분	척도				합계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종종	
호주	1044	883	645	102	2674
	39.0%	33.0%	24.1%	3.8%	100.0%
영국	374	268	195	38	875
	42.7%	30.6%	22.3%	4.3%	100.0%
미국	544	445	396	127	1512
	36.0%	29.4%	26.2%	8.4%	100.0%
스웨덴	471	340	243	66	1120
	42.1%	30.4%	21.7%	5.9%	100.0%
캐나다	341	325	189	30	885
	38.5%	36.7%	21.4%	3.4%	100.0%
일본	466	464	206	19	1155
	40.3%	40.2%	17.8%	1.6%	100.0%
프랑스	689	477	481	105	1752
	39.3%	27.2%	27.5%	6.0%	100.0%
핀란드	598	334	149	24	1105
	54.1%	30.2%	13.5%	2.2%	100.0%
대만	686	643	531	93	1953
	35.1%	32.9%	27.2%	4.8%	100.0%
한국	685	459	398	41	1583
	43.3%	29.0%	25.1%	2.6%	100.0%
합계	5898	4638	3433	645	14614
	40.4%	31.7%	23.5%	4.4%	100.0%

〈부표 33〉 자신의 중요결정에 대한 타인의 도움 요청 빈도분석(ISSP 2006)

구분	척도				합계
	전혀 없음	약간 있음	어느 정도 있음	많이 있음	
호주	1055	1154	361	37	2607
	40.5%	44.3%	13.8%	1.4%	100.0%
영국	395	346	105	12	858
	46.0%	40.3%	12.2%	1.4%	100.0%
미국	566	630	229	85	1510
	37.5%	41.7%	15.2%	5.6%	100.0%
스웨덴	335	435	216	35	1021
	32.8%	42.6%	21.2%	3.4%	100.0%
캐나다	347	366	115	21	849
	40.9%	43.1%	13.5%	2.5%	100.0%
일본	397	480	187	15	1079
	36.8%	44.5%	17.3%	1.4%	100.0%
프랑스	660	761	269	19	1709
	38.6%	44.5%	15.7%	1.1%	100.0%
핀란드	489	381	136	22	1028
	47.6%	37.1%	13.2%	2.1%	100.0%
대만	523	682	651	78	1934
	27.0%	35.3%	33.7%	4.0%	100.0%
한국	752	499	307	18	1576
	47.7%	31.7%	19.5%	1.1%	100.0%
합계	5519	5734	2576	342	14171
	38.9%	40.5%	18.2%	2.4%	100.0%

〈부표 34〉 일주일 동안의 타인과의 접촉 빈도분석(ISSP 2006)

구분	척도					합계
	0-4명	5-9명	10-19명	20-49명	50명 이상	
호주	305	624	707	644	404	2684
	11.4%	23.2%	26.3%	24.0%	15.1%	100.0%
영국	141	188	233	202	117	881
	16.0%	21.3%	26.4%	22.9%	13.3%	100.0%
미국	247	354	378	336	199	1514
	16.3%	23.4%	25.0%	22.2%	13.1%	100.0%
스웨덴	150	286	350	286	102	1174
	12.8%	24.4%	29.8%	24.4%	8.7%	100.0%
캐나다	130	191	227	209	131	888
	14.6%	21.5%	25.6%	23.5%	14.8%	100.0%
일본	241	359	341	196	57	1194
	20.2%	30.1%	28.6%	16.4%	4.8%	100.0%
프랑스	237	480	512	379	166	1774
	13.4%	27.1%	28.9%	21.4%	9.4%	100.0%
핀란드	263	335	334	188	45	1165
	22.6%	28.8%	28.7%	16.1%	3.9%	100.0%
대만	289	563	616	357	137	1962
	14.7%	28.7%	31.4%	18.2%	7.0%	100.0%
한국	332	480	414	251	118	1595
	20.8%	30.1%	26.0%	15.7%	7.4%	100.0%
합계	2335	3860	4112	3048	1476	14831
	15.7%	26.0%	27.7%	20.6%	10.0%	100.0%

〈부표 35〉 ISSP(2006) 정부역할 부문 지표의 국가별 평균 및 순위

국가	정치에 대한 영향력		대시민 정부서비스에 대한 신뢰		신뢰할 수 있는 타인의 존재		타인에 대한 불신		타인의 중요결정에 대한 도움 요청		자신의 중요결정에 대한 타인의 도움 요청		일주일 동안의 타인과의 접촉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남아프리카공화국	2.86	5	3	6	1.82	3	1.67	2	1.65	30	1.51	31	2.88	12
네델란드	3.56	24	3.21	13	2.56	30	2.62	28	2.02	4	1.8	16	3.05	5
노르웨이	3.46	18	2.94	5	2.45	29	2.74	31	1.9	15	1.79	18	2.64	21
뉴질랜드	3.5	21	3.09	7	2.13	11	2.19	20	2	8	1.91	8	3.05	6
대만	2.89	6	3.2	12	2.62	31	2.87	32	2.02	5	2.15	3	2.74	17
덴마크	2.94	9	2.55	1	2.79	33	2.96	33	1.94	10	1.88	11	2.64	23
도미니카공화국	2.82	4	3.7	30	1.62	1	1.53	1	1.85	19	2.09	4	3.47	1
독일	3.7	26	3.36	22	2.29	25	2.15	19	1.67	27	1.48	33	2.72	18
라트비아	3.73	27	3.35	21	2.24	22	2.13	17	1.61	32	1.5	32	2.37	31
러시아	3.75	29	3.97	32	1.83	4	2.2	21	1.83	21	2.02	6	2.55	27
미국	3.24	12	3.32	20	2.15	17	1.95	11	2.07	3	1.89	10	2.92	10
베네주엘라	2.18	1	3.19	11	1.95	8	1.74	3	3.13	1	1.72	23	3.4	2
스웨덴	3.53	22	3.46	25	2.38	27	2.63	29	1.91	12	1.95	7	2.92	11
스위스	2.9	7	2.66	2	2.69	32	2.73	30	1.66	28	1.55	30	2.69	19
스페인	3.34	15	3.3	18	1.94	6	2.01	14	1.65	29	1.89	9	2.87	14
슬로베니아	3.83	31	3.28	16	2.24	23	1.98	12	2.45	2	2.3	1	2.42	29
아일랜드	3.42	17	2.71	3	2.13	12	2	13	1.51	33	1.72	24	3.08	3
영국	3.55	23	3.25	15	2.18	19	2.13	18	1.88	16	1.69	27	2.96	9
우루과이	2.92	8	3.24	14	1.81	2	1.78	4	1.88	17	1.87	12	2.88	13
이스라엘	3.29	14	3.39	23	2.15	14	2.03	16	2.01	7	1.73	22	2.64	22
일본	3.09	10	4.03	33	2.28	24	2.21	22	1.81	22	1.83	13	2.56	26
체코	3.94	32	3.63	28	2.35	26	2.34	25	1.77	23	1.68	28	2.61	24
칠레	3.21	11	3.31	19	1.95	9	1.85	7	1.75	24	1.64	29	2.74	16
캐나다	3.35	16	3.1	8	2.21	20	2.33	24	1.9	14	1.78	19	3.02	8
크로아티아	3.83	30	3.77	31	2	10	1.83	6	1.83	20	1.71	25	2.42	30
포르투갈	3.46	19	3.3	17	2.15	16	1.93	9	1.67	26	1.82	14	3.03	7
폴란드	3.75	28	3.64	29	1.93	5	1.95	10	2.01	6	2.29	2	2.24	32
프랑스	3.27	13	3.57	27	2.16	18	2.03	15	2	9	1.79	17	2.86	15
핀란드	3.61	25	2.85	4	2.41	28	2.57	27	1.64	31	1.7	26	2.5	28
필리핀	2.76	3	3.12	9	2.14	13	1.92	8	1.91	13	2.05	5	2.65	20
한국	2.73	2	3.54	26	2.22	21	2.37	26	1.87	18	1.74	21	2.59	25
헝가리	4.02	33	3.4	24	1.94	7	1.82	5	1.72	25	1.8	15	2.06	33
호주	3.47	20	3.14	10	2.15	15	2.23	23	1.93	11	1.76	20	3.08	4

〈부표 36〉 사람을 만나기 위한 스포츠 활동 빈도분석(ISSP 2007)

구분	척도				합계
	매우 중요하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	그리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호주	306	785	572	448	2111
	14.5%	37.2%	27.1%	21.2%	100.0%
대만	296	742	613	431	2082
	14.2%	35.6%	29.4%	20.7%	100.0%
핀란드	138	522	382	134	1176
	11.7%	44.4%	32.5%	11.4%	100.0%
프랑스	277	801	454	139	1671
	16.6%	47.9%	27.2%	8.3%	100.0%
일본	65	323	235	169	792
	8.2%	40.8%	29.7%	21.3%	100.0%
스웨덴	141	483	360	146	1130
	12.5%	42.7%	31.9%	12.9%	100.0%
한국	206	569	331	104	1210
	17.0%	47.0%	27.4%	8.6%	100.0%
합계	1429	4225	2947	1571	10172
	14.0%	41.5%	29.0%	15.4%	100.0%

〈부표 37〉 스포츠 단체 참여 빈도분석(ISSP 2007)

구분	척도					합계
	일주일에 1회	한 달에 1회	수 차례	1-2회	없음	
호주	417	184	193	271	1536	2601
	16.0%	7.1%	7.4%	10.4%	59.1%	100.0%
대만	32	21	39	87	1968	2147
	1.5%	1.0%	1.8%	4.1%	91.7%	100.0%
핀란드	151	78	100	150	833	1312
	11.5%	5.9%	7.6%	11.4%	63.5%	100.0%
프랑스	374	98	191	141	1082	1886
	19.8%	5.2%	10.1%	7.5%	57.4%	100.0%
일본	52	30	59	77	1013	1231
	4.2%	2.4%	4.8%	6.3%	82.3%	100.0%
스웨덴	175	80	169	145	716	1285
	13.6%	6.2%	13.2%	11.3%	55.7%	100.0%
한국	112	165	112	92	950	1431
	7.8%	11.5%	7.8%	6.4%	66.4%	100.0%
합계	1313	656	863	963	8098	11893
	11.0%	5.5%	7.3%	8.1%	68.1%	100.0%

〈부표 38〉 문화 단체 참여 빈도분석(ISSP 2007)

구분	척도					합계
	일주일에 1회	한 달에 1회	수 차례	1-2회	없음	
호주	57	98	201	391	1809	2556
	2.2%	3.8%	7.9%	15.3%	70.8%	100.0%
대만	12	24	47	150	1913	2146
	.6%	1.1%	2.2%	7.0%	89.1%	100.0%
핀란드	27	35	72	186	974	1294
	2.1%	2.7%	5.6%	14.4%	75.3%	100.0%
프랑스	176	152	273	218	1072	1891
	9.3%	8.0%	14.4%	11.5%	56.7%	100.0%
일본	24	29	52	92	1029	1226
	2.0%	2.4%	4.2%	7.5%	83.9%	100.0%
스웨덴	29	50	156	206	825	1266
	2.3%	3.9%	12.3%	16.3%	65.2%	100.0%
한국	31	91	156	134	1018	1430
	2.2%	6.4%	10.9%	9.4%	71.2%	100.0%
합계	356	479	957	1377	8640	11809
	3.0%	4.1%	8.1%	11.7%	73.2%	100.0%

〈부표 39〉 종교 단체 참여 빈도분석(ISSP 2007)

구분	척도					합계
	일주일에 1회	한 달에 1회	수 차례	1-2회	없음	
호주	295	105	204	331	1680	2615
	11.3%	4.0%	7.8%	12.7%	64.2%	100.0%
대만	85	88	136	317	1521	2147
	4.0%	4.1%	6.3%	14.8%	70.8%	100.0%
핀란드	51	44	99	261	851	1306
	3.9%	3.4%	7.6%	20.0%	65.2%	100.0%
프랑스	99	76	171	176	1358	1880
	5.3%	4.0%	9.1%	9.4%	72.2%	100.0%
일본	14	23	27	30	1132	1226
	1.1%	1.9%	2.2%	2.4%	92.3%	100.0%
스웨덴	40	47	116	205	859	1267
	3.2%	3.7%	9.2%	16.2%	67.8%	100.0%
한국	262	103	133	151	780	1429
	18.3%	7.2%	9.3%	10.6%	54.6%	100.0%
합계	846	486	886	1471	8181	11870
	7.1%	4.1%	7.5%	12.4%	68.9%	100.0%

〈부표 40〉 지역사회 봉사단체 참여 빈도분석(ISSP 2007)

구분	척도					합계
	일주일에 1회	한 달에 1회	수 차례	1-2회	없음	
호주	175	199	249	443	1543	2609
	6.7%	7.6%	9.5%	17.0%	59.1%	100.0%
대만	45	94	135	285	1588	2147
	2.1%	4.4%	6.3%	13.3%	74.0%	100.0%
핀란드	33	52	80	152	986	1303
	2.5%	4.0%	6.1%	11.7%	75.7%	100.0%
프랑스	87	90	229	294	1200	1900
	4.6%	4.7%	12.1%	15.5%	63.2%	100.0%
일본	8	20	78	123	997	1226
	.7%	1.6%	6.4%	10.0%	81.3%	100.0%
스웨덴	21	48	61	114	1027	1271
	1.7%	3.8%	4.8%	9.0%	80.8%	100.0%
한국	45	87	89	134	1074	1429
	3.1%	6.1%	6.2%	9.4%	75.2%	100.0%
합계	414	590	921	1545	8415	11885
	3.5%	5.0%	7.7%	13.0%	70.8%	100.0%

〈부표 41〉 정치 단체 참여 빈도분석(ISSP 2007)

구분	척도					합계
	일주일에 1회	한 달에 1회	수 차례	1-2회	없음	
호주	7	22	38	106	2392	2565
	.3%	.9%	1.5%	4.1%	93.3%	100.0%
대만	2	8	24	71	2042	2147
	.1%	.4%	1.1%	3.3%	95.1%	100.0%
핀란드	6	12	17	61	1199	1295
	.5%	.9%	1.3%	4.7%	92.6%	100.0%
프랑스	18	29	82	68	1679	1876
	1.0%	1.5%	4.4%	3.6%	89.5%	100.0%
일본	1	2	15	43	1165	1226
	.1%	.2%	1.2%	3.5%	95.0%	100.0%
스웨덴	8	24	44	57	1142	1275
	.6%	1.9%	3.5%	4.5%	89.6%	100.0%
한국	0	4	12	41	1373	1430
	.0%	.3%	.8%	2.9%	96.0%	100.0%
합계	42	101	232	447	10992	11814
	.4%	.9%	2.0%	3.8%	93.0%	100.0%

〈부표 42〉 ISSP(2007) 레저시간과 스포츠 부문 지표의 국가별 평균 및 순위

국가	사람을 만나기 위한 스포츠 활동		스포츠 단체 참여		문화 단체 참여		종교 단체 참여		지역사회 봉사단체 참여		정치 단체 참여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남아프리카공화국	1,89	5	4,2	13	4,38	8	3,26	4	4,44	8	4,72	5
노르웨이	2,43	19	3,97	7	4,1	4	4,4	15	4,5	13	4,85	11
뉴질랜드	2,35	17	2,34	1	2,92	1	2,24	1	2,8	1	3,51	1
대만	2,57	23	4,83	24	4,83	22	4,44	17	4,53	14	4,93	20
도미니카공화국	1,53	1	3,88	3	3,95	2	3,22	2	3,79	2	3,97	2
라트비아	2,16	9	4,57	20	4,52	15	4,66	21	4,79	23	4,92	19
러시아	2,28	15	4,73	22	4,85	24	4,72	23	4,81	24	4,91	18
맥시코	2,29	16	4,08	8	4,48	11	3,61	5	4,46	9	4,61	4
스웨덴	2,45	21	3,89	4	4,38	7	4,42	16	4,63	20	4,8	8
스위스	2,11	8	4,1	10	4,29	5	4,39	12	4,5	12	4,81	9
슬로베니아	1,81	3	4,17	12	4,45	10	4,56	20	4,27	6	4,86	13
우루과이	1,9	6	4,44	18	4,51	14	4,29	10	4,59	17	4,85	12
이스라엘	2,42	18	4,53	19	4,5	13	3,97	7	4,23	5	4,77	6
일본	2,64	24	4,6	21	4,69	21	4,83	24	4,7	21	4,93	22
체코	1,92	7	4,39	16	4,68	20	4,69	22	4,6	19	4,89	17
칠레	2,25	12	4,37	15	4,63	19	4,02	8	4,53	15	4,93	21
크로아티아	1,64	2	4,43	17	4,6	18	4,45	18	4,6	18	4,84	10
폴란드	2,23	11	4,82	23	4,83	23	4,55	19	4,76	22	4,97	24
프랑스	2,27	13	3,77	2	3,98	3	4,39	14	4,28	7	4,79	7
플랜더스	2,19	10	3,96	6	4,3	6	4,38	11	4,49	11	4,88	14
핀란드	2,44	20	4,09	9	4,58	17	4,39	13	4,54	16	4,88	15
필리핀	1,82	4	4,34	14	4,53	16	3,23	3	4,03	3	4,51	3
한국	2,28	14	4,12	11	4,41	9	3,76	6	4,47	10	4,95	23
호주	2,55	22	3,89	5	4,49	12	4,15	9	4,14	4	4,89	16

〈부표 43〉 주요국 교회 신자 혹은 종교단체 회원(WVS 2005-2008)

구분	척도			합계
	비회원	비적극적 회원	적극적 회원	
미국	423	349	466	1238
	34,2%	28,2%	37,6%	100,0%
일본	931	81	47	1059
	87,9%	7,6%	4,4%	100,0%
호주	748	386	226	1360
	55,0%	28,4%	16,6%	100,0%
스웨덴	454	476	67	997
	45,5%	47,7%	6,7%	100,0%
핀란드	217	614	180	1011
	21,5%	60,7%	17,8%	100,0%
스위스	661	334	243	1238
	53,4%	27,0%	19,6%	100,0%
중국	1796	145	49	1990
	90,3%	7,3%	2,5%	100,0%
대만	988	148	91	1227
	80,5%	12,1%	7,4%	100,0%
독일	1297	484	268	2049
	63,3%	23,6%	13,1%	100,0%
한국	636	328	228	1192
	53,4%	27,5%	19,1%	100,0%
합계	8151	3345	1865	13361
	61,0%	25,0%	14,0%	100,0%

〈부표 44〉 스포츠 혹은 레크레이션 단체 회원(WVS 2005-2008)

구분	척도			합계
	비회원	비적극적 회원	적극적 회원	
미국	884	147	199	1230
	71.9%	12.0%	16.2%	100.0%
일본	765	95	192	1052
	72.7%	9.0%	18.3%	100.0%
호주	684	218	451	1353
	50.6%	16.1%	33.3%	100.0%
스웨덴	562	144	294	1000
	56.2%	14.4%	29.4%	100.0%
핀란드	643	146	218	1007
	63.9%	14.5%	21.6%	100.0%
스위스	621	174	442	1237
	50.2%	14.1%	35.7%	100.0%
중국	1666	209	124	1999
	83.3%	10.5%	6.2%	100.0%
대만	990	116	121	1227
	80.7%	9.5%	9.9%	100.0%
독일	1392	161	498	2051
	67.9%	7.8%	24.3%	100.0%
한국	760	261	176	1197
	63.5%	21.8%	14.7%	100.0%
합계	8967	1671	2715	13353
	67.2%	12.5%	20.3%	100.0%

〈부표 45〉 예술, 음악, 교육 단체 회원(WVS 2005-2008)

구분	척도			합계
	비회원	비적극적 회원	적극적 회원	
미국	901	149	177	1227
	73.4%	12.1%	14.4%	100.0%
일본	890	59	106	1055
	84.4%	5.6%	10.0%	100.0%
호주	891	174	246	1311
	68.0%	13.3%	18.8%	100.0%
스웨덴	752	120	128	1000
	75.2%	12.0%	12.8%	100.0%
핀란드	815	95	96	1006
	81.0%	9.4%	9.5%	100.0%
스위스	864	130	242	1236
	69.9%	10.5%	19.6%	100.0%
중국	1712	168	115	1995
	85.8%	8.4%	5.8%	100.0%
대만	1104	75	48	1227
	90.0%	6.1%	3.9%	100.0%
독일	1771	122	157	2050
	86.4%	6.0%	7.7%	100.0%
한국	878	212	106	1196
	73.4%	17.7%	8.9%	100.0%
합계	10578	1304	1421	13303
	79.5%	9.8%	10.7%	100.0%

〈부표 46〉 노동조합 회원(WVS 2005-2008)

구분	척도			합계
	비회원	비적극적 회원	적극적 회원	
미국	1026	109	93	1228
	83.6%	8.9%	7.6%	100.0%
일본	941	78	26	1045
	90.0%	7.5%	2.5%	100.0%
호주	1041	161	115	1317
	79.0%	12.2%	8.7%	100.0%
스웨덴	415	488	97	1000
	41.5%	48.8%	9.7%	100.0%
핀란드	498	396	117	1011
	49.3%	39.2%	11.6%	100.0%
스위스	1065	115	57	1237
	86.1%	9.3%	4.6%	100.0%
중국	1737	166	90	1993
	87.2%	8.3%	4.5%	100.0%
대만	1096	91	40	1227
	89.3%	7.4%	3.3%	100.0%
독일	1819	167	57	2043
	89.0%	8.2%	2.8%	100.0%
한국	1086	92	18	1196
	90.8%	7.7%	1.5%	100.0%
합계	10724	1863	710	13297
	80.6%	14.0%	5.3%	100.0%

〈부표 47〉 정당 회원(WVS 2005-2008)

구분	척도			합계
	비회원	비적극적 회원	적극적 회원	
미국	600	411	221	1232
	48.7%	33.4%	17.9%	100.0%
일본	974	48	22	1044
	93.3%	4.6%	2.1%	100.0%
호주	1182	110	28	1320
	89.5%	8.3%	2.1%	100.0%
스웨덴	888	80	29	997
	89.1%	8.0%	2.9%	100.0%
핀란드	866	111	33	1010
	85.7%	11.0%	3.3%	100.0%
스위스	1041	96	98	1235
	84.3%	7.8%	7.9%	100.0%
중국	1745	135	120	2000
	87.3%	6.8%	6.0%	100.0%
대만	1141	65	21	1227
	93.0%	5.3%	1.7%	100.0%
독일	1936	61	47	2044
	94.7%	3.0%	2.3%	100.0%
한국	1106	76	13	1195
	92.6%	6.4%	1.1%	100.0%
합계	11479	1193	632	13304
	86.3%	9.0%	4.8%	100.0%

〈부표 48〉 환경 단체 회원(WVS 2005-2008)

구분	척도			합계
	비회원	비적극적 회원	적극적 회원	
미국	1028	137	67	1232
	83.4%	11.1%	5.4%	100.0%
일본	998	24	25	1047
	95.3%	2.3%	2.4%	100.0%
호주	1118	139	57	1314
	85.1%	10.6%	4.3%	100.0%
스웨덴	894	93	9	996
	89.8%	9.3%	.9%	100.0%
핀란드	908	83	17	1008
	90.1%	8.2%	1.7%	100.0%
스위스	949	220	62	1231
	77.1%	17.9%	5.0%	100.0%
중국	1790	115	88	1993
	89.8%	5.8%	4.4%	100.0%
대만	1165	35	27	1227
	94.9%	2.9%	2.2%	100.0%
독일	1943	73	29	2045
	95.0%	3.6%	1.4%	100.0%
한국	1098	76	22	1196
	91.8%	6.4%	1.8%	100.0%
합계	11891	995	403	13289
	89.5%	7.5%	3.0%	100.0%

〈부표 49〉 전문가 단체 회원(WVS 2005-2008)

구분	척도			합계
	비회원	비적극적 회원	적극적 회원	
미국	920	162	150	1232
	74.7%	13.1%	12.2%	100.0%
일본	903	87	57	1047
	86.2%	8.3%	5.4%	100.0%
호주	901	198	212	1311
	68.7%	15.1%	16.2%	100.0%
스웨덴	796	137	62	995
	80.0%	13.8%	6.2%	100.0%
핀란드	874	110	24	1008
	86.7%	10.9%	2.4%	100.0%
스위스	896	156	180	1232
	72.7%	12.7%	14.6%	100.0%
중국	1854	100	36	1990
	93.2%	5.0%	1.8%	100.0%
대만	1046	138	43	1227
	85.2%	11.2%	3.5%	100.0%
독일	1877	90	71	2038
	92.1%	4.4%	3.5%	100.0%
한국	1077	88	29	1194
	90.2%	7.4%	2.4%	100.0%
합계	11144	1266	864	13274
	84.0%	9.5%	6.5%	100.0%

〈부표 50〉 자비롭고 인도주의적 단체 회원(WVS 2005-2008)

구분	척도			합계
	비회원	비적극적 회원	적극적 회원	
미국	847	170	198	1215
	69.7%	14.0%	16.3%	100.0%
일본	992	32	18	1042
	95.2%	3.1%	1.7%	100.0%
호주	924	194	221	1339
	69.0%	14.5%	16.5%	100.0%
스웨덴	672	229	98	999
	67.3%	22.9%	9.8%	100.0%
핀란드	791	129	88	1008
	78.5%	12.8%	8.7%	100.0%
스위스	798	278	158	1234
	64.7%	22.5%	12.8%	100.0%
중국	1832	90	67	1989
	92.1%	4.5%	3.4%	100.0%
대만	1010	141	76	1227
	82.3%	11.5%	6.2%	100.0%
독일	1841	121	83	2045
	90.0%	5.9%	4.1%	100.0%
한국	1076	97	22	1195
	90.0%	8.1%	1.8%	100.0%
합계	10783	1481	1029	13293
	81.1%	11.1%	7.7%	100.0%

〈부표 51〉 소비자 단체 회원(WVS 2005-2008)

구분	척도			합계
	비회원	비적극적 회원	적극적 회원	
미국	1060	80	53	1193
	88.9%	6.7%	4.4%	100.0%
일본	1005	29	7	1041
	96.5%	2.8%	.7%	100.0%
호주	1188	69	39	1296
	91.7%	5.3%	3.0%	100.0%
스웨덴	630	330	31	991
	63.6%	33.3%	3.1%	100.0%
핀란드	923	70	13	1006
	91.7%	7.0%	1.3%	100.0%
스위스	1058	140	32	1230
	86.0%	11.4%	2.6%	100.0%
중국	1771	172	46	1989
	89.0%	8.6%	2.3%	100.0%
대만	1196	23	8	1227
	97.5%	1.9%	.7%	100.0%
독일	2002	35	4	2041
	98.1%	1.7%	.2%	100.0%
한국	1113	64	18	1195
	93.1%	5.4%	1.5%	100.0%
합계	11946	1012	251	13209
	90.4%	7.7%	1.9%	100.0%

〈부표 52〉 정치에 대한 관심(WVS 2005-2008)

구분	척도				합계
	매우 관심있다	어느 정도 관심있다	매우 관심없다	전혀 관심없다	
미국	194	556	317	158	1225
	15.8%	45.4%	25.9%	12.9%	100.0%
일본	156	539	327	58	1080
	14.4%	49.9%	30.3%	5.4%	100.0%
호주	208	627	421	154	1410
	14.8%	44.5%	29.9%	10.9%	100.0%
스웨덴	142	450	309	93	994
	14.3%	45.3%	31.1%	9.4%	100.0%
핀란드	45	342	385	239	1011
	4.5%	33.8%	38.1%	23.6%	100.0%
스위스	283	540	282	132	1237
	22.9%	43.7%	22.8%	10.7%	100.0%
중국	506	640	398	234	1778
	28.5%	36.0%	22.4%	13.2%	100.0%
대만	35	319	443	429	1226
	2.9%	26.0%	36.1%	35.0%	100.0%
독일	432	806	529	286	2053
	21.0%	39.3%	25.8%	13.9%	100.0%
한국	49	416	551	180	1196
	4.1%	34.8%	46.1%	15.1%	100.0%
합계	2050	5235	3962	1963	13210
	15.5%	39.6%	30.0%	14.9%	100.0%

〈부표 53〉 WVS(2005-2008) 사회참여 부문 지표 지표의 국가별 비교

국가	교회 혹은 종교단체		스포츠 혹은 레크레이션 단		예술, 음악, 교육 단체		노동조합		정당		환경 단체		전문가 단체		자비롭고 인도주의적 단체		소비자 단체	정치에 대한 관심		
	적극적 회원 (%)	순위	적극적 회원 (%)	순위	적극적 회원 (%)	순위	적극적 회원 (%)	순위	적극적 회원 (%)	순위	적극적 회원 (%)	순위	적극적 회원 (%)	순위	적극적 회원 (%)	순위	적극적 회원 (%)	순위	평균	순위
가나	72.1	1	18.6	11	18.6	11	7.9	10	15.4	5	10.1	4	8.0	15	8.6	20	4.8	7	2.82	15
남아프리카공화국	5.22	4	15.4	18	15.4	18	6.0	18	8.1	10	5.2	14	5.5	24	5.9	24	3.7	11	2.6	17
대만	7.4	30	9.9	28	9.9	28	3.3	31	1.7	37	2.2	24	3.5	27	6.2	23	0.7	33	3.03	40
독일	13.1	23	24.3	5	24.3	5	2.8	34	2.3	29	1.4	33	3.5	28	4.1	29	0.2	41	2.33	8
루마니아	5.4	34	1.0	43	1.0	43	3.8	27	2.5	27	0.2	43	1.2	43	0.8	43	0.1	42	2.97	38
르완다	53.0	3	11.3	26	11.3	26	12.8	3	12.5	7	6.9	8	15.1	4	14.7	5	6.0	6	2.49	14
말레이시아	15.6	22	14.3	22	14.3	22	4.9	20	4.7	18	3.5	21	3.0	31	4.6	28	4.8	8	2.8	29
말리	39.0	8	22.5	6	22.5	6	12.9	2	19.8	1	26.6	1	15.5	2	19.2	1	16.3	1	2.19	4
맥시코	41.6	7	19.8	10	19.8	10	7.6	13	9.7	8	6.1	10	9.9	11	14.2	6	8.7	4	2.9	34
모로코	1.5	41	9.0	30	9.0	30	2.9	32	0.9	42	0.5	39	2.3	37	2.0	35		43	2.95	37
몰디브	12.9	24	6.4	35	6.4	35	6.8	14	2.7	25	1.9	25	7.0	17	2.5	34	2.1	20	2.76	24
미국	37.6	10	16.2	15	16.2	15	7.6	12	17.9	2	5.4	12	12.2	8	16.3	4	4.4	9	2.36	10
버키나파소	24.4	13	8.4	33	8.4	33	3.7	28	6.7	12	4.9	16	5.8	23	2.6	33	2.5	18	2.39	12
베트남	6.0	33	8.8	31	8.8	31	8.2	9	13.9	6	7.9	7	11.1	10	11.8	12	1.5	25	1.95	1
불가리아	1.8	40	1.2	42	1.2	42	3.3	30	2.1	34	0.4	41	1.3	42	0.8	42	0.3	38	2.73	22
브라질	51.6	5	12.3	24	12.3	24	8.7	8	5.3	16	3.6	20	8.7	13	14.2	7	2.0	21	2.65	18
사이프러스	6.4	32	12.9	23	12.9	23	6.8	15	8.9	9	1.5	31	5.8	22	5.3	26	1.8	23	2.71	19
세르비아	3.9	37	6.9	34	6.9	34	2.2	37	2.7	26	1.1	35	1.9	39	1.2	39	0.9	31	2.91	35
스웨덴	6.7	31	29.4	4	29.4	4	9.7	5	2.9	24	0.9	37	6.2	21	9.8	14	3.1	13	2.36	9
스위스	19.6	16	35.7	1	35.7	1	4.6	22	7.9	11	5.0	15	14.6	5	12.8	10	2.6	17	2.21	6
스페인	9.1	29	9.8	29	9.8	29	2.8	33	1.1	40	1.1	34	3.4	29	5.1	27	0.9	30	2.94	36
슬로베니아	12.4	26	18.2	13	18.2	13	8.9	6	2.1	33	2.7	22	6.4	20	7.7	22	1.1	28	2.78	28

국가	교회 혹은 종교단체		스포츠 혹은 레크레이션 단		예술, 음악, 교육 단체		노동조합		정당		환경 단체		전문가 단체		자비롭고 인도주의적 단체		소비자 단체	정치에 대한 관심		
	적극적 회원 (%)	순위	적극적 회원 (%)	순위	적극적 회원 (%)	순위	적극적 회원 (%)	순위	적극적 회원 (%)	순위	적극적 회원 (%)	순위	적극적 회원 (%)	순위	적극적 회원 (%)	순위	적극적 회원 (%)	순우	평균	순위
아르헨티나	17.1	20	8.4	32	8.4	32	1.4	40	2.4	28	1.6	29	3.3	30	5.9	25	0.5	35	3.14	42
안도라	10.8	27	31.7	3	31.7	3	2.6	35	3.2	23	6.1	11	9.8	12	13.3	8	2.7	16	2.78	26
에티오피아	29.8	11	21.8	7	21.8	7	6.3	16	6.1	14	8.1	6	8.5	14	12.2	11	7.7	5	2.18	3
요르단	3.1	38	3.3	39	3.3	39	0.6	42	0.6	43	0.5	40	2.7	33	2.9	32	0.4	37	2.82	31
우크라이나	5.4	35	3.8	38	3.8	38	4.5	24	2.0	36	1.0	36	1.9	38	1.8	37	0.6	34	2.57	16
이집트	0.8	43	1.6	41	1.6	41	0.4	43	1.4	38	0.4	42	2.3	36	1.2	40	0.3	39	3.03	39
이탈리아	9.2	28	17.3	14	17.3	14	3.3	29	3.4	21	1.4	32	7.0	16	9.3	16	1.8	22	2.78	27
인도	21.9	15	15.9	17	15.9	17	15.7	1	17.6	3	10.5	3	12.4	7	10.8	13	10.7	2	2.71	20
인도네시아	38.1	9	10.4	27	10.4	27	1.8	38	4.6	19	200.0	2	15.4	3	17.6	2	3.7	12	2.75	23
일본	4.4	36	18.3	12	18.3	12	2.5	36	2.1	31	2.4	23	5.4	25	1.7	38	0.7	32	2.27	7
잠비아	63.1	2	21.3	9	21.3	9	6.1	17	16.6	4	6.8	9	13.0	6	8.5	21	4.0	10	2.45	13
중국	2.5	39	6.2	36	6.2	36	4.5	23	6.0	15	4.4	18	1.8	40	3.4	30	2.3	19	2.2	5
칠레	22.5	14	14.5	21	14.5	21	4.3	25	2.0	35	1.6	30	3.9	26	8.6	19	1.0	29	3.18	43
태국	19.5	17	12.3	25	12.3	25	7.8	11	6.5	13	10.1	5	11.3	9	8.7	18	9.6	3	2	2
터키	1.4	42	1.9	40	1.9	40	1.0	41	2.2	30	0.8	38	1.5	41	0.9	41	0.2	40	2.85	32
트리니다드토바고	43.1	6	16.0	16	16.0	16	5.4	19	4.0	20	4.8	17	6.9	18	13.0	9	2.8	15	2.89	33
페루	25.4	12	15.3	19	15.3	19	4.3	26	4.8	17	5.3	13	6.5	19	9.7	15	1.2	27	3.1	41
폴란드	12.5	25	4.4	37	4.4	37	4.7	21	1.2	39	1.7	28	2.7	32	3.2	31	0.5	36	2.76	25
핀란드	17.8	19	21.6	8	21.6	8	11.6	4	3.3	22	1.7	27	2.4	34	8.7	17	1.3	26	2.81	30
한국	19.1	18	14.7	20	14.7	20	1.5	39	1.1	41	1.8	26	2.4	35	1.8	36	1.5	24	2.72	21
호주	16.6	21	33.3	2	33.3	2	8.7	7	2.1	32	4.3	19	16.2	1	16.5	3	3.0	14	2.37	11

〈부표 54〉 타인을 돕는 것의 중요성(WVS 2005-2008)

구분	척도						합계
	매우 나와 유사하다	나와 유사하다	어느 정도 유사하다	약간 나와 유사하다	나와 유사하지 않다	전혀 나와 유사하지 않다	
미국	220	451	372	146	22	9	1220
	18.0%	37.0%	30.5%	12.0%	1.8%	.7%	100.0%
일본	60	163	272	429	107	11	1042
	5.8%	15.6%	26.1%	41.2%	10.3%	1.1%	100.0%
호주	249	492	375	241	29	10	1396
	17.8%	35.2%	26.9%	17.3%	2.1%	.7%	100.0%
스웨덴	316	459	171	46	8	0	1000
	31.6%	45.9%	17.1%	4.6%	.8%	.0%	100.0%
핀란드	132	353	323	140	56	6	1010
	13.1%	35.0%	32.0%	13.9%	5.5%	.6%	100.0%
스위스	277	503	338	98	18	6	1240
	22.3%	40.6%	27.3%	7.9%	1.5%	.5%	100.0%
중국	469	926	344	127	68	21	1955
	24.0%	47.4%	17.6%	6.5%	3.5%	1.1%	100.0%
대만	296	514	291	83	35	6	1225
	24.2%	42.0%	23.8%	6.8%	2.9%	.5%	100.0%
독일	339	644	540	376	100	20	2019
	16.8%	31.9%	26.7%	18.6%	5.0%	1.0%	100.0%
한국	81	214	332	316	213	44	1200
	6.8%	17.8%	27.7%	26.3%	17.8%	3.7%	100.0%
합계	2439	4719	3358	2002	656	133	13307
	18.3%	35.5%	25.2%	15.0%	4.9%	1.0%	100.0%

〈부표 55〉 타인에 대한 신뢰(WVS 2005-2008)

구분	척도		합계
	대부분의 타인은 신뢰할 수 있다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국	491	750	1241
	39.6%	60.4%	100.0%
일본	401	625	1026
	39.1%	60.9%	100.0%
호주	676	727	1403
	48.2%	51.8%	100.0%
스웨덴	655	308	963
	68.0%	32.0%	100.0%
핀란드	588	412	1000
	58.8%	41.2%	100.0%
스위스	606	581	1187
	51.1%	48.9%	100.0%
중국	979	894	1873
	52.3%	47.7%	100.0%
대만	297	928	1225
	24.2%	75.8%	100.0%
독일	647	1251	1898
	34.1%	65.9%	100.0%
한국	357	827	1184
	30.2%	69.8%	100.0%
합계	5697	7303	13000
	43.8%	56.2%	100.0%

〈부표 56〉 가족에 대한 신뢰(WVS 2005-2008)

구분	척도				합계
	완벽하게 신뢰한다	어느 정도 신뢰한다	많이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미국	887	307	20	3	1217
	72.9%	25.2%	1.6%	.2%	100.0%
호주	1176	221	12	1	1410
	83.4%	15.7%	.9%	.1%	100.0%
스웨덴	940	56	4	1	1001
	93.9%	5.6%	.4%	.1%	100.0%
핀란드	914	80	5	2	1001
	91.3%	8.0%	.5%	.2%	100.0%
스위스	995	222	15	4	1236
	80.5%	18.0%	1.2%	.3%	100.0%
중국	1755	214	24	2	1995
	88.0%	10.7%	1.2%	.1%	100.0%
대만	1069	149	7	1	1226
	87.2%	12.2%	.6%	.1%	100.0%
독일	1624	364	30	12	2030
	80.0%	17.9%	1.5%	.6%	100.0%
한국	1052	140	8	0	1200
	87.7%	11.7%	.7%	.0%	100.0%
합계	10412	1753	125	26	12316
	84.5%	14.2%	1.0%	.2%	100.0%

〈부표 57〉 이웃에 대한 신뢰(WVS 2005-2008)

구분	척도				합계
	완벽하게 신뢰한다	어느 정도 신뢰한다	많이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미국	139	853	197	29	1218
	11.4%	70.0%	16.2%	2.4%	100.0%
호주	122	1031	216	32	1401
	8.7%	73.6%	15.4%	2.3%	100.0%
스웨덴	394	482	81	15	972
	40.5%	49.6%	8.3%	1.5%	100.0%
핀란드	379	481	117	24	1001
	37.9%	48.1%	11.7%	2.4%	100.0%
스위스	231	798	162	26	1217
	19.0%	65.6%	13.3%	2.1%	100.0%
중국	532	1165	255	19	1971
	27.0%	59.1%	12.9%	1.0%	100.0%
대만	156	841	201	26	1224
	12.7%	68.7%	16.4%	2.1%	100.0%
독일	271	1252	429	57	2009
	13.5%	62.3%	21.4%	2.8%	100.0%
한국	104	724	349	23	1200
	8.7%	60.3%	29.1%	1.9%	100.0%
합계	2328	7627	2007	251	12213
	19.1%	62.4%	16.4%	2.1%	100.0%

〈부표 58〉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WVS 2005-2008)

구분	척도				합계
	완벽하게 신뢰한다	어느 정도 신뢰한다	많이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미국	383	774	53	6	1216
	31.5%	63.7%	4.4%	.5%	100.0%
호주	596	780	24	4	1404
	42.5%	55.6%	1.7%	.3%	100.0%
스웨덴	494	489	17	1	1001
	49.4%	48.9%	1.7%	.1%	100.0%
핀란드	449	514	44	6	1013
	44.3%	50.7%	4.3%	.6%	100.0%
스위스	410	763	51	8	1232
	33.3%	61.9%	4.1%	.6%	100.0%
중국	400	1194	340	14	1948
	20.5%	61.3%	17.5%	.7%	100.0%
대만	248	870	104	5	1227
	20.2%	70.9%	8.5%	.4%	100.0%
독일	486	1411	114	8	2019
	24.1%	69.9%	5.6%	.4%	100.0%
한국	177	831	172	20	1200
	14.8%	69.3%	14.3%	1.7%	100.0%
합계	3643	7626	919	72	12260
	29.7%	62.2%	7.5%	.6%	100.0%

〈부표 59〉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WVS 2005-2008)

구분	척도				합계
	완벽하게 신뢰한다	어느 정도 신뢰한다	많이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미국	4	527	522	165	1218
	.3%	43.3%	42.9%	13.5%	100.0%
호주	13	689	535	164	1401
	.9%	49.2%	38.2%	11.7%	100.0%
스웨덴	58	619	247	58	982
	5.9%	63.0%	25.2%	5.9%	100.0%
핀란드	28	499	396	84	1007
	2.8%	49.6%	39.3%	8.3%	100.0%
스위스	18	584	497	123	1222
	1.5%	47.8%	40.7%	10.1%	100.0%
중국	28	184	1263	411	1886
	1.5%	9.8%	67.0%	21.8%	100.0%
대만	8	233	813	170	1224
	.7%	19.0%	66.4%	13.9%	100.0%
독일	20	475	1038	451	1984
	1.0%	23.9%	52.3%	22.7%	100.0%
한국	12	149	707	331	1199
	1.0%	12.4%	59.0%	27.6%	100.0%
합계	189	3959	6018	1957	12123
	1.6%	32.7%	49.6%	16.1%	100.0%

〈부표 60〉 타종교인에 대한 신뢰(WVS 2005-2008)

구분	척도				합계
	완벽하게 신뢰한다	어느 정도 신뢰한다	많이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미국	90	889	179	45	1203
	7.5%	73.9%	14.9%	3.7%	100.0%
호주	83	946	296	62	1387
	6.0%	68.2%	21.3%	4.5%	100.0%
스웨덴	155	690	83	28	956
	16.2%	72.2%	8.7%	2.9%	100.0%
핀란드	119	633	187	43	982
	12.1%	64.5%	19.0%	4.4%	100.0%
스위스	63	760	280	51	1154
	5.5%	65.9%	24.3%	4.4%	100.0%
중국	24	195	651	384	1254
	1.9%	15.6%	51.9%	30.6%	100.0%
대만	20	545	564	87	1216
	1.6%	44.8%	46.4%	7.2%	100.0%
독일	34	707	774	258	1773
	1.9%	39.9%	43.7%	14.6%	100.0%
한국	39	457	594	110	1200
	3.3%	38.1%	49.5%	9.2%	100.0%
합계	627	5822	3608	1068	11125
	5.6%	52.3%	32.4%	9.6%	100.0%

〈부표 61〉 타국인에 대한 신뢰(WVS 2005-2008)

구분	척도				합계
	완벽하게 신뢰한다	어느 정도 신뢰한다	많이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미국	69	855	227	55	1206
	5.7%	70.9%	18.8%	4.6%	100.0%
호주	72	990	285	46	1393
	5.2%	71.1%	20.5%	3.3%	100.0%
스웨덴	183	692	70	19	964
	19.0%	71.8%	7.3%	2.0%	100.0%
핀란드	105	603	230	53	991
	10.6%	60.8%	23.2%	5.3%	100.0%
스위스	64	813	254	35	1166
	5.5%	69.7%	21.8%	3.0%	100.0%
중국	17	142	622	423	1204
	1.4%	11.8%	51.7%	35.1%	100.0%
대만	4	363	650	195	1212
	.3%	30.0%	53.6%	16.1%	100.0%
독일	36	694	758	280	1768
	2.0%	39.3%	42.9%	15.8%	100.0%
한국	22	313	661	203	1199
	1.8%	26.1%	55.1%	16.9%	100.0%
합계	572	5465	3757	1309	11103
	5.2%	49.2%	33.8%	11.8%	100.0%

〈부표 62〉 WVS(2005-2008) 신뢰 부문 지표 지표의 국가별 비교

국가	타인을 돕는 것의 중요성		타인에 대한 신뢰		가족에 대한 신뢰		이웃에 대한 신뢰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		타종교인에 대한 신뢰		타국인에 대한 신뢰	
	평균	순위	대부분의 타인 신뢰 (%)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가나	1.82	4	8.5	39	1.36	40	2.27	31	2.24	35	3.12	29	2.5	13	2.86	23
남아프리카공화국	2.18	16	17.5	27	1.18	22	2.14	23	1.99	20	2.96	15	2.34	10	2.58	11
대만	2.24	22	24.2	17	1.14	15	2.08	15	1.89	14	2.94	13	2.59	14	2.85	22
독일	2.66	35	34.1	11	1.23	31	2.14	22	1.82	9	2.97	16	2.71	24	2.73	19
루마니아	2.72	36	20.3	21	1.27	33	2.53	40	2.46	41	3.24	34	2.91	34	2.92	30
르완다	2.22	19	4.9	41	1.31	36	1.87	9	2.01	23	2.81	7	2.33	8	2.69	17
말레이시아	2.84	39	8.8	38	1.16	19	2.06	14	2.15	29	3.22	32	2.76	28	3.13	37
말리	1.71	3	17.5	28	1.1	8	1.82	8	1.88	12	2.77	6	2.15	3	2.3	7
맥시코	2.16	13	15.6	30	1.32	38	2.5	38	2.16	31	3.32	38	2.99	37	3.16	39
모로코	2.26	23	13.0	33	1.11	10	1.72	3	1.89	13	3.11	28	3.09	40	3.1	36
몰디브	2.45	31	17.9	26	1.22	29	2.47	37	2.16	32	3.29	37	3.02	39	2.82	21
미국	2.45	30	39.6	9	1.29	34	2.1	18	1.74	6	2.7	5	2.15	2	2.22	4
버키나파소	2.13	12	14.7	32	1.21	27	2.08	17	2.27	37	2.99	19	2.46	12	2.58	12
베트남	2.34	29	52.1	4	1.12	11	1.8	7	2.15	30	2.9	9	2.85	32	3	33
불가리아	2.49	32	22.0	19	1.11	9	2.1	19	1.87	10	3.02	21	2.65	22	2.67	15
브라질	1.91	5	9.2	37	1.41	42	2.52	39	2.32	39	3.36	41	2.6	16	3.15	38
사이프러스	1.67	1	12.8	34	1.14	18	2.25	30	1.96	17	3.34	40	2.91	35	2.89	28

국가	타인을 돕는 것의 중요성		타인에 대한 신뢰		가족에 대한 신뢰		이웃에 대한 신뢰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		타종교인에 대한 신뢰		타국인에 대한 신뢰	
	평균	순위	대부분의 타인 신뢰 (%)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세르비아	2,83	38	15,3	31	1,09	5	2,21	28	1,89	15	2,99	18	2,59	15	2,57	10
스웨덴	1,97	7	68,0	1	1,07	4	1,71	2	1,53	1	2,31	1	1,98	1	1,92	1
스위스	2,27	26	51,1	5	1,21	28	1,99	13	1,72	5	2,59	3	2,28	6	2,22	5
스페인	2,16	14	19,9	22	1,09	6	2,08	16	1,75	7	2,89	8	2,63	18	2,59	13
슬로베니아	2,2	17	18,1	25	1,21	25	2,3	33	2,01	22	3,29	36	2,89	33	2,88	27
아르헨티나	2,22	20	16,9	29	1,13	13	2,16	26	1,82	8	2,93	12	2,33	9	2,38	8
안도라	2,07	11	20,7	20	1,2	24	2,58	41	1,87	11	3,1	27	2,29	7	2,2	2
에티오피아	2,75	37	24,4	16	1,14	16	1,88	11	2,2	34	2,92	11	2,64	20	2,87	25
요르단	1,68	2	31,3	12	1,04	1	1,76	4	2	21	3,05	22	2,97	36	3	34
우크라이나	2,23	21	28,3	15	1,24	32	2,16	25	2,03	24	3,09	25	2,75	27	2,69	18
이집트	2,06	10	18,4	24	1,04	2	1,58	1	1,67	4	2,91	10	2,81	30	3,19	40
이탈리아			29,2	14	1,14	17	2,27	32	2,28	38	3,07	23	2,74	26	2,69	16
인도	2,32	28	23,3	18	1,17	20	1,79	6	1,96	18	2,97	17	2,64	19	2,88	26
인도네시아	2,17	15	42,5	7	1,21	26	2,11	21	1,95	16	3	20	2,68	23	2,8	20
일본	3,38	41	39,1	10												
잠비아	2,32	27	11,5	36	1,41	41	2,34	34	2,33	40	3,25	35	2,74	25	3,06	35
중국	2,21	18	52,3	3	1,13	14	1,88	10	1,98	19	3,09	24	3,11	42	3,21	41
칠레	1,94	6	12,4	35	1,18	23	2,44	36	2,27	36	3,33	39	2,8	29	2,89	29
태국	3,03	40	41,5	8	1,22	30	1,96	12	2,18	33	3,1	26	2,84	31	2,99	31
터키	2,04	9	4,8	42	1,05	3	2,14	24	2,07	28	3,23	33	2,99	38	2,99	32
트리니다드토바고	2,02	8	3,8	43	1,34	39	2,41	35	2,05	27	3,16	31	2,4	11	2,52	9
페루	2,27	24	6,4	40	1,31	37	2,8	42	2,57	42	3,51	42	3,1	41	3,31	42
폴란드	2,27	25	19,5	23	1,3	35	2,2	27	2,04	26	2,94	14	2,6	17	2,63	14
핀란드	2,66	34	58,8	2	1,1	7	1,79	5	1,61	3	2,53	2	2,16	4	2,23	6
한국	3,42	42	30,2	13	1,13	12	2,24	29	2,03	25	3,13	30	2,65	21	2,87	24
호주	2,53	33	48,2	6	1,18	21	2,11	20	1,6	2	2,61	4	2,24	5	2,22	3

〔부록 2〕

전문가 조사 설문지

▣ 설문 안내 ▣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사회적자본수준·정책분석 및 교육투자효율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일환으로 정부부처별 2009년 정책사업 중 사회적자본과 관련한 정책사업을 파악하여 예산규모 및 집행과정을 분석하기위해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행정안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총6개 부처의 사회적자본 관련 정책사업을 선별하였습니다.

선별된 부처별 정책사업과 사회적자본의 관련성을분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가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통계적 자료로만 활용되며,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응답결과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수준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투자 방안 도출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하셔서 ○월 ○일까지 회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11월

연구책임자:고등·인재교육연구본부장홍영란드림

☞문의처

본조사와관련하여문의하실사항이있으시면아래전화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한국교육개발원고등·인재교육연구본부

다음은 2009년도 정부부처별 정책사업 중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각 정책사업(단위사업)명과 내용을 참고하시어 정책사업별 사회적 자본 하위영역과 사회적자본과의 관련성을 체크해주십시오.

【응답방법】

설문지에 제시된 부처별 정책사업(단위사업)과 내용을 읽어보시고, 각 정책사업이 사회적 자본 하위영역인 "시민의식/사회참여", "신뢰/관용성", "네트워크/파트너십"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사업이 사회적 자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사회적 자본 인프라 구축과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시어 해당란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정책사업(단위사업)별로 "사회적 자본 하위영역"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에 각각 하나의 응답란에만 ✓해주십시오.

(예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사업 중 "영어교육격차해소"사업이 사회적 자본 하위영역 중 "신뢰/관용성" 영역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와 같이 "신뢰/관용성"란에 ✓해주시고, 사회적 자본 형성에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간접관련정책"란에 ✓해주시면됩니다.

			사회적 자본 하위영역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			
소관 부처	프로그램	단위사업	시민의식/사회참여	신뢰/관용성	네트워크/파트너십	직접관련정책	간접관련정책	인프라 구축 관련 정책	단위사업 내용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내실화	영어교육격차해소		✓			✓		도농간 영어교육 격차해소를 위한 학교교육기반 지원사업

			사회적 자본 하위영역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			
소관부처	프로그램	단위사업	시민의식/사회참여	신뢰/관용성	네트워크/파트너십	직접 관련 정책	간접 관련 정책	인프라 구축 관련 정책	단위사업 내용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 내실화	학생지도 강화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지원을 통해 학력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 유도
		e-러닝 활성화							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e-Learning 기반을 조성하여 자발적인 학습참여와 협력학습 촉진
		지방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 운영							업무관리, 성과관리, 지식관리, 예산·회계관리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함으로써 교육공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개선
	대학의 특성화 다양화	수도권 대학 특성화							수도권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를 지원하여 대학간 인재육성 역할분담 및 균형 발전 도모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이공계 국가장학사업							우수인재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공계 대학(원)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간 인력수급의 불균형 해소
	평생학습 체제 구축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비 지출
	직업교육 체제 구축	전문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학생의 근로와 장학금을 연계하여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교육소외 문제를 해결
통일부	인도적 사업	새터민 및 이산가족 지원 정보화							새터민 활동 및 이산가족 관련 정보통합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새터민과 이산가족의 사회통합을 지원
		새터민							정착금과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사회적 자본 하위영역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			
소관부처	프로그램	단위사업	시민의식/사회참여	신뢰/관용성	네트워크/파트너십	직접 관련 정책	간접 관련 정책	인프라 구축 관련 정책	단위사업 내용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							비용을 지급하여 새터민이 사회일원으로 적응하도록 지원
	통일교육	통일교육 추진							북한의 실상 및 안보현실에 관한 대국민 교육을 통해 올바른 통일관, 안보관, 북한관 정립
		사이버 통일교육							교원, 공무원, 청소년 대상의 통일강좌를 "사이버 통일교육센터"에서 운영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공직선거 관리							공정한 공직자 선거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을 통해 선거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선거참여 촉진
		주민생활 지원통합 정보시스템 운영							복지, 보건, 주거, 평생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등 주민생활 관련 8대 주민서비스를 포탈시스템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주민서비스 업무에 대한 신뢰와 편의성 도모
	국가사회정보화	생산적 정보문화 조성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및 인터넷 중독 예방 등 정보취약계층의 사회통합과 가상공간에서의 민주적인 사회참여 도모
	재난안전	통합적 재난안전 체계구축							행안부와 소방방재청 간의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통합함으로써 재난안전 업무의 중복문제 해소와 합리적 역할분담 도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비영리민간단체의 사회적 공익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

			사회적 자본 하위영역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			
소관부처	프로그램	단위사업	시민의식/사회참여	신뢰/관용성	네트워크/파트너십	직접 관련 정책	간접 관련 정책	인프라 구축 관련 정책	단위사업 내용
		민관협력 지원							지역의 인적·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지자체 사업에서 기업,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문화 지원	종교문화 활동 및 보존지원							가치있는 종교문화 활동과 보존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종교단체 참여 촉진과 종교문화의 전수 지원
		종교문화 기반구축							종교 문화재 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비용을 지원하여 종교문화의 보존과 국민의 이해 증진
		국어·민족문화의 진흥 지원							한국어의 해외보급 및 민족문화 계승/창달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식 함양 도모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역사예술, 공연 등 지역의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산업 지원(문화중심도시 선정 등)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함양
		해외문화원 운영							다른 국가의 문화홍보 및 한국과의 지속적이고 상호적인 문화교류 관계형성을 위해 주재 문화원의 활동을 지원하여 타국가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
		국제문화 협력 강화							한국과의 수교기념행사, 재외 한국문화원, 외국방송사와의 방송교류협력 등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과 지속가능한 국제교류 도모

			사회적 자본 하위영역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			
소관부처	프로그램	단위사업	시민의식/사회참여	신뢰/관용성	네트워크/파트너십	직접 관련 정책	간접 관련 정책	인프라 구축 관련 정책	단위사업 내용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문화예술 교육지원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독창적 문화예술 전수
		문화예술 단체지원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지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 등)를 지원함으로써 학교와 사회 단체 간 문화예술교육 협력 제고
		공연 예술 활성화							전통공연, 무용, 연극 등 공연예술을 위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활동 참여 촉진
		전통예술 유산의 창조적 계승							문화유산과 전통예술의 계승 및 전수를 위한 각종 사업활동을 지원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예술의 육성
	문화예술기반시설확충	문화예술 공간조성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위한 문화공간(예, 문화예술지원센터 등) 확충 및 운영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활동 참여 촉진
	콘텐츠 산업 육성	문화 콘텐츠 진흥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문화콘텐츠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한국 고유문화에 대한 홍보 및 인식 제고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 활성화							창작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보호와 합법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 교육홍보, 저작권유통 등의 기반을 조성하여 저작활동의 신뢰 제고

			사회적 자본 하위영역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			
소관부처	프로그램	단위사업	시민의식/사회참여	신뢰/관용성	네트워크/파트너십	직접 관련 정책	간접 관련 정책	인프라 구축 관련 정책	단위사업 내용
	국립현대미술관운영	사이버 미술관 확충							국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미술정보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사이버미술관 확충사업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문화활동 참여 촉진
	국정홍보기획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강화							정치연설, 정책관련 언론보도 등 국민대상의 정책홍보를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제고와 정치참여 촉진
		정책포털 시스템 운영							부처별 정책관련 뉴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정치참여를 촉진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근로무능력자 대상의 창업지원사업(재원: 저소득층생업자금융자,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통합 도모
	아동복지지원	방과후 활동 지원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의 방과후 프로그램(예,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운영을 통해 학습부진문제를 해소하고, 생활지도를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사회통합 도모
		드림스타트 지원							취약지역 아동의 양육여건을 지원하고,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운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이탈방지 및 사회통합 도모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장애인 지원							저소득 장애인 대상의 창업자금 지원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자립기회 제공과 사회통합에 기여

			사회적 자본 하위영역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			
소관부처	프로그램	단위사업	시민의식/사회참여	신뢰/관용성	네트워크/파트너십	직접 관련 정책	간접 관련 정책	인프라 구축 관련 정책	단위사업 내용
		장애인자립자금 융자							장애인의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통합 촉진
		장애인 선택적 복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활동 보조서비스 지원
		장애인 단체지원							장애인 복지와 사회통합을 제공하는 장애인 단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민간보조금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소개하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에 도우미를 배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지원
	가족기능 강화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결혼이민자가 한국 문화환경에 조기 정착하여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한국어 교육, 생활교육, 영유아의 보육시설이용료 지원, 언어문화적 격차해소, 자녀학습지원 등)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							전문언어지도사 파견, 다문화언어교실 운영 등 아동연령에 맞는 개별·모둠 수업을 통해 다문화 가족 아동의 언어발달을 촉진하여 한국에 대한 적응과 소속감 제고
	아동·청소년 정책	아동·청소년 참여. 인권증진							아동·청소년 정책 및 사업 과정에 아동/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참여권과 인권 증진
		아동·							세계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사회적 자본 하위영역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			
소관부처	프로그램	단위사업	시민의식/사회참여	신뢰/관용성	네트워크/파트너십	직접 관련 정책	간접 관련 정책	인프라 구축 관련 정책	단위사업 내용
		청소년 국가간 국제교류사업							국제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세계시민의식과 역량개발 기회 제공
	노인생활 안정	노인복지 지원							기초노령연금, 무료경로식당운영, 지역경로당 개보수, 노인돌보미바워처, 독거노인도우미 파견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노인 일자리 지원							현직에서 은퇴한 노인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제공을 통해 노인의 경제적 사회활동 참여 도모
노동부	고용정책	사회적 일자리 확충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해 일반 시장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업취약 저소득층에게 제공(장애아통합교육도우미, 방과후교실 선생님, 간병사 등)
	고용평등 실현	고용평등 환경개선							기업의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상의 차별문제 해소
	노사정책	노사협력							노사협력사례 홍보, 노사문화우수기업선정,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발전적인 노사관계 장려
		노사문화 구축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협의회 조직/운영 지원
	국제노동 협력	국제기구 협력지원							ILO 분담금 납부를 통해 고용노동문제에 대한 국제적 교류협력 도모